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신욱
노대명·김기태·오성재·하은솔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43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18-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43>

발|간|사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다른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사회보장 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동시에 사회보장의 확대에는 조세부담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점 역시 자명한 사실로 여겨졌고, 사회지출의 확장을 둘러싼 논의는 이 지점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교착 지점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보여주는 도전적인 시도이다. 사회적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또한 사회보장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 부담, 수혜,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위험과 여섯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깊이 있는 이론적 탐색과 엄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창의적이고도 시사점이 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이 연구가 대상과 방법 측면에서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사회보장 정책 설계의 중요한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요약	1
제1부 이론적 검토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검토	19
제1절 사회적 위험 개념에 대한 검토	21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측정	26
제2부 집계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31
제3장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국가군별 비교	33
제1절 국가군의 구분	35
제2절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비교	47
제4장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계층별 순수혜 비교 분석	55
제1절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특징	57
제2절 소득 계층별 순수혜 배분 비교	61
제3절 가구 유형별 순수혜 배분 비교	75
제4절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	86

제3부 국가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89

제5장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분석 방법 91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비교의 기본 틀 93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분포 측정 102

제3절 순수혜의 분포 측정 115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119

제1절 한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21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29

제3절 소결 161

제7장 미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169

제1절 미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71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79

제3절 소결 210

제8장 영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217

제1절 영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219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226

제3절 소결 258



제9장 일본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265
제1절 일본의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267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275
제3절 소결	308
제10장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315
제1절 프랑스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317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324
제3절 소결	355
제11장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361
제1절 스웨덴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363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371
제3절 소결	401
제12장 국가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407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에서 한국의 특징	409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에 대한 함의	427
참고문헌	433
Abstract	441

표 목차

〈표 2-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비교 분석의 쟁점과 선택	30
〈표 3-1〉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에 따른 국가군 구분(3×3=9개)	38
〈표 3-2〉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에 따른 3개 국가군 구분	40
〈표 4-1〉 국민계정 자료에서 가구 소득 및 저축 항목의 구분	60
〈표 4-2〉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순수혜 비율(1분위의 비율 순)	62
〈표 4-3〉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 순수혜 비율(1분위의 비율 순)	64
〈표 4-4〉 국가별 총 순수혜 규모	68
〈표 4-5〉 현금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1분위의 점유율 순)	70
〈표 4-6〉 현금 + 현물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1분위의 점유율 순)	72
〈표 4-7〉 가구 유형 구분과 각 유형의 시장소득 점유율	76
〈표 4-8〉 가구 유형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순수혜 비율(노인 단독가구의 비율 순)	77
〈표 4-9〉 가구 유형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 순수혜 비율(노인단독가구의 비율 순)	78
〈표 4-10〉 가구유형별 현금 순수혜 점유율(노인단독가구 점유율 순)	84
〈표 4-11〉 가구유형별 현금 + 현물 순수혜 점유율(노인단독가구 점유율 순)	85
〈표 5-1〉 미시자료 분석과 국민계정 자료에서의 가구 유형 구분	112
〈표 6-1〉 주요 사회보장제도 및 예산(2019년)	124
〈표 6-2〉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131
〈표 6-3〉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132
〈표 6-4〉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133
〈표 6-5〉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11~2018년)	134
〈표 6-6〉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135
〈표 6-7〉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138
〈표 6-8〉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139
〈표 6-9〉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141
〈표 6-10〉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142
〈표 6-11〉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144
〈표 6-12〉 소득분위별 불안전고용 위험도(2019년)	145



〈표 6-13〉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간 4개년 평균)	147
〈표 6-14〉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148
〈표 6-15〉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150
〈표 6-16〉 소득분위별 돌봄 부담 위험(2019년)	151
〈표 6-17〉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153
〈표 6-18〉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154
〈표 6-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156
〈표 6-20〉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157
〈표 6-21〉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158
〈표 6-22〉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164
〈표 6-23〉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166
〈표 7-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180
〈표 7-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181
〈표 7-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182
〈표 7-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183
〈표 7-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184
〈표 7-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187
〈표 7-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188
〈표 7-8〉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190
〈표 7-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191
〈표 7-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193
〈표 7-11〉 소득분위별 불안전고용 위험도(2019년)	194
〈표 7-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196
〈표 7-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197
〈표 7-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199
〈표 7-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200
〈표 7-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202

〈표 7-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203
〈표 7-18〉 소득분위별 수해와 부담(2019년)	205
〈표 7-19〉 소득분위별 수해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206
〈표 7-20〉 순수해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해(2019년)	207
〈표 7-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213
〈표 7-22〉 순수해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215
〈표 8-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227
〈표 8-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228
〈표 8-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229
〈표 8-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230
〈표 8-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231
〈표 8-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234
〈표 8-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235
〈표 8-8〉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237
〈표 8-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238
〈표 8-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240
〈표 8-11〉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241
〈표 8-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243
〈표 8-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244
〈표 8-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246
〈표 8-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247
〈표 8-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249
〈표 8-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250
〈표 8-18〉 소득분위별 수해와 부담(2019년)	252
〈표 8-19〉 소득분위별 수해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253
〈표 8-20〉 순수해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해(2019년)	254
〈표 8-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261



〈표 8-22〉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262
〈표 9-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276
〈표 9-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277
〈표 9-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278
〈표 9-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11~2018년)	280
〈표 9-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281
〈표 9-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284
〈표 9-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285
〈표 9-8〉 성 및 연령대별 고용자 비율(2009~2018년 평균)	287
〈표 9-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288
〈표 9-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290
〈표 9-11〉 소득분위별 불안전고용 위험도(2019년)	291
〈표 9-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293
〈표 9-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294
〈표 9-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296
〈표 9-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297
〈표 9-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299
〈표 9-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300
〈표 9-18〉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303
〈표 9-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304
〈표 9-20〉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305
〈표 9-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311
〈표 9-22〉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312
〈표 10-1〉 프랑스와 OECD의 공적사회지출의 분야별 배분의 변화	321
〈표 10-2〉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325
〈표 10-3〉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326
〈표 10-4〉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327

〈표 10-5〉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328
〈표 10-6〉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2019년)	329
〈표 10-7〉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및 고용률(2010~2019년의 평균)	331
〈표 10-8〉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332
〈표 10-9〉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334
〈표 10-10〉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 (2019년)	335
〈표 10-11〉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337
〈표 10-12〉 소득분위별 불안전고용 위험도(2019년)	338
〈표 10-13〉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340
〈표 10-14〉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341
〈표 10-15〉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0~2018년)	343
〈표 10-16〉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344
〈표 10-17〉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결여 비율(2009~2018년 평균)	346
〈표 10-18〉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347
〈표 10-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350
〈표 10-20〉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351
〈표 10-21〉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353
〈표 10-22〉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359
〈표 10-23〉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360
〈표 11-1〉 스웨덴과 OECD의 공적사회지출의 분야별 배분의 변화	366
〈표 11-2〉 지급방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비중 비교(2022년)	367
〈표 11-3〉 기여주체별 사회보장재원의 구성분포(2022년)	368
〈표 11-4〉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371
〈표 11-5〉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372
〈표 11-6〉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373
〈표 11-7〉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374
〈표 11-8〉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375



〈표 11-9〉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및 고용률(2019~2018년 평균)	377
〈표 11-10〉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378
〈표 11-11〉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380
〈표 11-12〉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381
〈표 11-13〉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383
〈표 11-14〉 소득분위별 불안정고용 위험도(2019년)	384
〈표 11-15〉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386
〈표 11-16〉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2019년)	387
〈표 11-17〉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0~2018년)	389
〈표 11-18〉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390
〈표 11-19〉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	392
〈표 11-20〉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393
〈표 11-21〉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396
〈표 11-22〉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397
〈표 11-23〉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 규모(2019년)	399
〈표 11-24〉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405
〈표 11-25〉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406
〈표 12-1〉 부담 > 수혜가 시작되는 소득 계층 비교(2019년)	424

그림 목차

[그림 3-1] 사회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의 3개 분위 구분값 변화	37
[그림 3-2] 7개 국가군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 분포(1980년~2020년)	39
[그림 3-3] 3개 국가군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 분포(1980년~2020년)	41
[그림 3-4] 3개 국가군별 주요 지출 및 부담 지표 변화	42
[그림 3-5]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군별 사회지출 비중 변화	44
[그림 3-6]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지속적 증가를 보인 국가	45
[그림 3-7]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51
[그림 4-1] 1분위의 현금 및 현물 수혜의 점유율 비교(현금 수혜 점유율이 높은 순)	66
[그림 4-2] 1분위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사회보장기여의 점유율이 낮은 순)	67
[그림 4-3] 노인 단독 가구의 수혜 점유율 비교(현금 수혜 점유율 순)	80
[그림 4-4] 노인 단독 가구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 점유율 순)	81
[그림 4-5] 커플 + 아동(2명 이하) 가구의 수혜 점유율 비교(현물 수혜 점유율 순)	82
[그림 4-6] 커플 + 아동(2명 이하) 가구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 점유율 순)	83
[그림 5-1] 소득의 로렌츠 곡선과 위험의 로렌츠 곡선	99
[그림 5-2] 지니계수와 집중지수(CI)	101
[그림 5-3] 소득계층별 위험도 산출의 과정	114
[그림 6-1] 한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122
[그림 6-2] 한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123
[그림 6-3]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2020년)	125
[그림 6-4] 한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127
[그림 6-5]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37
[그림 6-6]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40
[그림 6-7]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43
[그림 6-8] 불완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46
[그림 6-9]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49
[그림 6-10] 돌봄 부담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52
[그림 6-11]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55



[그림 6-12] 수해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159
[그림 6-13] 순수해의 로렌츠 곡선(2019년)	160
[그림 6-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162
[그림 6-15]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163
[그림 7-1] 미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174
[그림 7-2] 미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175
[그림 7-3] 미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178
[그림 7-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86
[그림 7-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89
[그림 7-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92
[그림 7-7] 불완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95
[그림 7-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198
[그림 7-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01
[그림 7-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04
[그림 7-11] 수해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208
[그림 7-12] 순수해의 로렌츠 곡선(2019년)	209
[그림 7-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211
[그림 7-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212
[그림 8-1] 영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220
[그림 8-2] 영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221
[그림 8-3] 영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225
[그림 8-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33
[그림 8-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36
[그림 8-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39
[그림 8-7] 불완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42
[그림 8-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45
[그림 8-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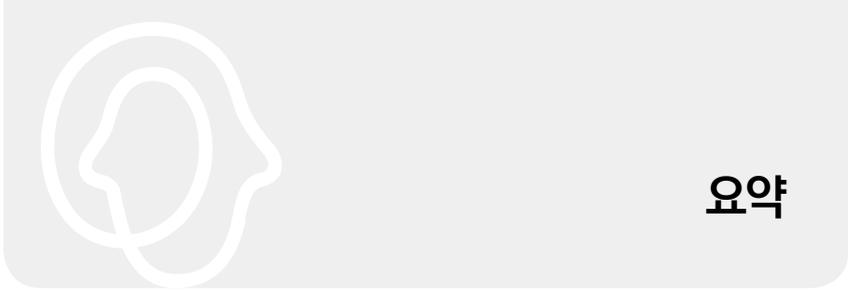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그림 8-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51
[그림 8-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255
[그림 8-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256
[그림 8-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259
[그림 8-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260
[그림 9-1] 일본의 국민부담률 비교	268
[그림 9-2] 일본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269
[그림 9-3] 일본, 한국, OECD의 공공사회지출 증가 추이	270
[그림 9-4] 일본의 사회적 위험 비교	274
[그림 9-5]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83
[그림 9-6]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86
[그림 9-7]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89
[그림 9-8]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92
[그림 9-9]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95
[그림 9-10]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298
[그림 9-11]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01
[그림 9-12]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306
[그림 9-13]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307
[그림 9-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309
[그림 9-15]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310
[그림 10-1] 프랑스 사회지출의 추이와 국제비교	318
[그림 10-2] 프랑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 추이 비교	319
[그림 10-3]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비교	322
[그림 10-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30
[그림 10-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33
[그림 10-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36
[그림 10-7]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39



[그림 10-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42
[그림 10-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45
[그림 10-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48
[그림 10-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352
[그림 10-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354
[그림 10-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357
[그림 10-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358
[그림 11-1]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비교	364
[그림 11-2] 스웨덴의 국민부담률 비교	365
[그림 11-3]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비교	370
[그림 11-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76
[그림 11-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79
[그림 11-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82
[그림 11-7] 불완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85
[그림 11-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88
[그림 11-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91
[그림 11-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394
[그림 11-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398
[그림 11-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400
[그림 11-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402
[그림 11-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403
[그림 12-1] 위험도의 분포 비교 1	410
[그림 12-2] 위험도의 분포 비교 2	411
[그림 12-3] 소득 하위 20% 계층의 위험 점유율 비교	413
[그림 12-4] 위험별 집중지수 비교	414
[그림 12-5] 수혜와 부담의 분포 비교	416
[그림 12-6] 소득 하위 20% 계층의 수혜 및 부담 점유율 비교	419



[그림 12-7] 수혜와 부담의 집중지수 비교	420
[그림 12-8] 순수혜(음→0 대체)의 분포 비교	421
[그림 12-9] 순수혜(음→0 대체)의 집중도 비교	422
[그림 12-10] 100분위별 순수혜의 상대적 크기(30분위=1)	4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 등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회지출 목표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을 선택할 때는 사회적 위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사회적 위험의 수준과 함께 그 분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험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나 부담도 위험의 분포에 조응하여 배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험의 계층 간 분포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사회보장 급여 - 부담)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 재원 배분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2장)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위험 개념의 이론적 지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문제 제기가 확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험을 실제로 계량화하고 특히 그 분포를 분석하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사회적 위험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사전적(事前的) 의미로 정의하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분위) 간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순수혜를 각 가구가 받는 사회보장급여(수혜)에서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분포를 비교할 때는 소득 분위별 점유율과 집중지수 두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3장) 국가별 비교를 위해 먼저 OECD 국가를 사회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저부담-저지출, 중부담-중지출, 고부담-고지출)으로 분류하였다. 국가군 간 사회지출 비중의 격차는 각국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군 사이에는 사회적 위험 수준의 뚜렷한 격차가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지출과 부담 수준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그 국가가 감내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수준을 선택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국가군별로 2개의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모두 6개국, 즉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4장) 미시자료를 이용한 6개국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집계자료(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많은 국가의 소득 5분위 간 순수혜 분포를 비교하였다. 같은 국가군 안에서도 순수혜의 분포는 달랐다. 수혜와 순수혜가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순수혜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 한국은 1분위의 현금 순수혜 비율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했으나 현금과 현물을 합한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은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등의 효과로 그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5장)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위험은 모두 7가지, 즉 빈곤, 돌봄 부담, 미취업, 실업, 불완전 고용, 건강, 사회적 지지의 부재 위험이다. 각 위험을 가구 단위로 집계하여 소득 계층별로 비교하였다. 사전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각 위험도는 동일한 가구 유형(또는 같은 성과 연령대의 개인)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겪은 위험의 평균값으로 정의되었다. 개인 단위로 측정된 위험은 가구원의 위험도를 곱함으로써 가구 단위로 합산하였다. 이렇게 계측한 위험도를 이용하여 2019년 시점에서 소득

계층별 집중도(점유율)를 계산하였고, 이를 다시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순수혜의 분포는 가구 단위의 순수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소득 계층별 집중도를 비교하였다.

(6~12장 1절) 이러한 동일한 분석 방법에 입각하여 6개국의 위험 및 순수혜 집중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국가별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모든 국가에서 위험의 보편화와 집중이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소득계층이 사전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다.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위험 집중의 정도는 위험마다, 국가마다 달랐다. 같은 국가군 안에서도 위험의 집중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은 소득 하위 20%층의 위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위험이 집중된 국가이다. 집중지수를 비교할 때도 한국은 8개 위험 지표 중 5개에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반면 순수혜의 집중도 비교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위 20% 소득층의 순수혜 점유율로 볼 때는 집중도가 높지만 집중지수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양(+의 순수혜를 얻는 계층의 비율을 비교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3. 결론 및 시사점

(12장 2절)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분포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위험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어느 계층의 위험 점유율에 주목할 것인가, 위험의 집중도를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낮출 것인가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둘째, 위험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험의 보편화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소득 계층에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위험의 보편화와 위험의 집중 두 현상 모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집중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재원의 재배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순수혜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총수혜나 총 순수혜의 크기를 증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선택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모든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만큼 저소득층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위험의 집중도가 높은 미취업, 불안전 고용, 건강 등의 영역에서 집중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의 집중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표적화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적의 크기는 현재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설정하는 범위에 비해 훨씬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기존 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계층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양의 순수혜를 얻는 집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계층별로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을 모두 조정하되 수혜가 부담보다 큰 계층을 현재의 하위 약 40% 수준에서 더욱 높이는 것이 사회보장 재원의 확충과 정책적 지지의 기반을 모두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 프로그램별로 관련 위험을 설정하고 위험별로 정책 조합을 재배치하거나 재설계하는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그러한 작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료의 제약하에서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를 비교분석하였고

불가피하게 여러 한계를 갖게 되었다. 위험의 종류와 비교 대상 국가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위험을 계측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가정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분석 시점을 2019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발생한 최근까지의 변화를 담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은 향후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이 적용될 경우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 수혜, 조세, 사회보장기여, 사회보장 순수혜, 사회지출, 재정 배분, 국가 간 비교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이론적 검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사회지출과 관련된 논의의 한계

한 국가의 사회지출 비중은 사회보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가 확충되고 더 많은 인구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사회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에 국한하여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지체되었음을 설명 하면서 사회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이 그것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되고 있다. 사회지출 비중을 높이려는 것은 사회정책 발전의 목표 지표로 제시 된 바도 있고¹⁾ 사회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제도 발전의 당면 과제임을 제시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사회지출의 확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 역시 꾸준히 지적되었다. 국가의 부채에 의해 지출을 위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한 지출의 증가는 부담의 증가, 즉 조세 부담이나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복지는 높은 수준의 부담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이 기꺼이 그런 부담의 증가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런 의사가 강화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 들도 있지만, 이 역시 지출의 증가는 부담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관점을

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편(2006),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력에 맞는 적정 부담과 적정 사회지출의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는 사회정책의 목표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출 수준과 부담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회지출의 목표 변수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지출의 구성과 수준이 선택된다. 그리고 지출의 수준에 맞추어 부담의 수준과 방식이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본다면 사회지출과 부담은 모두 정책적 선택 변수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이라기보다 둘 모두가 동시에 선택되는 구조를 띠는 것이다.

2. 사회적 위험과 정책적 선택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지출의 목표, 달리 말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그것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줄이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need)를 지지하는 것 역시 그러한 지지의 부재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의 예방이란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위험의 정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지출이 높고 그에 상응하여 국민의 부담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지출-국민 부담의 조합과 사회적 위험의 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 때, 특정한 수준의 지출-부담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며 살 것을 선택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회지출의 수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사회적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지출과 부담의 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국가별로 사회지출-부담의 조합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에는 다양한 모습이 포착된다. 유사한 수준의 사회지출-부담의 조합을 지닌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위험의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사회지출 수준이 높을 때 사회적 위험이 낮아지는 관계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위험의 분포(distribution)와 사회지출-부담의 분포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지출은 결국 개인과 가구에 사회보장 수혜(benefit)로 배분되는데, 그 배분도 당연히 균등하지 않다.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란 총량적 결과는 위험과 지출(수혜), 부담의 미시적 배분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총량이 충분하더라도 그 계층별 배분이 위험의 배분(분포)과 심하게 불일치한다면 사회적 위험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사회적 위험의 배분과 사회보장 수혜의 배분이 일치한다면 사회보장 지출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²⁾

2) 경제학적 의미에서 분배(分配, distribution)는 생산된 결과물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배분(配分, allocation)은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투입물을 사전에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 급여는 재분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원을 나누어준다는 의미로 배분으로 지칭한다. 한편, 분포(分布, distribution)는 각 자에게 몫이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위험이 계층별로 나누어진 상태는 분포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여기서는 위험의 정도도 사회적 자원 배분의 결과

순수혜(net benefit)를 사회보장 수혜에서 부담을 뺀 값으로 정의하면, 수혜와 부담의 분배는 순수혜라는 단일한 변수의 분배로 이해할 수 있다. 통상 수혜는 저소득층이, 부담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배분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순수혜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고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순수혜와 사회적 위험 모두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되지만 그 집중의 구체적 양상은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의 효과성 역시 달라질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위험의 배분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배분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보장 지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출(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데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출(수혜)-부담의 조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위험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위험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험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지표화하며, 미시자료와 연계시켜 위험의 분포를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와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한 가지 주제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 (불)일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가

라고 보아 위험의 배분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일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국가별 비교가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비교 대상 국가를 선별한 후, 각 국가의 사회적 위험 관련 데이터 및 가구 소득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국가별로 제도적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위험의 총량이 아닌 분포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집계변수를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많았으나 사회적 위험의 분포에 대해, 그것도 다양한 위험별로 분석한 연구는 흔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가정하에서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를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그로 인해 순수혜와 위험의 조응이라는 문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 양적 투입의 충분성과 별개로 자원 배분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지출과 관련된 국가별 비교를 한 걸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량적 지출과 부담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회정책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설명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3개의 부(部)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제2부에서는 집계 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한 분석을, 그리고 제3부에서는 미시 자료(micro data)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서론과 함께 1부를 구성하는 제2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사회적 위험이 기존 문헌에서 어떻게 이해

되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측정에 관련된 이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어떤 위험을, 누구에 대한 배분을, 어느 국가들 사이에 비교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집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3장에서는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란 두 지표를 이용하여 주요 OECD 국가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한다. 또한 국가군별로 주요 사회적 위험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3장의 논의는 이후 3부에서 비교 대상 국가들을 선택하는 데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국민계정을 활용한 가구 소득 집계 자료를 이용하여 수혜와 부담의 계층별 배분에 대해 분석한다. 소득분위별 또는 가구 유형별 순수혜 점유율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4장의 분석에는 사회적 위험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지만 현금과 현물을 모두 포함한 순수혜 분포를 다룰 수 있다는 점, 미시자료로 포착되지 않는 계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 계층의 순수혜 배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3부의 논의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3장과 4장은 집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여기서 사회보장 순수혜의 배분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사회적 위험의 배분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3부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해결될 수 있다. 3부는 3장에서 구분된 국가군별로 2개의 국가를 선정해서 각 국가별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배분에 대해 분석한다. 이에 앞서 5장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미시자료를 통해 사회적 위험은 어떻게 수량화되고 계층되는지, 그리고 소득 계층별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5장에서 설명한 방법론은 3부 전체를 통해 적용된다. 6장부터 11장까지는 각 국가별 분석이다. 6장은 한국, 7장은 미국인데 두 국가 모두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에 해당한다. 8장과 9장은 각각 영국과 일본으로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에 해당하는 나라들이다. 10장과 11장은 각각 프랑스와 스웨덴으로 고부담-고지출군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3부의 각 국가를 선택할 때 3장의 국가군 구분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면서 국가군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고,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가용성도 감안하였다.

마지막 12장은 국가 간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그것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특히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검토

제1절 사회적 위험 개념에 대한 검토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측정

제 2 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검토

제1절 사회적 위험 개념에 대한 검토

1.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위험의 이론적 지위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사회적 위험으로 개념 규정한 역사는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초기 문헌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특정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서비스 경제가 발달하고 탈제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기태 외 2024).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에스핑-앤더슨인데(Esping-Anderson, 1999, 정무권, 2012에서 재인용), 그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목표임을 지적하고 있다.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사회정책의 목표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 있는 것은..(중략) ..사람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³⁾였음을 지적하면서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위험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의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a) 사회적 위험의 분포와 규모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b) 이러한 위험들이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 사이에 어떻게 분산화되고 분배되는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⁴⁾.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모종의 집합적인 정치적 행동이 있었을 경우 사회정책은 존재한

3) Esping-Anderson(1999), p.78.

4) Esping-Anderson(1999), p.80.

셈이라고 주장한다.⁵⁾ 그는 사회정책이란 단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공적 관리를 의미한다고 단정한다⁶⁾.

사회적 위험 개념은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주목하는 문헌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구비(Taylor-Gooby, 2005)가 사회적 위험을 오래된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구분한⁷⁾ 이후 이러한 구분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Yang, 2014). 예컨대 보놀리(Bonoli, 2007)는 사회정책을 제조업 단계의 사회정책(industrial social policies), 또는 전후 사회정책(postwar social policies)과 새로운 위험 정책(new social risk policies) 또는 탈제조업 사회정책(postindustrial social policies)으로 구분⁸⁾ 하는데, 이 또한 시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주목하는 많은 이론적 논의들은 사회적 위험의 내용이 경제·사회구조의 규정을 받으며, 산업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내용이 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역할 역시 이 변화된 위험 구조에 반응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위험이 사회정책이나 사회정책의 목표를 설명하는 유일한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앨커크 등(Alcock eds, (2016))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개인과 집단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를 충족시키는 것과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이들은 사회적

5) Esping-Anderson(1999), p.81.

6) Esping-Anderson(1999), p.86.

7) Taylor-Gooby(2005), pp.5-6.

8) Bonoli(2007), p.501.

9) Alcock eds.(2016). p.21.

위험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용어를 통해 정책 목표를 설명한다. 이때 사회적 문제는 개인적 필요와 구분되는 것이어야 하고(사회적 조건), 어떤 불운이 공동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사회적 인지), 그에 대해 사회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사회적 판단), 마지막으로 그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사회적 해결). 이 네 가지 요소가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 간주된다.¹⁰⁾

한편, 사회적 위험은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주목받기도 하였다. 홀츠만 등(Holzmann et al., 2003)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social risk management)를 사회적 보호정책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이들 역시 사회적 위험을 사회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들의 관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경제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경제발전론적 관점이다.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위험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해석이 시도되기도 한다. 루푸(Lupu, 2019)는 사회학(예컨대 Beck, 1992)이나 경제학,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지리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사회적 위험이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 또는 취약 집단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 재난과 감염병의 확산같은 문제까지 모두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의 확산이 경제활동의 위축과 중단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빈곤,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정책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양상이다.

10) Alcock eds,(2016). p.24.

2. 사회적 위험의 정의

사회적 위험이 사회정책에서 이와 같은 이론적 지위를 갖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는 다소 현상 중심의 설명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다.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적 위험을 소득의 상실을 일으키는 불행(misfortunes) 등의 나쁜 위험(bad risks)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그 원인에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력의 상품화나 시장의 실패와 같은 경제구조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¹¹⁾ 한편 테일러-구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탈제조업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험이라고 정의한다.¹²⁾

이러한 정의 방식은 사회적 위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나 사회적 위험에 포함되는 문제들을 예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만, 이로부터 사회적 위험의 개념적 핵심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개념에서 ‘사회적’의 의미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이란 노동력이 상품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령의 위험도 은퇴로 인해 노동력의 상품화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는 소득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위험의 내용을 바꾼다. 루푸(Lupu, 2019)는 여러 분과 학문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위험 개념의 정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위험이 불운한 사건, 즉 불행(misfortune), 불운(bad luck), 손실(loss), 좋지 않은 사건(unfavorable event),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versible damage), 부정적 결과(negative consequence) 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¹³⁾ 다른

11) Esping-Anderson, 1999, 정무권, 2012에서 재인용.

12) Taylor-Gooby(2005). pp.2-3.

13) 이런 점에서 경제학적 위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학에서 위험은 확률분포가 알려

하나는 그것이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possible, probability, potential), 즉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렘(Rehm, 2016)은 사회적 위험을 좀 더 좁게 규정한다. 그에게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나쁜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다. 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같은 실업이란 사건이더라도 그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으면 위험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 불확실성¹⁴⁾으로 규정된다. 그는 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degree of risk exposure)가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회적’, ‘불행(또는 나쁜 결과)’, 그리고 불확실성(확률분포가 알려져 있는가와는 별개로)이다. 사회적 원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해결, 즉 국가에 의한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열어둔다. 위험은 나쁜 결과일 뿐 규범적인 비난의 대상은 아님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도¹⁵⁾ 같은 효과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실제로 불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범위에 비해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갖는 사람의 수는 훨씬 많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인과성을 갖고 시간적 선후 관계로도 연관되어 있다. 정책의 개입은 발생한 불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예견되는 불행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다.

진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나쁜 사건만 포함되지 않는다(예, 복권 당첨).

14) Rhem(2016) p.19.

15) 베버리지가 결핍이나 질병을 무지나 나태와 함께 거대 ‘악(evils)’으로 인식한 것과 구별된다(Beveridge, 2000).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측정

1. 위험의 종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몇 가지 쟁점이 확인된다. 첫째, 위험은 사전적인가 사후적인가이다. 홀츠만 등(Holzmann et.al., 2003)은 이러한 구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위험 관리는 두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사전적(ex-ante) 목표는 위험의 발생을 막는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즉 어떤 문제까지 사회적 위험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빈곤은 사회적 위험에 속하는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상기할 수 있다. 핀텔론 등(Pintelon et. al., 2011)은 실업, 나쁜 건강, 취업자가 없는 가구, 한 부모, 일시 고용(temporary employment), 저임금 고용(low-paid employment)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분석한다. 이 위험들은 각각 (가구) 소득의 감소로 귀결되어 빈곤 위험(poverty risk)을 높이는 사전적 지표이다. 즉 빈곤 자체가 아닌 빈곤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사전적 지표인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위험의 주체가 개인인가 사회인가이다. 예를 들어 빈곤은 사회에도 문제이지만 개인에게도 생계의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반대로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 개인 간의 격차는 사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격차 그 자체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핀텔론 등(Pintelon et. al., 2011)은 소득의 불평등을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로 보는 예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셋째, 쟁점이라기보다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내용인데, 즉 자연적 재난을 사회적 위험의 영역을 포함할 것인가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론이 제기된 이후에도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다루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는 대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충격은 사회정책의 범위와 영역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자연 재난 등 이전에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 되는 것이다.

위험의 종류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는 개념의 문제라기보다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는 문제, 또는 정책의 일차적 대상 영역을 어디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현실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위험을 어떻게 측정(measure)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위험의 측정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위험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데 비해 양적 분석, 특히 비교 분석이 제한된 데에는 자료의 제약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국가 단위에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위험의 분포 또는 분배(distribution)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적 위험이 사회계급과 성,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분배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위험의 배분은 역사에 따라서 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 이때 그가 말한 위험 분배(배분)의 문제는 가족, 시장, 복지국가 사이의

16) Esping-Anderson(1999) p.79.

배분이다. 만일 배분의 문제를 좀 더 미시적인 단위, 예컨대 성, 연령, 인종, 지역, 소득계층 등 하위 집단 간의 배분, 나아가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배분으로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더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에스핑-엔더슨 역시 사회적 위험이 계급 위험, 생애주기 위험, 세대 간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급 위험(class risks)은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이 사회적 계층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광부들과 교수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계급 위험의 예로 든다.

로드 등(Rohde et al., 2015)는 위험의 배분(allocation) 방식이 정책 결정권자의 관심과 선택 대상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과는 별개로 위험의 분배 불평등에 관심을 둘 수 있는데, 공적 위험(public risk) 배분의 사전적(ex ante) 불평등과 사후적(ex post) 불평등 사이의 선택, 개인의 위험을 높이는 방식과 집단의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선택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의 선호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렇다면 위험의 분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레hm(Rehm, 2016)은 위험의 분포가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균은 위험의 위치, 즉 위험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설명하고, 위험의 확산(표준편차)은 위험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위험의 치우침(왜도)은 다수가 사회보험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위험의 불평등이 낮을수록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가 비슷해질 것이고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므로, 사회정책적 노력의 국가 간 차이는 사회적 위험 불평등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위험의 분포를 측정할 때 위험의 계측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17) Rehm(2016) pp.23-24.

하는 문제도 남는다. 뎀(Rehm, 2016)은 위험에 대한 노출이 집단 수준(meso-level)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객관적으로 위험을 측정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미시적 수준(micro-level)에서의 객관화된 위험 확률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사회적 위험 분포의 비교 분석을 위한 선택

위에서 검토한 쟁점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위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각 위험을 표현하는 지표를 선택해야 하며 그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위험의 분포를 비교하려면 위험의 측정 단위를 정해야 하고, 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 역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의 대상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하의 각 장에서는 이러한 쟁점별 선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선 비교 대상 국가를 선택하기 위해 3장에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군을 구분할 것이다. 이는 분석 대상 국가를 선택할 때 국가군별 안배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5장에서는 위험의 종류와 그것을 측정할 지표와 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5장에서 설명하는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의 순수혜를 6장부터 분석할 것인데, 그 이전에 4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은 제외한)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각 장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위험의 측정 및 비교를 위한 선택의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면 <표 2-1>과 같다.

30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표 2-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비교 분석의 쟁점과 선택

쟁점	주요 내용	관련 지표	관련 자료 주요 출처
비교 대상 국가	- 한국, 미국 - 영국, 일본 - 프랑스, 스웨덴	- 사회지출 비중 -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OECD
사회적 위험의 종류	- 빈곤 - 돌봄 부담 - 미취업, 실업, 불완전고용 - 나쁜 건강 - 사회적지지의 부재	- 빈곤율 -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 고용률, 실업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 - 주관적 인지 건강 -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인식	LIS OECD
사회보장 순수혜 관련 항목	- 사회보장 급여(공적이전소득) - 조세 - 사회보장기여(사회보험료)	- 가구별 소득 및 지출액 - 국민계정상 수입 및 지출액	LIS OECD
분포의 계층 단위	- 소득 계층	- 시장소득 기준 10분위(또는 100분위)	LIS
분포의 비교 지표	- 위험의 집중 정도 - 순수혜의 집중 정도	- 계층별 (누적)점유율 - 집중지수	LIS OECD

주: LIS는 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제공하는 가구소득 및 지출 데이터를, OECD는 OECD Data Explorer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를 의미함. 자세한 자료명은 5장을 참조.
출처: 저자가 작성.

이 연구에서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3장의 국가군 분석으로부터 저부담-저지출 국가군(한국, 미국),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영국, 일본), 고부담-고지출 국가군(프랑스, 스웨덴)을 대표하여 선택되었다. 이들 6개 국가는 6장부터 11장까지 장별로 분석될 것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은 빈곤, 돌봄, 고용,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을 대표하는 7개 위험(8개 지표)이다. 사회보장 순수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장 수혜와 부담(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차이로 정의된다. 사회적 위험과 수혜의 배분 대상은 소득 계층이다. 즉 소득 계층 간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이나 순수혜가 소득 계층에게 얼마나 집중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소득 계층(분위)별 점유율과 지니계수를 응용한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를 이용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부

집계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국가군별 비교

제1절 국가군의 구분

제2절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비교

제 3 장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국가군별 비교

제1절 국가군의 구분

1. 국가군 구분 기준과 방법

가.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이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에 따라 사회적 위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좀 더 안정적인 지표인 사회지출 비중,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한 국가의 사회지출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간주할 것이다. 즉 이 장에서 어떤 국가의 사회지출이 높고 낮음을 논의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회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지출은 정부의 지출 가운데 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은 조세로부터 그 재원을 조달하지만 사회지출은 다른 정부지출과 달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이라는 추가적인 재원을 사용한다. 즉 사회지출을 위한 국민들의 부담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고, 이 두 금액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부담률이다.

사회지출이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조세수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사회지출에 배분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장에서는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률이라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국가군을 구분하고자 한다.

나. 1단계: 9개 국가군 구분

이 장에서 다루는 국가는 2024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38개 국가이다 (<표 3-1> 참조). 이들 국가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을 이용하여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로 국가군을 구분한다. 먼저 사회지출비중에 따라 국가군을 3개로 나누고, 동시에 국민 부담률을 기준으로 3개 국가군을 나눈다. 3개의 국가군으로 나눌 때에는 각 연도별, 변수별로 3분위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사회지출비중의 3분위수는 38개 국가의 사회지출 비중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각 구간(분위)에 균등한 수의 국가가 배치되도록 하는 값이다. 3분위 수를 이용하면 매년 전체 국가의 1/3씩이 각 분위에 속한다.

1980~2020년간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3분위 수를 구하였다. 전체 국가를 사회지출 비중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하위 1/3 국가군과 중간 1/3 국가군을 구분하는 분위수(p33)는 1980년에는 13.1%였으나 2000년에는 15.4%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21.1%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사회지출 비중이 높았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2019년의 p33값을 보더라도 17.6%로 2000년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다. 중간층 1/3 국가군과 상위 1/3 국가군을 구분하는 값(p67)은 1980년 20.1%였고 2000년도 20.1%로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25.9%로 높아졌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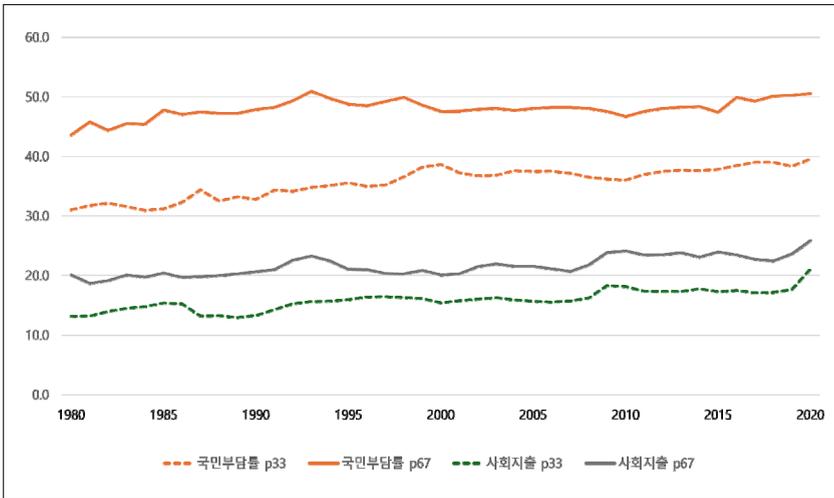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국가군을 세 집단으로 구분

18)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2019년에는 23.6%였다.

하였다. 국민부담률 기준 하위 1/3과 중간 1/3 국가군을 구분하는 p33의 값은 1980년 31.0%였으나 2000년에는 38.7%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39.6%로 높아졌다. p67값은 1980년 43.6%, 2000년 47.6%, 2020년에는 50.6%로 높아졌다. [그림 3-1]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별로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률의 p33값과 p67값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준다. 사회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 분위수 모두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3-1] 사회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의 3개 분위 구분값 변화

(단위: %)



출처: "SOCX,"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두 변수에 대해 3분위 수를 이용하여 각각 3 집단으로 전체 국가를 나누면 형식적으로는 매년 9개의 국가군이 형성된다. 그런데 개별 국가가 일시적으로 사회지출비중이나 국민부담률을 높인다면 특정한 한두 해에 국가군의 구성이 달라진다. 한 국가가 속하는 국가군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장에서는 1995년 이후 국가별 최빈 소속 분위를 확인하였다. 1995년 이후의 데이터로 제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표 3-1>과 같은 분위별 국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에 따른 국가군 구분(3×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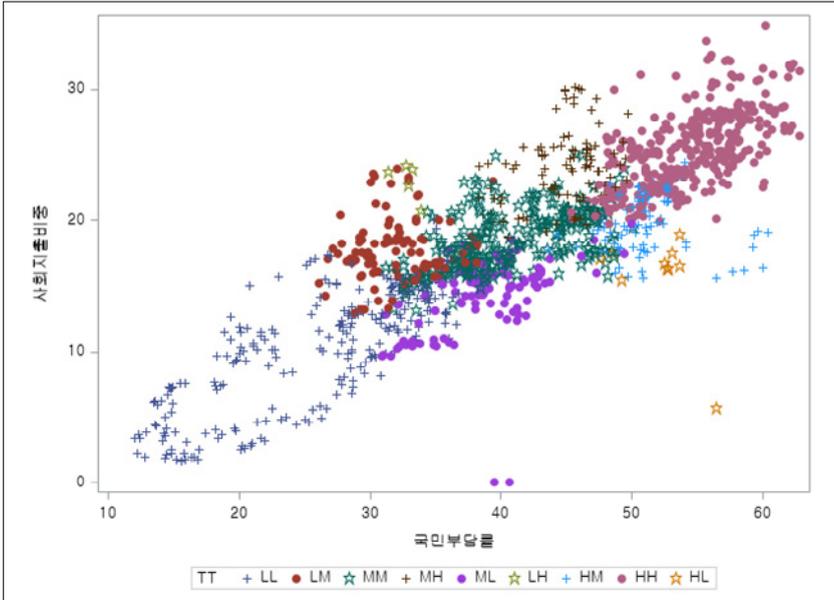
		사회지출 비중		
		1분위(저지출)	2분위(중지출)	3/3분위(고지출)
국민부담률	1분위 (저부담)	Chile Ireland Israel Korea Mexico Switzerland Turkiye	← Australia New Zealand ↓ ← United States	-
	2분위 (중부담)	Estonia→ Latvia ↑ Lithuania ↑ Slovak Republic→	Canada Greece Iceland Japan Luxembourg Poland Spain United Kingdom	Denmark ↓ Portugal ←
	3/3분위 (고부담)	-	Czechia ↑ Hungary ↑ Netherlands ↑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Norway Slovenia Sweden

주: 화살표는 이 표의 9개 국가군 구분에서 3개 국가군 구분으로 재분류할 경우 각 국가가 이동하는 방향임.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9개 국가군으로 나눌 때는 저부담-중지출 국가군에 해당했으나 3개 국가군으로 구분할 때는 저부담-저지출 국가로 분류됨.

출처: 저자가 작성.

[그림 3-2] 7개 국가군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 분포(1980년~2020년)

(단위: %)



주: 국가군 LL은 저부담-저지출, LM은 저부담-중지출, MM은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을 의미함. 다른 구분기호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표기한 것임.

출처: "SOCX,"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매년의 관측치에 대해 9개의 국가군(사회지출 비중별 3개 × 국민부담률별 3개)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최빈값을 이용하면 한 국가의 소속 국가군을 고정하면 <표 3-1>과 같이 7개의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저부담-고지출과 고부담-저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는 없는 셈이다. [그림 3-2]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의 분포를 7개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다. 2단계: 3개 국가군으로 재분류

9개(실제로는 7개)로 구분된 국가군을 다음 단계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3개 국가군으로 다시 재편하였다. 이때 <표 3-1>의 대각선 셀(색칠된 부분)이 아닌 다른 셀에 포함된 국가군을 어디로 이동시킬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각 국가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의 장기적 변화 패턴을 대각선 셀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였고, 유사한 수준과 흐름을 보이는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3-2>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에 따른 3개 국가군 구분

1. 저부담-저지출 (11개국)	2. 중부담-중지출 (15개국)	3. 고부담-고지출 (10개국)
Chile	Canada	Austria
Ireland	Greece	Belgium
Israel	Iceland	Finland
Korea	Japan	France
Mexico	Luxembourg	Germany
Switzerland	Poland	Italy
Turkiye	Spain	Norway
Australia	United Kingdom	Slovenia
United States	New Zealand	Sweden
Latvia	Estonia	Denmark
Lithuania	Slovak Republic	
	Portugal	
	Czechia	
	Hungary	
	Netherlands	

주: <표 3-1>의 국가군을 재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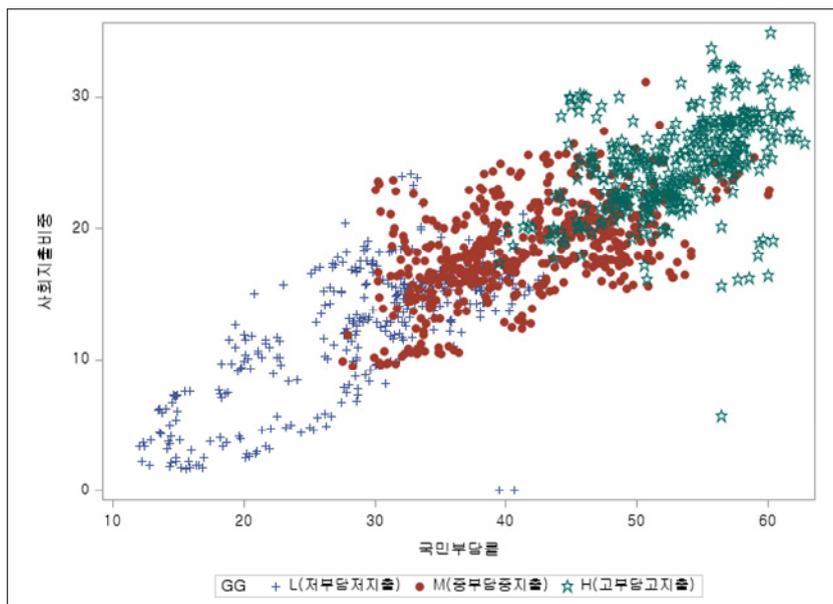
출처: 저자가 작성

결과적으로 <표 3-1>에서 국가명 옆에 표기된 화살표 방향으로 국가 분류를 이동한 후 3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9개 국가군으로 구분할 때는 저부담-중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지만

3개 국가군으로 구분할 때는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포르투갈은 중부담-고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다가 3개 국가군 구분 시에는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군을 3개로 구분한 결과가 <표 3-2>이다. [그림 3-3]은 3개 국가군별로 1980년~2020년에 걸친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3] 3개 국가군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 분포(1980년~2020년)

(단위: %)



주: 국가군 1은 저부담-저지출, 2는 중부담-중지출, 3은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을 의미함.

출처: "SOCX,"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라. 국가군 간 격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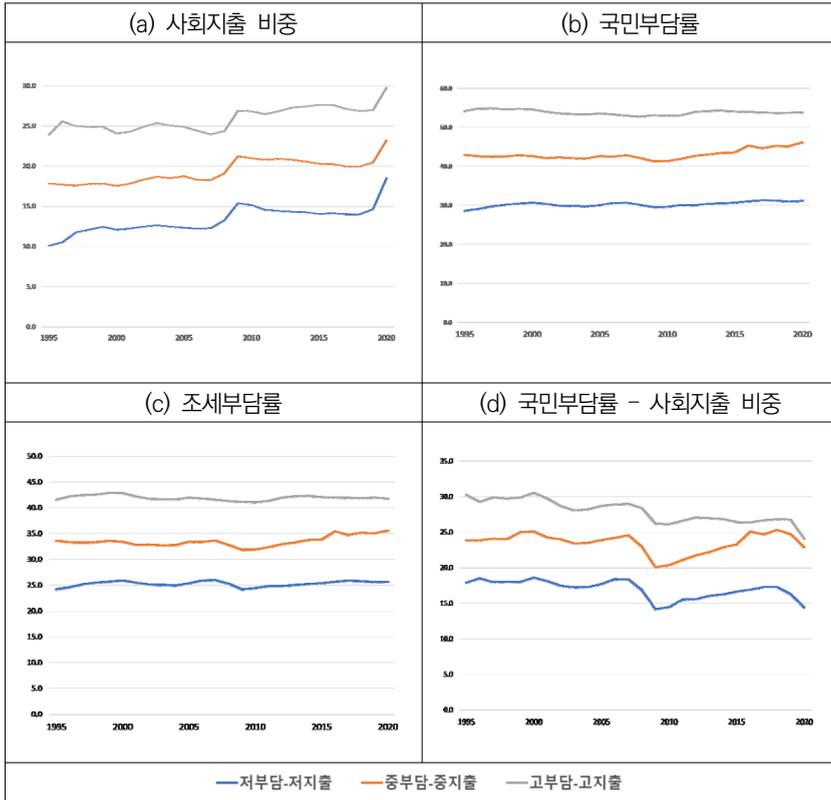
이와 같이 국가를 나눈 결과 각 국가군 사이에는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 등 중요한 변수에 대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또한 그 격차는

4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는 세 국가군에 대해 사회지출 비중,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그리고 국민부담률에서 사회지출 비중을 뺀 값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3-4] 3개 국가군별 주요 지출 및 부담 지표 변화

(단위: %)



출처: "SOCX,"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사회지출 비중([그림 3-4]의 (a))을 보면 세 국가군 사이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사회지출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일 때도 이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중부담-중지출 국가군과 고부담-고지출 국가군 사이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국가군 간 격차는 확연히 유지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의 국민부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부담률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뺀 값의 두 집단 간 격차는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군의 수치가 역전되거나 같아지는 정도는 아니다.

2. 경제성장과 국가군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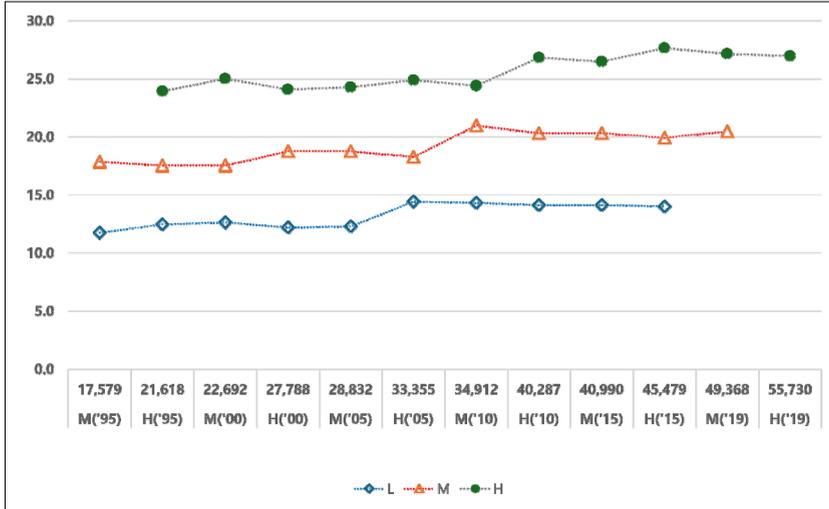
국가군 사이에 이러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사회지출 비중이 중부담-중지출 또는 고부담-고지출 국가의 사회지출 비중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5]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 그림의 가로축은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각 국가군의 일인당 GDP¹⁹⁾ 수준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군이 그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회지출 비중은 얼마였는지를 점 그래프로 보여준다. 여기서 L, M, H는 각각 저부담-저지출, 중부담-중지출, 고부담-고지출의 국가군을 의미한다.

19)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를 적용한 값이다.

4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그림 3-5]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군별 사회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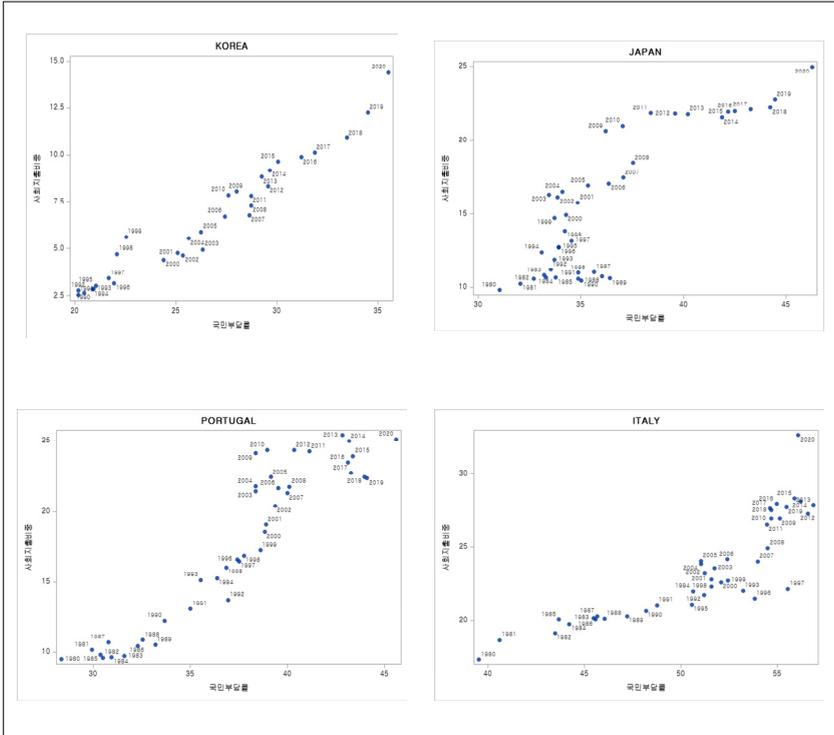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에서 인출.

예를 들어 1995년 시점에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의 일인당 GDP는 약 1만 7,600달러였고, 이때의 국가군 평균 사회지출 비중은 17.8%였다. 그런데 저지출-저부담 국가군 평균이 이 평균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회지출 비중은 11.8%였다. 2010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의 2010년 평균 소득 수준은 약 3만 5천달러였고, 이 시기의 사회지출 비중은 21.0%였다. 그런데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이 이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때(2013년) 사회지출 비중은 그보다 낮은 14.3%였다. 반면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의 소득수준이 이와 유사했던 시점(2006년)에는 사회지출 비중이 24.4%로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을 통제 하더라도 사회지출 비중의 국가군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림 3-6]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지속적 증가를 보인 국가

(단위: %)



출처: “OECD SOCX, OECD 국민부담률,” <https://data-explorer.oecd.org/?l=en>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물론 이러한 사실이 국가군의 구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어떤 한 국가가 계속 한 국가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3-6]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꾸준히 증가해 온 몇 나라들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은 해당 국가군이 바뀌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사회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표 3-1>이나 <표 3-2>에서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부담-고지출군에 속하는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을 증가시켜 왔다.

한국과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에 속한 나라에서 사회지출의 비중과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부담과 지출 수준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출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출 수요에 대한 대응의 방향, 정도, 속도 모두가 정책적 선택의 대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지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지출 수요에 대한 대응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사회지출 비중과 사회적 위험의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2절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비교

1. 사회적 위험의 다양한 유형

이 절에서는 앞 절의 국가군 구분을 바탕으로 지출 - 따라서 부담 - 이 높은 국가군에서 사회적 위험이 낮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지출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하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사회지출 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사회적 위험의 수준은 각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정책의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높아진 사회지출의 결과로 사회적 위험이 낮은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²⁰⁾와 웰빙 데이터베이스(well-being database)²¹⁾에 포함된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을 비교할 것이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표의 내용이 사회적 위험과 사회정책의 핵심과 맞닿아 있어서이지만, 무엇보다 국가 또는 국가군 간 비교에 적합한 형태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자료의 지표 영역이 상호 중복됨을 고려하고, 비교적 많은 국가와 긴 시계열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택하였다.

이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살펴볼 것이

20)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 OECD Publishing.

21) OECD. (2024).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OECD Publishing.

다. 22) 첫째는 소득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위험은 빈곤과 불평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험을 어떤 시점에서 파악하고 측정하는가에 따라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사이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영역의 위험에서는 정부의 사회지출과 조세 부과,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 부과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계층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사회적 위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지표는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그리고 지니계수를 이용할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노동 시장 위험 영역이다. 대표적인 위험지표는 실업률이다. 최근 들어서는 실업의 위험과 더불어 불완전 고용이란 위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불완전 고용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거나 시간당 임금이 높지 않아 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 즉 전일제(full-time) 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 임금의 2/3 이하인 근로자의 비율을 위험지표로 사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주거 영역이다. 주거 영역의 핵심 지표로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과 과밀주거 가구 비율(overcrowding rate)을 사용할 것이다.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주거비²³⁾로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전체 가구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이다. 과밀주거 가구는 가구의 연령이나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방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한다.²⁴⁾

22) 이하에서 소개되는 각 지표의 정의와 자료원에 대해서는 OECD(2020)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 and Metadata, OECD를 참조할 것.

23) 주거비에는 집세와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상환액,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된다. (OECD, 2024e, Society at A Glance, p.94)

네 번째는 건강 영역이다. 건강 영역의 대표적 지표로는 출생 시의 기대 수명과 주관적인 건강 상태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출생시 기대 수명은 길수록 사회적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보고한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16세 이상 인구 중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나쁜 편”이나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인구의 비율을 주관적으로 인지된 나쁜 건강 위험으로 간주하였다.²⁵⁾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위험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위험 지표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 위험지표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²⁶⁾

이 밖에도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더 많은 지표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빈곤이나 실업 등 이른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이외에 새롭게 주목받는 사회적 위험 관련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별 위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군 사이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나머지 다양한 위험 지표에 대한 비교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장에서

24) OECD. (2025. 10).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25) OECD. (2024d).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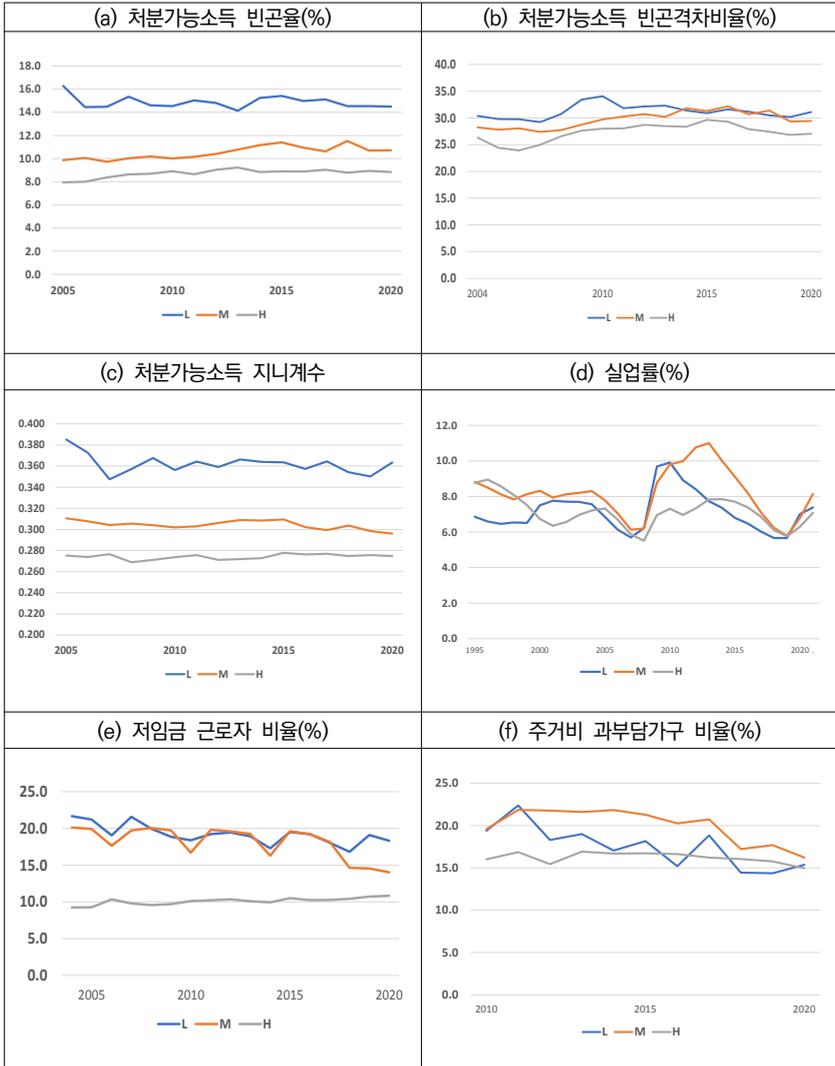
26) OECD. (2024d).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다루는 사회적 위험이 이후 3부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사회적 위험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차이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데이터의 가용성이지만, 개념적으로는 한 사회에게 위험 요인이 개별 가구나 개인에게는 반드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 같은 지표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가구나 개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타인의 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반드시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사회(국가)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한 사회가 처한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얼마든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검토되는 사회적 위험은 다양한 위험들 가운데 대표적 일부이며 맥락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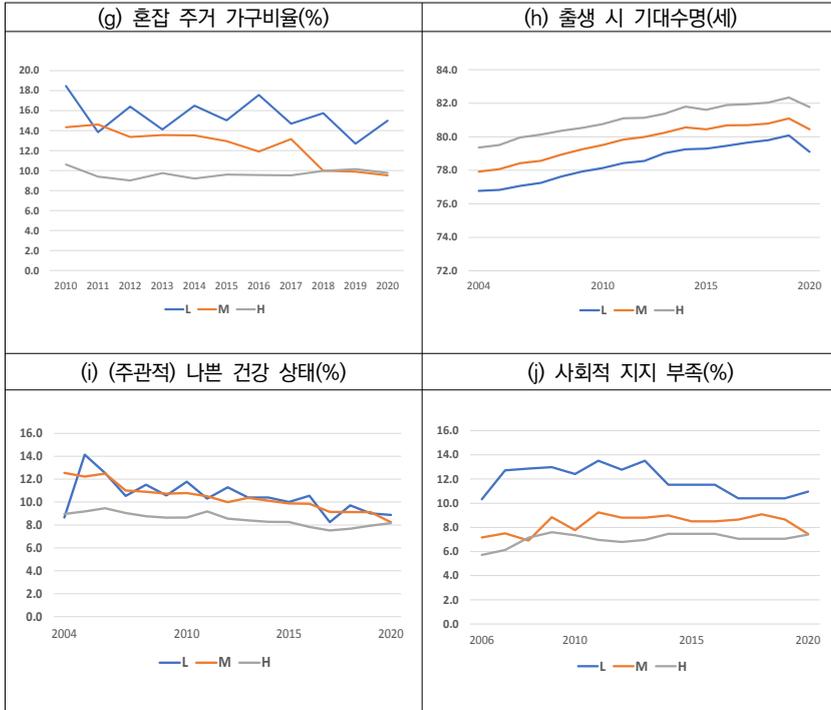
2.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비교

[그림 3-7]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위험들을 국가군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패널 (a)부터 (j)까지 모든 지표에서 국가군 사이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볼 수 있는 출생시 기대수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사회적 위험은 고부담-고지출 국가군 < 중부담-중지출 국가군 <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그림 3-7]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 계속



주: 그림에서 L, M, H는 각각 저부담-저지출, 중부담-중지출,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을 의미함.
출처: "OECD Social Indicators," <https://data-explorer.oecd.org/?!c=en>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사회적 위험 수준의 전반적인 차이와는 별개로 차이의 구체적 양상은 사회적 위험마다 다소 다르다.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출생시 기대수명 등은 세 국가군 사이에 차이가 뚜렷하고 시간이 지나도 격차가 유지되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빈곤격차 비율이나 저임금근로자 비율, 건강 상태가 나쁜 인구 비율 등에서는 중부담-중지출 국가군과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차이가 크지 않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비율에서는 저부담-저지출 국가군과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이 역전되기도 한다. 실업률은 세 국가군의 수준과 변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²⁷⁾ 요컨대

사회적 위험은 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군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3. 사회적 위험의 집계치 비교가 갖는 한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장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 인지를 유추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사회지출이 각 위험과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 각국의 사회지출은 각 영역별, 분야별로 배분되며 그 배분 결과가 각각의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출의 영역별 배분까지를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량적으로 파악된 사회지출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 수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영역별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지출의 계층별 배분이다. 국가군의 구분에서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이 고려되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담과 지출은 각 국가를 단위로 집계된 지표였다. 실제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각 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사회지출의 결과 개별 가구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현금 및 현물)는 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고려되지 않았다.

사회적 위험도 마찬가지다. 이 절에서 검토된 사회적 위험은 개별 국가 단위로 관측된 위험들이다. 그런데 사회적 위험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빈곤의 위험을 생각해도 이 점은

27) [그림 3-7]의 대부분의 그래프에서 2020년은 예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이 모든 국가군에서 급격히 떨어졌고 실업률은 모든 국가군에서 급증했다. 모두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한다.

분명하다. 모든 소득 계층이 동일한 빈곤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나쁜 건강 상태가 연령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사회적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위험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문제이다.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의 집계치는 사회 계층들 사이에 사회지출의 효과와 사회적 위험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결국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계층 간 분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계층이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 또는 자산 수준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위험과 사회지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필요하며,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과 부담,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3부의 주제이다. 하지만 3부의 본격적인 미시적 분석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집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의 계층 간 분포를 비교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계층별 순수혜 비교 분석

제1절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특징

제2절 소득 계층별 순수혜 배분 비교

제3절 가구 유형별 순수혜 배분 비교

제4절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

제 4 장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계층별 순수혜 비교 분석

제1절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특징

1. 국민계정 집계자료의 특징

가. 미시자료와 집계자료

3장에서 각 국가의 사회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 수준을 바탕으로 국가군을 구분하였고 국가군별로 사회적 위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지출은 정부의 지출 가운데 한 종류인데 민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구나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복지지출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른 영역의 정부지출과 다른 점이다. 즉 사회지출은 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출이고 복지 제도의 수혜자인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복지 급여, 즉 수혜(benefit)이다. 부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간주되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별 가계나 기업이 부담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은 부담인 것이다.

계층별 수혜와 부담을 비교할 때 필요한 것은 계층을 구성하는 개인별로 복지급여가 얼마이고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순수혜의 배분을 사회적 위험의 배분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의 단위와 수혜의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혜와 부담을 미시적 단위에서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즉 가구 또는 개인 단위로 소득, 지출을 조사한 미시조사자료가²⁸⁾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미시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있고, 특히 고소득 집단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득의 분포나 고소득층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둘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 수혜는 미시 조사자료에 공적이전소득이란 항목으로 조사 되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 제도는 공적연금이나 아동수당, 공공부조제도 등 주요 제도에 국한된다. 급여액이 적거나 대상자 규모가 작은 제도들의 수혜 실태는 충분히 포착되지 못한다. 셋째, 어떤 집단이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항목도 충분히 하더라도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의 미시 조사가 응답자에 대한 설문(survey)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사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된 데이터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가구나 개인 단위의 조사에서 제외되는 모든 제도들의 급여액이 정부의 지출액에는 포함되어 있다. 현금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서비스 포함)의 형태로 지출된 급여액도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의 집계 과정에서 공적인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도 쉽다.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집계된 집계 자료(혹은 거시 자료)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한계는 국민경제를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이 세분되고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집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 국민계정을 이용한 계층별 가구 소득자료

각 데이터의 이러한 장단점을 조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28) 대표적인 예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나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들 수 있다.

과제였다. 최근 OECD(2024c)는 국민계정 자료를 미시자료와 조화시킨 통계를 작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고 그 결과 일부 실험적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이 데이터는 국민계정 작성 과정에서 집계된 소득과 지출이 가계 집단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계층 구분의 기준에는 소득, 가구 유형 등이 채택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은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5개 분위로 나누어져 있다. 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가구 유형 계층은 가구원의 수와 연령대 구성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이는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자료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국민계정 자료와 미시 자료를 조화시켜 작성되는 실험적 자료이다. 따라서 3장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국가의 데이터가 작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국가별로 시계열도 차이가 크다. 그러나 집계자료와 미시자료의 장점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²⁹⁾ 이 자료가 3부의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미시자료와 다른 중요한 장점은 현물수혜의 계층 간 배분 실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 만큼 현금 순수혜의 배분과 현금 및 현물 순수혜의 배분을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가구 소득을 집계할 때 그 구성항목은 <표 4-1>과 같다. 국민계정의 소득 구분 범주에서 총 국민소득(national income)에 해당하는 일차 소득(primary income)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의 합에 해당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일차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³⁰⁾을 빼고 현금 급여³¹⁾와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값이다. 그리고

29) 이 데이터의 작성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는 OECD(2024c)를 참조할 것.

30) <표 4-1>에서 사회보장기여는 수입 항목(8번)과 지출항목(9번)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하 분석에서는 지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사회보장기여로 계산하였다.

31) <표 4-1>에는 현금급여가 수입 부분(10)과 지출부분(11)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분석에서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급여액으로 계산하였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현물 급여 총액을 더한 값이다. <표 4-1>에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분석을 위해서 시장소득 범주를 별도로 구분할 것이다.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값으로 정의할 것이다.³²⁾

<표 4-1> 국민계정 자료에서 가구 소득 및 저축 항목의 구분

구분	항목	해석	참고
1	Balance of primary incomes, gross / National income, gross	일차소득	1=2+3+(4-5)
2	· Operating surplus and mixed income, gross	사업소득	
3	· Compensation of employees	근로소득	
4	· Property income(revenue)	재산소득(수입)	재산소득
5	· Property income(expenditure)	재산소득(지출)	=4-5
6	Disposable income, gross	처분가능소득	6=1-7-(9-8) +(10-11)+12
7	· 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	조세	
8	· Net social contributions (revenue)	사회보장기여(수입)	사회보장기여
9	· Net social contributions (expenditure)	사회보장기여(지출)	=9-8
10	· Social benefits other than social transfers in kind (revenue)	현금급여(수입)	현금급여
11	· Social benefits other than social transfers in kind (expenditure)	현금급여(지출)	=10-11
12	· Other current transfers (revenue-expenditure)	사적이전소득	
13	Adjusted disposable income, gross	조정처분가능소득	13=6+14
14	· Social transfers in kind	현물급여합계	14=15+16+17
15	· Social transfers in kind	현물급여_보건의료	
16	· Social transfers in kind	현물급여_교육	
17	· Social transfers in kind	현물급여_기타	
18	Saving, gross	저축	18=13+19-20
19	· Adjustment for the change in pension entitlements	연금수급권 변화	
20	· Actual individual consumption	소비	

출처: OECD(2024c)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32) <표 4-1>의 사적이전소득 항목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로 정의된 셈이며, 이는 미시 자료 분석에서의 시장소득(market income)의 정의와 일치한다.

2.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순수혜의 정의

이 장의 분석에서는 <표 4-1>의 조세(7)와 사회보장기여(=9-8)의 합한 금액을 가구의 '부담'으로 정의할 것이다. 또한 현금급여를 현물 수혜로, 현물 급여를 현물 수혜로 지칭할 것이다. '순수혜'는 수혜에서 부담을 제외한 값이다. 수혜의 범위를 현금 수혜로 국한하여 정의할 수도 있고 현금수혜까지 포함한 값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순수혜 역시 현금순수혜만 계산할 수도 있고 현물을 포함한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값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소득 계층별 순수혜 배분 비교

1. 순수혜의 크기 비교

이 절에서 소득계층별 순수혜의 분포를 비교할 때 비교 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010년대 중후반에 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 중 16개 국가이다.³³⁾ 16개 국가와 국가별로 분석 대상 시점은 <표 4-2>와 같다. <표 4-2>는 각 분위별로 시장소득에 대비하여 현금수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국가의 순서는 1분위 가구에서 현금 순수혜 비율이 높은 순서이다. 첫 번째 순위는 벨기에(2019년)인데, 1분위 가구의 현금 순수혜는 시장소득의 90%에 이른다. 16개 국가 중 8개국에서 1분위의 현금 순수혜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한국은 10%로 13번째다. 2분위의 시장소득 대비 순수혜

33) 자료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코스타리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율을 비교할 때도 한국은 0.6%로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2분위까지 순수혜 비율이 양수이다. 즉 2분위까지 수혜가 부담보다 크다. 예외는 멕시코와 이탈리아이다. 두 나라는 1분위에서도 수혜보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포르투갈은 3분위에서도 수혜가 부담보다 크다.

〈표 4-2〉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순수혜 비율(1분위의 비율 순)

(단위:%)

순위	국가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벨기에	2019	90.9	27.5	-2.1	-24.6	-32.9
2	아일랜드	2016	89.8	23.3	-7.1	-22.1	-23.8
3	캐나다	2019	89.6	22.4	-4.2	-20.3	-27.6
4	호주	2017	88.0	26.0	-1.4	-12.1	-20.8
5	체키야	2019	69.4	36.7	-5.2	-27.8	-33.9
6	프랑스	2016	64.8	6.8	-8.7	-18.8	-26.2
7	스웨덴	2015	52.3	46.0	-9.0	-22.3	-28.2
8	영국	2017	51.7	27.9	5.5	-11.1	-30.7
9	네덜란드	2019	47.1	22.1	-16.9	-29.6	-36.2
10	뉴질랜드	2015	41.5	11.9	-12.2	-18.5	-12.6
11	포르투갈	2017	35.9	18.3	0.4	-9.3	-7.1
12	슬로베니아	2019	32.0	12.7	-4.1	-14.5	-24.1
13	한국	2019	10.0	0.6	-6.9	-13.0	-20.7
14	미국	2016	9.0	0.7	-3.4	-10.4	-24.2
15	멕시코	2018	-1.2	-2.6	-4.6	-6.3	-5.0
16	이탈리아	2019	-3.1	-4.9	-7.1	-13.1	-8.2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 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 \[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 =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 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 [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 =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현금은 물론 현물 수혜까지를 포함하여 순수혜 비율을 계산했을 때의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2>와 비교해 볼 때 현물 수혜의 비율은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현금 수혜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보면 <표 4-2>에서 1분위의 현금수혜 비율은 10.0%였지만 <표 4-3>에서 현금과 현물수혜를 합한 값의 비율은 78.8%이다. 즉 현물수혜의 크기는 시장소득 대비 68.8%인 것이다.

현물수혜를 포함하여 계산한 1분위의 순수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다(271.6%). 상위 10개국에서 순수혜의 비율은 100%를 넘는다. 모든 국가에서 3분위까지는 순수혜의 비율이 양수이다. 4분위에서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갖는 국가가 음(-)의 값을 갖는 국가보다 많다. 즉 현금 순수혜와 달리 현물 순수혜는 더 많은 소득계층이 양(+)의 값을 갖는다. 사회보장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될 때는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서비스 등 현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는 중산층까지를 포괄하거나 소득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1분위에서의 순수혜 비율이 78.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한다. 현금 순수혜의 비율로 비교한 순위와 동일하다. 2분위에서의 비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은 4분위까지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갖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표 4-3〉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 순수혜 비율(1분위의 비율 순)

(단위:%)

순위	국가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스웨덴	2015	271.6	157.0	35.3	3.9	-15.3
2	벨기에	2019	246.6	86.7	30.0	-7.6	-25.0
3	호주	2017	241.9	84.4	26.4	3.1	-14.5
4	캐나다	2019	241.9	79.7	27.4	-1.4	-18.5
5	네덜란드	2019	238.8	103.2	17.7	-9.2	-26.4
6	아일랜드	2016	224.9	75.8	19.7	-7.5	-15.7
7	프랑스	2016	179.8	49.3	17.2	-0.8	-16.6
8	영국	2017	149.2	77.3	32.0	4.2	-25.3
9	뉴질랜드	2015	148.4	55.0	11.8	-3.1	-3.9
10	체키아	2019	134.5	79.1	20.5	-12.4	-26.4
11	포르투갈	2017	93.6	53.9	21.3	4.0	0.0
12	슬로베니아	2019	86.5	48.5	19.2	1.0	-15.7
13	한국	2019	78.8	35.4	15.2	1.1	-13.7
14	이탈리아	2019	45.6	20.5	10.9	-0.8	-1.4
15	멕시코	2018	36.3	20.6	10.8	3.3	-2.6
16	미국	2016	29.0	18.6	10.5	-1.6	-22.1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표 4-2〉와 〈표 4-3〉을 보면 1분위에서 순수혜의 비율 순위가 〈표 3-2〉의 국가군 구분과 분명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현금 순수혜의 비율이, 호주는 현금과 현물의 순수혜 비율이 높은 국가인데, 〈표 3-2〉의 국가군 구분에서는 두 나라 모두 저부담 - 저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고부담-고지출 국가로 구분되었던 이탈리아는 1분위

현금 순수혜의 비율이 음수였고 현금과 현물을 합한 순수혜 비율도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낮은 편이다.

2. 순수혜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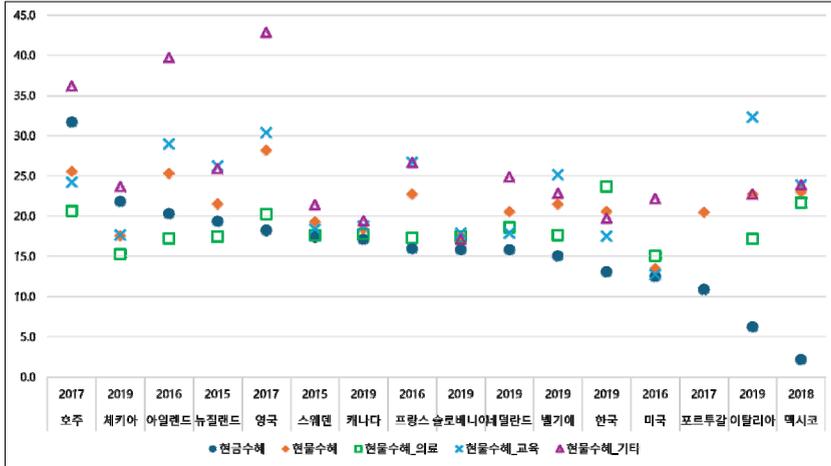
가. 수혜와 부담의 배분

이상의 분석은 순수혜의 크기를 각 분위별 시장소득에 대비한 후 각 국가들 간에 비교한 것이다. 순수혜의 비율은 순수혜의 규모는 물론 각 분위의 시장소득 값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혜의 배분 실태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경제 전체의 순수혜 대비 각 분위의 순수혜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즉 전체 순수혜에 대한 각 분위의 순수혜 점유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점유율을 중심으로 국가별 배분 실태를 비교 하도록 한다.

먼저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을 각각 살펴보자. [그림 4-1]과 [그림 4-2]는 각각 1분위의 수혜 점유율과 부담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4-1]은 1분위의 현금 수혜 점유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한 그림인데,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31.7%)이다. 한국은 13.1%로 1분위의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현금지원 제도들이 대부분 선별적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분위의 현금수혜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림 4-1] 1분위의 현금 및 현물 수혜의 점유율 비교(현금 수혜 점유율이 높은 순)

(단위: %)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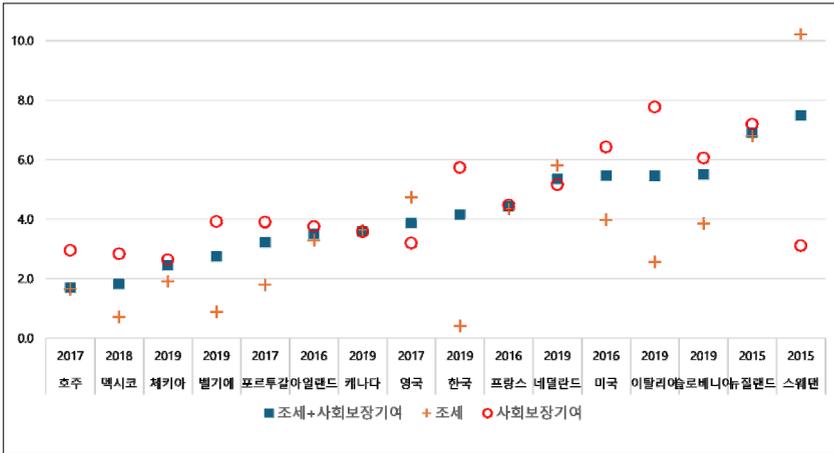
현물 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28.2%)이다. 특히 영국은 의료와 교육을 제외한 기타 부문의 현물 수혜에서 1분위의 점유율이 42.8%로 매우 높다. 한국의 현물 수혜 1분위 점유율은 20.6%로 [그림 4-1]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21.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 부문의 현물 수혜에 국한한다면 한국은 1분위 점유율이 23.7%로 가장 높다.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1]을 보면 3장에서 살펴본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이라고 해서 1분위 점유율의 비율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던 호주와 아일랜드의 경우 현금 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높지만 동시에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의 1분위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멕시코의 현금 수혜 1분위 점유율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현금 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대략 15% ~18%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4-2] 1분위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사회보장기여의 점유율이 낮은 순)

(단위: %)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1분위의 수혜 점유율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담의 점유율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2]는 1분위의 부담 점유율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1분위의 부담 점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1.7%)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7.5%)이다. 호주는 [그림 4-1]에서 현금 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고 [그림 4-2]에서는 1분위 점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멕시코는 현금수혜의 점유율도 낮고 부담의 점유율도 낮다.

한국은 1분위 부담 점유율이 4.2%로 [그림 4-2]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에

해당한다. 1분위의 조세 부담률은 0.4%로 멕시코(0.7%)보다 낮은 최저 수준이고, 사회보장기여(사회보험료)의 점유율은 5.7%로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인 4.5%보다 높은 편이다. 반대로 스웨덴은 1분위의 조세부담 점유율은 높고 사회보장기여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조세 배분에서 1분위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은 과세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비과세 대상자의 비중이 크고 그에 따라 1분위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난다.

나. 순수혜의 배분

이제 수혜와 부담의 분포를 바탕으로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율이 전체 순수혜의 합 대비 해당 분위의 순수혜 값으로 정의되는 만큼 국민경제 전체의 순수혜가 양수 또는 음수 값을 갖는가에 따라 비율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별로 총 순수혜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4-4>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순수혜 총액을 보여준다. 총액의 부호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화폐 단위를 통일하지는 않고 각 국가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였다. 모든 화폐액은 십억 단위로 표기하였다.

<표 4-4> 국가별 총 순수혜 규모

(단위:십억×국가별화폐단위)

국가	연도	현금 순수혜	현금+현물 순수혜	화폐 단위
호주	2017	-92.3	186.2	AUD
벨기에	2019	-56.8	17.9	EUR
캐나다	2019	-215.4	134.5	CAD
체키아	2019	-579.5	77.4	CZK
프랑스	2016	-217.1	128.9	EUR

국가	연도	현금 순수혜	현금+현물 순수혜	화폐 단위
아일랜드	2016	-12.6	11.5	EUR
이탈리아	2019	-106.7	91.6	EUR
한국	2019	-168,691.5	58,415.6	KRW
멕시코	2018	-862.4	779.3	MXN
네덜란드	2019	-130.1	12.3	EUR
뉴질랜드	2015	-14.7	17.4	NZD
포르투갈	2017	-1.8	20.4	EUR
슬로베니아	2019	-3.6	2.2	EUR
스웨덴	2015	-386.1	455.5	SEK
영국	2017	-165.7	133.9	GBP
미국	2016	-2,281.3	-1,227.0	USD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한 국가에서 가구가 납부한 조세가 모두 사회보장 현금 급여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의 현금 순수혜 총액이 음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물 수혜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가구의 순수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수이다. <표 4-4>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의 현금 및 현물 순수혜 합은 양수이다. 각 분위의 순수혜 점유율은 해당 분위의 순수혜 합을 전체 순수혜 합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므로 전체 순수혜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분위의 점유율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 분위의 수혜가 부담보다 큰 경우를 양수로 표기하기로 하자.

이런 방식으로 분위별 현금 순수혜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 <표 4-5>이다. 이 표는 1분위의 현금 순수혜 점유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가 정렬되어 있다. 현금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155.3%)이고

다음 호주, 아일랜드의 순이다. 포르투갈은 2분위 순수혜 점유율도 매우 큰 양수 값(129.8%)을 갖는다. 반면 4분위와 5분위의 점유율 절댓값도 매우 크다. 즉 수혜와 부담이 각각 저소득과 고소득 분위로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분위 점유율은 4.0%로 음의 점유율을 갖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이탈리아와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순위이다. 한국의 2분위 점유율(0.5%)도 미국(0.4%)보다 약간 높다.

〈표 4-5〉 현금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1분위의 점유율 순)

(단위:%)

국가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포르투갈	2017	155.3	129.8	5.0	-161.2	-228.8
호주	2017	44.0	32.6	-3.1	-39.0	-134.4
아일랜드	2016	32.2	16.5	-11.2	-52.0	-85.4
영국	2017	27.0	23.8	6.9	-21.9	-135.8
체키아	2019	21.2	20.0	-5.2	-43.8	-92.3
프랑스	2016	20.4	5.1	-10.2	-31.7	-83.6
뉴질랜드	2015	18.3	12.4	-23.1	-49.6	-58.0
캐나다	2019	17.6	13.8	-4.6	-35.4	-91.4
슬로베니아	2019	16.7	11.9	-6.0	-32.2	-90.4
벨기에	2019	16.5	13.3	-1.8	-36.6	-91.5
스웨덴	2015	10.0	20.0	-9.4	-37.0	-83.6
네덜란드	2019	5.5	6.5	-11.2	-31.0	-69.8
한국	2019	4.0	0.5	-8.6	-24.1	-71.8
미국	2016	2.8	0.4	-2.8	-11.6	-88.8
이탈리아	2019	2.7	-7.7	-14.7	-37.3	-37.5
멕시코	2018	-1.4	-4.8	-12.0	-23.6	-58.2

주: 양수는 수혜)부담, 음수는 수혜(부담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음.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국가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저부담-저지출 국가들은 1분위 점유율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쪽에 편중되어 있다.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이더라도 순수혜의 배분 양상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부담-중지출 국가군과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은 중간 순위에 올라 있는데, 이들 국가군에서는 일반적으로 1분위와 2분위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다. 예외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분위 점유율(20.4%)과 2분위의 점유율(5.1%)의 차이가 크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2분위의 점유율이 1분위의 점유율보다 큰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3분위 부터는 순수혜 점유율이 음수인데 예외는 포르투갈과 영국이다. 3분위의 점유율은 같은 국가군 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고부담-고지출 국가군 중 벨기에의 경우 3분위 점유율은 -1.8%인데 비해 프랑스는 -10.2%이다.

〈표 4-6〉은 현금과 현물을 합하여 계산한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앞서 〈표 4-4〉에 따르면 모든 나라에서 현물포함 순수혜의 총액은 양수이지만 미국은 유일한 예외이다. 따라서 미국은 순수혜가 양인 분위에서 순수혜 점유율이 음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점유율이 양수로 표기되도록 조정하였다.

7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표 4-6〉 현금 + 현물 순수혜의 분위별 점유율(1분위의 점유율 순)

(단위: %)

국가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체키아	2019	307.4	322.9	153.2	-145.9	-537.5
네덜란드	2019	296.6	321.5	124.0	-102.4	-539.7
벨기에	2019	141.7	133.3	81.2	-35.9	-220.3
영국	2017	96.4	81.6	50.4	10.2	-138.6
프랑스	2016	95.4	61.8	34.0	-2.2	-89.1
한국	2019	91.6	84.8	55.1	5.9	-137.4
아일랜드	2016	88.2	59.0	34.0	-19.5	-61.8
캐나다	2019	76.0	78.6	47.3	-3.9	-98.0
슬로베니아	2019	72.8	73.0	45.7	3.6	-95.1
호주	2017	60.0	52.4	28.8	5.0	-46.3
뉴질랜드	2015	55.1	48.2	18.8	-7.1	-15.0
멕시코	2018	46.9	42.1	30.9	13.5	-33.4
이탈리아	2019	46.0	37.7	26.3	-2.7	-7.3
스웨덴	2015	44.1	57.7	31.1	5.5	-38.5
포르투갈	2017	36.2	34.3	23.1	6.2	0.1
미국	2016	16.8	21.4	15.7	-3.3	-150.6

주: 양수는 수혜<부담, 음수는 수혜<부담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음.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현물을 포함한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체키아(체코)로 점유율이 307.4%이다. 체키아와 네덜란드는 2분위의 점유율도 300%가 넘는다. 1, 2분위의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4, 5분위에서 순수혜의 점유율이 매우 낮는데, 체키아의 경우 5분위의 점유율은 -537.5%, 네덜란드의 5분위 점유율은 -539.7%이다. 1분위의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분위에서도 부담이 수혜보다 큰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1분위의

점유율이 91.6%로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98.2%)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분위의 순수혜 점유율은 -137.4%이다.

현물을 포함한 순수혜의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1분위의 점유율이 반드시 2분위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1분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체키아와 네덜란드에서도 2분위의 점유율이 1분위보다 크다.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특징은 3분위는 물론 4분위에서도 순수혜 점유율이 양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4분위 5.9%)을 포함하여 영국, 호주, 스웨덴, 포르투갈 등이 4분위에서 양(+)¹⁾의 점유율을 보인다.

국가군의 분포를 보면 적어도 1분위 점유율과 국가군 사이에 뚜렷한 대응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증부담-증지출 국가군과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의 1분위 점유율이 높지만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이면서도 1분위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즉 고부담-고지출 국가군 안에서도 현금 및 현물 순수혜의 배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4-5>와 <표 4-6>을 비교할 때 분위 간 점유율의 차이가 큰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은 현금 순수혜의 1, 2분위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현물까지 포함할 경우 1분위의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런 나라들은 저소득층에 수혜의 집중이, 고소득층에는 부담의 집중이 심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분위와 고소득분위 사이에 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수혜와 부담의 집중이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현물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현물 포함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은 매우 높다. 한국은 현금 순수혜의 1분위 점유율은 낮았으나 현물포함 순수혜의 점유율은 중간 정도로 높아진

경우이다. 의료 현물급여의 1분위 점유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원인인데, 이는 건강보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비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 비중의 수준이 유사한 국가군 안에서도 순수혜의 배분실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양의 순수혜가 1, 2분위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 분위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대신에 상위 소득분위의 점유율도 크게 낮지 않은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순수혜의 분위별 배분 실태를 현금만 고려한 경우와 현물까지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보면 양상은 더욱 복잡하다. 저소득층의 현금 급여 점유율은 낮지만 현물 급여 점유율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의료분야의 현물 수혜처럼 특정 연령층에 따라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현물을 포함한 순수혜의 분포는 연령 집단의 소득 계층별 분포에 영향을 받기 쉽다. 하위 소득 분위에 고령층이나 아동 연령층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에 따라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현물 수혜의 계층별 분포는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3절 가구 유형별 순수혜 배분 비교

1. 순수혜의 크기

사회보장 급여의 배분은 소득 이외에도 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수혜의 배분에 중요한 고려 요인임은 틀림없지만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급여 대상자의 선정에서 연령, 성,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이외의 다른 특성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순수혜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절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순수혜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국가별로 비교할 것이다. 자료의 제공 실태가 2절에서 사용한 것과 달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3절의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비교 시점이 2018년으로 바뀌었다.

이 장의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에서 가구 유형은 <표 4-7>과 같이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³⁴⁾ 각 유형별 인구 비중이나 가구 비중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유형별 비중과 평균 소득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신 <표 4-7>에서는 각 유형의 시장 소득 점유율을 제시하였다.³⁵⁾

34) 여기서 성인은 18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연령층이다. 비노인은 노인이 아닌 성인, 즉 18세~64세의 성인을 의미한다.

35) 시장소득 점유율은 국민경제 전체의 시장소득 합계 대비 해당 유형 가구의 시장소득 합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어느 유형의 소득 점유율이 높은 것이 그 유형의 인구가 많아서인지 평균소득이 높아서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표 4-7〉 가구 유형 구분과 각 유형의 시장소득 점유율

국가 및 연도 가구 유형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2017	2019	2016	2018	2018	2015	2019	2015	2017	2016
1. 비노인 단독	9.1	12.9	14.7	14.6	5.9	6.4	9.0	14.6	8.2	10.0
2. 노인 단독	2.5	2.5	2.8	4.2	1.9	3.1	1.8	1.5	2.2	2.9
3. 성인 1명, 아동 1명	2.7	8.2	6.5	4.4	2.8	3.4	2.7	5.9	1.8	3.6
4. 비노인 커플, 아동 없음	20.1	17.5	20.4	12.1	10.3	21.9	13.2	20.1	28.5	23.9
5. 노인 포함 커플, 아동 없음	5.2	4.2	5.2	9.0	4.4	9.1	5.2	6.0	3.4	9.1
6. 커플, 아동 2명 이하	42.1	40.4	39.5	32.4	23.8	31.2	35.4	36.5	29.6	36.4
7. 커플, 아동 3명 이상	-	9.4	8.7	3.7	8.2	8.0	5.7	7.9	4.6	10.0
8. 기타	18.3	5.1	2.1	19.6	42.7	17.0	27.0	7.5	21.6	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소득 점유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노인 단독 가구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이 노인을 포함한 커플 가구이다.³⁶⁾ 소득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커플과 2명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이고 다음이 아동이 없는 근로 연령 커플이다.

〈표 4-8〉은 가구 유형별로 시장소득 대비 현금 순수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 간에 비교한 것이다. 순서는 평균 시장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 단독 가구의 순수혜 비율 순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스웨덴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 시장소득의 280.9%가 순수혜이다. 프랑스, 슬로베니아, 영국의 경우 시장소득의 두 배가 넘는 순수혜를 받고 있다.

〈표 4-8〉 가구 유형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순수혜 비율(노인 단독가구의 비율 순)

(단위: %)

국가	연도	가구 유형							
		비노인 단독	노인 단독	성인1 아동1	비노인 커플 아동0	노인포 함커플 아동0	커플, 아동2 이하	커플, 아동3 이상	기타
스웨덴	2015	-27.5	280.9	-15.5	-33.1	83.6	-28.9	-23.3	-17.4
프랑스	2016	-28.9	208.1	-7.0	-34.2	144.0	-34.9	-22.3	-0.2
슬로베니아	2019	-17.0	204.4	-21.2	-21.0	120.3	-29.1	-20.0	-18.4
영국	2017	-15.2	203.1	44.3	-24.9	192.9	-28.8	-20.6	-23.7
벨기에	2019	-25.5	143.8	-12.5	-28.4	137.8	-34.4	-27.2	-16.1
이탈리아	2018	-27.4	116.8	-26.0	-25.3	77.9	-29.6	-28.6	-6.8
뉴질랜드	2015	-13.4	81.6	18.4	-22.0	35.7	-21.5	-18.2	-11.5
미국	2016	-24.4	81.2	-0.2	-30.2	30.0	-23.6	-15.5	-14.2
호주	2017	-9.2	65.5	22.5	-16.6	29.9	-13.8	.	-6.2
멕시코	2018	-5.9	24.6	-3.3	-6.5	23.7	-10.3	-8.7	-4.6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36) 예외적으로 영국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커플 가구의 점유율이 더 낮다.

노인 단독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소득의 점유율이 낮은 또 다른 유형이 노인 포함 커플로만 이루어진(아동이 없는) 가구이다. 이 유형의 가구에서 시장 소득 대비 순수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영국(192.9%)이고, 다음은 프랑스(144.0%)이다. 영국은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포함 커플 가구의 순수혜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표 4-9〉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수혜를 포함한 순수혜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표 4-8〉과 마찬가지로 노인 단독 가구의 순수혜 비율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노인 단독가구의 순수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595.0%)이다. 스웨덴의 노인 가구 점유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다음 순위인 프랑스의 287.9%의 두 배가 넘는다. 스웨덴은 노인 단독 가구의 점유율과 노인을 포함한 커플 가구의 점유율 격차가 큰 점도 특징적이다.

〈표 4-9〉 가구 유형별 시장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 순수혜 비율(노인단독가구의 비율 순)
(단위:%)

국가	연도	가구 유형							
		비노인 단독	노인 단독	성인1 아동1	비노인 커플 아동0	노인포함 커플 아동0	커플, 아동 2이하	커플, 아동 3이상	기타
스웨덴	2015	-11.8	595.0	38.3	-21.3	164.6	-1.1	29.7	20.8
프랑스	2016	-13.7	287.9	35.0	-24.8	200.6	-17.9	11.0	35.8
영국	2017	-5.4	282.9	169.6	-18.2	265.2	-10.8	27.2	-8.6
슬로베니아	2019	-10.2	274.3	12.5	-13.4	163.0	-10.5	12.5	-4.6
벨기에	2019	-11.1	228.9	26.3	-18.9	202.5	-18.2	8.7	9.9
이탈리아	2018	-23.3	152.4	-3.1	-19.8	110.2	-12.9	2.6	6.5
호주	2017	6.8	141.6	95.3	-8.7	83.3	7.9	.	12.1
뉴질랜드	2015	0.1	132.0	64.5	-12.8	67.3	-3.3	10.5	10.0
미국	2016	-22.5	88.0	15.4	-29.1	33.7	-14.9	4.8	-5.9
멕시코	2018	-4.0	26.9	12.9	-3.7	27.1	-1.3	11.3	5.2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시장소득 점유율이 가장 높은 커플과 2명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 유형을 비교해 보면 호주가 유일하게 순수혜 비율이 양수이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음의 순수혜 비율을 보인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 커플과 3인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 유형에 관해 별도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커플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 유형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커플과 2인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들의 순수혜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수이지만 커플과 3인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의 순수혜 비율은 모두 양수라는 점도 흥미롭다. 아동이 2명을 초과하면서 현물 포함 수혜의 크기가 부담의 크기를 초과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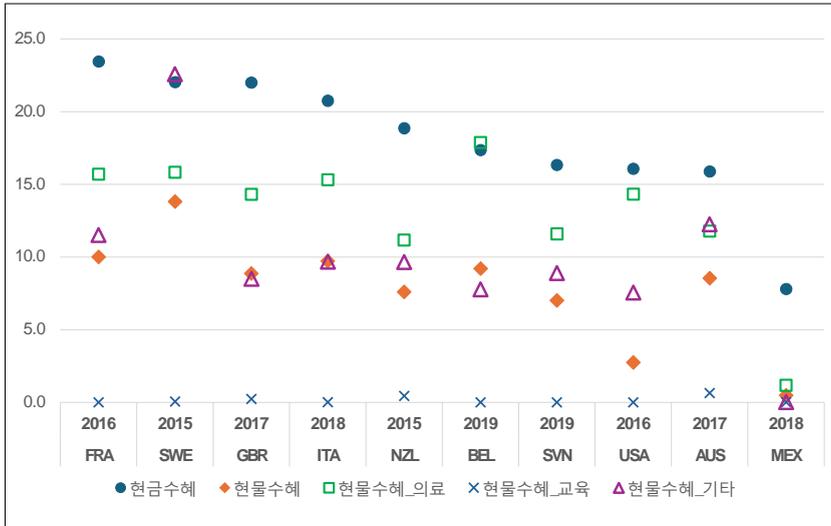
2. 순수혜의 배분

가. 수혜와 부담의 배분

순수혜의 배분 실태는 가구 유형별 순수혜의 점유율로 확인할 수 있다. 순수혜의 점유율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수혜와 부담의 배분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3]은 노인 단독 가구의 각 수혜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노인 단독 가구는 국민경제 총 현금 수혜의 약 15~24%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23.5%)이다. 멕시코는 예외적으로 7.8%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현물 수혜 가운데 의료는 노인 단독가구의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높고 반면 교육 분야는 거의 0%에 가깝다. 의료 수혜의 점유율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4-3] 노인 단독 가구의 수혜 점유율 비교(현금 수혜 점유율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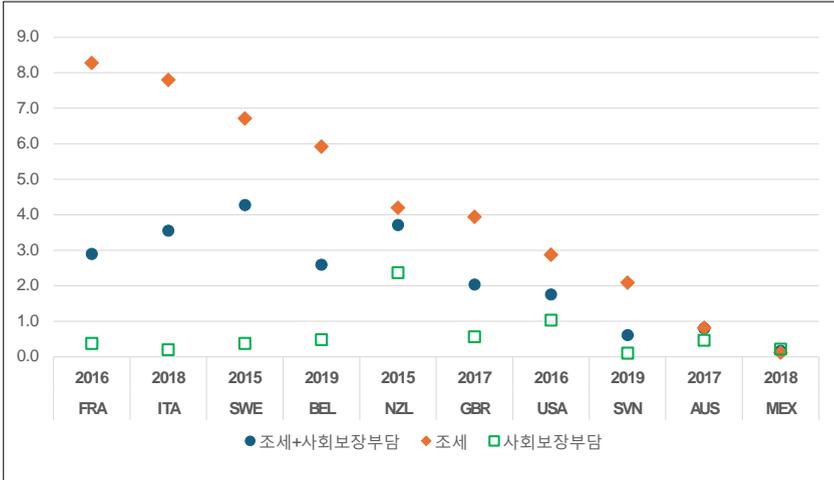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부담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4]에서 보듯이 조세 부담의 점유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뚜렷한 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고부담-고지출 국가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의 조세 부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저부담-저지출 국가인 호주, 멕시코 등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의 조세 부담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보장 부담의 점유율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1% 이하의 수준이다.

[그림 4-4] 노인 단독 가구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 점유율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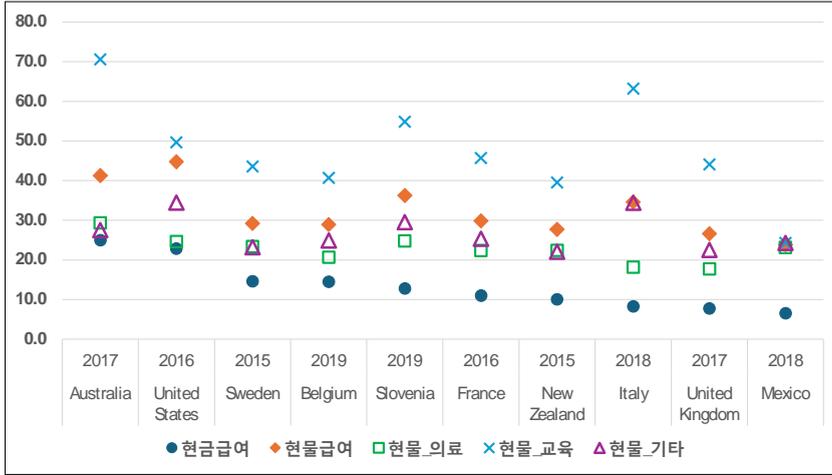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번에는 반대로 [그림 4-5]에서 가구 유형들 가운데 시장소득 점유율이 높았던 커플과 2명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 유형의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자. [그림 4-5]의 국가는 현금 수혜 점유율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호주와 미국 등 저부담-저지출 분위에 해당하는 국가의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높고 다른 국가들은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 멕시코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림 4-5] 커플 + 아동(2명 이하) 가구의 수혜 점유율 비교(현물 수혜 점유율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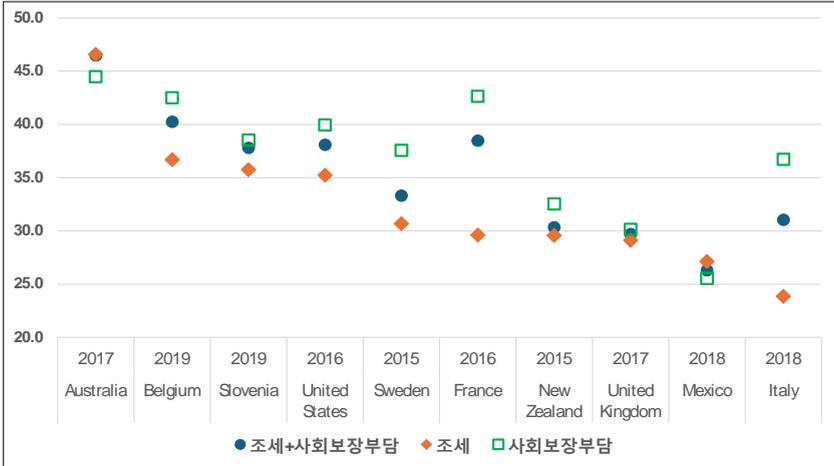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런데 이 유형은 현금 수혜의 점유율보다 현물 수혜의 점유율이 더 높고 국가 간 편차도 더 크다. 호주와 이탈리아에서 이 유형 가구의 교육 현물 급여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던 호주와 미국에서 의료 현금 급여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수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부담의 점유율도 높다([그림 4-6] 참고). 호주에서 이 유형의 조세 점유율은 46.6%로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인 미국보다 10%p 이상 높고 고부담-고지출 국가인 이탈리아보다 20%p 이상 높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조세부담의 점유율은 다른 고부담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사회보장부담금의 점유율은 조세 부담 점유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림 4-6] 커플 + 아동(2명 이하) 가구의 부담 점유율 비교(조세 점유율 순)

(단위: %)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나. 순수혜의 배분

이제 수혜와 부담을 모두 고려한 순수혜의 가구 유형별 배분 실태를 비교하여 보자. <표 4-10>은 현금 순수혜의 가구 유형별 점유율을, <표 4-11>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순수혜의 가구 유형별 점유율을 보여 준다. 두 그림 모두 노인 단독 가구의 점유율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³⁷⁾ 모든 국가의 현금 순수혜 총합은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순수혜가 양수인 가구 유형의 점유율은 음수로 표현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부호를 바꾸어 양수로 표기하였다.

37) <표 4-4>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탈리아의 2018년 현금 순수혜총액은 -104,379백만 유로, 현금 및 현물 포함 순수혜 총액은 96,738백만 유로이다.

8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표 4-10〉 가구유형별 현금 순수혜 점유율(노인단독가구 점유율 순)

(단위: %)

국가	연도	근로연 단독	노인, 단독	성인 1, 아동1명	근로연령 커플, 아동0	노인포함 커플, 아동 0	커플, 아동2명 이하	커플, 아동3명 이상	기타
이탈리아	2018	-48.5	60.3	-13.8	-37.3	85.1	-116.5	-13.0	-16.2
프랑스	2016	-30.3	41.5	-3.2	-49.7	53.3	-97.9	-13.8	0.0
영국	2017	-11.3	40.8	7.1	-64.3	59.4	-76.8	-8.6	-46.3
슬로베니아	2019	-13.6	33.2	-5.1	-24.7	56.0	-91.6	-10.1	-44.1
스웨덴	2015	-25.3	26.9	-5.8	-41.7	31.7	-66.2	-11.5	-8.2
뉴질랜드	2015	-9.1	26.9	6.6	-51.2	34.7	-71.4	-15.6	-20.8
호주	2017	-11.4	22.2	8.2	-45.5	21.2	-79.2	.	-15.4
벨기에	2019	-19.0	20.5	-5.9	-28.8	33.3	-80.5	-14.8	-4.8
미국	2016	-15.8	15.1	-0.1	-47.1	17.8	-56.0	-10.1	-3.8
멕시코	2018	-7.3	9.7	-1.9	-14.0	22.1	-51.7	-15.1	-41.7

주: 양수는 수혜<부담, 음수는 수혜<부담을 의미함.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w=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 순수혜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노인 포함 커플에 아동이 없는 가구이고, 다음으로 노인 단독 가구이다. 성인 1명과 아동 1명으로 구성된 가구(예, 한부모 가구)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순수혜 점유율이 양(+이기도 하고 음(-)이기도 하다.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노인이 포함된 커플 가구의 순수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영국은 고부담-고지출 국가인 슬로베니아나 스웨덴, 벨기에에 비해 두 유형의 순수혜 점유율이 더 높다. 순수혜의 점유율이 가장 작은 유형은 커플과 2명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인데, 이 유형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 또한 이탈리아이다. 같은 고부담-고지출 국가군 안에서도 이탈

리아는 순수혜 점유율의 가구 유형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표 4-11>은 현물을 포함한 순수혜의 가구 유형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현물 순수혜까지 포함한 경우 현금 순수혜만을 배분할 때에 비해 노인 단독 가구나 노인이 있는 커플 가구의 순수혜 점유율은 훨씬 커진다. 두 집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이고 다음이 프랑스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여전히 하위 순위를 보인다. 현금 순수혜의 배분과는 달리 성인 1명과 아동 1명으로 구성된 가구, 커플과 3명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의 순수혜 점유율이 모두 양수로 전환된다.

<표 4-11> 가구유형별 현금 + 현물 순수혜 점유율(노인단독가구 점유율 순)

(단위: %)

국가	연도	근로연 단독	노인, 단독	성인 1, 아동1명	근로연령 커플, 아동0	노인포함 커플, 아동 0	커플, 아동2명 이하	커플, 아동3명 이상	기타
벨기에	2019	-26.1	103.1	39.3	-60.6	154.7	-134.6	14.9	9.2
프랑스	2016	-24.2	96.7	27.1	-60.8	125.2	-84.7	11.4	9.2
이탈리아	2018	-44.5	85.0	-1.8	-31.5	129.8	-54.9	1.3	16.7
슬로베니아	2019	-13.2	71.9	4.8	-25.4	122.8	-53.2	10.2	-18.0
영국	2017	-4.9	70.3	33.8	-58.0	101.2	-35.6	14.1	-20.8
스웨덴	2015	-9.2	48.3	12.1	-22.8	53.0	-2.2	12.4	8.3
뉴질랜드	2015	0.0	36.7	19.5	-25.1	55.2	-9.3	7.6	15.3
호주	2017	4.2	23.8	17.2	-11.9	29.3	22.5	.	15.0
미국	2016	-27.1	30.5	6.7	-84.4	37.3	-65.7	5.8	-3.0
멕시코	2018	-5.6	11.7	8.3	-8.8	28.0	-7.1	21.6	51.9

주: 양수는 수혜<부담>, 음수는 수혜<부담>을 의미함.

출처: “국민계정,”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bp=true&snb=273&tm=household%20income&hc[Transactio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GDNA_INC_INC%40DF_INC_INC&df[ag]=OECD.SDD.NAD&df[vs]=1.0&dq=A.CAN.....XDC.....&pd=2019%2C2019&to[TIME_PERIOD]=false&vv=tb)에서 인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현물을 포함하는 순수혜 배분에서는 국가군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다. 스웨덴을 제외하면 고부담-고지출 국가군들은 가구 유형 간 순수혜 점유율의 격차가 큰 편이다. 반대로 호주, 미국, 멕시코 등 저부담-저지출 국가는 순수혜의 편차가 작다. 고부담-고지출 국가는 부담과 지출의 수준 뿐만 아니라 그 배분 양상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군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별 순수혜 배분을 분석할 때는 수혜와 부담 중 누락되는 부분 없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미시 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현물 수혜의 배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현금 수혜의 배분 양상과 의료 및 교육 현물 수혜의 배분 양상이 소득 분위마다 가구 유형마다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데에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가구 소득 집계자료가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3부의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한계는 이 자료가 실험적 데이터이고 작성 중인 데이터다 보니 많은 국가들의 긴 시계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의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만 일부 시계열이 제공되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 분위별 배분과 관련된 자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가구 유형별 배분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국가군별 순수혜의 배분과 풍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는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소득 계층(분위)이나 가구 유형은 사회보장 지출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집단 구분 기준이다. 그러나 성별, 연령대별, 산업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서 순수혜의 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소득 계층을 구분하더라도 2절과 같이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위 구분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분에 대한 별도의 집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이 미시자료를 활용할 때에 비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한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다양한 집단 구분을 교차 적용하여 순수혜 배분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의 2절과 3절의 분석을 예로 들더라도 노인 단독 가구 가운데 1분위인 가구와 5분위인 가구의 순수혜 배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제약은 순수혜의 배분을 위험의 배분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계자료상의 집단 구분에 맞추어 위험의 배분 실태를 분석하고 순수혜 배분과 비교하는 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한계는 엄밀히 말해 순수혜 배분 분석에 사용된 집계자료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자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위험 지표들에 대해 국가별 총량은 확인하기 쉽지만 집단별 위험의 수준과 분포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계자료를 이용한 순수혜의 분포는 분석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계측하고 분석할 수 없다면 본 연구의 분석 목표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순수혜의 배분과 위험의 배분실태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다. 이후 3부에서 이 방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부

국가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제5장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분석 방법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비교의 기본 틀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분포 측정

제3절 순수혜의 분포 측정

제 5 장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분석 방법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비교의 기본 틀

1. 소득 계층별 분포 비교: 시장소득 분위 이용

앞서 2부의 3장에서는 국가별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지출 및 부담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국가별 비교에서 더 나아가 국가 내에서 계층, 특히 소득 계층과 가구 유형별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집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위험의 분포를 분석할 수 없었다. 이하 3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시 조사 자료(micro survey data)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로 사회보장 순수혜와 위험의 분포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미시적 분석은 한 사회를 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즉 총량적 분석과 더불어 분배(distribution)나 배분(allocation) 상태(통칭하여 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3부 전체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어떤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한 국가를 여러 하위 집단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이나 가구처럼 기본적인 생활 단위 수준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가 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등 인구·사회적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 상태나 종사상 지위, 종사 산업 등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 계층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계층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은 사회적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제적 자원이다. 반대로 소득의 결핍과 부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보장 순수혜를 구성하는 부담과 (현금) 수혜는 가구의 최종 소득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어떤 기준보다 소득 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위험과 순수혜를 비교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은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전체 인구를 10개 분위로 나누는 것이다.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며, 10분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각 분위 안에는 동일한 수의 인구가 포함된다. 시장소득을 분위 구분의 기준 범주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부담과 수혜가 차감되기 이전의 소득 범주이기 때문이다.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를 비교할 때 순수혜가 포함된 소득범주를 이용하여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정부 지원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곤란하게 하므로 시장소득을 사용하여 계층을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비교 단위는 가구이다. 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가구는 개인들의 소득을 합하여 소비에 사용한다.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계층을 구분할 때는 가구별로 시장소득을 집계하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사용한다.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가구원 수에 따른 실제 소득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균등화 방법은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의 기본적 집계 단위가 가구인 만큼 사회적 위험도 가구 단위로 집계할 것이다. 어떤 위험은 가구 단위로 정의되고 측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위험은 개인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위험을 집계할 때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의 소득을 가구 단위로 집계할 때에는 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면 되지만, 위험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 사전적 위험과 사후적 순수혜

2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은 사전적(事前的) 위험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사후적(事後的) 위험으로 측정될 수도 있다. 사회적 위험을 소득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위험은 소득 감소 이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소득 감소가 발생할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소득의 감소 이 외에 다른 부정적 사건들(예컨대 실업, 건강 악화 등)로 확장하여 보면 사전적 위험은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후적으로 측정된 위험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빈곤한 상태, 실업인 상태,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위험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런데 위험을 사후적 위험으로 규정할 경우 몇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첫째, 사후적인 위험 정의에서 일부 위험은 소득 계층 구분과 동어반복의 의미를 지닌다. 빈곤의 위험이 단적인 예이다. 빈곤도 가구 소득을 이용하여 판별되고 소득 계층도 마찬가지로 빈곤층의 구분과 일부 소득 분위의 구분 결과는 중첩되게 된다. 예를 들어 빈곤율이 15%인 국가에서 10분위 중 하위 1분위는 그 자체가 빈곤층이 된다. 계층 구분에 따른 빈곤 위험의 분포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

둘째, 위험이 식별되는 시점과 대응이 완료되는 시점이 같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특정한 해에 어떤 가구가 빈곤 가구인지는 그 해가 경과한 후에 알 수 있다. 가구의 연간 소득과 사회 전체의 연간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가 다 취합된 뒤에야 빈곤선을 결정하고 빈곤 가구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혜(복지 급여)의 크기도 같은 시점에 파악된다. 한 해가 모두 경과한 뒤에야 소득 계층 구분, 위험 여부, 수혜의 규모 등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사회보장 지출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적 의미의 위험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 현실적인 의미는 특정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층별로 예상되는 위험이다. 실제로 발생한 사후적 위험과 구분하기 위해 사전적인 위험은 위험도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정도를 말해주는 위험 확률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전적 위험을 표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세 가지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반면 순수혜는 사후적으로 관측된 값을 사용한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같은 지출과 복지급여 같은 소득 항목은 연간 소득 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조사 자료의 성격상 부담과 수혜, 순수혜는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조사된 값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사전적 위험과 사후적 순수혜를 비교할 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복지급여(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발생한 위험에 대해 제공된 수혜이다. 어떤 개인이 연중 실업을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개별 사건과 급여에 대해 조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연간 조사 자료에서 이러한 대응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풍부하지 않고 더구나 가구 단위로 공적 이전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보고되는 자료에서는

위험과 급여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사전적 위험과 순수혜를 비교할 때는 예상되는 위험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었는지가 해석의 중심에 놓인다. 소득 계층별로 위험의 분포 상태와 순수혜의 분포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순수혜 배분의 적절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분석의 기준시점: 2019년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배분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매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비교적 현실성 있는 분석 결과와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가 수행되는 2025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는 대부분 2022년 또는 2023년 기준 조사자료이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수년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었다.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예외적으로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지출도 예년에 비해 급등했었다. 위험과 순수혜 두 측면에서 2020년 이후 수년간은 매우 예외적인 해였던 것이다.

이런 예외성을 피하기 위해 3부의 분석에서는 2019년을 비교의 기준 시점으로 삼을 것이다. 2019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최근의 연도이다. 물론 2023년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위험이나 순수혜 모든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편차가 있다면 이는 국가 간 비교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이 비교 기준 시점을 2019년으로 한다.

4. 집중도의 표현 방법: 분위별 점유율과 집중지수

소득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고 분위별로 비교할 때는 분위별 평균값과 분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다. 두 지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그 의미는 다소 다르다. 이하에서는 두 지표를 모두 소개하겠지만, 위험과 순수혜의 배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분위별 점유율을 비교할 것이다. 10개 분위의 모든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1분위, 1~2분위, 1~5분위의 점유율을 비교할 것이다.

소득의 분포를 비교할 때 흔히 지니계수를 자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지니집중계수라고도 지칭되는데, 소득이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분포하는 가상적 상태로부터 실제의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균등 분배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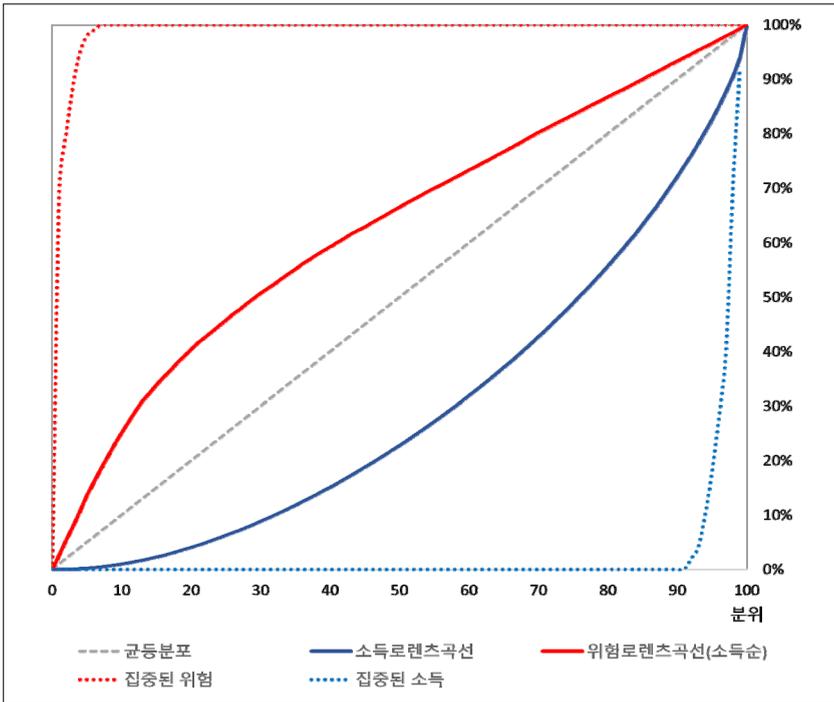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지니계수를 추정할 때와 다른 점은 위험 수준에 따라 배열된 인구 분포하에서 위험의 집중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렬된 인구 분포하에서 위험의 집중도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라고 지칭한다.³⁸⁾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소득 분포를 분석할 때 소득의 집중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 자주 사용된다. [그림 5-1]은 여러 가지 로렌츠 곡선을 보여준다. 만일 가로축이 소득순으로 줄 선 인구의 누적

38) 집중 지수는 최초로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Wagstaff et. al.(1989) 및 Wagstaff et.al.(1991)참조.

비율이고 세로축이 각 집단이 차지하는 누적 소득의 비율이라면 소득 분포의 로렌츠 곡선은 파란 실선 모양으로 그려진다. 통상적인 로렌츠 곡선이다. 소득이 모든 인구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45°의 점선)와 비교할 수 있다. 소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오른쪽 아래의 점선 모양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림 5-1] 소득의 로렌츠 곡선과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저자가 작성.

위험의 분포에 대해 분석할 때 모든 개인들을 위험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정렬하고 그 누적 비율을 가로축에 표현한다고 하면 위험의 로렌츠 곡선 역시 파란색 곡선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소득순으로

정렬된 개인에 대해 위험의 누적 비율을 그린다면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 만일 저소득층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붉은색 곡선 모양이 되고, 위험이 일부 저소득층에 극도로 편중된다면 붉은색 점선처럼 그려진다.

이를 이용하여 집중 지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2]에서 각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A, B, C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소득 지니계수 (G)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G = \frac{(A+B)-B}{(A+B)} = \frac{A}{(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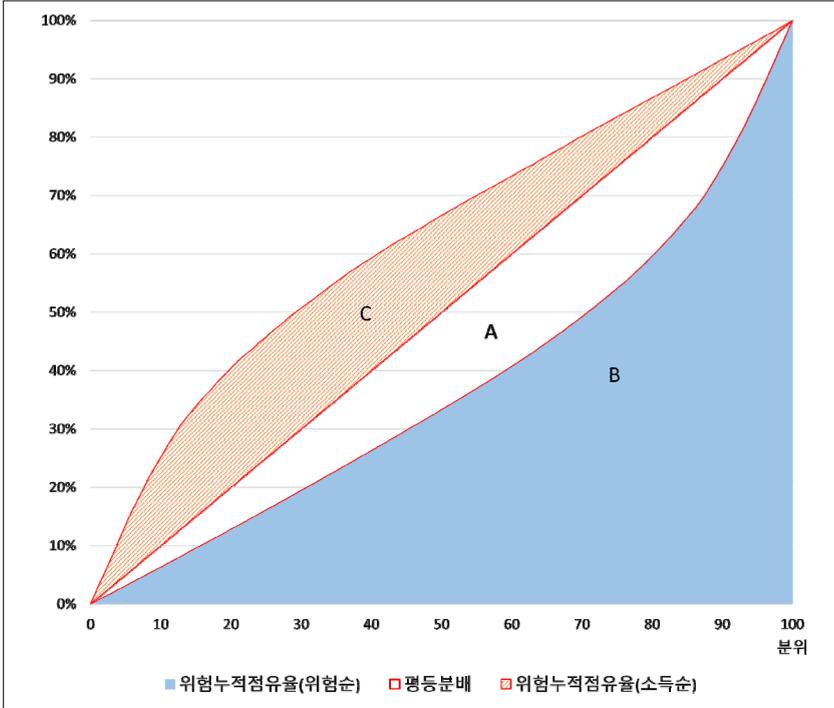
이때 $0 \leq G \leq 1$ 이 된다. 만일 가로축이 위험 순누적 인구 비율이라면 이 지니계수는 위험의 지니계수인 셈이다.

그런데 가로축을 소득순으로 정렬된 누적 인구 비율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집중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왼쪽 위의 곡선처럼 그려지고 집중 지수 (C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I = \frac{(A+B)-(A+B+C)}{(A+B)} = \frac{-C}{(A+B)}$$

이때 $-1 \leq CI \leq 0$ 의 값을 갖게 된다. 만일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면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아래 곡선으로 그려지고 CI 는 양수 값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1 \leq CI \leq 1$ 이다. CI 가 양수이면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수이면 저소득층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5-2] 지니계수와 집중지수(CI)



출처: 저자가 작성.

순수혜에 대해서도 집중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수혜와 순수혜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면 수혜 및 순수혜의 집중지수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통상 조세나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소득층의 부담이 높으므로 집중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와 수혜, 부담, 순수혜 집중 지수의 부호와 절댓값으로 각각이 소득 분포의 어느 계층에 집중되는지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분포 측정

1. 사회적 위험 지표와 데이터

3장에서 이미 국가군별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본 바 있다. 3장에서 예시된 사회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로서,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주요 사회정책 관련 지표에 포함 되어 있는 것들이다.³⁹⁾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지표를 선택하였다.

첫째,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 단위로 계측되는 지표가 아닌 개인이나 가구 단위로 계측되는 지표를 선택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불평등 위험이다. 불평등은 한 사회나 국가의 위험일 수는 있어도 개인이나 가구의 위험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불평등은 비교 대상 위험에서 제외된다.

둘째, 2장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전통적인 위험과 새로운 위험을 균형있게 포괄하고자 하였다. 빈곤이나 실업이 전자에 속한다면 돌봄과 불안정 고용이 후자에 속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위험 지표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제한되었다. 3장에서 OECD 회원국을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세 국가군을 구분한 바 있었다. 3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군당 두 국가를

39)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증시되는 다양한 지표들의 체계와 구성에 대해서는 OECD(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또는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를 참조할 것.

선택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가 간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위험 관련 데이터 역시 6개 국가 사이에 비교 가능성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 동일한 정의와 기준, 동일한 분류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석 대상 시계열도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3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빈곤 위험이다. 빈곤은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값의 50% 또는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 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로 빈곤율을 계산한다. 빈곤 위험을 추정할 때는 LIS (Luxembourg Income Study)가 제공하는 가구별 소득 조사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둘째는 실업의 위험이다. 통상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수로 정의되지만, 3부의 분석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실업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로 정의할 것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은 OECD의 Data Explorer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취업의 위험이다. 미취업이란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 없이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미취업자에는 실업자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미취업의 위험은 1-고용률로 정의된다. 고용률에 관련된 정보 역시 실업률과 같이 OECD Data Explorer의 자료를 이용한다.

네 번째는 비자발적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불완전 고용의 위험을 대표하는 위험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는 것을 시간제 근로로 간주한다. 성별, 연령대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OECD Data Explorer의 자료와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중 일자리 선택 동기별/근로형태별 구성비⁴⁰⁾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위험과 관련된 지표로,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perceived health as negative) 인구의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건강 위험으로 간주한다. 성 또는 연령별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OECD Data Explorer가 제공하지만⁴¹⁾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 국가의 경우 Eurostat의 정보를,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국 통계기관의 정보를, 한국의 경우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섯 번째는 돌봄 부담의 위험이다. 여기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을 돌봄 부담 위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연령이 75세 이상이거나 5세 이하인 경우, 또는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즉 돌봄 위험은 돌봄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연령별 구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LIS의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한국의 경우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위험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어려

4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B1A%26obj_var_id%3D%26seqNo%3D%26query%3D%EB%B9%84%EC%9E%90%EB%B0%9C%EC%A0%81+%EC%8B%9C%EA%B0%84%EC%A0%9C%26tblId%3DDDT_1DE7078S%26vw_cd%3DMT_ZTITLE%26language%3Dkor%26orgId%3D101%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

41) OECD. (2024d.).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즉 사회적 지지의 부재(lack of social support)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Gallup World Poll의 국가별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성별, 연령별 비율은 OECD Data Explorer를 통해 제공된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가운데 빈곤의 위험과 돌봄의 위험은 가구 단위의 위험이다.⁴²⁾ 반면 고용과 관련된 위험과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위험은 개인 단위의 위험이다.

2. 사회적 위험의 가구별 집계 방법

가. 개인 단위 사회적 위험의 가구 단위 집계

가구는 한 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다. 어떤 사회적 위험은 개인별로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실업의 위험을 들 수 있는데, 한 가구원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반드시 실업자인 것은 아니다. 실업의 위험은 가구 전체가 아닌 가구원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위험, 즉 개인 단위로 정의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집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제 i 를 가구원 개인(individual), h 를 가구(household)라고 하자. k 는 개인 i 가 속하는 집단(group)이다. 예를 들어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지역별 등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고 이 특성들 가운데 하나를 적용하거나

42) OECD Well-being 지표 가운데는 주거 위험과 관련된 지표가 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주거와 관련된 위험 역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주거 관련 지표로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주거비의 비율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주거비에 포함된 항목이 불일치하여(특히 한국의 경우) 분석 대상 위험에서 제외하였다.

둘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반드시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데, i 가 속하는 집단을 K_i 라고 하자. 여기서 같은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동일한 크기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집단 k 에 속하는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을 r_k 라고 하면 개인의 위험은

$$r_i = r_{K_i} = r_k \text{이다.}$$

이때 i 가 속하는 가구의 위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가구원이 동시에 위험에 처할 위험(R^1)이다. 둘째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할 위험(R^2)이다. 다시 말해 가구원 가운데 일부가 위험에 처할 위험이다.

먼저 첫 번째 정의 방식에 따를 경우 가구 i 가 속하는 가구 $h(i)$ 가 직면하는 위험 $R_{h(i)}^1$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_{h(i)}^1 = \prod_{i \in I_h} r_i = \prod_{i \in I_h} r_{K_i}$$

여기서 I_h 는 가구 h 에 속한 가구원들의 집합이다. 가구의 위험을 가구원 위험의 곱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가구원의 위험이 서로 독립적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는 다소 강한 가정이다. 어떤 위험은 가구원 서로 독립적일 수 있으나 어떤 위험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취업의 위험을 생각해 보자. 가구주의 미취업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배우자로 하여금 경제활동 참여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배우자의 유보 임금(reserve wage) 수준을 낮추고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미취업 위험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가구원의 위험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위험의 종류와 가구원 간의 관계에 따라⁴³⁾ 다를 것이다. 가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의 구체적 형태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위험의 분포를 계층별로 집계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구원 위험의 상호 독립성이라는 강한 가정을 전제하기로 한다.

가구원 위험의 곱으로 정의된 가구 위험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위험이 감소한다. 위험 확률로 표현된 r_i 에 대해 $0 \leq r_i \leq 1$ 이므로 각 r_i 의 곱으로 정의되는 $R_{h(i)}^1$ 에 대해 $R_{h(i)}^1 \leq r_i$ 가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위험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비유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가구원들은 같은 크기의 위험을 갖게 된다. 가구의 위험을 모든 가구원이 위험에 빠질 확률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 정의하에서 가구원들 사이에 위험의 크기가 다를 수 없다.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위험은 최초의 개인적 위험 r_i 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결합되어 재정의된 위험(\widetilde{r}_i^1)이다. 즉,

$$\widetilde{r}_i^1 = R_{h(i)}^1$$

이러한 정의하에서 개인 i 의 가중치를 w_i 라고 할 때 소득 분위 q 가 전체 위험에서 점유하는 비율(S_q^1)은 다음과 같다.

43) 예를 들어 가구주의 미취업 위험과 자녀 가구원의 미취업 위험 사이의 상호관계는 가구주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와 다를 것이다.

$$S_q^1 = \frac{\sum_{i \in I_q} w_i \widetilde{r}_i^1}{\sum_{i \in I} w_i \widetilde{r}_i^1} = \frac{\sum_{i \in I_q} w_i R_{h(i)}^1}{\sum_{i \in I} w_i R_{h(i)}^1}$$

이제 두 번째 정의방식에 따른 가구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위험은 한 명의 가구원이라도 위험에 처할 확률로 정의되고, 이는 가구원 가운데 아무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뺀 값과 같다. 즉,

$$R_{h(i)}^2 = 1 - \prod_{i \in I_h} (1 - r_i) = 1 - \prod_{i \in I_h} (1 - r_{K_i}) \text{ 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정의된 가구의 위험을 가구원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즉

$$\widetilde{r}_i^2 = R_{h(i)}^2 \text{ 이다.}$$

그런데 $R_{h(i)}^2$ 에 대해서는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가구의 위험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0 \leq r_i \leq 1$ 이므로 $0 \leq (1 - r_i) \leq 1$ 이고, 따라서 위의 식에서 $\prod_{i \in I_h} (1 - r_i)$ 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 가구원 모두 위험에 빠지지 않을 확률도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다. $0 \leq \prod_{i \in I_h} (1 - r_i) \leq 1$ 이므로 $1 - \prod_{i \in I_h} (1 - r_i)$ 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두 번째로 정의된 가구 위험은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셈이고, 이는 두 가지 정의 방식에 따른 위험의 분포가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두 번째 정의 방식에 따른 가구 위험하에서 소득 분위 q 의 위험 점유율 S_q^2 는 다음과 같다.

$$S_q^2 = \frac{\sum_{i \in I_q} w_i \widetilde{r}^2_i}{\sum_{i \in I} w_i \widetilde{r}^2_i} = \frac{\sum_{i \in I_q} w_i R_{h(i)}^2}{\sum_{i \in I} w_i R_{h(i)}^2}$$

개인 단위로 정의된 두 가지 방식의 위험이 규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가구원이 위험에 빠질 확률은 줄어들지만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빠질 확률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의 위험은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분석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정의 방식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첫째 정의 방식, 즉 모든 가구원이 위험에 빠지는 위험일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정의 방식에 비해 훨씬 심각한 위험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장 이하의 분석에서는 개인 단위의 위험을 가구로 집계할 때 모든 가구원이 위험에 처할 확률을 가구 단위의 위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개인이 직면하는 평균적 위험도가 매우 낮을 경우 가구 단위로 집계된 위험 확률은 더 작은 수치가 된다. 하지만 그 작은 확률도 계층 간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 차이의 실태를 비교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는 만큼 위험도의 절대적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가구 단위의 사회적 위험

어떤 사회적 위험은 가구 단위로 발생하고 가구 단위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 위험이다. 통상적으로 빈곤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소득은 가구 합산소득이다. 빈곤의 정의 자체가 가구 단위의 규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로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별 위험을 가구 단위로 집계하지만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위험은 별도의 집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 위험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것과 달리 가구의 위험은 가구의 유형(type)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즉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가구는 같은 크기의 위험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도 가구의 위험은 모든 가구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가구 h 가 처할 위험을 r_h , h 에 속한 가구원 i 의 위험을 \tilde{r}_i 라고 하면 다음의 관계를 가정한다.

$$\tilde{r}_i = r_{h(i)} = r_{t(h)}$$

여기서 $h(i)$ 는 개인 i 가 속한 가구를, $t(h)$ 는 가구 h 가 속한 유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위험에서 소득 분위 q 의 위험 점유율(S_q^3)⁴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_q^3 = \frac{\sum_{i \in I_q} w_i \tilde{r}_i}{\sum_{i \in I} w_i \tilde{r}_i} = \frac{\sum_{i \in I_q} w_i r_{h(i)}}{\sum_{i \in I} w_i r_{h(i)}}$$

3. 위험의 측정

1절에서 3부에서 분석되는 사회적 위험은 사전적 위험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위에서 개인의 위험은 그가 속한 집단의 위험과 같다고 설명한

44) 앞의 S_q^1 , S_q^2 와 구분하기 위해 S_q^3 로 표기한다.

바 있다. 이제 그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고 집단의 사전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살펴보자.

3부의 분석에서 개인의 위험은 개인의 성과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전체 인구를 성×연령대를 기준으로 다수의 세부 집단(sub-group)으로 구분한 후 같은 세부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때 연령대의 구분 방식은 위험에 따라, 더욱 정확히 말해 각 위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다. 실업이나 미취업 위험의 경우 OECD는 각국의 5세 구간별 고용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러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나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위험의 경우 연령대 구간은 좀 더 넓다.

각 연도별로 성×연령대별 위험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이전의 10년간 평균치를 해당 집단의 사전적 위험으로 간주한다.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이 기준연도이므로 이전 10년 동안, 즉 2009년~2018년의⁴⁵⁾ 집단별 위험 지표 평균값을 2019년 현재 해당 집단의 위험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크기가 단지 성과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들, 예컨대 학력이나(노동시장 관련 위험의 경우) 실제 건강 상태(빈곤 위험의 경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 등 경제적 상태에 따라 개인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단 소득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 충동을 일으킨다는 점은 앞서 설명하였다. 다른 인구·사회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45) 일부 지표의 경우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시계열이 10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매년 조사되지 않고 격년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이 경우 10년 중 조사된 연도의 평균을 위험도로 간주하였다.

못하는 것은 데이터의 가용성 문제이다. 만일 좀 더 다차원적으로 집단을 나눌 수 있다면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은 좀 더 정확히 측정될 수 있고 개인 간 차이도 더 넓게 분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합적 집단 구분을 적용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 단위의 위험에서는 같은 유형의 가구가 동일한 크기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가구 유형은 가구원의 수와 가구원의 연령대 구성에 따라 <표 5-1>의 원편과 같이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표 5-1>에는 비교를 위해 참고로 4장에서 다룬 국민계정 자료의 가구 유형 구분(<표 4-7> 참조)을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유형 구분에서 가구원수와 연령대별 구성을 이용한 것은 <표 4-7>과 같지만 미시자료 분석의 가구 유형 구분에서는 커플(또는 배우자) 여부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표 5-1> 미시자료 분석과 국민계정 자료에서의 가구 유형 구분

미시 자료 분석	참고: 국민계정 자료 분석*
1. 노인 단독	노인 단독(2)
2. 노인만 2인 이상	
3. 근로연령 단독	비노인 단독(1)
4. 근로연령만 2인	비노인 커플, 아동 없음(4)
5. 노인 + 근로연령	노인 포함 커플, 아동 없음(5)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 1명+아동	성인 1명, 아동 1명(3)
7. 근로연령 2인 + 아동	커플 + 아동 2명 이하(6)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커플 + 아동 3명 이상(7)
9. 기타	기타(8)

주: *(<표 4-7>)의 구분을 그대로 인용함. 번호는 <표 4-7>에서의 번호임.

출처: 저자가 작성.

가구의 구성 형태는 각 국가의 가족 관계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므로 국가별로 <표 5-1>의 유형별 비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단독 가구, 근로연령층 단독 가구, 근로연령층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주요 유형은 두 분석에서 모두 일치한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집단별 소득 분석에서도 가구 유형을 주요 집단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 유형별로 소득이나 지출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가구 유형별로 사회적 위험의 정도도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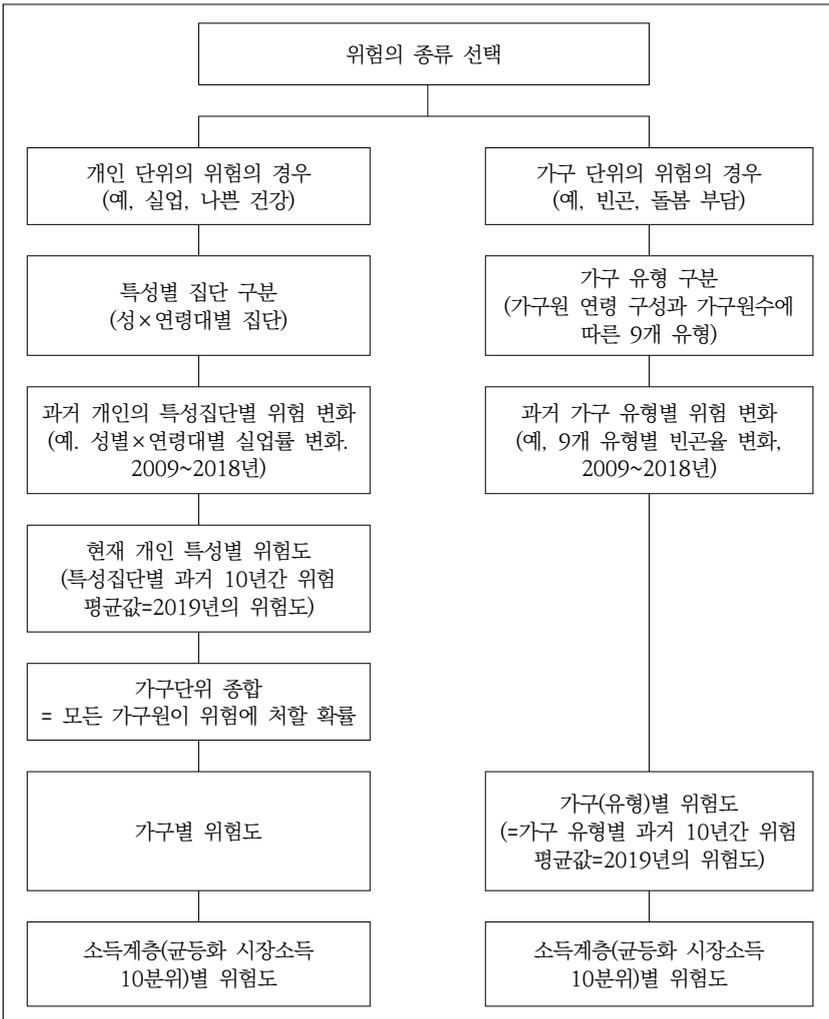
개인별 위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 단위의 위험에서도 가구 유형별 2019년 시점의 위험은 2009년~2018년 위험의 평균값으로 가정하였다. 각 유형이 과거 10년 동안 경험한 위험이 현재 시점의 기대 위험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가구의 위험이 오직 가구 유형, 즉 가구원의 연령대별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 가구 소득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구주의 학력, 경제활동 상태, 건강 상태 등은 위험의 발생 확률이나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표 4-7>을 참고하여 가구원들 사이의 관계를 범주 구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구 유형별로 위험의 차이는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표 5-1>의 가구 유형 구분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5-3]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소득 계층별 위험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위험의 선택, 개인별 위험 분석에서 집단의 구분 방식, 가구별 위험 분석에서 가구 유형의 구분 방식, 현재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 과거 몇 년의 위험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소득 계층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분석 방법상 다른 선택도 가능한 쟁점들이다. 그 선택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후 3부의 분석을 진행 하도록 한다.

[그림 5-3] 소득계층별 위험도 산출의 과정



출처: 저자가 작성.

제3절 순수혜의 분포 측정

1. 순수혜의 정의

위험을 측정하고 집계하는 것에 비해 순수혜를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본 연구 전체를 통해 수혜(benefit)는 개인과 가구에 지급되는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의미하는데, 이는 통상의 가구 소득 조사에서 공적 이전소득(public transfer income)이란 항목으로 조사된다. 공적 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은 공적 연금(예, 국민 연금) 급여, 기타 사회보험 급여(예, 실업급여), 각종 수당(예, 아동수당), 공공부조 급여 등으로 다양하고 그 구성 항목들은 국가마다 또는 데이터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의 합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3부의 분석에서도 수혜란 소득 조사 자료에서의 공적이전소득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구 소득 조사 자료에서 이 두 항목 모두 별도로 조사되어 보고되고 있다. 조세의 경우 소득세, 재산세 등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 따라, 자료에 따라 세부 항목 구성이 바뀌기도 하지만 세부 항목의 합으로서 조세 납부액과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가구 소득 조사에서 지출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3부의 분석에서 역시 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합으로 정의한다.

수혜와 부담 모두 가구 단위로 집계된 금액을 사용한다. 그리고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과 비교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한다.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수혜와 부담 금액을 나누는 방식 역시 소득의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과 동일하다.

3부의 분석에서는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로 LIS의 연도별 가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모든 국가의 가구 단위 소득 조사자료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긴 시계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3장에서 분석된 모든 국가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4장의 논의에서 특징적인 사례로 지적된 포르투갈이 제외되어 있다. 3부에서 분석하는 국가별 분석의 경우 3장에서 분류한 각 국가군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택하였으나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LIS에는 두 종류의 소득 조사자료가 등재되어 있다. 2016년까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2017년 이후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자료는 포괄성과 조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시계열의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분석에서는 LIS에 등재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2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사된 소득은 한 해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11년부터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평균값이 필요한 경우(예, 빈곤 위험의 계산)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0년 치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2. 순수혜 분포의 비교

순수혜가 수혜에서 부담을 뺀 금액인 만큼 가구에 따라서는 순수혜가 음(-)인 가구가 있을 수 있다. 고소득층에서는 사회보장 수혜를 받지 않는 가구가 많은 반면 조세 납부액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보험료 납부액도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크다.

소득 계층별로 수혜의 분포를 비교할 때 이와 같이 양수와 음수가 모두 존재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순수혜의 금액을 비교한다면 순수혜의 부호는 해당 계층의 수혜가 더 큰지 부담이 더 큰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순수혜의 계층별 점유율을 비교할 때 두 계층의 점유율 부호가 다르다면 절댓값의 차이에 대해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지니계수를 구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양수와 음수가 포함된 소득 분포에서 지니계수를 구할 경우 그 값은 통상적인 지니계수의 상한값인 1보다 커지고 상한도 없게 된다.⁴⁶⁾ 1을 초과하는 지니계수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의 값의 관측치를 제거하는 것인데, 관측치의 비율이 극히 제한적 이면 큰 관계가 없으나 관측치의 수가 적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관측치에 소득 분포의 최솟값⁴⁷⁾을 더하여 모든 관측치를 비음(non-negative)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다른 관측치에 비해 최솟값의 절댓값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 비음(非陰)으로 전환한 결과 소득 격차가 매우 줄어들어 효과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즉 소득의 불평등을 매우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 사이에서 다양한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솟값 대신 하위 p%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위 5%도 음수라고 가정하자. 이값을 이용할 경우 소득이 하위 5%보다 작은 값들은 모두 하위 5%의 값으로 대체해 준다. 그리고 하위 5%값 만큼을

46) 음수의 소득을 갖는 관측치가 있는 경우 소득 분포의 지니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논의는 Chen et.al.(1982), Raffinetti et.al.(2014) De Battisti and Vernizzi(2019), Ostasiewicz and Vernizzi(2017) 등을 참조할 것.

47) 또는 최솟값 더하기 미세한 크기의 양수.

모든 관측치에 더해 모든 관측치를 비음으로 만들어 준 후 지니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최솟값과 하위 5%값의 차이가 클 경우 이 방법은 소득불평등을 과소추정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⁴⁸⁾. 하위 10%값을 이용하면 소득 불평등의 과소평가 경향은 줄일 수 있지만 정보의 손실은 더 커진다. 하위 1%의 값을 이용하면 반대로 불평등의 과소평가 경향은 커지고 정보의 손실은 줄어든다.

이러한 방법을 특정 분위값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음의 관측치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음의 값을 갖는 관측치들을 모두 0으로 대체하여 지니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불평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더 줄이되 음의 관측치를 제외하는 방법에 비해 정보의 손실을 줄인다는⁴⁹⁾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음의 값이 전달하는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이다.

이하에서 순수혜의 분포를 분석할 때에는 음수를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음의 순수혜가 관측된 가구(부담이 수혜보다 큰 가구)의 경우는 순수혜가 0인 것으로 대체하고 순수혜가 양인 경우는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조정된 순수혜 값을 이용하는 것이다.⁵⁰⁾ 이로 인해 음의 순수혜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의 분포와 관련하여 분석할 때, 실제로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양의 값을 갖는 순수혜이다. 물론 음의 순수혜가 위험에 대한 대응의 여력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하의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8) 5%의 표본에 대해 소득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49) 분석 대상 관측치의 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50) 이런 관점에서 보면 4장의 분석은 음의 순수혜를 전혀 조정하지 않고 분석한 것이다. 소득계층을 5분위로만 구분했기 때문에 소득 분포상에서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갖는 정확한 지점을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한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제3절 소결

제 6 장

한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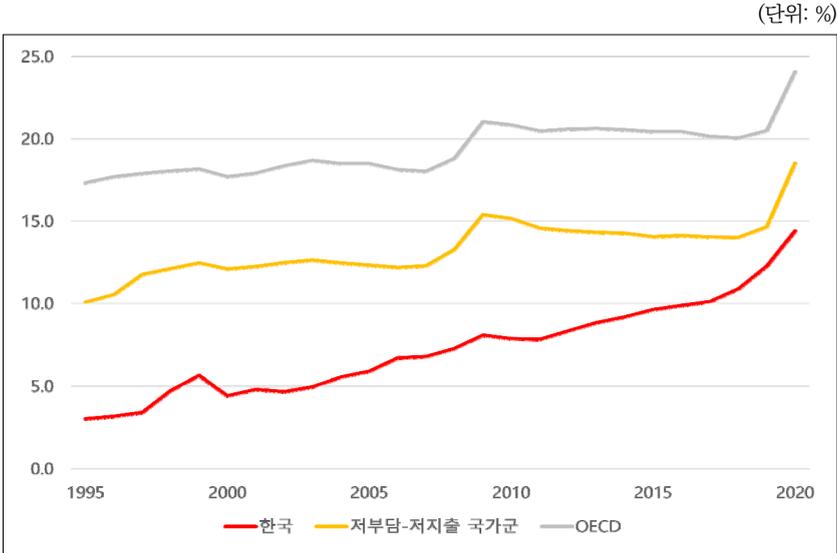
제1절 한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

이 장에서는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에 대해 살펴본다. 여러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1절에서는 그 총량적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가운데에서도 사회지출의 비중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6-1]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사회지출 비중을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평균 및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이 OECD 평균의 1/2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16년에 이르러서이다. 2020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는데, 그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의 사회지출 비중은 12.3%이다. OECD 국가 평균인 20.5%는 물론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평균인 1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림 6-1] 한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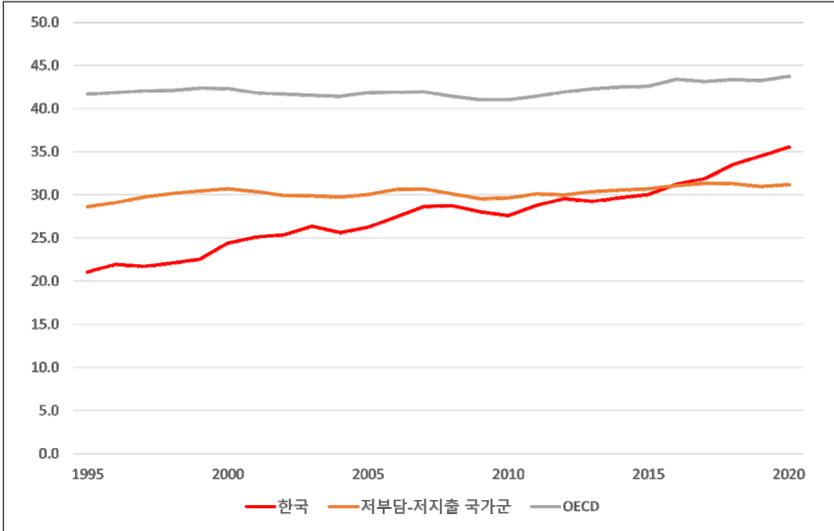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에서 인출.

[그림 6-2]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및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43.7%,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평균은 31.2%이고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5.5%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부담-저지출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평균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림 6-2] 한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출처: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에서 인출.

[그림 6-1]과 [그림 6-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특징은 사회 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의 빠르고도 지속적인 상승 추이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닥치기 이전인 2010~2019년의 기간 동안 OECD 및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사회지출 비중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OECD 국가와 저부담-저지출 국가의 완만한 상승세에 비해 한국은 좀 더 빠른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회지출 특징은 상대적으로 지체된 총량적 수준과 빠른 증가 속도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와 일부 현금 급여 제도가 신설되는 등 사회보장 제도 예산이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사회보장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이다. <표 6-1>은 2019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20개 사업을 보여 준다. 이 사업 가운데 노령연금(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각종 특수 직역연금 퇴직급여) 및 관련 제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까지 합할 경우 <표 6-1>에 포함된 제도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관련 사업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와 같이 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도 사회보험 부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표 6-1> 주요 사회보장제도 및 예산(2019년)

(단위: 십억원)

예산 규모 순위	제도명(세부사업명)	예산(십억원)	제도 특성 구분
1	국민연금 급여지급	23,019.3	사회보험
2	퇴직급여(공무원연금)	14,077.1	사회보험
3	기초연금지급	11,495.2	공공부조
4	주택구입 전세자금(용자)	7,844.2	용자
5	구직급여	7,182.8	사회보험
6	의료급여 경상보조	6,391.5	공공부조
7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5,972.1	사회보험
8	산재보험급여	5,070.0	사회보험
9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3,998.6	지출보조
10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815.3	지출보조
11	생계급여	3,750.8	공공부조
12	영유아보육료지원	3,405.3	지출보조
13	퇴직급여(군인연금)	2,937.0	사회보험
14	전세임대(용자)	2,907.3	용자
15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2,818.8	사업체지원
16	보상금	2,813.1	보훈사업
17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2,766.9	사회보험
18	퇴직수당(공무원연금)	2,662.3	사회보험
19	아동수당지급	2,162.7	사회수당
20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01.1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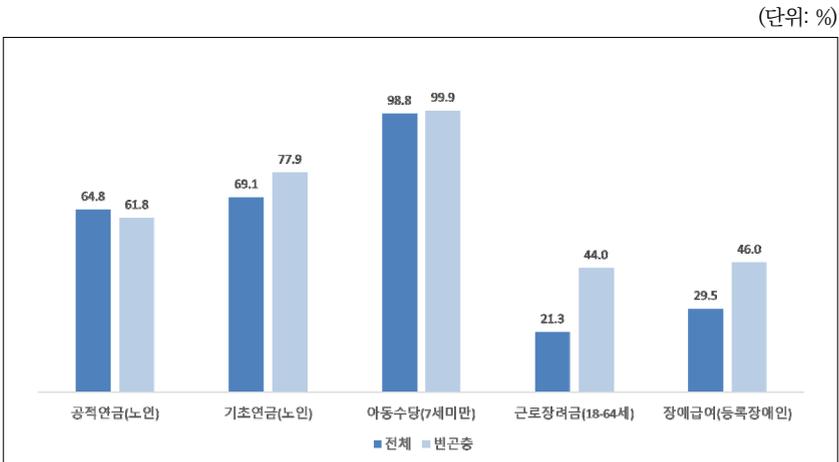
주: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한정함.

출처: “사회보장재정사업 DB,” 강신욱 외, 2024를 이용하여 작성.

사회보험 이 외의 제도들 가운데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200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2010년), 국가장학금(2012년), 기초연금(2015년), 아동수당(2019년) 등 비교적 지출 규모가 큰 제도들이 200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되거나 확충되었다. 이들은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되거나(생계 및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 특정 연령에 국한하여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들(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이다.

사회 지출이 빠르게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넓은 대상자 포괄성이나 높은 급여가 충분성을 보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림 6-3]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전체 인구나 빈곤층 인구의 몇 퍼센트가 주요 급여를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림 6-3]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2020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0년(RAS용),” 통계청, 2021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 2021, 강신욱 외. 저작권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 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약 65%, 빈곤층 노인의 약 62%가 수급 가구에 해당한다. 공적 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금 제도의 보편적인 도입이 지체되어 연금 수급권 없이 고령층으로 진입한 인구가 많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빈곤층 노인의 약 78%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연령 빈곤층의 약 44%가 급여를 받고 있을 뿐이다. 2020년 현재 공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인구는 전체 빈곤층의 약 3/4 수준이다.⁵¹⁾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총량적 수준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빈곤층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비율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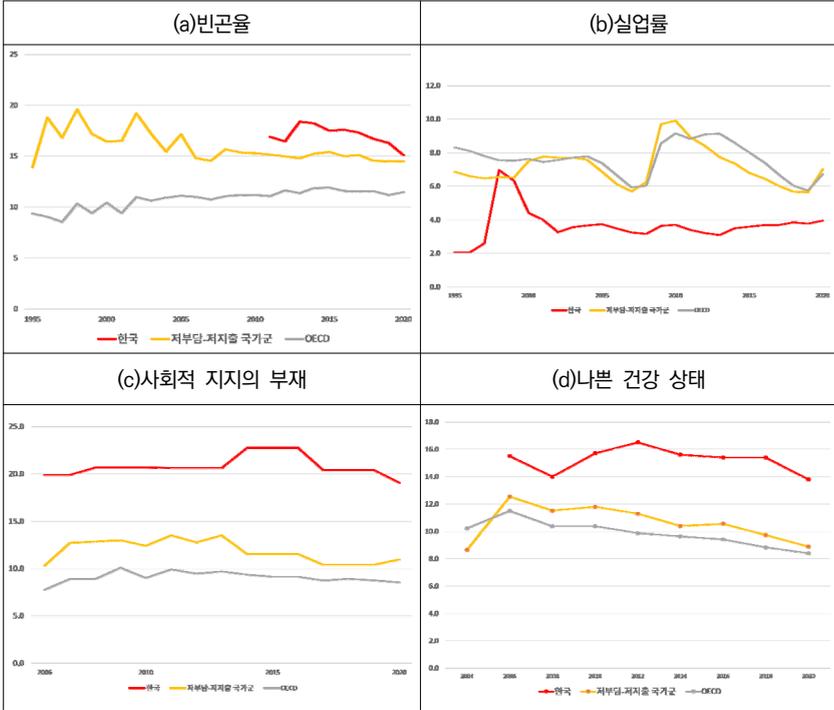
2. 사회적 위험의 수준

앞서 3장에서 국가군별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을 비교할 때 위험에 따라 그 수준과 변화 추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의 사회적 위험을 비교할 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예시되었고 이 장의 2절에서 분석될 사회적 위험에 국한하여 한국의 위험 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6-4]와 같다.

51) 강신욱 외(2021). p.91.

[그림 6-4] 한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주: 한국의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0년(소득 기준)부터 제시함.
 출처: "Social Indicators,"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en>에서 인출.

중위소득 50%선 기준 가처분소득 빈곤율([그림 6-4]의 (a))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적 수준은 물론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수준보다 높다. 최근 들어 빈곤율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시점까지 여전히 한국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실업률은 OECD 평균과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평균에 비해 낮다. 1998년~1999년 기간에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실업률이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에 비해 높아진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의미하는 사회적 위험과 주관적으로 인지된 나쁜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 위험 역시 한국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낮은 사회지출, 낮은 부담,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험의 특징을 갖는다. 낮은 부담은 낮은 지출 수준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이 낮은 지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지출의 증가가 필요하고 따라서 부담의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총량적 증가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지출에 따른 수혜의 분포, 부담의 분포, 위험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지출의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다.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가. 데이터

소득계층별로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공공용)를 이용하기로 한다. 2025년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구 소득 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이때 소득은 조사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를 비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2년~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각 연도별 자료는 가구 및 개인의 특성과 가구 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실태를, 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실태를 제공한다. 따라서 같은 연도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소득과 인적 특성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편의상 소득을 기준으로 연도표기를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가구 특성은 2019년의 소득을 보고하는 자료(2020년 자료)상의 가구 특성이다. 2019년의 소득을 파악하는 시점이 2019년 말이고 2020년의 가구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 시점은 2020년 4월이다. 이 기간 동안 가구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도한 가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20년 자료상의 가구 특성을 2019년의 가구 특성으로 표기할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계열에 따라(2017년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항목이 다르다. 그에 따라 연도별로 소득을 비교할 때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구분하기 때문에 시계열의 단절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구 유형별로 위험을 비교할 때에도 가구 유형별로 행정자료 활용의 영향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보아 시계열 단절의 영향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나. 가구 유형의 소득 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가구 유형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한국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6-2〉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 구성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각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6-2〉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를 포함하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계속하여 늘고 있는 반면 근로연령대 가구원 2명과 아동이 함께 살거나 근로연령대 가구원 3명 이상과 아동이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근로연령의 단독가구도 늘었다는 점과 노인과 근로연령층이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도 늘었다는 점이다. 〈표 6-2〉의 다섯 번째 유형, 즉 노인과 근로연령층이 함께 사는 가구의 인구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가구 유형에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가구와 노인인 부(또는 모)와 근로연령대의 자녀 1명이 거주하는 가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유형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각 유형별 빈곤 확률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2〉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노인 단독	2.6	2.4	2.5	2.5	2.7	2.9	3.1	3.5	4.0
2. 노인만 2인 이상	4.8	4.4	4.5	4.6	5.0	5.4	6.0	6.5	7.4
3. 근로연령 단독	3.6	3.6	3.4	3.4	3.5	3.8	3.8	4.1	4.3
4. 근로연령만 2인	8.7	8.2	7.9	7.8	8.0	8.3	8.5	8.9	9.0
5. 노인+근로연령	29.9	31.4	32.6	33.9	34.0	33.6	33.2	34.2	33.7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2.0	1.7	1.6	1.4	1.5	1.3	1.2	1.2	1.3
7. 근로연령2+아동	32.7	32.7	32.1	31.7	31.1	31.3	31.7	30.2	29.8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11.7	12.0	11.8	11.1	10.9	10.2	9.4	8.6	7.8
9. 기타	4.0	3.8	3.7	3.5	3.4	3.3	3.1	2.8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각연도.

가구 유형에 따라서 빈곤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9년 사이에 각 소득 분위별로 가구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6-3〉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최하위 소득 분위인 1분위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만 2인 이상이 사는 가구의 합이 60%를 넘는다. 이들 가구의 비중은 높은 소득 분위로 갈수록 낮아진다. 반대로 근로연령층 2명과 아동이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1분위에서는 4.7%에 불과하지만 3분위 이상 소득층에서는 30%가 넘는다. 노인과 근로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임을 볼 수 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유형도 있다. 이는 적어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 유형은 계층적 지위를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3〉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 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 노인 단독	29.4	5.6	2.0	1.3	0.5	0.3	0.2	0.2	0.1	0.2
2. 노인만 2인이상	32.4	19.4	8.5	4.4	2.6	1.3	1.7	0.9	1.1	1.7
3. 근로연령 단독	7.3	6.8	5.3	5.6	3.7	3.5	3.1	2.9	2.9	2.0
4. 근로연령만 2인	4.3	9.9	10.7	10.8	7.8	9.9	8.9	8.8	10.2	8.6
5. 노인+ 근로연령	16.2	26.6	31.6	29.3	34.7	35.0	39.7	39.7	41.6	42.9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3.2	4.6	1.7	1.2	0.7	0.3	0.3	0.3	0.3	0.0
7. 근로연령2+아동	4.7	19.4	30.9	35.0	38.6	35.9	33.9	35.6	31.9	32.5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1.5	4.6	5.6	8.7	8.3	10.0	10.3	9.2	10.2	9.7
9. 기타	1.0	3.1	3.6	3.7	3.1	3.9	2.1	2.5	1.7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다. 개인 특성의 소득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개인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성과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가정하 만큼 소득 계층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6-4〉는 각 소득 분위별로 성과 연령대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7분위 이하 소득 분위에서는 남성의 비중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고 8분위 이상 고소득 분위에서는 남성 비중이 높다.

〈표 6-4〉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0.8	59.2	5.9	28.5	65.6
2	46.2	53.8	13.8	50.1	36.1
3	47.2	52.8	18.6	60.0	21.3
4	48.2	51.8	20.6	65.5	13.9
5	49.8	50.2	22.4	68.5	9.1
6	49.8	50.2	21.3	70.7	8.1
7	51.0	49.0	19.4	73.2	7.4
8	50.5	49.5	19.5	74.5	6.0
9	50.3	49.7	18.5	77.2	4.3
10	50.2	49.8	18.1	76.9	5.0
전체	48.4	51.6	17.8	64.5	17.7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 보면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65세 이상 노인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연령층인 18~64세의 비중은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점차 늘어난다. 0~17세의 아동의 비중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중간 소득 분위에서는 높아졌다가 9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간이나 고소득분위에서 가구원의 연령대 구성은 분위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동 연령층 가구원이 근로연령층으로 진입하고 취업 가구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소득분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사회적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

가. 빈곤 위험의 분포

이하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 분포에 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빈곤 위험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8년의 빈곤율 평균값을 확인하였다.⁵²⁾ <표 6-5>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의 평균 빈곤율이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는 89.7%, 중위소득의 6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92.9%에 이른다. 평균 빈곤율이 낮은 7번째 유형, 즉 근로연령 2명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보면 평균 빈곤율은 빈곤선 수준에 따라 각각 9.7%와 15.2%이다.

<표 6-5>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89.7	92.9
2. 노인만 2명 이상	75.5	81.0
3. 근로연령 단독	31.4	37.9
4. 근로연령만 2명	19.0	25.4
5. 노인+근로연령	15.1	19.9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61.6	71.5
7. 근로연령2명+아동	9.7	15.2
8. 근로연령3명 이상+아동있음(노인 무관)	10.1	15.0
9. 기타	21.2	29.0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이용한 빈곤율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각연도.

52) 앞 장에서 2019년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10년의 위험 평균값을 사용한 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소득 기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8개년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6-5〉의 가구 유형별 평균 빈곤율을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평균하면 2019년 기준 각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모든 분위의 위험도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위험도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표 6-6〉에는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제시되어 있다.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에서는 55.9%, 중위소득의 60% 빈곤선에서는 60.9%이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빈곤 위험도는 낮아지지만 5분위 이상에서는 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6-6〉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55.9	25.0(25.0)	60.9	22.0(22.0)
2	34.1	15.2(40.3)	39.6	14.3(36.3)
3	23.6	10.6(50.9)	29.2	10.6(46.8)
4	19.1	8.5(59.4)	24.6	8.9(55.7)
5	16.2	7.3(66.7)	21.7	7.8(63.5)
6	15.1	6.8(73.5)	20.5	7.4(70.9)
7	15.0	6.7(80.2)	20.3	7.3(78.3)
8	14.7	6.6(86.7)	20.0	7.2(85.5)
9	14.6	6.5(93.3)	19.9	7.2(92.7)
10분위	15.0	6.7(100.0)	20.3	7.3(100.0)
전체	23.3		27.7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6-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1분위의 빈곤 위험도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2011년~2018년)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2019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5.9% (중위소득 50%선 기준)의 확률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의 실제 빈곤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1분위의 빈곤율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표 6-6>에서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55.9%이다. 그 이유는 <표 6-6>의 위험은 사전적(事前的) 위험이고 실제 계측된 빈곤율은 사후적(事後的) 위험이라는 점이다. 사후적으로는 1분위의 모든 구성원들이 빈곤층이겠지만 이는 2019년의 소득이 모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판별되는 빈곤층이다. 2019년의 소득이 실현되기 이전 시점, 즉 소득 분위도 결정되기 이전에 가구 유형별로 사전적으로 예측되는 빈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위가 결정된 후 1분위의 사전적 빈곤 위험을 평균하여 보면 그 값이 55.9%라는 것이다. 최고위 소득 분위인 10분위에서도 빈곤 위험도가 15.0%라는 값(중위소득의 50% 빈곤선 기준)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각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계산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위별 빈곤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빈곤 위험도 점유율이란 전체 계층의 위험도 합에서 특정 분위의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란 특정 분위 및 그 이하 소득 계층의 위험도 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표 6-6>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빈곤위험도의 합에서 2분위까지의 빈곤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은 40.3%(중위소득의 50%선), 46.8%(중위소득의 60%선)이다. 5분위까지 누적 점유율은 각각 66.7%와 63.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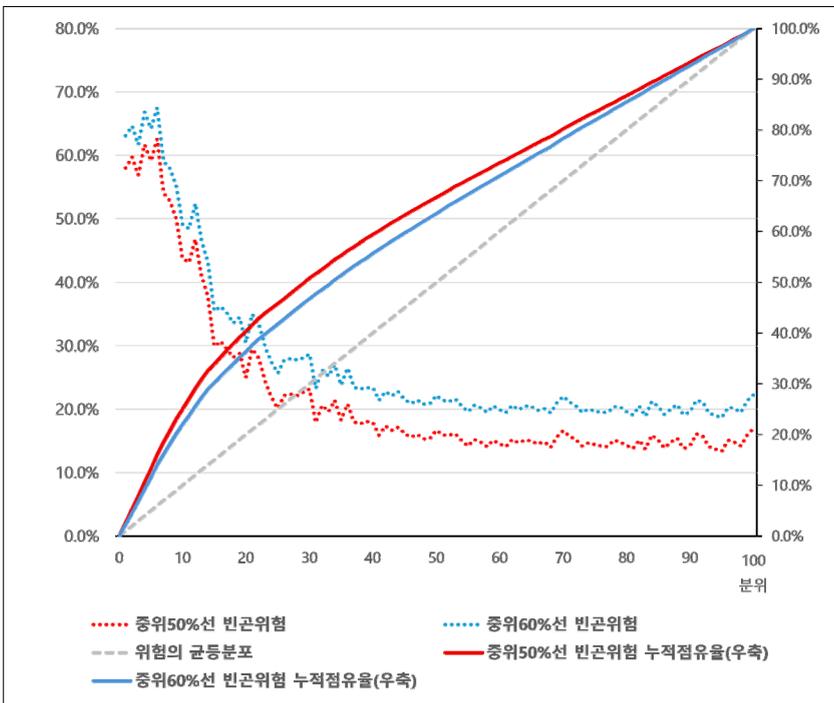
[그림 6-5]는 소득 분위기를 100분위로 세분화하여 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다. [그림 6-5]의 가로축은 전체 인구를 시장소득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누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각 소득 분위별 빈곤 위험도(좌축)와 각 분위까지의 누적 인구가 점유하는 빈곤 위험도 누적점유율(우축)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린 실선의 곡선이 빈곤 로렌츠 곡선이다.

먼저 좌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빈곤위험도를 보면 전체 인구의 10%까지 빈곤위험도가 높고 이후 빈곤 위험도가 낮아지다가 대략 40%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완만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위 50%의 빈곤위험은 중위 60% 빈곤 위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측을 기준으로 그려진 로렌츠 곡선(빈곤위험도 누적점유율 곡선)을 보면 두 빈곤 곡선 모두 위험도의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점선(우상향 대각선) 위쪽으로 그려져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빈곤 위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위 50% 빈곤의 로렌츠 곡선이 중위 60%의 로렌츠곡선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는 중위 50%선 기준 빈곤이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5]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나. 실업

실업의 위험은 개인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위험이다. <표 6-7>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연령대별, 성별 실업자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주의할 것은 이 비율이 실업률이 아닌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점이다. 즉 경제활동참여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 아닌 전체 연령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다. 같은 기간 동안 15~19세 남성의 실업률은 약 9.5%~15.1%를 기록하였으나 <표 6-7>에서 이 연령대의 평균값이 0.8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표 6-7>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자 비율	
	남성	여성
15 ~ 19세	0.8	0.8
20 ~ 24세	4.8	5.0
25 ~ 29세	7.3	4.3
30 ~ 34세	3.7	2.1
35 ~ 39세	2.6	1.5
40 ~ 44세	2.1	1.6
45 ~ 49세	2.0	1.4
50 ~ 54세	2.1	1.2
55 ~ 59세	2.3	1.1
60 ~ 64세	2.6	0.8
65세 이상	1.0	0.4

주: 해당 성별 및 연령대의 인구 대비 비율임.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6-7〉의 수치를 2019년 데이터의 각 성 및 연령대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할당해 주면 2019년 시점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의 위험도가 산출된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 가구원 개인별 실업 위험도를 모두 곱하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 상태에 놓일 위험도가 계산된다. 〈표 6-8〉의 가운데 열은 가구의 실업 위험도를 소득 분위별로 평균한 값이다. 〈표 6-8〉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일 위험의 절대적인 값은 매우 낮다. 그러나 그 분포는 균등하지 않다. 1분위의 실업 위험은 5분위 이상에 비해 3배나 높다.

〈표 6-8〉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0.3	20.8(20.8)
2	0.2	15.4(36.3)
3	0.2	12.6(48.9)
4	0.2	11.5(60.4)
5	0.1	9.0(69.3)
6	0.1	7.6(77.0)
7	0.1	6.9(83.9)
8	0.1	6.5(90.4)
9	0.1	5.4(95.8)
10분위	0.1	4.2(100.0)
전체	0.1	

주: 1) 괄호는 누적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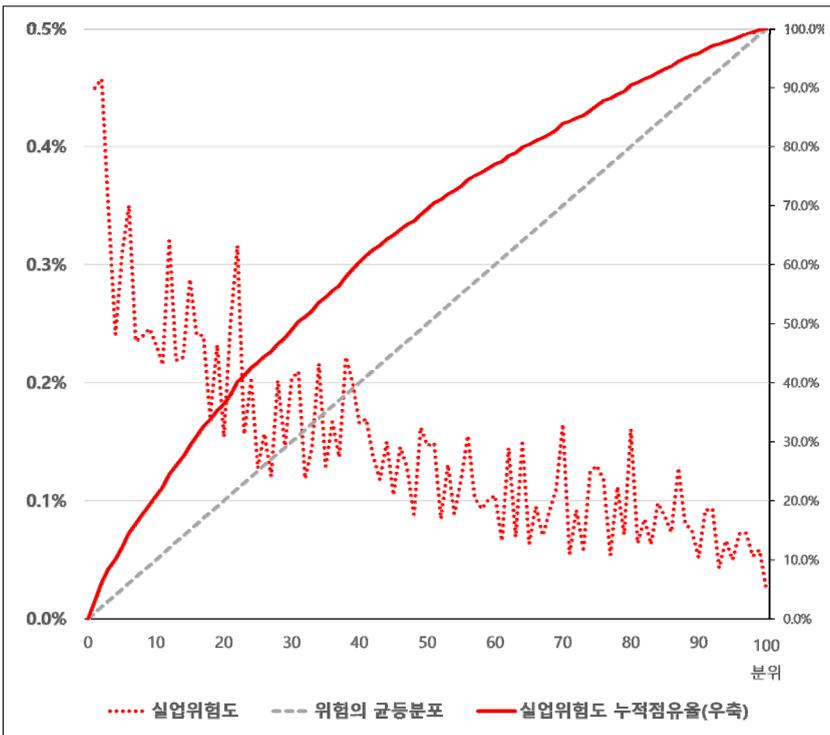
2) 〈표 6-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표 6-8〉의 마지막 열은 계층별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소득 분위의 위험도 합 대비 각 소득 분위의 위험도가 위험도 점유율이고, 최하위 소득 분위부터 특정 소득 분위까지 위험도

점유율을 합한 것이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이다. 하위 소득 1~2분위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36.3%이고, 중위소득 이하인 1~5분위가 차지하는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69.3%이다.

[그림 6-6]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 (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6]은 소득 계층을 10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 위험도 곡선과 위험도 누적 점유율 곡선(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다. 소득분위별 위험도는 그 수준 자체는 낮지만 대체로 우하향하는 모습, 즉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다. 미취업 위험

앞 소절에서 실업 위험의 집중도를 분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취업 위험의 계층별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 미취업 위험이란 실업자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위험이다. 특성 집단별 미취업 위험은 100에서 해당 집단의 고용률을 뺀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되지 않을 확률이 곧 미취업 확률 즉 미취업 위험인 것이다.

〈표 6-9〉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15 ~ 19세	8.3	6.1
20 ~ 24세	49.1	39.1
25 ~ 29세	68.2	69.7
30 ~ 34세	56.9	88.3
35 ~ 39세	55.5	91.7
40 ~ 44세	63.0	92.3
45 ~ 49세	67.1	91.5
50 ~ 54세	63.5	88.9
55 ~ 59세	55.8	83.3
60 ~ 64세	44.8	70.6
65세 이상	22.7	40.8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6-9〉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연령대별 평균 고용률을 보여준다. 100에서 이 값들을 빼주면 각 성×연령대별 미취업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를 2019년의 개인들에게 성과 연령대에 맞추어

할당해 주면 2019년의 개인별 빈곤 위험이 된다. <표 6-10>은 이를 이용하여 소득 분위별 미취업 위험도와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가구원 모두가 미취업일 위험은 소득 분위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표 6-10>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1.1	33.2(33.2)
2	23.6	19.1(52.3)
3	15.1	12.2(64.5)
4	10.6	8.5(73.1)
5	7.6	6.1(79.2)
6	6.2	5.0(84.3)
7	5.5	4.4(88.7)
8	5.0	4.1(92.7)
9	4.3	3.5(96.2)
10분위	4.7	3.8(100.0)
전체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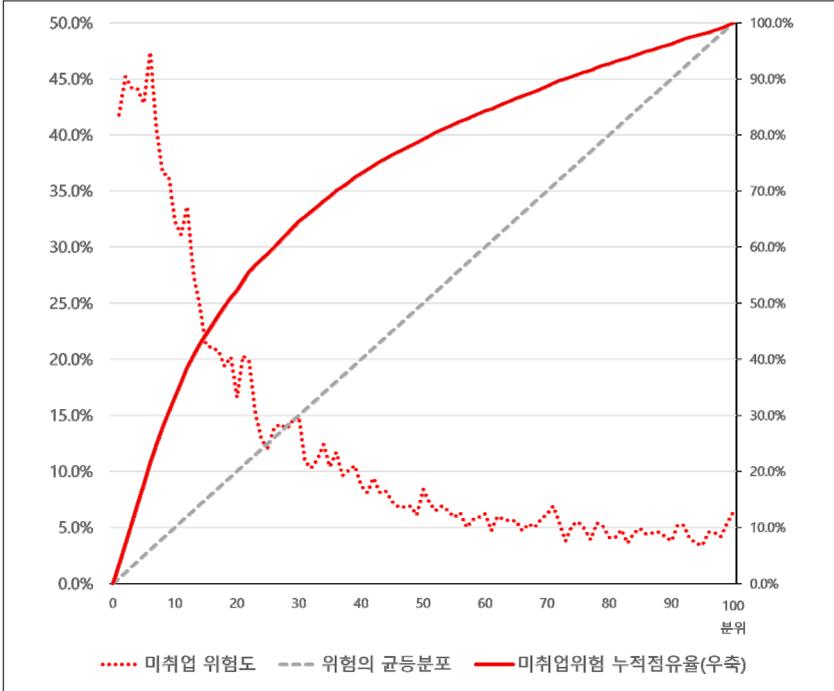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점유율.

2) <표 6-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분위별 평균 위험의 차이는 분위별 위험도 누적 점유율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표 6-10>을 보면 미취업일 위험은 2분위까지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 52.3%,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이 79.2%이다.

[그림 6-7]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저소득 분위의 위험도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림 6-7]의 로렌츠 곡선으로도 확인된다. 분위별 취업 위험을 보여주는 점선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매우 높고 하위 30%의 소득 구간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점선) 위로 상당히 올라 온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 불완전 고용 위험

이 연구에서 불완전 고용의 위험은 비자발적 근로자가 될 위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표 6-11>은 2009년~2018년간 성별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유의할 것은 이 비율이 근로자 대비 비율이 아니라 해당 인구집단(성×연령대별)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연령대의 구분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며 <표 6-7> 및 <표 6-9>와도 다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표현한 만큼 절대적인 위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 남성이 여성과 달리 연령대별 위험의 편차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은 40~50대에서 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성은 오히려 청년층에 비해 높은 위험도를 보인다.

<표 6-11>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19세	1.8	2.9
20 ~ 29세	2.8	3.8
30 ~ 39세	0.6	3.0
40 ~ 49세	0.7	3.9
50 ~ 59세	1.0	3.6
60세이상	2.4	3.8

주: 각 집단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각연도.

<표 6-11>의 값을 2019년의 각 성×연령대별 그룹에 할당하여 불완전 고용의 위험을 소득분위별로 구한 결과가 <표 6-12>에 나타나 있다.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될 위험은 위험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하위 소득 분위와 중상위 분위 사이에 격차가 큰 편이다. 분위별 위험도 점유율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모든 가구원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위험(불완전 고용 위험)은 1분위의 점유율이 42.6%로 거의 절반에 근접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5분위까지의 불완전 위험 누적 점유율은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6-12〉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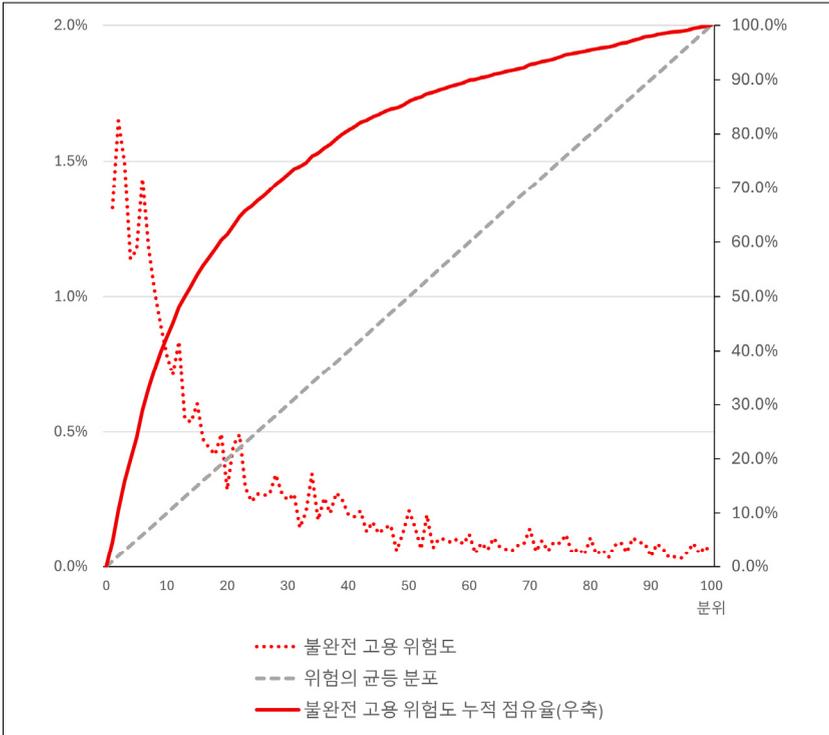
소득분위	불완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2	42.6(42.6)
2	0.5	18.8(61.4)
3	0.3	11.0(72.5)
4	0.2	8.2(80.7)
5	0.2	5.3(86.0)
6	0.1	3.9(89.9)
7	0.1	2.9(92.7)
8	0.1	2.8(95.5)
9	0.1	2.5(98.0)
10분위	0.1	2.0(100.0)
전체	0.3	

주: 1) 괄호 안은 누적점유율임.

2) 〈표 6-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8]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각연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8]은 불안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곡선을 보여준다. 우선 100 분위별 위험도를 보면 하위 20%의 인구를 넘어서면서부터 매우 낮아진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직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곡선 모양을 보인다. 불안전 고용의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 건강 위험

건강의 위험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을 건강 위험 지표로 삼는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격년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기서는 2010년, 2012년, 2016년, 2018년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표 6-13>에는 네 차례의 조사에서 각 성×연령 대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쁜 건강 위험은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6-13>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간 4개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4세 이하	0.2	0.2
15 ~ 19세	3.0	3.4
20 ~ 24세	4.3	5.3
25 ~ 29세	4.1	5.7
30 ~ 34세	5.9	5.5
35 ~ 39세	6.7	6.6
40 ~ 44세	7.7	9.2
45 ~ 49세	9.7	12.4
50 ~ 54세	12.7	17.1
55 ~ 59세	16.7	22.9
60 ~ 64세	21.2	31.3
65세 이상	37.5	53.3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10, 2012, 2016, 2018.

〈표 6-13〉의 성×연령대별 건강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원별 성×연령 층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집계한 것이 〈표 6-14〉이다. 건강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위험도는 1분위와 2분위의 차이가 크고 2분위와 3분위의 차이 또한 크다. 2분위의 평균 위험도는 1분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6-14〉의 마지막 열은 건강 위험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건강 위험은 집중도를 보인다. 1분위의 점유율이 45.3%로 매우 높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87.8%이다.

〈표 6-14〉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21.7	45.3 (45.3)
2	9.7	20.3 (65.6)
3	5.3	11.2 (76.7)
4	3.3	6.8 (83.5)
5	2.1	4.3 (87.8)
6	1.6	3.4 (91.2)
7	1.3	2.6 (93.8)
8	1.1	2.3 (96.1)
9	0.8	1.8 (97.8)
10분위	1.0	2.2 (100.0)
전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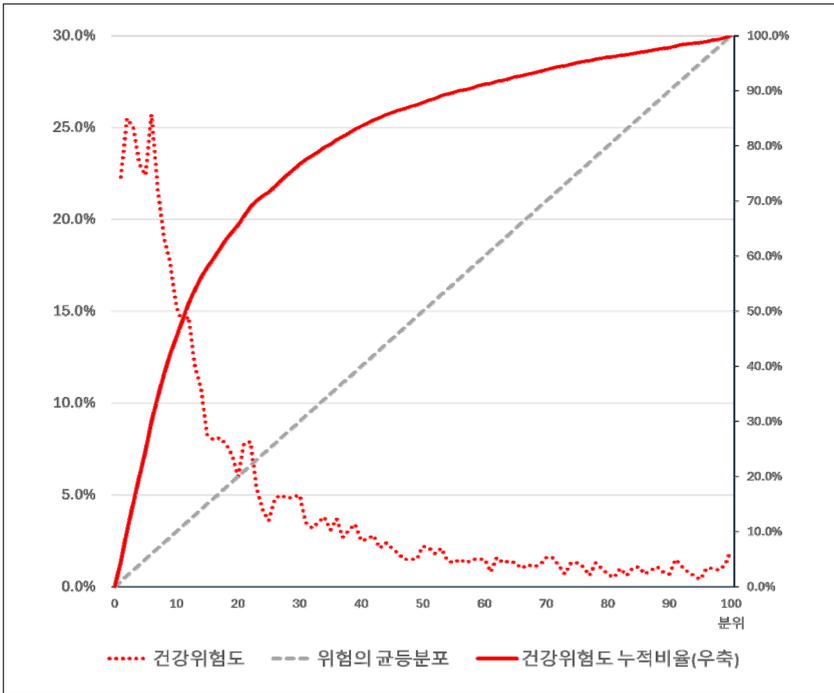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6-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소득 분위를 100개로 세분화하여 본 [그림 6-9]에서도 위험의 집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은 하위 20%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5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위험의 수준도 낮고 계층별 차이도 크지 않다. 로렌츠 곡선을 보더라도 건강 위험의 집중도는 매우 크게 그려진다.

[그림 6-9]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10, 2012, 2016, 2018.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바. 돌봄 위험

이 연구에서 돌봄 위험은 전체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75세 이상 노인층, 5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돌봄의 위험은 가구 단위의 위험이다. 가구의 유형별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 <표 6-15>는 2011년~2018년간 가구 유형별로 돌봄 위험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가구원의 연령을 이용하여 돌봄 필요 가구원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노인 가구에서 돌봄의 위험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난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돌봄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표 6-15>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가구 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60.2
2. 노인만 2인이상	48.1
3. 근로연령 단독	7.0
4. 근로연령만 2인	4.4
5. 노인+ 근로연령	8.7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인+아동	9.7
7. 근로연령 2인+아동	17.1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6.9
9. 기타	19.2
전체	14.6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빈곤율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각연도

〈표 6-16〉은 〈표 6-15〉의 가구 유형별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하여 소득 분위별로 구한 위험도를 보여준다. 1분위의 위험은 3분위 이상의 계층에서 직면하는 위험의 두 배 이상이다. 위험의 분위별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보면 위험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의 돌봄 위험 점유율은 22.1%, 5분위까지의 점유율은 62.7%이다. 돌봄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표 6-12〉나 〈표 6-14〉 등 다른 위험에 비해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도는 약한 편이다.

〈표 6-16〉 소득분위별 돌봄 부담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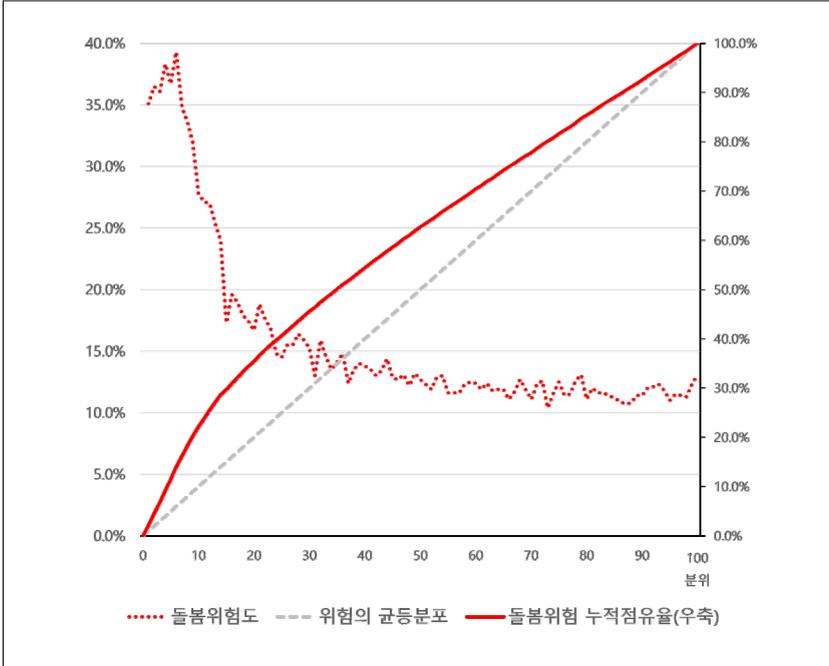
소득분위	돌봄 부담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35.0	22.1 (22.1)
2	21.1	13.3 (35.4)
3	16.1	10.2 (45.6)
4	14.0	8.8 (54.4)
5	13.1	8.3 (62.7)
6	12.2	7.7 (70.4)
7	11.8	7.5 (77.8)
8	11.9	7.5 (85.4)
9	11.3	7.1 (92.5)
10분위	11.9	7.5 (100.0)
전체	15.8	

주: 1)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2) 〈표 6-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0] 돌봄 부담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0] 은 돌봄 부담 위험의 100분위별 분포와 누적 위험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린 로렌츠 곡선이다. 위험의 수준은 하위 20%의 소득계층과 그 이상의 계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 위쪽에 위치하여 저소득층에 집중된 위험임을 보이지만 위험의 집중 정도는 앞서 살펴 본 다른 위험들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지지의 부재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위험도의 지표로 삼았다. 자료는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는 성과 연령대의 결합 분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및 연령대별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 6-17>로 재구성하였다. <표 6-17>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서 성×연령대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다른 위험도와는 달리 연령대의 구분이 상세하지 않아 집단 간 위험도의 차이가 다소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6-17>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6.5	5.5
30 ~ 49세	19.7	16.4
50세 이상	38.9	32.4

출처: 1)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SEX&df\[ag\]=OECD.WISE.WDP&df\[vs\]=1.1](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SEX&df[ag]=OECD.WISE.WDP&df[vs]=1.1)", 2) "Current well-being by age,"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fr&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AGE&df\[ag\]=OECD.WISE.WDP&df\[vs\]=1.1](https://data-explorer.oecd.org/vis?lc=fr&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AGE&df[ag]=OECD.WISE.WDP&df[vs]=1.1)"

<표 6-18>은 <표 6-17>의 값을 이용하여 2019년의 소득분위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낮은 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낮게 나타난다. 1분위의 위험도는 17.0%로,

전체 평균 5.8%의 세 배에 이른다. 분위별 위험 점유율을 보더라도 1분위의 위험 점유율은 29.2%,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73.5%이다. 다른 위험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위험이 더욱 집중되어 있다.

〈표 6-18〉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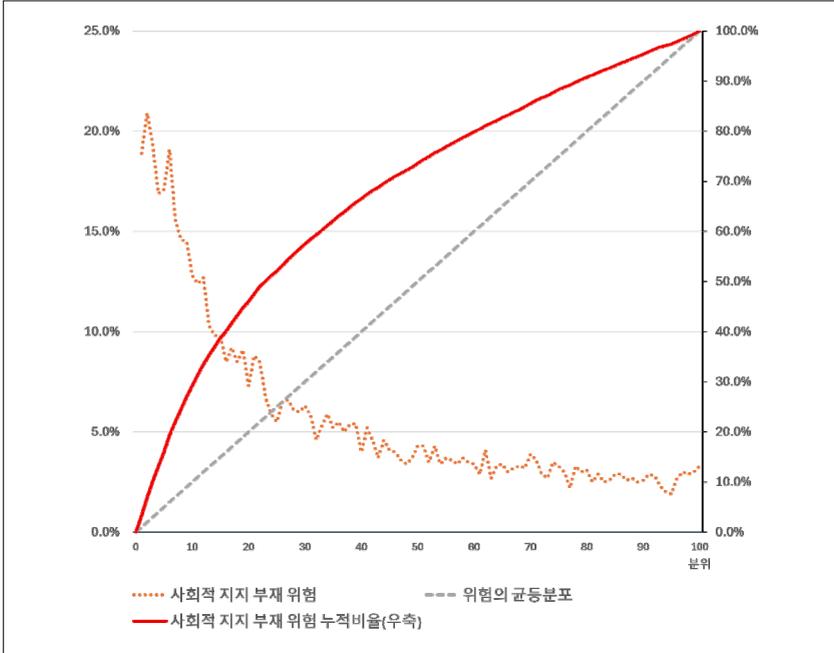
소득 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17.0	29.2 (29.2)
2	9.8	16.8 (46.0)
3	6.7	11.5 (57.5)
4	5.2	9.0 (66.5)
5	4.1	7.1 (73.5)
6	3.7	6.4 (79.9)
7	3.3	5.6 (85.5)
8	3.1	5.3 (90.8)
9	2.6	4.6 (95.4)
10분위	2.7	4.6 (100.0)
전체	5.8	

주: 1)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2) 〈표 6-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1]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6-1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1]을 통해서도 위험의 집중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도는 30% 까지 급격히 줄어들다가 이후에는 완만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 절에서 살펴본 사회적 위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전에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분포와 집중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순수혜의 분포

위험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에 비해 순수혜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 수혜와 부담을 구성하는 항목이 모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고 금액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다만 순수혜의 경우 음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다수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 6-19〉는 2019년 기준 각 소득 분위별 수혜와 부담 금액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수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 이전소득을, 부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공적연금 납부액 포함)를 합한 값이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수혜는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나지만 부담 가운데에서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분위별 차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6-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284	779	22	31	53
2	1,055	447	32	68	100
3	1,679	327	50	106	156
4	2,211	219	54	146	200
5	2,720	194	74	186	260
6	3,225	174	106	231	337
7	3,834	135	154	275	429
8	4,618	130	240	329	569
9	5,816	110	418	422	840
10분위	9,925	107	1,297	596	1,893
전체	3,537	262	245	239	484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지출.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표 6-20〉은 수혜와 부담의 분위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분위는 전체 수혜의 29.7%를 차지하고 3분위까지의 수혜 누적 점유율은 59.2%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점유율은 수혜와는 반대로 하위 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상위 소득분위에서 높다. 조세의 누적 점유율이 사회보험료의 누적 점유율에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합한 부담의 점유율 역시 고소득층에서 높는데, 그 누적 점유율이 증가하는 속도는 조세 > 부담 > 사회보험료의 순이다.

〈표 6-20〉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29.7 (29.7)	0.9 (0.9)	1.3 (1.3)	1.1 (1.1)
2	17.0 (46.7)	1.3 (2.2)	2.8 (4.1)	2.1 (3.2)
3	12.5 (59.2)	2.1 (4.3)	4.4 (8.5)	3.2 (6.4)
4	8.4 (67.6)	2.2 (6.5)	6.1 (14.7)	4.1 (10.5)
5	7.4 (75.0)	3.0 (9.5)	7.8 (22.4)	5.4 (15.9)
6	6.6 (81.6)	4.3 (13.8)	9.7 (32.1)	7.0 (22.9)
7	5.1 (86.8)	6.3 (20.1)	11.5 (43.6)	8.9 (31.7)
8	5.0 (91.7)	9.8 (29.9)	13.8 (57.4)	11.8 (43.5)
9	4.2 (95.9)	17.1 (47.0)	17.7 (75.0)	17.4 (60.8)
10분위	4.1 (100.0)	53.0 (100.0)	25.0 (100.0)	39.2 (100.0)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순수혜는 수혜에서 부담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표 6-21〉의 원편에서 보듯이 순수혜 금액은 분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위에 따라 그 값이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4분위까지는 순수혜가 양수, 즉 수혜가

부담보다 크고 5분위부터는 반대이다. 전체 평균 순수혜 값이 연간 -221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혜의 총액 역시 음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도 분위에 따라 양수와 음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소득 계층 가운데 양(+)의 순수혜와 음(-)의 순수혜를 갖는 분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를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분위 순수혜의 합은 양수가 되고, 분위별 순수혜의 점유율 역시 모두 양수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위별 순수혜를 비교한 것이 <표 6-21>의 오른쪽이다.

<표 6-21>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대체)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726	-32.8 (-32.8)	735	40.7 (40.7)
2	348	-15.7 (-48.5)	377	20.9 (61.6)
3	171	-7.7 (-56.2)	240	13.3 (74.9)
4	20	-0.9 (-57.1)	131	7.3 (82.2)
5	-66	3.0 (-54.1)	105	5.8 (88.0)
6	-163	7.4 (-46.8)	75	4.2 (92.2)
7	-294	13.3 (-33.5)	46	2.5 (94.7)
8	-439	19.8 (-13.7)	45	2.5 (97.2)
9	-730	33.0 (19.3)	30	1.7 (98.9)
10분위	-1,786	80.7 (100.0)	20	1.1 (100.0)
전체	-221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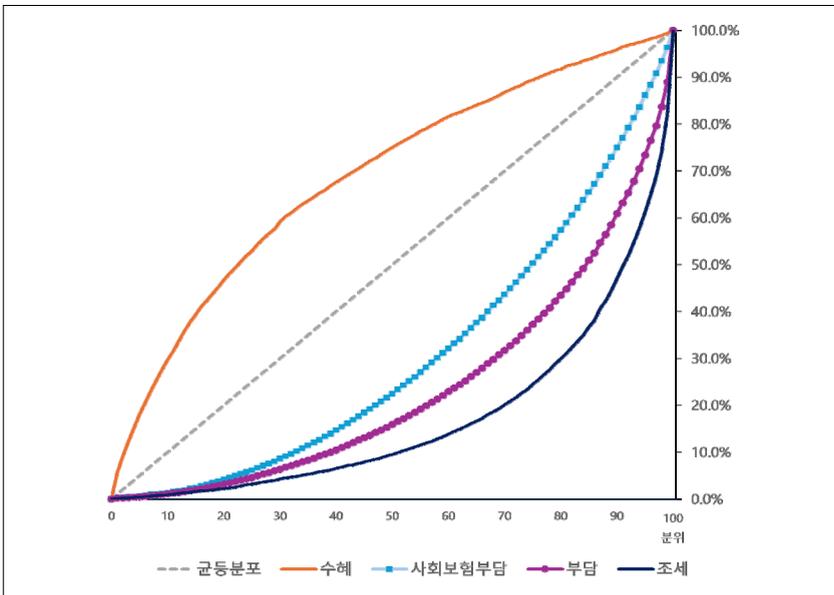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표 6-21〉은 각 방법으로 계산한 순수혜 금액 이 외에도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제시하고 있다. 음(-)의 순수혜를 양수로 대체한 순수혜의 점유율은 1분위에서 40.7%, 2분위에서 20.9% 등으로 나타난다. 2분위까지의 누적점유율은 61.6%이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88.0%에 이른다. 〈표 6-20〉의 분위별 수혜 누적 점유율에 비해 순수혜 점유율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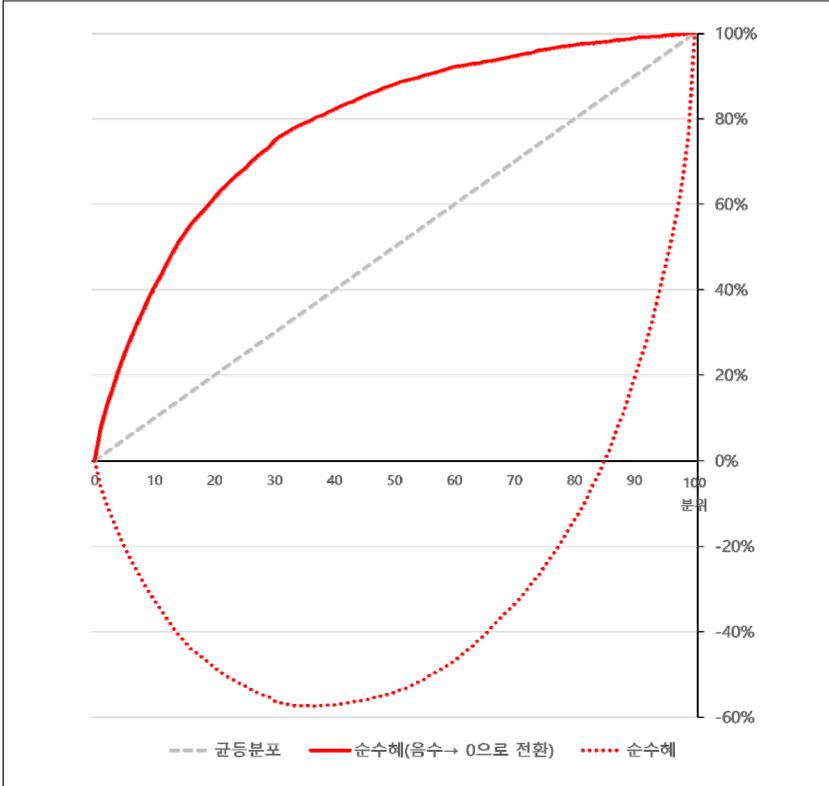
[그림 6-12]는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 [그림 6-13]은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6-12]에서 보듯이 수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아래에 위치한다. 즉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의 집중도는 사회보험료의 집중도보다 훨씬 크다.

[그림 6-12]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3]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3]은 음수값을 포함한 순수혜의 로렌츠곡선과 음수를 0으로 전환(대체)한 순수혜 로렌츠 곡선을 비교하고 있다. 음수값을 포함하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점선)은 누적 점유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집중 지수를 구하면 그 값은 1보다 크다. 음수를 0으로 대체할 경우 실선의 로렌츠 곡선이 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로렌츠곡선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음의 순수혜를 0으로 대체했을 때 순수혜는 저소득 층에 집중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위험의 종류에 따라 계층별 집중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각 위험의 집중도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들 사이에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위험은 비교적 모든 소득 계층에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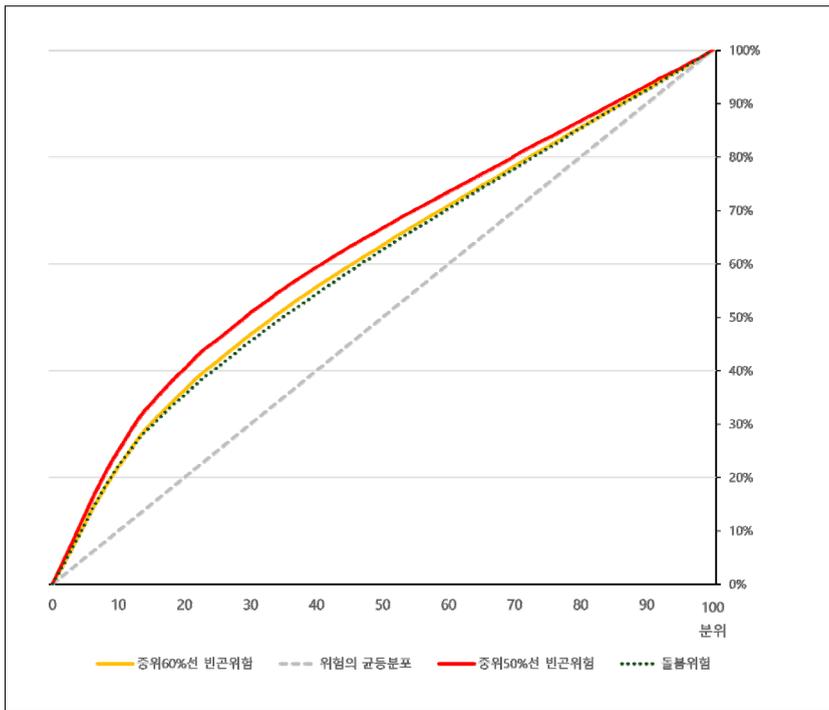
위험도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위험을 계층하고 위험의 집중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위험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앞의 분석에서 위험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빈곤이나 돌봄의 위험처럼 위험 자체가 가구 단위로 정의되는 경우이다. 빈곤 위험은 가구별로 합산된(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으로, 돌봄의 위험은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이 경우 모든 가구원은 처음부터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다. 두 번째 위험은 개인단위로 정의된 후 가구 단위로 합산된 위험이다. 고용 관련(미취업, 실업, 불완전 고용) 위험이나 건강,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위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위험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가구의 위험이 상이한 방식으로 산출될 때, 계층별 위험 집중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층별 위험의 수준과 분포가 위험의 계산 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의 분석에서는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과 개인 단위로 정의되어 가구별로 합산된 위험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6-14]는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위험의 균등한

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점선 위로 로렌츠 곡선이 치우쳐 있을수록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빈곤 위험이 돌봄 위험 비해 좀 더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돌봄의 위험은 중위소득의 60%선을 빈곤선으로 하여 측정한 빈곤 위험도에 비해 다소 덜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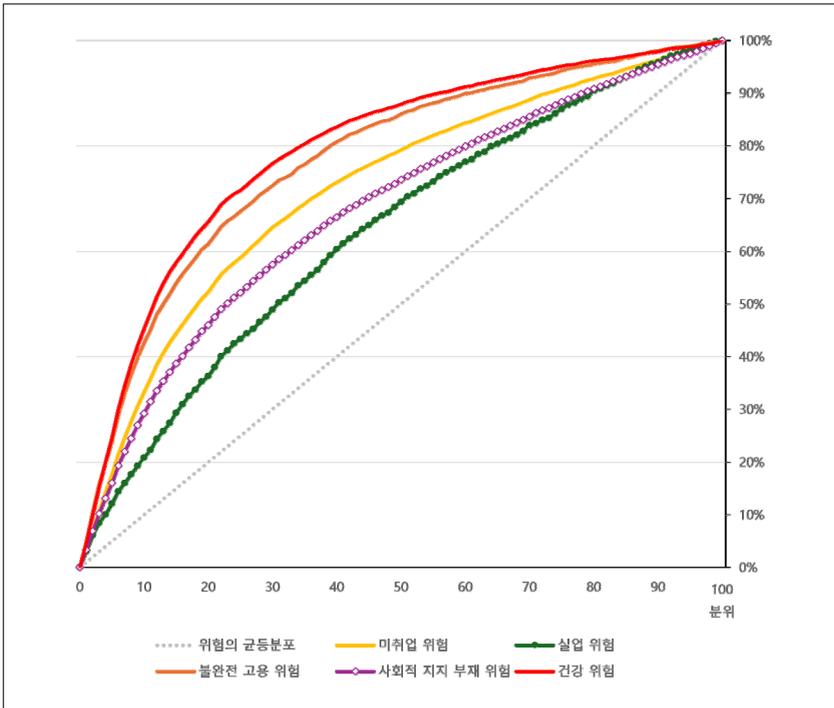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그림 6-15]는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된 위험들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로렌츠곡선이다. 위험의 균등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대각선 위에 있을수록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그림 6-15]에 따르면 위험의 집중도는 건강, 불안전 고용, 미취업, 사회적 지지의 부재,

실업 위험의 순이다. 물론 이런 순서가 로렌츠 곡선의 전 영역, 즉 모든 소득 분위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곡선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저소득 분위와 고소득 분위에서는 곡선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 집중도의 순서라기보다는 위험에 따라 집중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6-15]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곡선의 모양을 통해 살펴본 위험 집중도의 차이를 집중 계수와 비교함으로써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표 6-22>는 각 위험별 집중지수를 보여준다. 집중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집중도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표 6-22>에는 집중지수 이 외에도 위험의 지니계수도 참고로 제시하였다. 위험의 집중 지수는 위험도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험의 지니계수는 위험도를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위험의 집중도를 비교할 때에도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과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22>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255	0.408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206	0.331
	돌봄위험	-0.195	0.390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434	0.656
	실업 위험	-0.270	0.906
	불완전 고용 위험	-0.547	0.897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354	0.671
	건강 위험	-0.584	0.845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표 6-22>에서 모든 위험의 집중 지수는 그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다. 즉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집중된 정도는 집중 지수의 절댓값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단위로 측정된 위험에서는 중위소득 50%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위험의 집중지수(-0.255)의 절댓값이 중위소득 60%선 기준 빈곤 위험이나 돌봄 위험의 집중지수 절댓값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위험의 경우 집중 지수의 절댓값은 건강 > 불완전 고용 > 미취업 > 사회적 지지 부재 > 실업 위험의 순이다. 이는 [그림 6-15]에서 로렌츠

곡선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 순서와 같다.

위험의 집중지수와 위험의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의 위험은 위험 집중지수의 절댓값은 작은 편이지만 위험 지니계수의 절댓값은 매우 높다. 즉 위험도는 위험도가 높은 계층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는 그 정도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돌봄 위험과 중위소득 60%선 기준 빈곤 위험을 비교해 보면 위험의 지니계수는 돌봄 위험이 더 크다. 돌봄 위험이 높은 계층에 집중된 정도는 중위소득 60%선 기준 빈곤 위험이 더 높은 계층에 위험이 집중된 정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위험의 집중 지수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표 6-23>은 <표 6-22>와 마찬가지로 순수혜를 도출하는 데 관련된 항목들의 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6-23>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수혜, 순수혜 항목들의 집중지수 값은 음수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집중지수 값은 양수이다. 순수혜(음의 값을 0으로 대체)의 집중지수 절댓값은 수혜의 집중지수에 비해 크다. 부담까지를 고려한 순수혜는 수혜에 비해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표 6-23〉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375	0.727
부담	조세	0.656	0.737
	사회보험료	0.387	0.470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523	0.583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1.587	-1.956
	순수혜(음수 → 0으로 전환)	-0.572	0.838

출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2020(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를 각각 비교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6-22〉와 〈표 6-23〉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면 집중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구별 위험의 계산과 순수혜의 계산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과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집중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험의 계산과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집계 방식의 차이가 위험과 순수혜 사이에도 존재한다. 순수혜의 집중도는 가구 단위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즉 금액으로 표현된 값을 이용한 연산을 통해 집중지수가 도출되는 것이다. 확률값의 연산을 통해 도출된 위험의 집중지수와 다른 전제와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만큼 두 집중지수를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위험의 집중도는 위험별로 계산된 데 비해 수혜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구 소득(수혜)과 지출(부담)이라는 점 역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개별 위험의 집중도와 수혜의 집중도를 직접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표 6-22>의 집중지수와 <표 6-23>의 집중지수를 비교할 수 있다. 순수혜의 집중지수는 대부분의 위험 집중지수보다 절댓값이 크고, 건강 위험의 집중지수에 비해서만 절댓값이 낮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이후 12장에서 다른 국가의 위험 및 순수혜 집중도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할 것이다.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때 직면하는 한계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미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미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제3절 소결

제 7 장

미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미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

미국에서 순수혜의 유형과 특징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복지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국 복지국가의 부담과 지출 구조는 전형적인 자유주의형 체제를 반영한다.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며, 조세·이전의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이다(Esping-Andersen, 1990). 미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지출과 부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이 낮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약 25.2% 수준으로, OECD 평균(33.9%)과도 차이가 크다(OECD, 2025a). 북유럽(스웨덴·덴마크·핀란드)이 40% 이상을 유지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 규모 대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게 걷는 ‘저부담’ 국가이다. 미국의 조세제도 가운데서 개인 소득세는 일정 정도 누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의 누진성은 다국적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그 효과가 약화된(Zucman, 2015).

둘째, 미국은 공공사회지출 수준도 낮다. 미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24년 GDP 대비 19.8%로, OECD 평균(21.2%)보다 낮으며, 북유럽(24% 이상) 및 대륙형(독일·프랑스, 27% 이상)보다 현저히 낮다(OECD,

2025b). 다만, 사적 지출(민간 사회보험, 고용주 제공 복지 등)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총 사회 지출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Adema et al., 2011). 이는 시장과 고용주를 통한 복지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공공사회지출의 구성을 보면, 건강 분야 비중이 높고, 가족 분야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OECD, 2025b).

셋째, 재분배 효과와 이전방식을 보면, 미국의 조세·이전은 빈곤감소 효과가 작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2023년 기준으로 27.1%인 반면, 조세·이전 후 빈곤율은 약 18.1%로 감소폭이 9% 포인트다(OECD, 2025c).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감소율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5% 포인트를 넘는 점을 보면, 미국 복지국가의 낮은 재분배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이전 후 빈곤 감소 비율은 이른바 ‘중부담-중지출’ 국가인 일본(18.2%, 2021년 기준), 영국(17.0%, 2023년 기준)에서도 15%를 넘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5.4%로 미국 보다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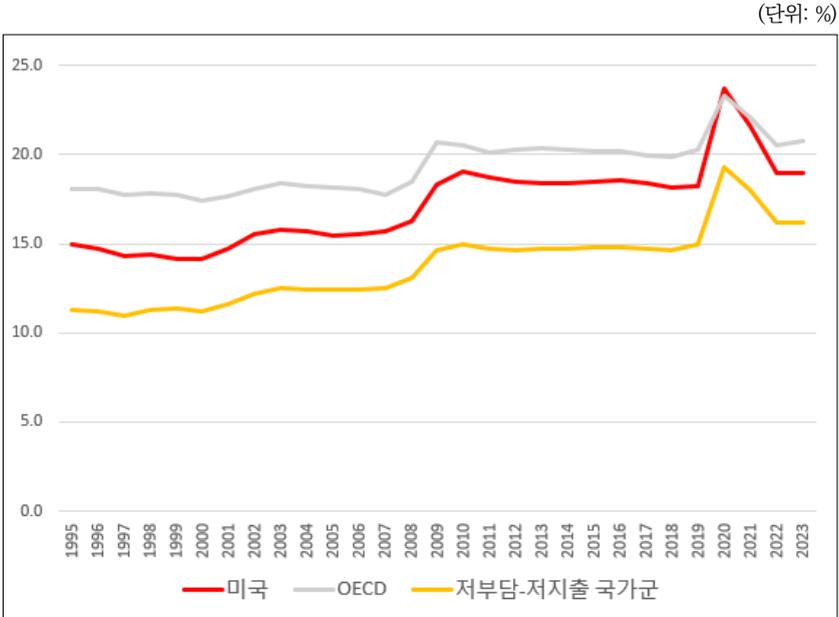
넷째, 미국은 GDP 대비 건강 지출이 1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다(OECD, 2023). 건강 분야에서 공공의 지출 비율은 51%로 OECD 평균(71%)을 크게 밑돈다(OECD, 2023). 민간보험 의존으로 인해 행정비용 및 의료수가가 높고, 지출 대비 보장성과 형평성은 낮다(Commonwealth Fund, 2023). 미국의 막대한 의료 관련 지출에도 불구하고 건강 지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신생아를 기준으로 78.9세로 OECD 평균(81.0세)에 못미친다(OECD, 2023). 그렇지만, 미국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다. 스스로의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8.5%)을 하회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통계는 <그림 7-3>에서도 확인된다.

다섯째, 미국은 연방·주·지방 간 재정분권이 강하다. 그래서 복지지출 수준과 범위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메디케이드의 주별 선택적 확대, TANF(현금공공부조)의 주별 급여수준, 주별 세제와 사회서비스 예산의 편차가 대표적이다(Bitler & Hoynes, 2016). 이는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라 부담과 지출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든다.

미국의 사회지출 및 부담 수준을 OECD 회원국 및 저부담-저지출 국가군과 비교해보자. [그림 7-1]은 미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서 공공 부분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반영한다(Esping-Andersen, 1990). 구체적으로, 미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약 1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약 21%보다 낮다(OECD, 2025b). [그림 7-1]에서 미국(붉은색 선)이 OECD 평균(회색 선)의 하단에 위치하고, '저부담-저지출 국가군'(노란색 선)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입증한다. 물론, 저부담-저지출 국가군보다 미국에서 지출 규모가 꾸준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컸던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지출 급증이 확인된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회성 현금 급여 등 연방정부의 한시적 지원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시의 낮은 지출 수준과 시장 중심의 복지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7-1]은 낮은 총량과 위기 시에만 일시적으로 팽창하는 미국 공공사회지출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7-1] 미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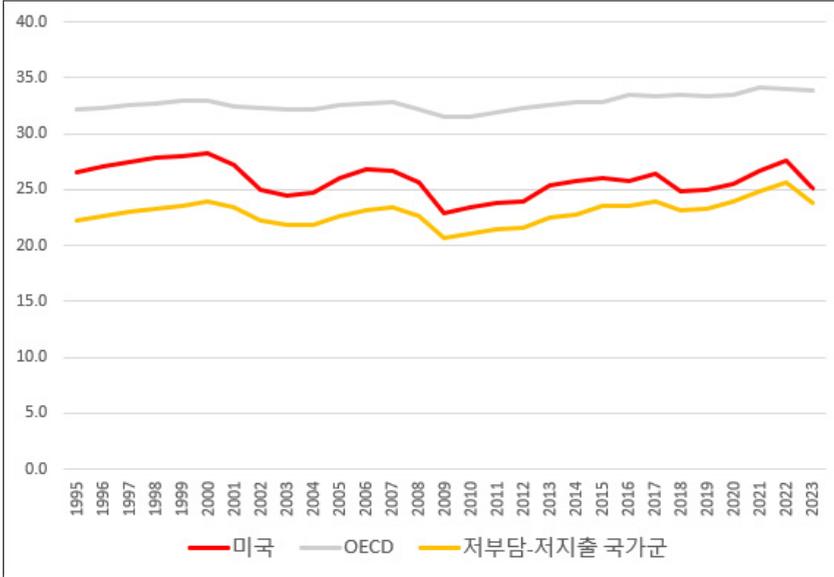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그림 7-2]가 보여주는 낮은 국민부담률은 미국 복지국가가 보여주는 특징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이다. 낮은 조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림 7-1]에서 확인된 낮은 수준의 공공사회지출과 연관된다. 미국의 낮은 국민부담률은 시장 중심의 복지 체제와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그림 7-1]과 [그림 7-2]에서 미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과 대체로 동조한다. 미국이 전형적인 저부담-저지출 국가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평균을 해당 국가 집단의 인구를 가중해서 산출한 과정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2] 미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출처: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2. 사회적 위험의 수준

미국의 사회적 위험 구조는 강한 시장 의존성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실업·질병·노령·가족 돌봄과 같은 전통적 위험뿐 아니라, 저임금·근로빈곤·돌봄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부실한 안전망의 틈 사이로 부각된다. 북유럽이나 대륙유럽의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공공의 보편적, 집합적 대응보다 개인·가구의 사적 대응이 요구된다(Esping-Andersen, 1990). 미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다. 미국의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값 50% 기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5c). [그림 7-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빈곤

율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의 평균을 꾸준히 상회했다. 2023년 기준으로 18.1%로 추정됐다. 특히 아동·한부모·유색인종 가구에서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21.1%로 추정됐다(OECD, 2025c). 참고로,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2022년 기준으로 9.5%였다(OECD, 2025c). 북유럽 등 다른 복지국가에서 조세·이전의 재분배로 시장불평등을 크게 완화하였지만, 미국은 조세·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강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약한 재분배 정책은, 경기변동기나 팬데믹과 같은 충격에서 노동 취약 계층의 실업 및 빈곤 위험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둘째, 가족·보육·성평등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공공의 역할이 약하다. 미국은 OECD 회원국 중 법정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OECD, 2024a). 북유럽이 유급휴가·보육보편주의로 여성 고용단절과 아동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출산 전후에 19주 미만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는다(OECD, 2024a). 반면, 미국은 주별·기업별 자율 제공과 선택적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한부모·저임금 여성의 빈곤 위험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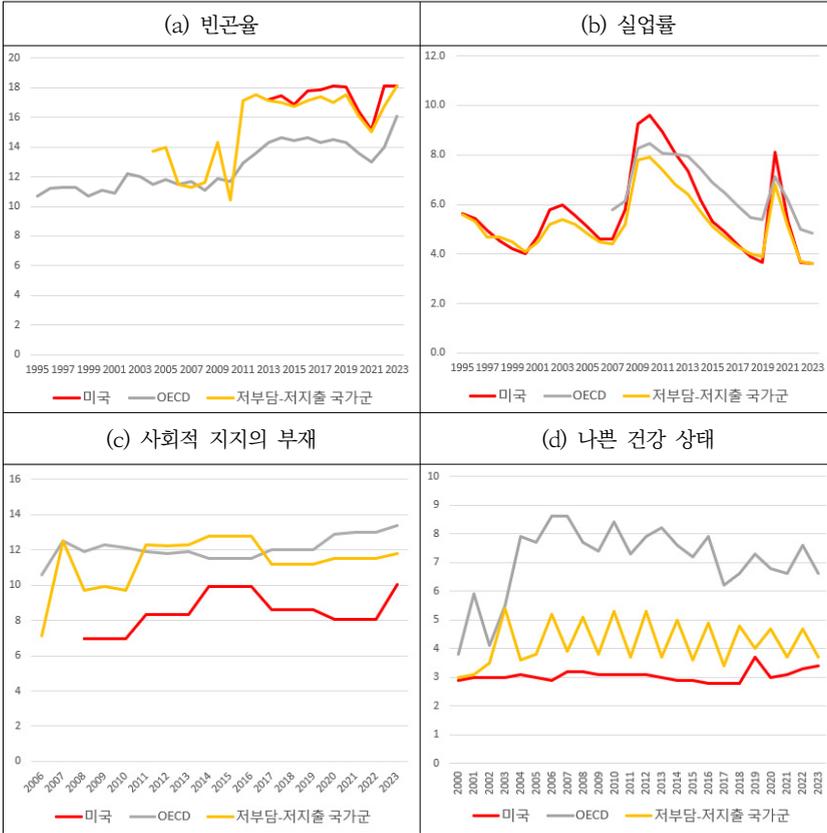
셋째, 건강보장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의료보장 영역에서 시장의 역할이 큰 결과, 비용 장벽이 높다. 국제 비교에서 미국은 미충족 의료경험과 비용부담 지표가 최하위 수준이며, 의료비 파산·비급여 부담이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 작동한다(Commonwealth Fund, 2023; OECD, 2023). 보편적 단일건강보험을 채택한 북유럽·영연방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고용연계 사보험의 역할이 강하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도 부재하다(김기태, 2023).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부재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뿐이다.

넷째, 노동시장 실업 등에 처할 위험이 크다. 미국은 저임금·비정형 고용·긱 경제(Gig Economy)의 비중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다(OECD, 2024b). 북유럽이 실업·전환기 위험을 공공훈련·고용서비스로 완충한다면, 미국은 공공지출의 수준도 낮고, 주에 따른 편차도 크다(OECD, 2024b). 이로 인해 경기충격 시 장기 가구 실업·미취업화 위험이 지역·학력·인종에 따라 취약집단에 집중된다. [그림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실업률의 변동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이 근로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저임 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3.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23.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OECD, 2025e). 저임 노동자 비율은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한다(OECD, 2025e). 미국의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12.7%)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영국은 그나마 근로연령대 및 노인집단을 위한 공공부조인 통합급여와 펜션크레딧은 보편적 건강 인프라와 결합되어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위험 양상을 다른 OECD 회원국이나 저비용-저지출 국가군과 비교하면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 미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출처: "Social Indicators,"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가. 가구 유형의 소득 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가구 유형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미국은 LI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7-1>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 구성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각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7-1>을 보면, 미국에서도 노인 단독 가구 및 노인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노인 단독 가구가 8년 사이 0.9% 포인트 늘었다. 물론, 한국만큼 변화가 빠르지는 않다. 한국에서 노인의 단독가구 비율은 1.4% 포인트 늘었다.

이른바 ‘표준가구’ 유형인 ‘근로연령 2인+아동’의 유형도 2.1% 포인트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빈가구 유형인 점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노인+근로연령’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인 점과 대조적이다. 성인 자녀가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한국의 특성은 미국에서는 자주 관찰되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준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2019년 기준으로 표준가구가 30% 수준인 것도 비슷하다.

〈표 7-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노인 단독	3.8	3.9	4.0	4.1	4.3	4.4	4.5	4.6	4.7
2. 노인만 2인 이상	5.5	5.8	6.0	6.1	6.2	6.4	6.7	7.0	7.1
3. 근로연령 단독	7.4	7.2	7.2	7.1	7.1	7.2	7.1	7.0	7.0
4. 근로연령만 2인	15.7	15.7	15.5	15.3	15.0	15.1	15.2	15.1	15.1
5. 노인+근로연령	15.0	15.5	15.9	16.3	16.2	16.6	16.9	17.0	17.3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6.2	6.4	6.3	5.9	5.8	6.0	5.8	5.7	5.4
7. 근로연령2+아동	31.0	30.5	30.7	30.6	30.4	29.7	29.3	29.2	28.9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13.3	12.7	12.3	12.4	12.6	12.2	12.1	12.0	11.9
9. 기타	2.0	2.2	2.2	2.2	2.4	2.3	2.5	2.5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가구 유형에 따라서 빈곤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9년 사이에 각 소득 분위별로 가구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7-2〉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7-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 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 노인 단독	23.7	9.1	4.2	2.6	2.0	1.7	1.5	1.4	1.1	1.2
2. 노인만 2인이상	24.3	13.8	8.3	5.4	4.1	4.5	3.7	3.4	4.2	4.7
3. 근로연령 단독	12.5	6.3	5.2	5.3	7.0	7.2	7.7	6.9	6.0	5.5
4. 근로연령만 2인	7.8	7.3	8.4	11.2	13.4	15.0	18.2	20.6	22.3	25.7
5. 노인+ 근로연령	13.4	15.4	15.6	15.7	18.0	18.2	19.9	21.1	21.6	20.9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7.9	14.0	10.3	7.0	5.3	3.5	2.7	1.7	1.4	1.1
7. 근로연령2+아동	5.4	21.0	30.5	33.3	31.8	32.8	31.7	30.5	30.1	30.0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2.5	9.7	13.2	15.8	15.5	14.9	12.8	12.0	11.3	9.4
9. 기타	2.6	3.5	4.3	3.8	2.9	2.3	1.8	2.3	1.9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개인 특성의 소득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개인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성과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가정한 만큼 소득 계층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7-3〉은 각 소득 분위별로 성과 연령대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6분위 이하 소득 분위에서는 남성의 비중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고 7분위 이상 고소득 분위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다.

〈표 7-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4.5	55.5	9.7	35.2	55.1
2	44.9	55.1	25.6	45.0	29.4
3	46.4	53.6	29.0	52.3	18.7
4	48.8	51.2	28.4	58.0	13.6
5	48.5	51.5	25.5	63.1	11.4
6	49.8	50.2	24.1	65.2	10.7
7	50.6	49.4	21.5	68.5	10.1
8	50.5	49.5	19.9	70.6	9.5
9	50.7	49.3	19.0	71.8	9.2
10	51.7	48.3	17.8	72.2	10.0
전체	48.6	51.4	22.0	60.2	17.8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 보면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연령층인 18~64세의 비중은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점차 늘어난다. 0~17세 아동의 비중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중간 소득 분위에서는 높아졌다가 9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과 한국이 유사하다. 고령화하면서 소득 분위가 떨어지는 추세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2. 사회적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

가. 빈곤 위험의 분포

미국의 사회적 위험 분포에 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빈곤 위험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8년의 빈곤율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표 7-4>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의 평균 빈곤율이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는 76.9%, 중위소득의 6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79.6%였다. 평균 빈곤율이 낮은 7번째 유형, 즉 근로연령 2명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보면 평균 빈곤율은 빈곤선 수준에 따라 각각 20.3%와 25.7%이다. 가구 안에 근로연령대가 두 명임에도, 평균빈곤율이 20%를 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표 7-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76.9	79.6
2. 노인만 2인 이상	61.7	65.4
3. 근로연령 단독	32.6	36.0
4. 근로연령만 2인	16.2	19.2
5. 노인+근로연령	23.4	27.1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58.4	65.2
7. 근로연령2+아동	20.3	25.7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20.2	25.8
9. 기타	36.9	43.1
계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에 근거한 빈곤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7-4〉의 가구 유형별 평균 빈곤율을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평균하면 2019년 기준 각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모든 분위의 위험도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위험도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표 7-5〉에는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제시되어 있다.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에서는 48.9%, 중위소득 60% 빈곤선에서는 52.7%이다. 1~4분위에서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빈곤 위험도는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하지만, 5분위 이상에서는 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7-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8.9	16.5(16.5)	52.7	15.5(15.5)
2	38.0	12.9(29.4)	42.6	12.5(28)
3	31.6	10.7(40.1)	36.3	10.7(38.7)
4	28.0	9.5(49.5)	32.7	9.6(48.3)
5	26.5	9(58.5)	31.1	9.2(57.5)
6	25.6	8.7(67.2)	30.2	8.9(66.4)
7	24.9	8.4(75.6)	29.3	8.6(75)
8	24.2	8.2(83.8)	28.6	8.4(83.4)
9	24.0	8.1(91.9)	28.4	8.3(91.7)
10분위	23.9	8.1(100)	28.1	8.3(100)
전체	31.4		36.4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7-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1분위의 빈곤 위험도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2011년~2018년)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2019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8.9% (중위소득 50%선 기준)의 확률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19년의 실제 빈곤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1분위의 빈곤율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표 7-5>에서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48.9%이다. 그 이유는,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7-5>의 위험은 사전적(事前的) 위험이고 실제 계측된 빈곤율은 사후적(事後的) 위험이라는 점이다.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계산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위별 빈곤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빈곤 위험도 점유율이란 전체 계층의 위험도 합에서 특정 분위의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란 특정 분위 및 그 이하 소득 계층의 위험도 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표 7-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빈곤위험도의 합에서 2분위까지의 빈곤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은 29.4%(중위소득 50%선), 28.0%(중위소득 60%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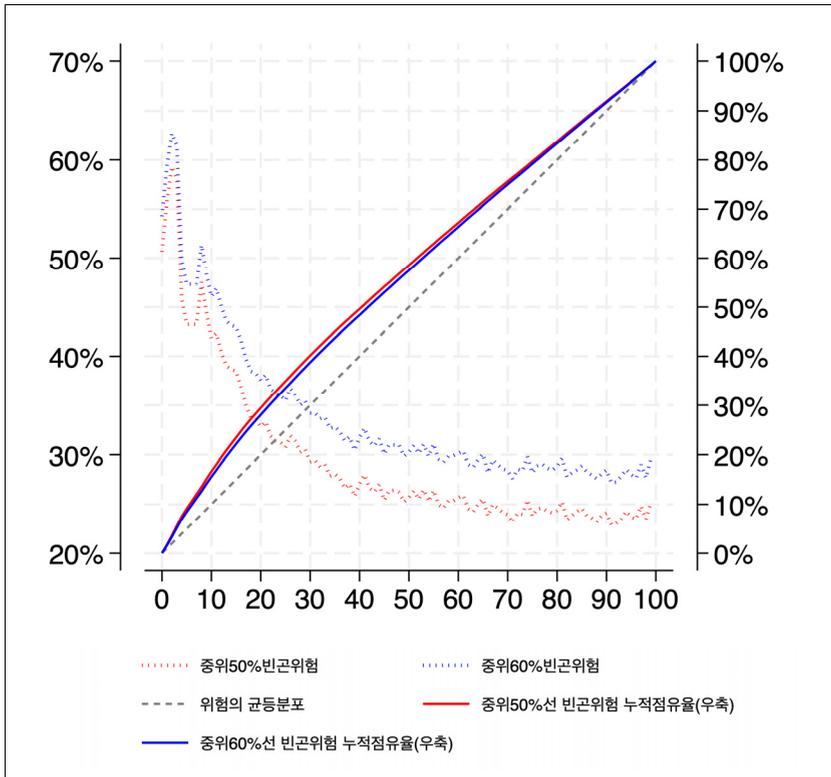
[그림 7-4]는 소득 분위를 100분위로 세분화하여 그린 로렌츠곡선이다. [그림 7-4]의 가로축은 전체 인구를 시장소득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누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각 소득 분위별 빈곤 위험도(좌축)와 각 분위까지의 누적 인구가 점유하는 빈곤 위험도의 누적점유율(우축)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린 실선의 곡선이 빈곤 로렌츠 곡선이다.

먼저 좌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빈곤위험도를 보면 전체 인구의 20%까지 빈곤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위 50%의 빈곤위험은 중위 60% 빈곤 위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로렌츠 곡선(빈곤위험도 누적점유율 곡선)을

보면 두 빈곤 곡선 모두 위험도의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점선(우상향 대각선) 위쪽으로 그려져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빈곤 위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위 50% 빈곤의 로렌츠곡선이 중위 60%의 로렌츠곡선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는 중위 50%선 기준 빈곤이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실업

실업의 위험은 복지국가가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다. <표 7-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연령대별, 성별 실업자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실업률이 아닌 실업자의 비율이다. 즉 경제 활동참여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 아닌 전체 연령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다. <표 7-6>에서 15~19세 연령대의 남성 평균값이 7.73%로 나타났다.

<표 7-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자 비율	
	남성	여성
15 ~ 19세	7.73	6.26
20 ~ 24세	9.44	6.87
25 ~ 29세	7.10	5.41
30 ~ 34세	5.84	4.73
35 ~ 39세	5.15	4.27
40 ~ 44세	4.86	3.96
45 ~ 49세	4.68	3.83
50 ~ 54세	4.53	3.54
55 ~ 59세	4.07	3.08
60 ~ 64세	3.23	2.31
65세 이상	1.17	0.73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7-6>의 수치를 2019년 데이터의 각 성 및 연령대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할당해 주면 2019년 시점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의 위험도가 산출된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 가구원 개인별 실업 위험도를 모두

곱하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 상태에 놓일 위험도가 계산된다. <표 7-7>의 가운데 열은 가구의 실업 위험도를 소득 분위별로 평균한 값이다. <표 7-7>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일 위험의 절대적인 값은 매우 낮다. 그러나 그 분포는 균등하지 않다. 1분위의 실업 위험은 5분위 이상보다 대략 2배 정도이다.

<표 7-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0	15.6(15.6)
2	0.9	14.7(30.3)
3	0.7	11.6(42)
4	0.6	9.5(51.5)
5	0.6	9.9(61.3)
6	0.6	9.1(70.4)
7	0.6	8.9(79.4)
8	0.5	7.9(87.3)
9	0.4	6.6(93.9)
10분위	0.4	6.1(100)
전체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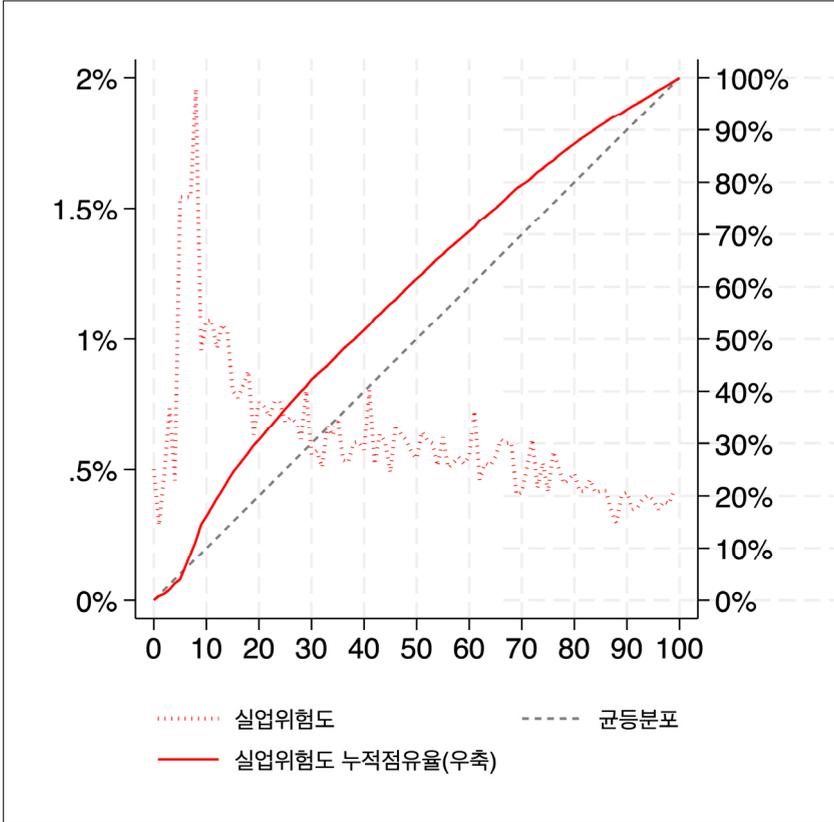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7-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7-7>의 마지막 열은 계층별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소득 분위의 위험도 합 대비 각 소득 분위의 위험도가 위험도 점유율이고, 최하위 소득 분위부터 특정 소득 분위까지 위험도 점유율을 합한 것이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이다. 하위 소득 1~2분위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30.3%이고, 중위소득 이하인 1~5분위가 차지하는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61.3%이다.

[그림 7-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5]는 소득 계층을 10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 위험도 곡선과 위험도 누적 점유율 곡선(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다. 소득분위별 위험도는 그 수준 자체는 낮지만 대체로 우하향하는 모습, 즉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다. 미취업 위험

이번에는 미취업 위험의 계층별 위험을 분석했다. 미취업 위험이란 실업자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위험이다. 특성 집단별 미취업 위험은 100에서 해당 집단의 고용률을 뺀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되지 않을 확률이 미취업 확률, 즉 미취업 위험이다.

〈표 7-8〉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15 ~ 19세	26.9	29.0
20 ~ 24세	64.7	61.3
25 ~ 29세	80.7	69.6
30 ~ 34세	84.8	69.1
35 ~ 39세	86.1	69.8
40 ~ 44세	85.6	71.5
45 ~ 49세	83.4	72.0
50 ~ 54세	80.0	69.9
55 ~ 59세	73.8	63.9
60 ~ 64세	58.0	48.1
65세 이상	22.0	14.1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7-8〉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연령대별 평균 고용률을 보여준다. 100에서 이 값들을 빼주면 각 성×연령대별 미취업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를 2019년의 개인들에게 성과 연령대에 맞추어 할당해 주면 2019년의 개인별 미취업 위험이 된다. 〈표 7-9〉는 이를 이용

하여 소득 분위별 미취업 위험도와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가구원 모두가 미취업일 위험은 소득 분위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표 7-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7.5	26.2(26.2)
2	28.0	15.4(41.6)
3	19.1	10.5(52.2)
4	14.8	8.2(60.3)
5	13.4	7.4(67.7)
6	12.6	6.9(74.6)
7	11.9	6.6(81.2)
8	11.1	6.1(87.3)
9	11.2	6.2(93.5)
10분위	11.8	6.5(100)
전체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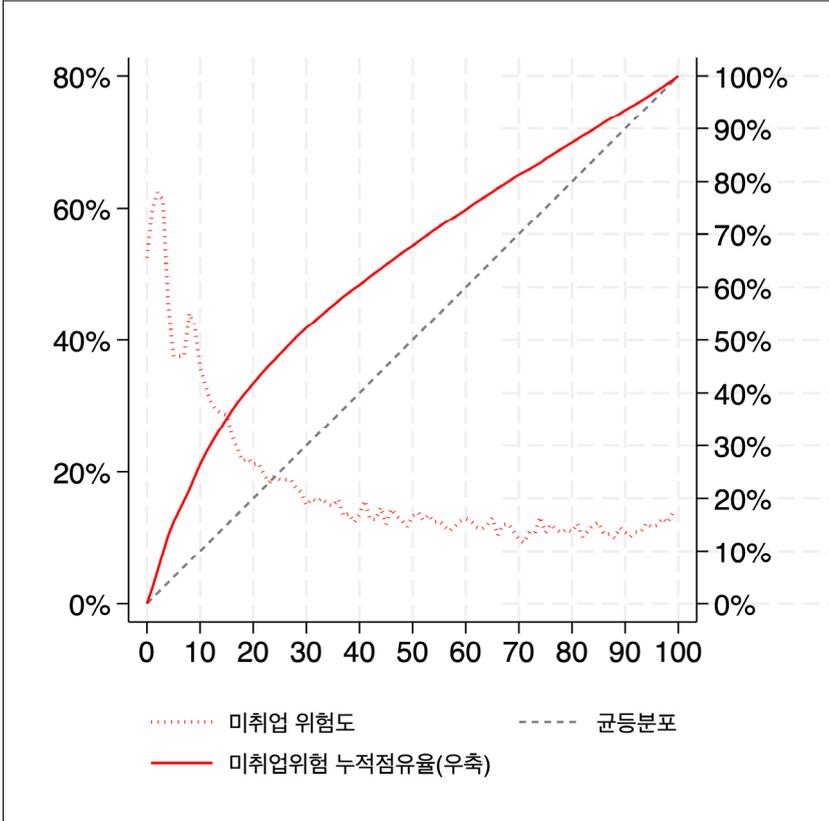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7-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분위별 평균 위험의 차이는 분위별 위험도 누적 점유율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표 7-9〉를 보면 미취업일 위험은 2분위까지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 41.6%,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이 67.7%이다.

[그림 7-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저소득 분위의 위험도 점유율이 높은 결과는 [그림 7-6]의 로렌츠 곡선으로도 확인된다. 분위별 취업 위험을 보여주는 점선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매우 높고 하위 30%의 소득 구간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점선) 위로 상당히 올라온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 불완전 고용 위험

앞서 불완전 고용의 위험은 비자발적 근로자가 될 위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표 7-10>은 2009년~2018년간 성별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유의할 것은 이 비율이 근로자 대비 비율이 아니라 해당 인구집단(성×연령대별)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연령대의 구분은 나라들끼리도 다르다. <표 7-6> 및 <표 7-8>과도 다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표현한 만큼 절대적인 위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연령대별 위험의 편차가 나타났다. 남녀 집단 모두 나이가 들면서 비율은 감소했다.

<표 7-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4세	1.9	2.0
25 - 54세	0.7	1.1
55 - 64세	0.4	0.7
65세 이상	0.1	0.1

주: LIS 자료상의 국가들의 연령대 구분(네 집단)과 한국의 구분(여섯 집단)이 다른 점에 주의할 필요 있음.

출처: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OECD, 각연도, 2025. 6. 11.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7-10>의 값을 2019년의 각 성×연령대별 그룹에 할당하여 불완전 고용의 위험을 소득분위별로 구한 결과가 <표 7-11>에 나타나 있다.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될 위험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분위 사이에 격차도 크지 않았다. 모든 가구원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위험(불완전 고용 위험)은 1분위의 점유율이 16.6%였고, 전체 인구의 절반인 5분위까지의 불완전 위험 누적 점유율은 66.0%였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세였다.

〈표 7-11〉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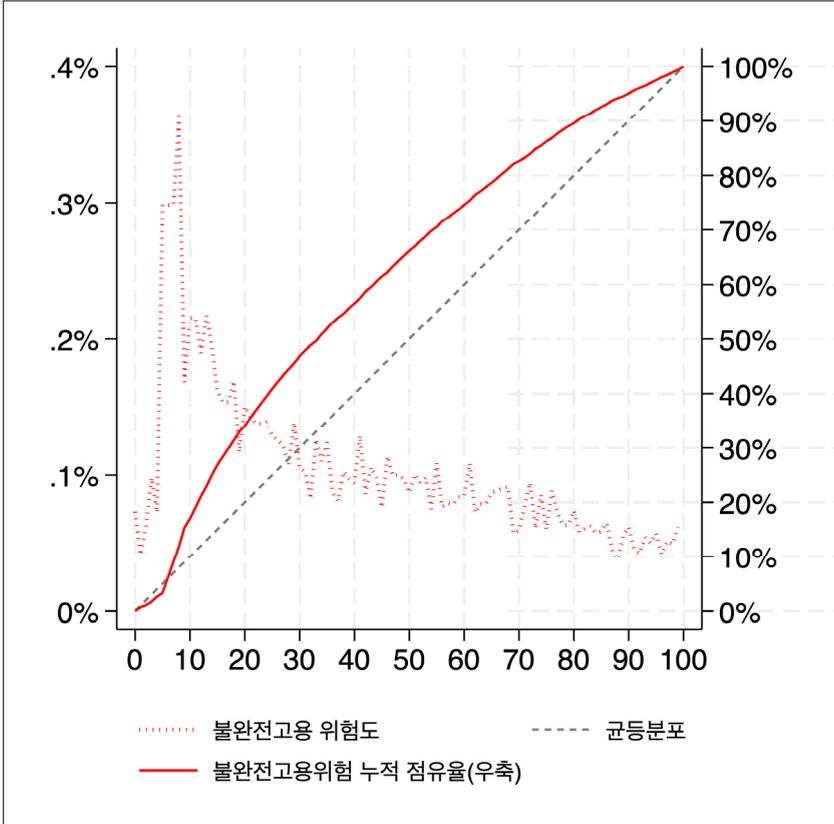
소득분위	불완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0.2	16.6(16.6)
2	0.2	17.2(33.8)
3	0.1	12.8(46.6)
4	0.1	9.8(56.4)
5	0.1	9.6(66)
6	0.1	8.5(74.5)
7	0.1	8.1(82.6)
8	0.1	7(89.5)
9	0.1	5.5(95)
10분위	0.1	5(100)
전체	0.1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7-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그림 7-7] 불완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7]은 불완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곡선을 보여준다. 우선 100 분위별 위험도를 보면 하위 0~5%에서는 위험도가 낮다가 이후 크게 상승한 후 20%의 인구를 넘어서면서부터 매우 낮아진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직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곡선의 모양을 보인다. 다만, 하위 5%에서는 균등 분포 곡선보다 밑으로 휘어진다.

마. 건강 위험

건강의 위험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을 건강 위험 지표로 삼는다. <표 7-12>에는 성×연령대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쁜 건강 위험은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7-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6세 이하	1.34	1.44
6-17세	1.94	2.06
18-24세	3.73	3.97
25-44세	6.86	7.32
45-54세	13.00	13.88
55-64세	18.13	19.35
65세 이상	22.05	23.53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표 7-12>의 성×연령대별 건강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원별 성×연령층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집계한 것이 <표 7-13>이다. 건강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컸다. 건강 위험도는 1분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가 2~3분위를 거치면서 완만해졌다. <표 7-13>의 마지막 열은 건강 위험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건강 위험은 집중도를 보인다. 1분위의 점유율이 32.5%로 매우 높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68.0%이다. <표 7-11>이나 <표 7-15> 등 다른 위험에 비해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도가 컸다.

〈표 7-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9.0	32.5(32.5)
2	3.9	14.1(46.7)
3	2.3	8.3(55)
4	1.8	6.5(61.4)
5	1.8	6.5(68)
6	1.8	6.5(74.5)
7	1.8	6.5(81)
8	1.7	6.3(87.2)
9	1.7	6.2(93.4)
10분위	1.8	6.6(100)
전체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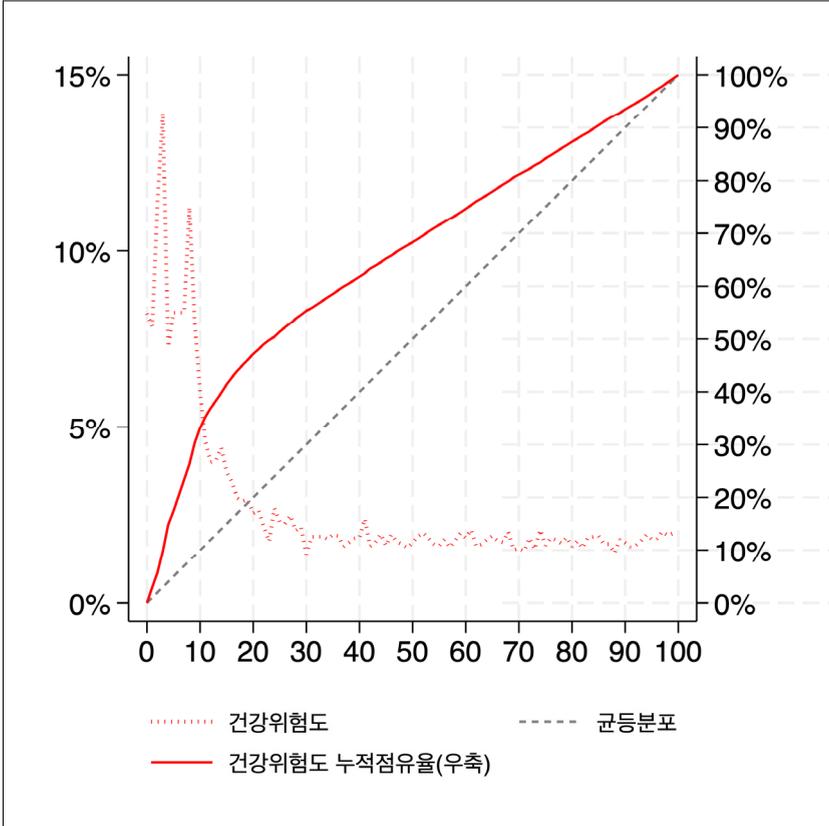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7-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소득 분위를 100개로 세분화하여 본 [그림 7-8]에서도 위험의 집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은 하위 20%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5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위험의 수준도 낮고 계층별 차이도 크지 않다. 로렌츠 곡선을 보더라도 건강 위험의 집중도는 매우 크게 그려진다.

[그림 7-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바. 돌봄 위험

돌봄 위험은 전체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됐다. 여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75세 이상 노인층, 5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다. 돌봄의 위험은 가구 단위의 위험이다. 가구의

유형별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표 7-14>는 2011년~2018년 간 가구 유형별로 돌봄 위험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노인 가구에서 돌봄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돌봄 위험이 높다.

<표 7-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64.4
2. 노인만 2인 이상	47.5
3. 근로연령 단독	17.6
4. 근로연령만 2인	9.1
5. 노인+근로연령	14.9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59.9
7. 근로연령2+아동	47.4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30.8
9. 기타	44.5
전체	37.4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이용한 빈곤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표 7-15>는 <표 7-14>의 가구 유형별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하여 소득 분위별로 구한 위험도를 보여준다. 위험의 분위별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보면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의 돌봄 위험 점유율은 12.3%, 5분위까지의 점유율은 55.7%이다. 돌봄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집중의 양상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더 현저했다.

〈표 7-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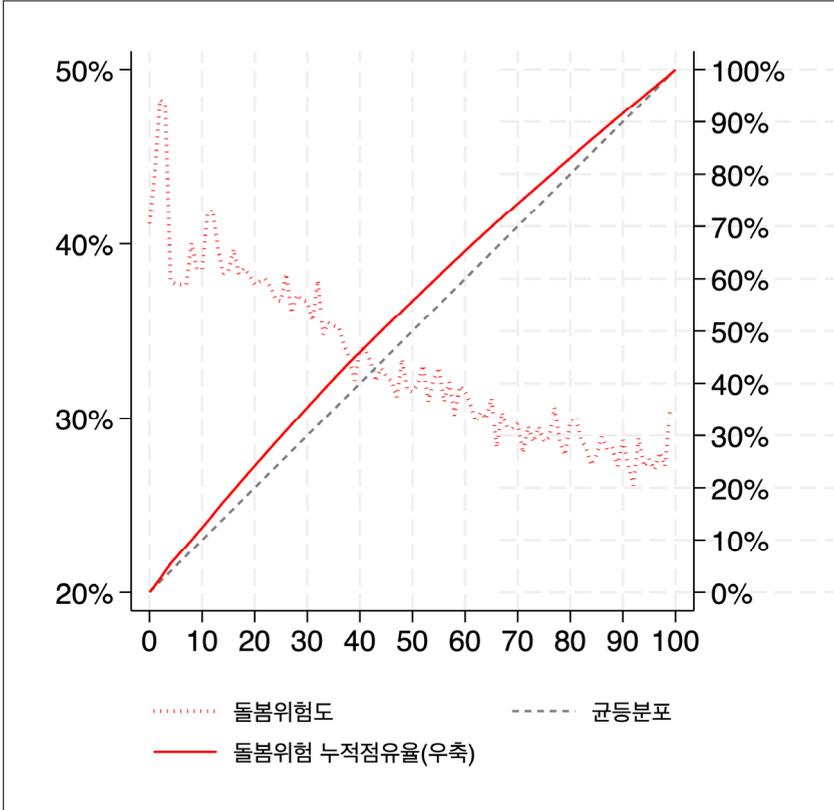
소득분위	돌봄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40.9	12.3(12.3)
2	39.3	11.8(24.1)
3	37.3	11.2(35.3)
4	35.1	10.5(45.9)
5	32.7	9.8(55.7)
6	31.8	9.6(65.3)
7	30.1	9.1(74.3)
8	29.0	8.7(83.1)
9	28.5	8.6(91.6)
10분위	27.9	8.4(100)
전체	33.3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7-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그림 7-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9]는 돌봄 위험의 100분위별 분포와 누적 위험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린 로렌츠 곡선이다. 위험의 수준은 하위 20%의 소득계층과 그 이상의 계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 위쪽에 위치하여 저소득층에 집중된 위험임을 보이지만 위험의 집중 정도는 앞서 살펴 본 다른 위험들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부재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지지의 부재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위험도의 지표로 삼았다. 자료는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는 성과 연령대의 결합 분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및 연령대별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 7-16>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7-1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서 성×연령대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다른 위험도와는 달리 연령대의 구분이 상세하지 않아 집단 간 위험도의 차이가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표 7-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6.0	4.6
30 ~ 49세	11.6	8.9
50세 이상	9.7	7.5

출처: 1)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2) "Current well-being by age,"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7-17>은 <표 7-16>의 값을 이용하여 2019년의 소득분위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낮은 소득 분위와 높은 소득 분위의 양쪽 끝에서 위험도가 높은 'U'자 모양을 그린다. 1분위의 위험도는 5.3%였다. 참고로, 한국에서 1분위의 위험도는 17.0%였다. 미국은 사회적 지지

부재의 비율도 낮고, 편차도 적은 편이다. 분위별 위험 점유율을 보면, 1분위의 위험 점유율은 13.3%,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46.7%였다.

〈표 7-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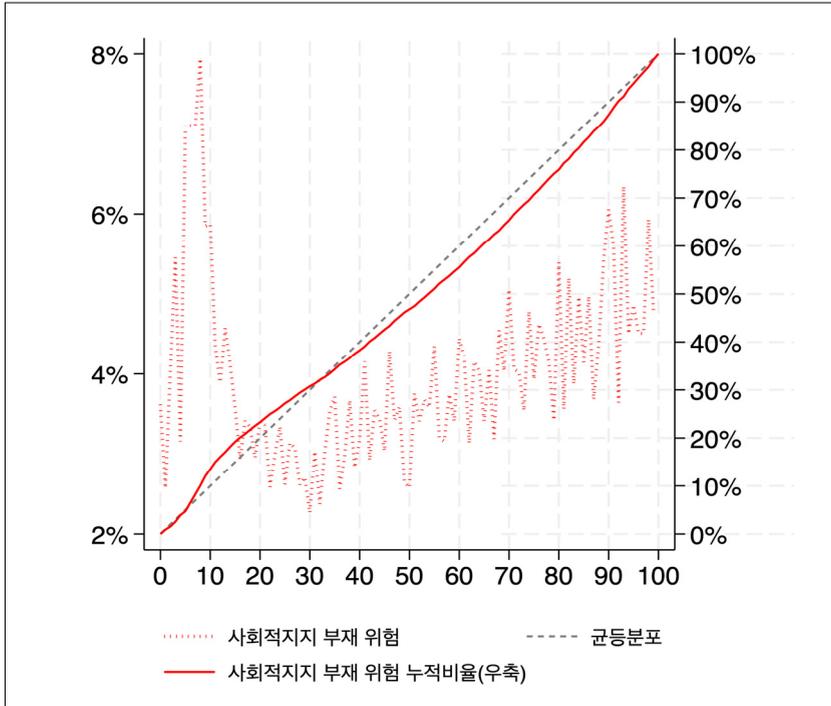
소득 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5.3	13.3(13.3)
2	3.9	9.8(23.1)
3	3.0	7.5(30.6)
4	3.0	7.5(38.1)
5	3.4	8.6(46.7)
6	3.5	8.7(55.5)
7	3.9	9.8(65.3)
8	4.2	10.5(75.8)
9	4.6	11.4(87.3)
10분위	5.1	12.7(100)
전체	4.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7-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 계산.

[그림 7-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7-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10]에서도 위험의 분산이 확인된다. 위험도는 20%까지만 일부 늘었다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보다 완만해지고, 다시 상위 20%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사회적 위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그렇지만, 그러한 집중의 정도는 한국보다 완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부재의 경우는 임금 분포의 양쪽 끝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U'자형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분포와 집중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순수혜의 분포

위험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에 비해 순수혜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 수혜와 부담을 구성하는 항목이 모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고 금액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다만 순수혜의 경우 음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표 7-18〉은 2019년 기준 각 소득 분위별 수혜와 부담 금액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수혜는 〈LIS〉에 나타나는 미국의 공적 이전소득을, 부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공적연금 납부액 포함)를 합한 값이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수혜는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난다.

〈표 7-18〉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달러)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142,905	2,057,566	34,696	990	35,686
2	589,343	1,685,587	37,445	39,527	76,973
3	1,575,631	1,312,886	81,726	113,626	195,352
4	2,429,493	1,055,170	156,069	183,947	340,016
5	3,308,338	865,855	262,400	258,408	520,807
6	4,294,768	817,553	428,021	330,018	758,040
7	5,460,331	739,768	661,537	422,114	1,083,651
8	7,010,326	674,838	1,032,858	530,685	1,563,543
9	9,515,924	546,519	1,677,065	690,843	2,367,908
10분위	19,776,296	462,806	4,975,724	1,032,095	6,007,819
전체	5,381,754	1,021,855	9,347,54	360,225	1,294,979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 조세 + 사회보험료 지출.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7-19〉는 수혜와 부담의 분위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분위는 전체 수혜의 20.1%를 차지하고 3분위까지의 수혜 누적 점유율은 49.5%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점유율은 수혜와는 반대로 하위 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상위 분위에서 높다. 조세의 누적 점유율이 사회보험료의 누적 점유율보다 대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합한 부담의 점유율 역시 고소득층에서 높는데, 그 누적 점유율이 증가하는 속도는 조세 > 부담 > 사회보험료의 순이다.

〈표 7-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단위:%)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20.1 (20.1)	0.4 (0.4)	0.0 (0.0)	0.3 (0.3)
2	16.5 (36.6)	0.4 (0.8)	1.1 (1.1)	0.6 (0.9)
3	12.8 (49.5)	0.9 (1.6)	3.2 (4.3)	1.5 (2.4)
4	10.3 (59.8)	1.7 (3.3)	5.1 (9.4)	2.6 (5.0)
5	8.5 (68.3)	2.8 (6.1)	7.2 (16.6)	4.0 (9.0)
6	8.0 (76.3)	4.6 (10.7)	9.2 (25.7)	5.9 (14.9)
7	7.2 (82.5)	7.1 (17.8)	11.7 (37.4)	8.4 (23.2)
8	6.6 (90.1)	11 (28.8)	14.7 (52.2)	12.1 (35.3)
9	5.3 (95.5)	17.9 (46.8)	19.2 (71.3)	18.3 (53.6)
10분위	4.5 (100)	53.2 (100)	28.7 (100)	46.4 (100)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순수혜는 수혜에서 부담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표 7-20〉의 원편에서 보듯이 순수혜 금액은 분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위에 따라 그 값이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6분위까지는 순수혜가 양수, 즉 수혜가 부담

보다 크고 7분위부터는 반대이다. 전체 평균 순수혜 값이 연간 5,523 달러였다. 물론,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도 분위에 따라 양수와 음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소득 계층 가운데 양(+의 순수혜와 음(-)의 순수혜를 갖는 분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를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분위 순수혜의 합은 양수가 되고, 분위별 순수혜의 점유율 역시 모두 양수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위별 순수혜를 비교한 것이 <표 7-20>의 오른쪽이다.

<표 7-20>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단위: 달러, %)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대체)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20,219	-74 (-74)	20,234	30 (30)
2	16,086	-58.9 (-132.9)	16,105	23.9 (53.9)
3	11,175	-40.9 (-173.8)	11,222	16.7 (70.6)
4	7,152	-26.2 (-200)	7,430	11 (81.6)
5	3,450	-12.6 (-212.7)	4,590	6.8 (88.5)
6	595	-2.2 (-214.8)	3,367	5 (93.5)
7	-3,439	12.6 (-202.2)	2,152	3.2 (96.6)
8	- 8,887	32.5 (-169.7)	1,364	2 (98.7)
9	- 18,214	66.7 (-103.0)	667	1 (99.7)
10분위	- 55,450	203 (100)	226	0.3 (100)
전체	5,523		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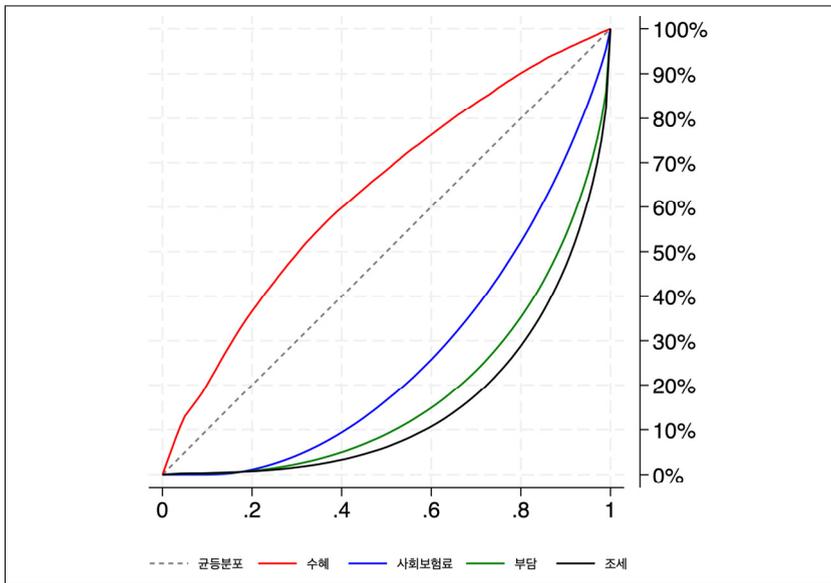
주: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7-20〉에서는 각 방법으로 계산한 순수혜 금액 이 외에도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제시하고 있다. 음(-)의 순수혜를 양수로 대체한 순수혜의 점유율은 1분위에서 30.0%, 2분위에서 23.9% 등으로 나타난다. 2분위까지의 누적점유율은 53.9%에 이른다. 미국에서 이러한 수준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에서는 2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이 6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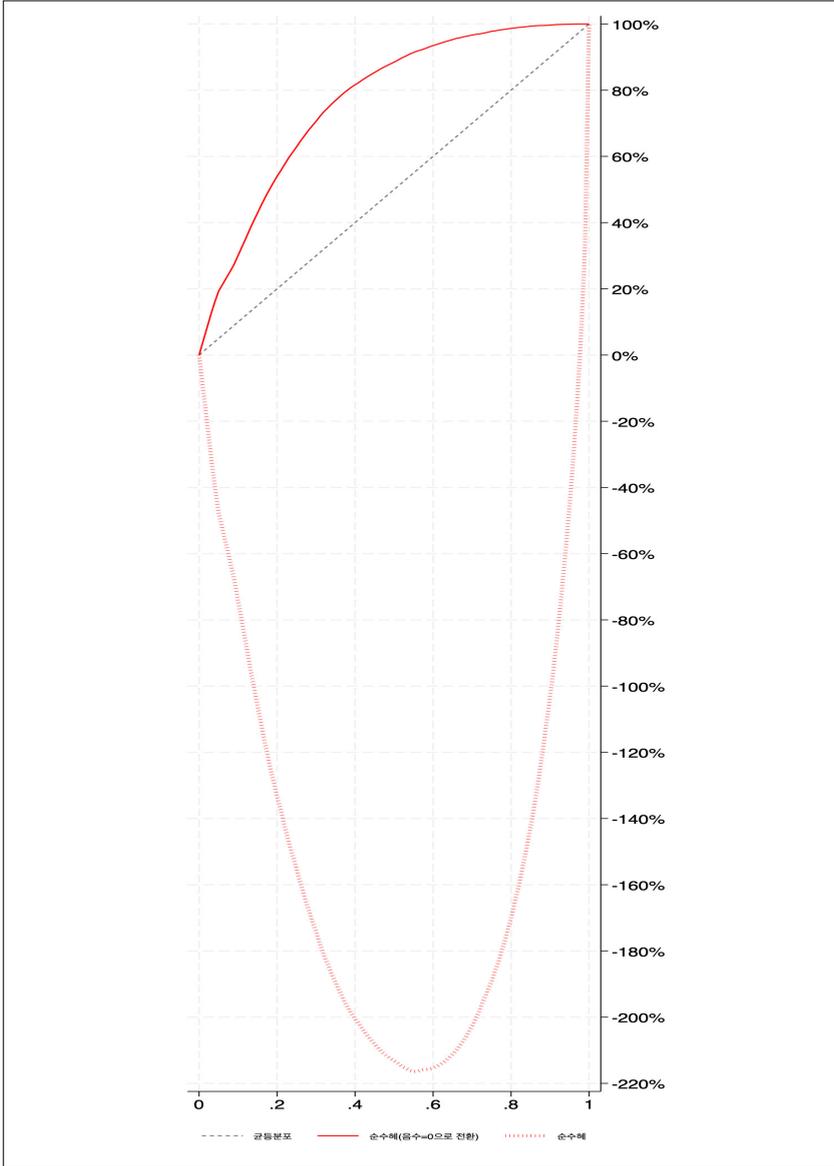
[그림 7-11]은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 그리고 [그림 7-12]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이다. [그림 7-11]에서 보듯이 수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아래에 위치한다. 즉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의 집중도는 사회보험료의 집중도보다 훨씬 큰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12]는 음수값을 포함한 순수혜의 로렌츠곡선과 음수를 0으로 전환(대체)한 순수혜 로렌츠 곡선을 비교하고 있다. 음수값을 포함하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점선)은 누적 점유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집중 지수를 구하면 그 값은 1보다 크다. 음수를 0으로 대체할 경우 실선의 로렌츠 곡선이 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로렌츠곡선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음의 순수혜를 0으로 대체했을 때 순수혜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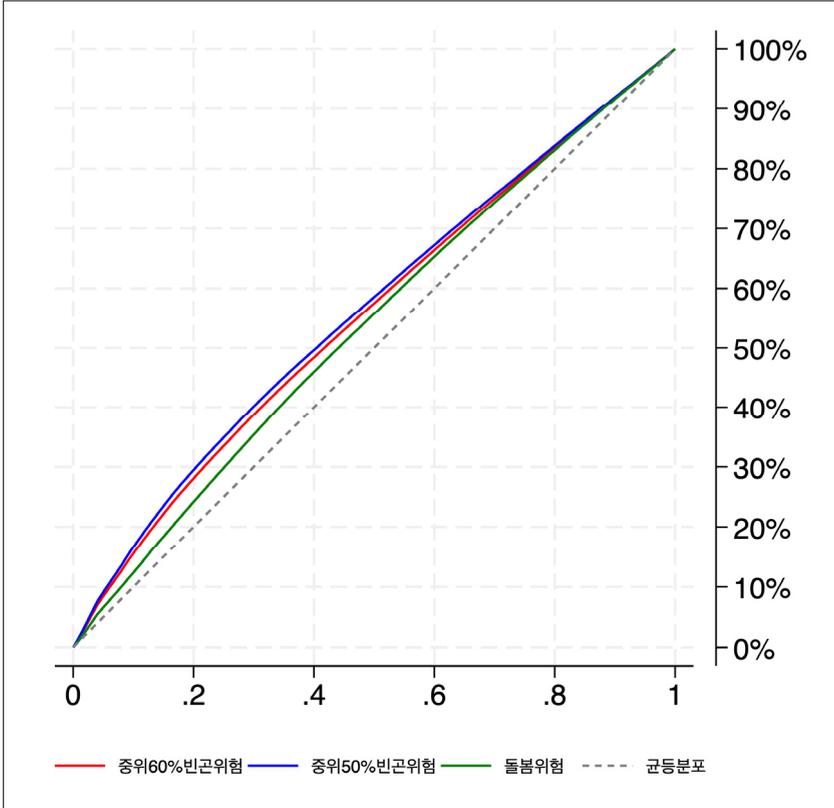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미국에서 위험의 종류에 따라 계층별 집중도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의 유형에 따른 계층별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앞선 2절에서 위험을 계측하고 위험의 집중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위험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즉, 빈곤이나 돌봄의 위험처럼 위험 분석의 출발점이 가구 단위인 경우와 개인 단위로 정의된 후 가구 단위로 합산된 위험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그림 7-13]과 [그림 7-14]로 나누어서 비교하겠다.

먼저, [그림 7-13]을 보면, 가구 단위로 정의된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의 균등한 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점선 위로 로렌츠 곡선이 볼록할수록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두 가지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이 대체로 겹쳐 있다. 빈곤위험이 돌봄위험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됐다. 한국에서도 빈곤 위험이 돌봄 위험보다 좀 더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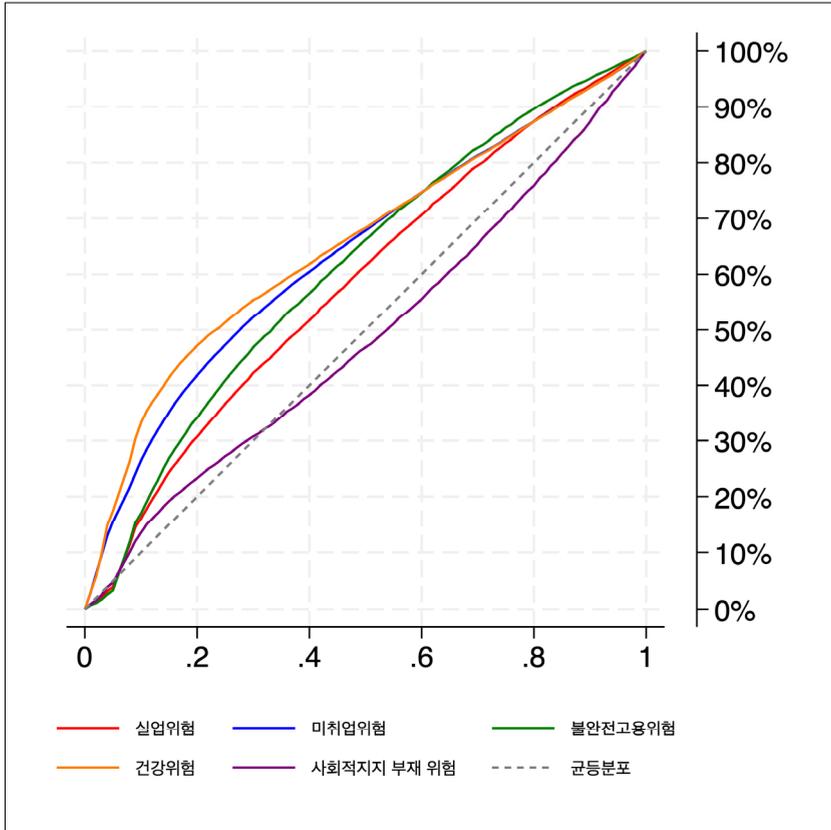
[그림 7-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7-14]는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된 위험들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로렌츠 곡선이다. 위험의 균등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대각선 위에서 볼록하게 그려질수록 위험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 것이다. [그림 7-14]에 따르면 위험의 집중도는 건강, 미취업, 불안정 고용, 실업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 부재의 위험은 균등한 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점선의 위아래를 오갔다.

[그림 7-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로렌츠 곡선의 모양을 통해 살펴본 위험 집중도는 집중 계수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표 7-21>은 위험별 집중지수를 보여준다. 집중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집중도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 <표 7-21>에는 집중지수와 더불어 위험의 지니계수도 제시했다.

〈표 7-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127	0.274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111	0.237
	돌봄위험	-0.077	0.301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274	0.619
	실업 위험	-0.162	0.818
	불완전 고용 위험	-0.220	0.891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029	0.821
	건강 위험	-0.302	0.814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7-21〉에서 사회적 지지 부재를 제외한 모든 위험의 집중 지수는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집중된 정도는 집중 지수의 절댓값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단위로 측정된 위험에서는 중위소득 50%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위험의 집중지수(-0.127)의 절댓값이 중위소득 60%선 기준 빈곤 위험이나 돌봄 위험의 집중지수 절댓값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위험의 경우 집중 지수의 절댓값은 건강 > 미취업 > 불완전 고용 > 실업 위험의 순이다. 사회적 지지 부재의 위험은 양수값을 나타냈다. 이는 [그림 7-14]에서 로렌츠 곡선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 순서와 같다.

미국에서 위험의 집중지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계층에 골고루 분산됐다. 12장에서도 확인하겠지만, 불완전고용위험의 위험 집중지수가 한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높았다. 다른 위험의 집중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위험의 집중지수와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분석의 다른 단면이 확인된다. 건강 위험은 위험의 집중지수 절댓값은 높지만 위험 지니계수의 절댓값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위험도는 위험도가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는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위험의 집중 지수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표 7-22>는 <표 7-21>과 마찬가지로 순수혜를 도출하는 데 관련된 항목들의 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7-22>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수혜, 순수혜 항목들의 집중지수 값은 음수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집중지수 값은 양수이다. 순수혜(음의 값을 0으로 대체)의 집중지수 절댓값은 수혜의 집중지수에 비해 크다. 부담까지를 고려한 순수혜는 수혜에 비해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의 분석 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특징은 부담의 집중지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의 집중지수는 0.629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집중지수가 높은 국가가 0.585를 기록한 영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2장의 <표 12-1>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표에서 부담액이 수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분위가 미국에서 57분위였다. 한국에서 35분위, 일본에서 27분위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절의 <그림 7-2>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에서 국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낮은 국민부담률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

〈표 7-22〉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265	0.564
부담	조세	0.690	0.716
	사회보험료	0.471	0.502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629	0.644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3.976	-4.578
	순수혜(음수 → 0으로 전환)	-0.536	0.740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다음으로 순수혜의 집중도를 보겠다. 미국의 순수혜 집중지수(-0.536)는 절댓값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다([그림 12-9] 참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부담은 고소득층에게 집중하고, 수혜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그렇지만, [그림 12-8]을 보면, 소득 하위 5%까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저소득층에게 순수혜를 집중했다가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졌다. 종합하면, 고소득층에 집중된 재정 부담이 미국의 작고, 잔여적인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과 수혜의 구조는 미국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8장

영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영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제3절 소결

제 8 장

영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영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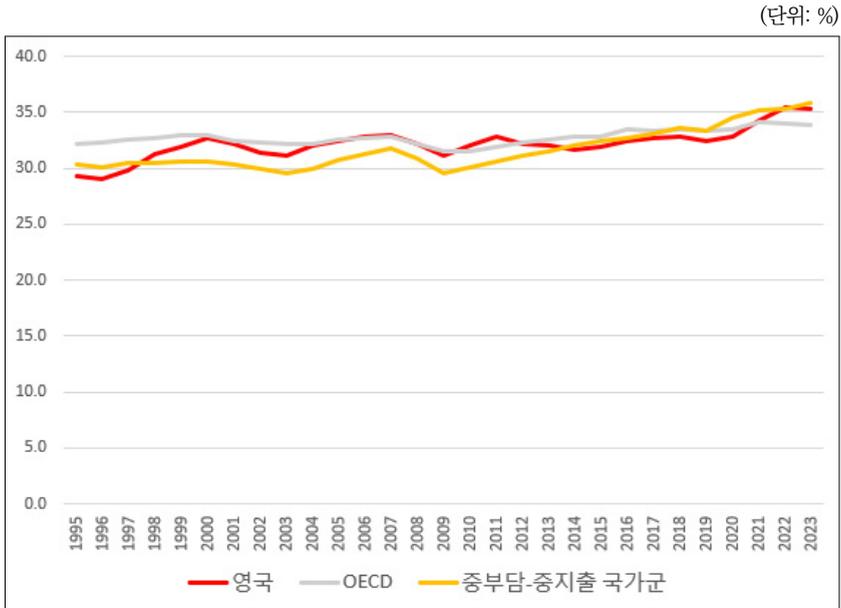
영국의 부담과 지출 구조는 전형적인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성격과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같은 보편적 제도에서 관찰되는 사회민주주의형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반영한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전후에는 보편적 모델로 출발했지만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형 모델로 변화를 거쳐왔다는 평가를 받는다(Duffy et al., 2013). 전반적으로 국민 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 규모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일부 분야, 특히 보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공공지출 비중을 유지한다. 영국 복지국가의 순수혜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하는 부담과 지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웃돈다. 영국의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023년 기준 35.3%로, OECD 평균(33.9%)보다 높다(OECD, 2025a). [그림 8-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부담-중지출 국가군 평균인 3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에서 국민부담률은 지난 30년 가까이 매우 안정적으로 30%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그림 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 사회보험료는 주로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형태로 부과되며, 부담률은 독일·프랑스와 같은 대륙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다.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 비율이 6.7%로, OECD 평균(8.7%)에 비해 낮다(OECD, 2025a). 영국은 사회보험 재정 기반이 제한적이고, 상당수의

보건복지 급여가 일반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림 8-1] 영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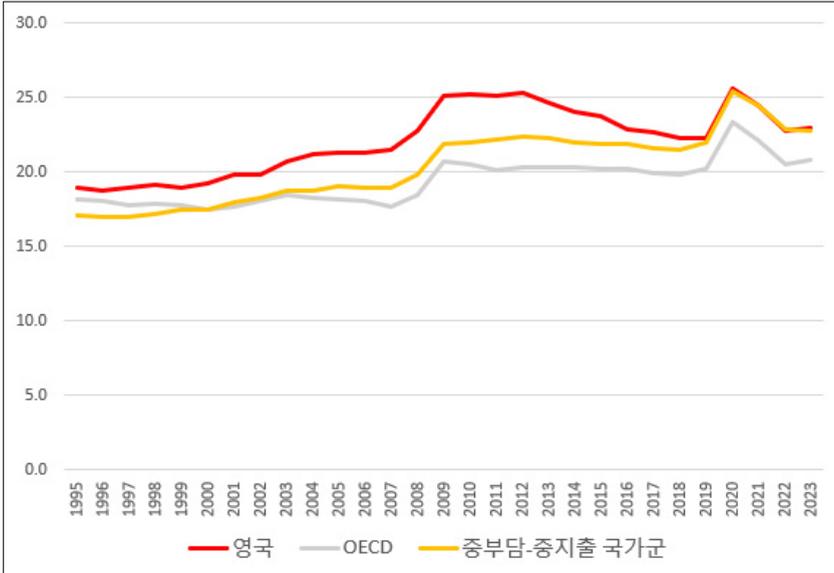


출처: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둘째, 사회지출 수준과 구성을 보겠다. 영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23%로, OECD 평균(20.8%)보다 높다(OECD, 2025b). 대륙형 복지국가인 독일(27.3%)이나 프랑스(30.6%)보다는 낮다. 구성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과 노령이다. 조세기반의 전형적인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인 NHS를 통한 보건 지출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9.8%로 OECD 평균(6.6%)보다 높다. 가족 분야 지출은 GDP 대비 2%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다.

[그림 8-2] 영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단위: %)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셋째, 영국의 조세·이전은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OECD 평균 이상이다. 영국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2023년 기준 29.6%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2.6%였다(OECD, 2025c). 빈곤율 감소에서 조세·이전의 효과가 17.0% 포인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조세·이전 효과는 스웨덴의 조세·이전 효과(15.7%)보다 높다. 영국과 한국의 분배 및 재분배 양상은 대조적이다. 영국이 불평등한 노동시장 분배를 강력한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하는 한편,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노동시장 분배에 대해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약한 편이다. 즉 영국은 불평등한 분배 + 평등한 재분배 조합이라면, 한국은 평등한 분배, 불평등한 재분배의 조합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영국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 대비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22년 기준 각각 14.9%, 11.8%이고, 지니계수는 0.324, 0.365이다. 두 나라를 비교하자면, 한국이 영국보다 빈곤율은 높지만, 지니계수는 낮았다. 영국에서 이러한 재분배 효과는 주로 현금 급여(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와 NHS를 통한 현물급여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세제 개편과 복지재정 긴축이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순재분배 효과는 감소했다. 특히 소득하위 20%는 당시 개혁의 결과 연평균 수백 파운드를 초과하는 실질 소득 손실을 경험했다(Hood & Waters, 2017).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복지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이었다.

넷째, 보건 지출의 특수성이 있다. 영국의 보건 지출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편적 체계(NHS)로, 일반조세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된다. 이는 대륙형 국가의 사회보험 기반 의료, 미국의 민간보험 중심 구조와 대비된다. 보편성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장기적 재정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대기시간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The King's Fund, 2023). 그럼에도, 영국의 NHS는 영국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제도로, 2010년대 보수당-자유민주당의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을 피하면서 기능과 위상을 유지했다.

2. 사회적 위험의 수준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의존성과 복지제도의 선별성, 그리고 노동연계 복지(workfare) 정책 기조가 사회적 위험의 분포와 완화 방식과 연관된다. 영국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위험의 특징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불평등과 빈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국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시장 소득 불평등을 보인다. 2023년 시장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29.6%)이다(OECD, 2025c). 미국에서 같은 해 시장소득 빈곤율이 27.1%였다. 미국보다 영국에서 시장의 불평등이 더 높았다. 영국의 아동빈곤율 수준도 높다. 2023년에는 15.8%, 한국(2022년 기준 9.5%)보다 크게 높다(OECD, 2025c). 노인 빈곤의 위험도 다른 서구의 복지국가들보다 크다. 영국은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낮고, 사적연금 의존도가 크다(OECD, 2023b). 기초연금(State Pension)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은퇴 후 빈곤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복지지출 삭감과 사회보장급여 동결이 장기 빈곤 위험을 확대했다(Hood & Waters, 2017).

둘째, 방임적인 정책 기조 아래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위험의 노출 빈도도 높다. 영국은 실업률이 OECD 평균을 꾸준히 하회하지만(그림 8-3) 참고), 저임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다. 2023년 영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약 23.5%이다.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 미국(23.3%)보다 높고, OECD 평균(12.7%)보다 크게 높다. 영국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의존도가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커서 경기 변동 시 취약계층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평가를 받는다(OECD, 2024). 영국 노동시장의 독특한 형태 중 하나인 '0시간 계약'은 영국 노동자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0시간 계약'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계약 형태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극심한 소득 불안정을 야기한다(OECD, 2024). 2025년 상반기에 117만 명 이상이 '0시간 계약'을 주된 고용 형태로 삼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 영국은 낮은 최저임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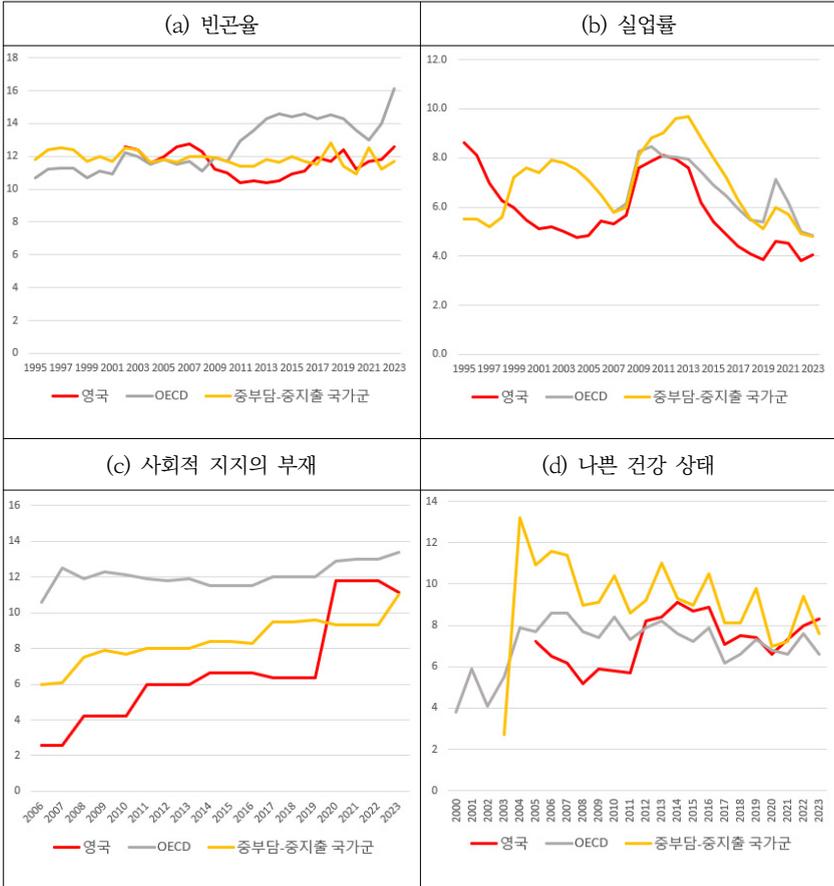
제한적인 고용서비스 지출로 인해 ‘근로빈곤’(working poor) 위험도 크다.

셋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영국 복지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보편적 무상의료를 보장한다. 그러나 긴 대기시간, 인력 부족, 정부 재정 지원 부족, 지역 간 의료접근 격차가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King’s Fund, 2022). Case, Kraftman (2022)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영국에서 평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24위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다’ 혹은 ‘매우 좋다’고 보고한 비율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3>에서도 본인의 건강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한 비율이 영국에서 경향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기대수명 증가 속도의 둔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Case, Kraftman (2022)은 이러한 문제가 영국 사회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넷째, 영국에서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제도 부각된다. 즉, 사회적 지지의 부재, 혹은 외로움의 문제도 나타난다. 영국인 가운데 항상 혹은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1%로 분석됐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18).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의 약화, 디지털화에 따른 대면 교류의 감소로 인해 개인들이 분자화하는 현상은 물론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특히 부각된다. <그림 8-3>에서도 사회적 지지 부재를 호소하는 비율이 2020년 이후 영국에서 크게 증가했다.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주목을 받는 원인은, 혹은 결과는, 지난 2018년 영국에서 테레이시 크라우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을 세계 최초의 외로움 장관(Minister of Loneliness, 한국의 차관격)으로 겸직 임명한 점도 있다(김기태 외, 2022).

[그림 8-3] 영국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출처: "Social Indicators,"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가. 가구 유형의 소득 계층별 분포

이번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가구 유형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영국은 LI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8-1>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 구성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각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8-1>을 보면, 영국의 가족 구조 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를 테면, 한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단독 가구는 2011~2019년 기간 동안 0.5%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해당 유형의 증가폭은 1.4% 포인트였다. 영국 역시 고령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최빈가구는 ‘근로연령 + 아동’ 가구로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빈가구는 성인 자녀가 노인과 함께 사는 ‘노인 + 근로연령’ 가구인 점과는 대조된다. 대부분의 가구유형의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점이 상대적인 특징으로 부각된다.

〈표 8-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노인 단독	5.3	5.1	5.5	5.7	5.6	5.7	5.7	5.8	5.8
2. 노인만 2인이상	7.7	7.9	8.1	8.3	8.6	8.6	8.8	8.8	8.9
3. 근로연령 단독	6.7	6.6	6.6	6.8	6.8	6.8	7.1	6.6	6.6
4. 근로연령만 2인	17.7	17.4	16.5	17.0	16.6	16.7	16.5	16.3	15.9
5. 노인+근로연령	16.5	17.1	17.6	16.6	16.7	16.9	16.7	17.4	17.7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6.5	6.1	6.2	6.3	6.1	6.5	6.1	6.0	5.9
7. 근로연령2+아동	30.8	30.6	30.6	30.6	30.9	30.6	30.7	30.3	30.0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8.0	8.3	8.2	8.0	7.9	7.4	7.8	7.9	8.4
9. 기타	0.8	0.8	0.6	0.8	0.8	0.8	0.8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가구 유형에 따라서 빈곤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9년 사이에 각 소득 분위별로 가구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8-2〉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8-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 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 노인 단독	17.0	17.4	6.9	6.0	3.5	2.3	1.2	1.1	0.9	0.5
2. 노인만 2인 이상	11.6	23.8	17.2	11.9	8.1	6.0	5.2	2.6	3.2	3.2
3. 근로연령 단독	18.0	3.0	4.4	5.3	6.9	6.0	7.7	5.7	5.6	5.0
4. 근로연령만 2인	10.6	5.6	8.2	11.5	11.6	14.8	23.9	21.1	30.6	29.1
5. 노인+근로연령	8.1	10.0	12.3	14.8	16.8	17.9	18.4	23.1	25.5	20.2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16.6	15.2	8.3	6.0	3.9	1.6	1.4	2.1	0.6	0.4
7. 근로연령2+아동	12.8	17.9	35.4	35.1	39.2	37.7	31.0	35.0	26.4	35.9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4.6	5.9	6.2	8.2	8.4	13.3	10.4	8.9	6.8	4.7
9. 기타	0.8	1.2	1.0	1.2	1.6	0.5	0.7	0.3	0.4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개인 특성의 소득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개인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성과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가정할 만큼 소득 계층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8-3〉은 각 소득 분위별로 성과 연령대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4분위 이하 소득 분위에서는 남성의 비중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고 5분위 이상 고소득 분위에서는 남성 비중이 높다. 한국과 비교하면 남녀 격차가 심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표 8-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6.3	53.7	19.4	48.7	31.9
2	44.3	55.7	22.1	33.3	44.6
3	48.3	51.7	26.3	45.8	27.9
4	48.1	51.9	24.2	53.1	22.7
5	50.6	49.4	25.5	58.4	16.1
6	50.2	49.8	22.1	66.5	11.5
7	50.5	49.5	18.5	72.1	9.4
8	51.0	49.0	20.8	73.3	6.0
9	52.3	47.7	14.6	79.1	6.2
10	52.2	47.8	19.0	75.7	5.2
전체	49.4	50.6	21.2	60.6	18.2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연령대별 구성 측면에서 보면 근로연령층인 18~64세의 비중이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점차 늘어난다. 0~17세의 아동의 비중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중간 소득 분위에서는 높아졌다가 9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영국에서 특징적인 양상은 1분위에서 18~64세 근로연령대가 48.7%를 차지해서, 65세 이상 집단의 비율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1분위의 약 3분의 2가 65세 이상 노인집단인 점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2. 사회적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

가. 빈곤 위험의 분포

이하에서는 영국의 사회적 위험 분포에 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빈곤 위험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8년의 빈곤율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표 8-4>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의 평균 빈곤율이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는 76.3%, 중위소득의 6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80.8%에 이른다. 평균 빈곤율이 낮은 7번째 유형, 즉 근로연령 2명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보면 평균 빈곤율은 빈곤선 수준에 따라 각각 21.2%와 26.0%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노인 집단의 빈곤율이 낮고, 근로연령대에서 빈곤율이 높았다.

<표 8-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76.3	80.8
2. 노인만 2인이상	57.0	62.7
3. 근로연령 단독	36.3	39.3
4. 근로연령만 2인	11.9	14.2
5. 노인+근로연령	17.0	20.5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75.2	79.5
7. 근로연령2+아동	21.2	26.0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20.0	24.1
9. 기타	43.3	48.0
계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계산한 빈곤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4〉의 가구 유형별 평균 빈곤율을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평균하면 2019년 기준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모든 분위의 위험도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위험도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표 8-5〉는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제시하고 있다.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에서는 45.2%, 중위소득 60% 빈곤선에서는 49.2%이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빈곤 위험도는 낮아지지만 6분위 이상에서는 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8-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5.2	15.3(15.3)	49.2	14.7(14.7)
2	47.3	16(31.3)	51.7	15.4(30.1)
3	35.2	11.9(43.2)	39.5	11.8(41.9)
4	31.3	10.6(53.8)	35.5	10.6(52.4)
5	27.7	9.4(63.1)	31.8	9.5(61.9)
6	24.1	8.2(71.3)	28.2	8.4(70.3)
7	22.7	7.7(79)	26.5	7.9(78.2)
8	21.8	7.4(86.4)	25.6	7.6(85.8)
9	20.1	6.8(93.2)	23.6	7(92.9)
10분위	20.2	6.8(100)	23.9	7.1(100)
전체	31.4		36.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1분위의 빈곤 위험도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2011년~2018년)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2019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5.2% (중위소득 50%선 기준)의 확률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의 실제 빈곤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1분위의 빈곤율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표 8-5>에서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45.2%이다. 그 이유는 <표 8-5>의 위험은 사전적(事前的) 위험이고 실제 계측된 빈곤율은 사후적(事後的) 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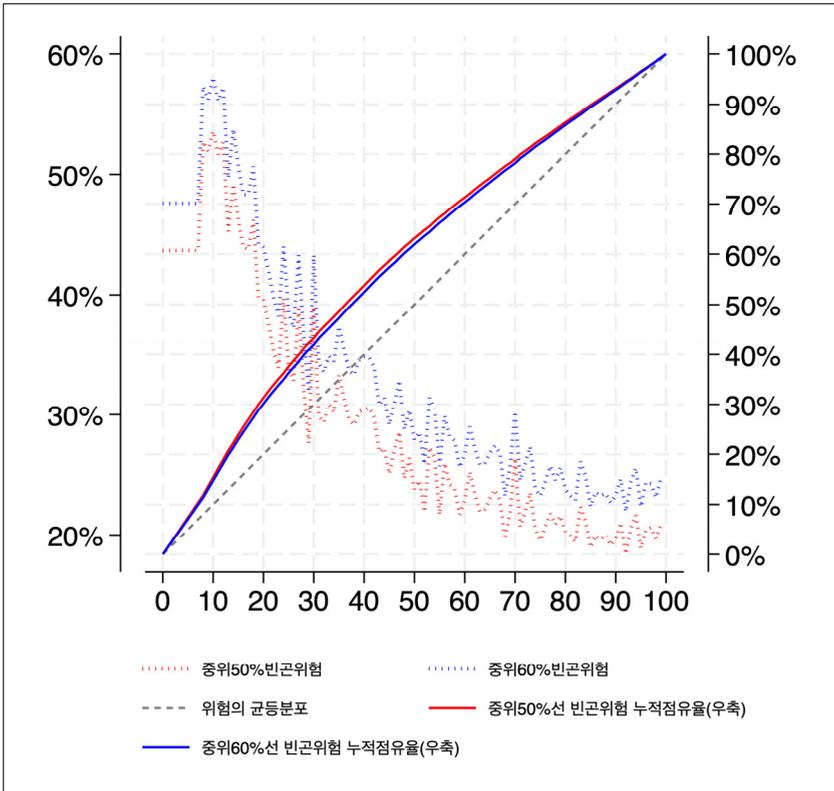
이렇게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계산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위별 빈곤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빈곤 위험도 점유율이란 전체 계층의 위험도 합에서 특정 분위의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란 특정 분위 및 그 이하 소득 계층의 위험도 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표 8-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빈곤위험도의 합에서 2분위까지의 빈곤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은 31.3%(중위소득 50%선), 30.1%(중위소득 60%선)이다. 5분위까지 누적 점유율은 각각 63.1%와 61.9%이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 저분위의 위험도가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8-4]는 소득 분위기를 100분위로 세분화하여 로렌츠곡선을 그린 것이다. [그림 8-4]의 가로축은 전체 인구를 시장소득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누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각 소득 분위별 빈곤 위험도 (좌축)와 각 분위까지의 누적 인구가 점유하는 빈곤 위험도의 누적점유율 (우축)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린 실선의 곡선이 빈곤 로렌츠 곡선이다.

먼저 좌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빈곤위험도를 보면 시장 소득 하위 10% 지점에서 빈곤위험도가 가장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빈곤 위험도가 낮아지다가 대략 하위 60%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완만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위 50%의 빈곤위험은 중위 60% 빈곤 위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측을 기준으로 그려진 로렌츠 곡선(빈곤위험도 누적점유율 곡선)을 보면 두 빈곤 곡선 모두 위험도의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점선(우상향 대각선) 위쪽으로 그려져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빈곤 위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위 50% 빈곤의 로렌츠곡선이 중위 60%의 로렌츠곡선 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는 중위 50%선 기준 빈곤이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실업

실업은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위험이다. <표 8-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영국의 연령대별, 성별 실업자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이 비율이 실업률이 아닌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분모가 해당 연령대 경제활동참여인구가 아니라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다.

<표 8-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자 비율	
	남성	여성
15 ~ 19세	12.64	10.04
20 ~ 24세	11.93	7.95
25 ~ 29세	6.74	5.04
30 ~ 34세	4.81	4.21
35 ~ 39세	4.04	3.79
40 ~ 44세	3.80	3.61
45 ~ 49세	3.88	3.20
50 ~ 54세	3.85	2.60
55 ~ 59세	3.98	2.45
60 ~ 64세	2.85	1.15
65세 이상	0.29	0.12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8-6>의 수치를 2019년 데이터의 각 성 및 연령대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할당해 주면 2019년 시점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의 위험도가 산출된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 가구원 개인별 실업 위험도를 모두

곱하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 상태에 놓일 위험도가 계산된다. <표 8-7>의 가운데 열은 가구의 실업 위험도를 소득 분위별로 평균한 값이다. <표 8-7>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일 위험의 절대적인 값은 매우 낮다. 그러나 그 분포는 균등하지 않다. 1분위의 실업 위험은 10분위의 다섯배다.

<표 8-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4	25.2(25.2)
2	0.7	12.6(37.8)
3	0.5	9.6(47.5)
4	0.4	8.1(55.6)
5	0.4	8.3(63.9)
6	0.4	7.1(70.9)
7	0.5	9.8(80.7)
8	0.4	7.3(88.1)
9	0.3	6.4(94.4)
10분위	0.3	5.6(100)
전체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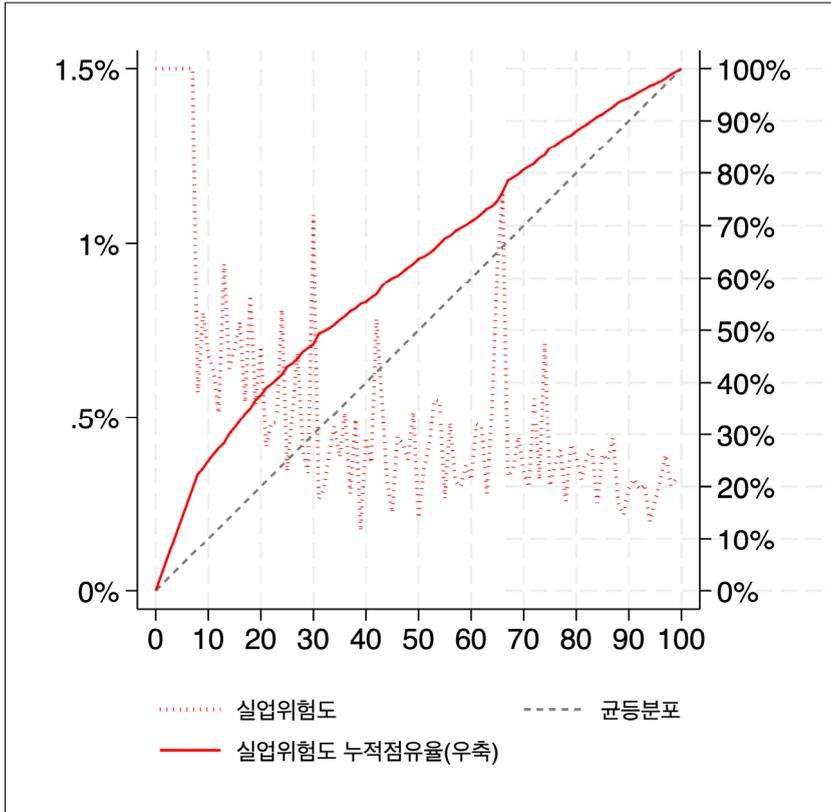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7>의 마지막 열은 계층별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소득 분위의 위험도 합 대비 각 소득 분위의 위험도가 위험도 점유율이고, 최하위 소득 분위부터 특정 소득 분위까지 위험도 점유율을 합한 것이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이다. 하위 소득 1~2분위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37.8%이고, 중위소득 이하인 1~5분위가 차지하는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63.9%이다.

[그림 8-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5]는 소득 계층을 10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 위험도 곡선과 위험도 누적 점유율 곡선(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다. 소득분위별 위험도의 수준 자체는 낮고, 일부 구간에서 들쭉날쭉하지만, 대체로 우하향하는 모습, 즉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다. 미취업 위험

미취업 위험의 계층별 위험을 분석하겠다. 미취업 위험이란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위험이다. 특성 집단별 미취업 위험은 100에서 해당 집단의 고용률을 뺀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되지 않을 확률이 곧 미취업 확률 즉 미취업 위험인 것이다.

〈표 8-8〉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15 ~ 19세	32.9	36.4
20 ~ 24세	65.9	61.8
25 ~ 29세	85.2	72.7
30 ~ 34세	88.9	73.0
35 ~ 39세	89.2	74.2
40 ~ 44세	88.5	76.9
45 ~ 49세	87.4	79.0
50 ~ 54세	84.3	77.1
55 ~ 59세	76.3	67.3
60 ~ 64세	56.8	39.0
65세 이상	12.5	6.8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8-8〉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연령대별 평균 고용률을 보여준다. 100에서 이 값들을 빼주면 각 성×연령대별 미취업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를 2019년의 개인들에게 성과 연령대에 맞추어 할당해 주면 2019년의 개인별 미취업 위험이 된다. <표 8-9>는 이를 이용하여 소득 분위별 미취업 위험도와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가구원 모두가 미취업일 위험은 소득 분위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표 8-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37.5	18.7(18.7)
2	43.5	21.7(40.4)
3	28.3	14.1(54.6)
4	22.8	11.4(65.9)
5	17.2	8.6(74.5)
6	13.7	6.9(81.4)
7	11.9	5.9(87.3)
8	9.0	4.5(91.8)
9	8.7	4.3(96.1)
10분위	7.7	3.9(100)
전체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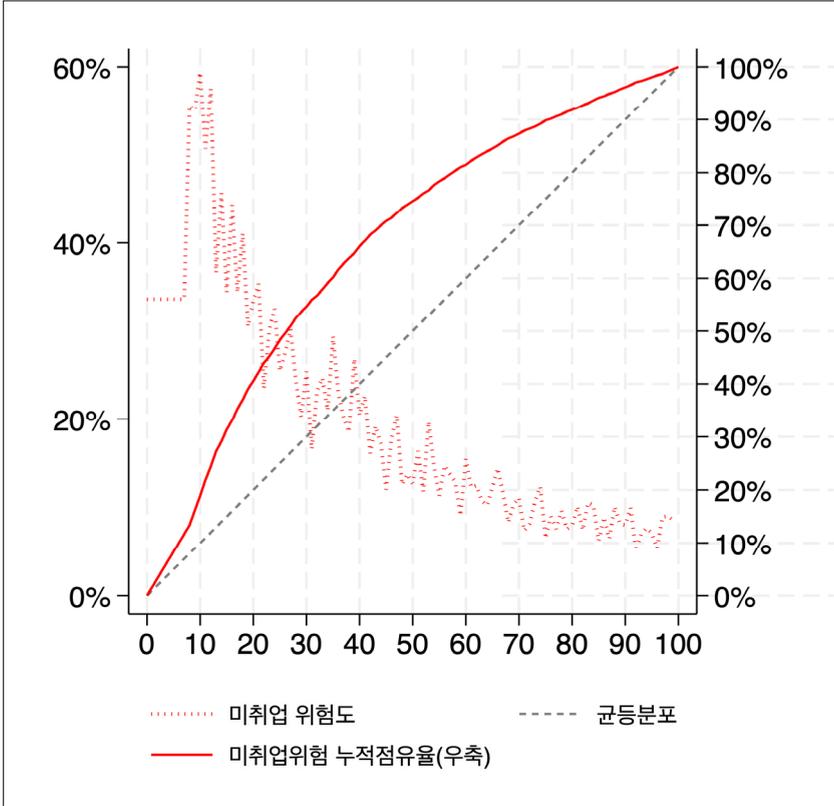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분위별 평균 위험의 차이는 분위별 위험도 누적 점유율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표 8-9>을 보면 미취업일 위험은 2분위까지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 40.4%,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이 74.5%이다. 한국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5분위까지 누적 점유율은 79.2%였다.

[그림 8-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저소득 분위의 위험도 점유율이 높은 경향은 [그림 8-6]의 로렌츠 곡선으로도 확인된다. 분위별 취업 위험을 보여주는 점선을 보면 저소득층 가운데 하위 10%인 지점에서 가장 높고 소득분위 전 구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 결과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점선) 위로 상당히 볼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 불완전 고용 위험

이 연구에서 불완전 고용의 위험은 비자발적 근로자가 될 위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표 8-10>은 2009년~2018년간 성별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유의할 것은 이 비율이 해당 인구집단의 근로자 대비 비율이 아니라 해당 인구집단(성×연령대별)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연령대의 구분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이번 장의 <표 8-6> 및 <표 8-8>과도 다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표현한 만큼 절대적인 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 다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체로 높다는 점,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별 위험의 편차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편차가 더 컸다.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8-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4세	3.9	4.4
25 - 54세	2.4	3.2
55 - 64세	1.9	2.3
65세 이상	0.2	0.1

주: LIS 자료상의 국가들의 연령대 구분(네 집단)과 한국의 구분(여섯 집단)이 다른 점에 주의할 필요 있음.

출처: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OECD, 각연도, 2025. 6. 11.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8-10>의 값을 2019년의 각 성×연령대별 그룹에 할당하여 불완전 고용의 위험을 소득분위별로 구한 결과가 <표 8-11>에 나타나 있다.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될 위험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소득 1분위와 2분위 사이에 격차가 큰 편이다. 분위별 위험도 점유율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모든 가구원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위험(불완전 고용 위험)은 1분위의 점유율이 26.7%로 높았다. 5분위까지의 불완전 위험 누적 점유율은 67.8%였다. 한국에서 1분위와 5분위까지의 비율은 각각 42.6%, 86.0%였다. 한국에서 저소득분위에서의 불완전 고용 위험도가 더 집중됐다.

〈표 8-11〉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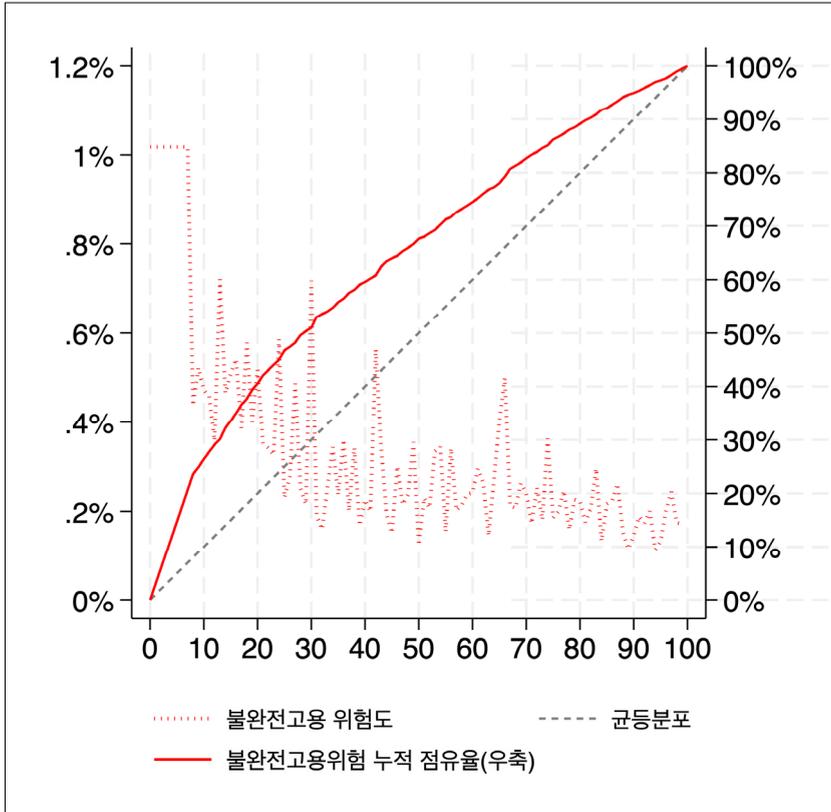
소득분위	불완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0.9	26.7(26.7)
2	0.5	14.1(40.7)
3	0.4	10.4(51.1)
4	0.3	8.6(59.7)
5	0.3	8.1(67.8)
6	0.2	6.9(74.7)
7	0.3	8.1(82.8)
8	0.2	6.4(89.2)
9	0.2	5.8(95)
10분위	0.2	5(100)
전체	0.4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7]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7]은 불안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곡선을 보여준다. 우선 100분위별 위험도를 보면 하위 10%에서 매우 높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완만하게 낮아졌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직선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곡선 모양을 보인다. 한국보다는 곡선이 그리는 포물선이 완만하다([그림 6-8] 참고). 불안전 고용의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은 결과다.

마. 건강 위험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을 건강 위험 지표로 삼는다. <표 8-12>에는 Eurostat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성×연령대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쁜 건강 위험은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8-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6~24세	1.89	2.24
25~34세	2.59	3.15
35~44세	4.82	5.18
45~54세	7.53	8.29
55~64세	11.33	10.22
65세 이상	12.87	13.14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Self-perceived health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Eurostat, 각 연도. 2025.5.18. 검색,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02_custom_16749729/default/table?lang=en

<표 8-12>의 성×연령대별 건강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원별 성×연령층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집계한 것이 <표 8-13>이다. 건강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위험도는 2분위와 3분위 사이에서 가장 차이가 큰 점이 이채롭다. <표 8-13>의 마지막 열은 건강 위험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1분위의 점유

율이 25.5%로 높았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분위의 점유율이 45.3%로 매우 높았다. 영국에서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75.3%이다.

〈표 8-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4.6	25.5(25.5)
2	3.6	20.1(45.6)
3	2.1	11.5(57.1)
4	1.8	10.2(67.2)
5	1.5	8.1(75.3)
6	1.1	6.1(81.5)
7	1.0	5.4(86.9)
8	0.8	4.7(91.6)
9	0.8	4.3(95.9)
10분위	0.7	4.1(100)
전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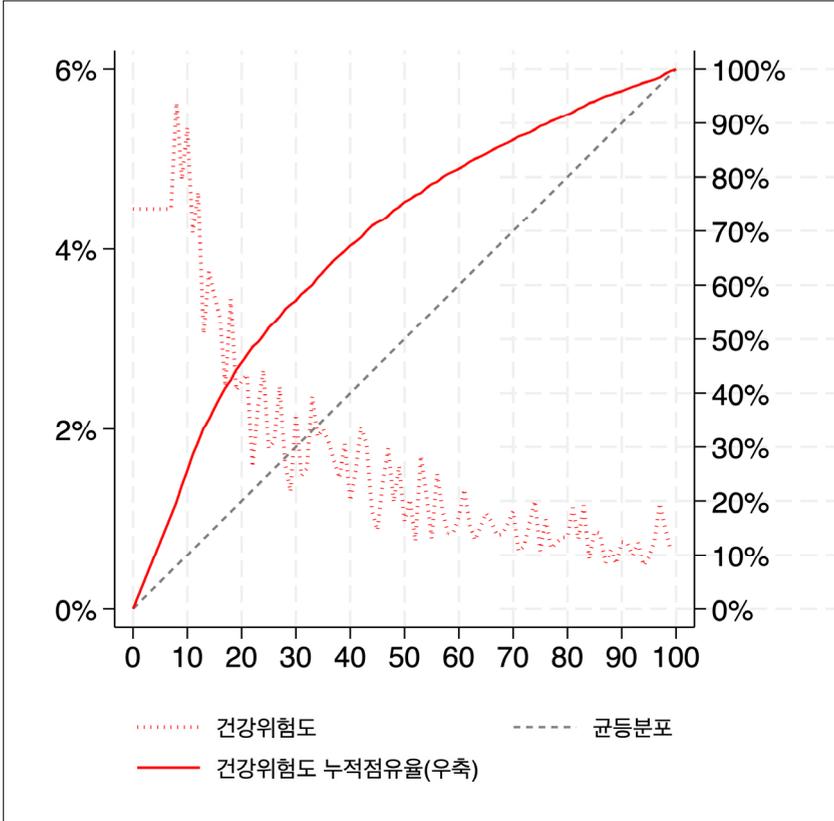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소득 분위를 100개로 세분화하여 본 [그림 8-8]에서도 위험의 집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은 하위 10% 지점에서 가장 높았고, 5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위험의 수준이 완만해졌다. 한국의 로렌츠 곡선과 비교 하면([그림 6-9] 참고), 영국의 로렌츠 곡선은 상대적으로 포물선의 높이가 낮았다.

[그림 8-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바. 돌봄 위험

돌봄 위험은 전체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됐다. 여기에서 7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유형별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 <표 8-14>는 2011년~2018년간 가구 유형별로 돌봄 위험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노인 및 아동, 장애인 가구에서 돌봄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표 8-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68.8
2. 노인만 2인 이상	53.5
3. 근로연령 단독	21.0
4. 근로연령만 2인	9.2
5. 노인+근로연령	13.6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28.9
7. 근로연령2+아동	23.4
8. 근로연령3인 이상+아동있음(노인 무관)	13.5
9. 기타	27.6
전체	28.8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15>는 <표 8-14>의 가구 유형별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하여 소득 분위별로 구한 위험도를 보여준다. 영국의 특징은 2분위에서 돌봄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2분위 돌봄 위험도가 36.9%인 반면, 1분위의 비율이 32.3%였다. 2분위 이상에서는 위험도가 완만하게 감소했다. 위험의 분위별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보면 위험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분위까지의 돌봄 위험 점유율은 28.7%였다.

〈표 8-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돌봄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32.3	13.4(13.4)
2	36.9	15.3(28.7)
3	29.1	12(40.7)
4	26.0	10.8(51.5)
5	23.4	9.7(61.2)
6	21.0	8.7(69.9)
7	19.2	7.9(77.8)
8	18.5	7.7(85.5)
9	17.1	7.1(92.6)
10분위	17.9	7.4(100)
전체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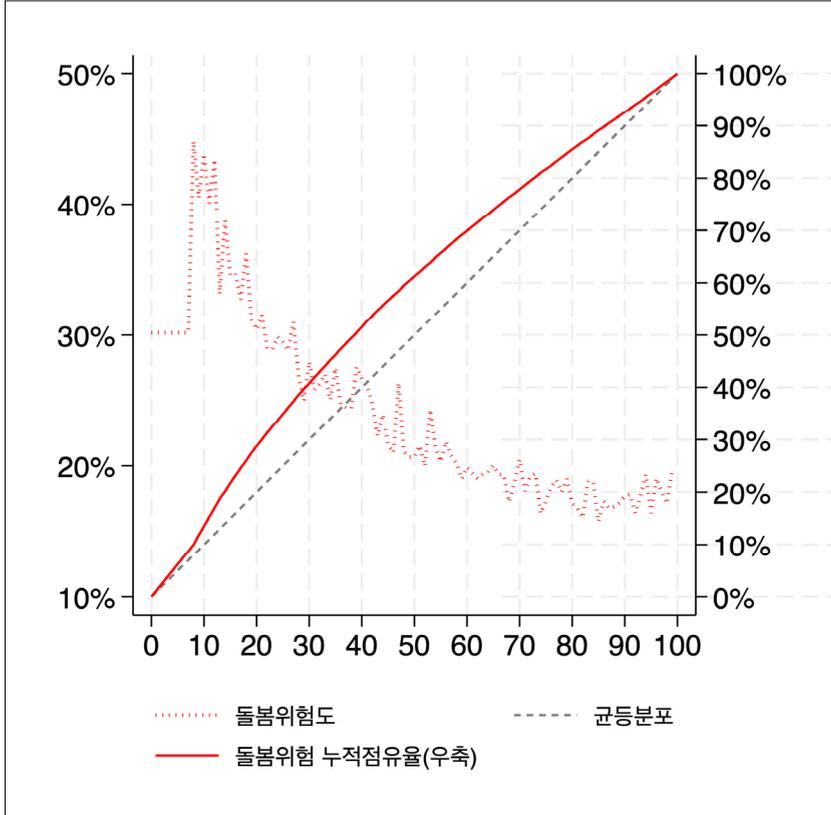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9]는 돌봄 위험의 100분위별 분포와 누적 위험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린 로렌츠 곡선이다. 돌봄 위험의 100분위별 분포를 보면, 2분위에서 돌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일부 설명이 된다. 10분위까지 돌봄 위험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다가, 10분위 즈음에서 돌봄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 위쪽에 위치하며, 포물선은 소득 10분위 즈음에서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림 8-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사.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지지의 부재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위험도의 지표로 삼았다. 자료는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는 성과 연령대의 결합 분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및 연령대별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 8-16>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8-1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서 성×연령대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다른 위험도와는 달리 연령대의 구분이 상세하지 않아 집단 간 위험도의 차이가 다소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

<표 8-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4.9	4.0
30 ~ 49세	7.4	5.9
50세 이상	7.4	5.8

출처: 1)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2) "Current well-being by age,"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8-17>은 <표 8-16>의 값을 이용하여 2019년의 소득분위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낮은 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높고 소득 분위가 중산층으로 높아갈수록 위험도는 낮다가 다시 소득 10분위에서는 위험도가 상승하는 'U'자형을 그렸다. 한국에서는 소득 분위가 올라갈

수록 위험도가 낮아졌다. 미국은 영국과 유사한 동선을 그렸다. 1분위의 위험도는 6.7%였고, 다음으로는 10분위에서 5.5%로 높았다. 분위별 위험 점유율을 보더라도 1분위의 위험 점유율은 17.6%였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51.0%이다. 소득 1~5분위와 6~10분위가 위험을 반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적 위험의 소득분위별 분포와는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표 8-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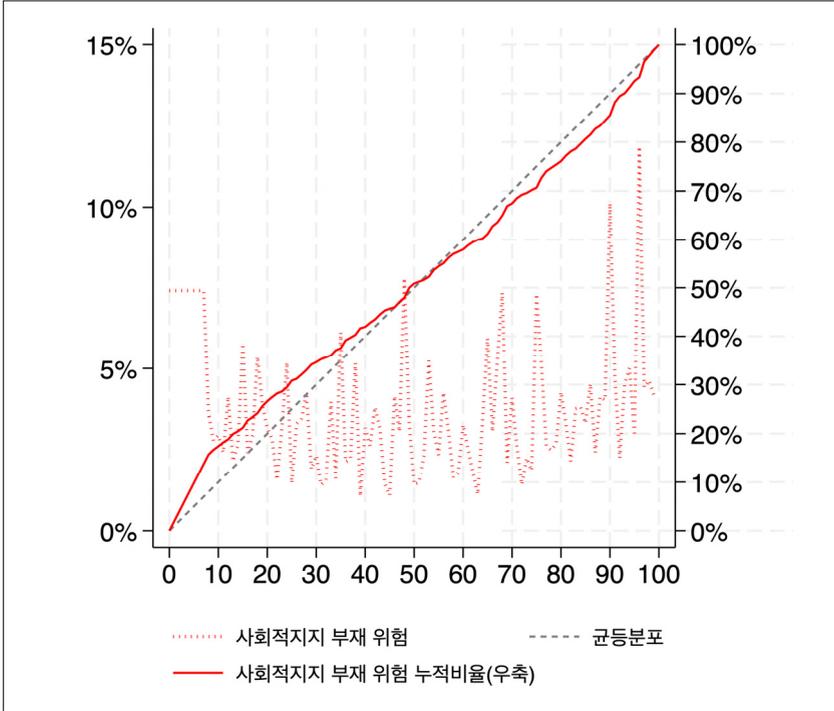
소득 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6.7	17.6(17.6)
2	3.5	9.2(26.8)
3	3.0	8(34.8)
4	2.8	7.3(42.1)
5	3.4	8.9(51)
6	2.7	7.1(58.1)
7	3.6	9.5(67.5)
8	3.3	8.6(76.1)
9	3.6	9.4(85.6)
10분위	5.5	14.4(100)
전체	3.8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8-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8-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10]을 통해서도 위험의 집중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도는 소득 분위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크게 보면 양쪽 끝 분위에서 위험도가 높은 'U'자형 패턴이 보인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의 아래와 위를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위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소득 층에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 부재가 유일한 예외였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는지, 마지막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분포와

집중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순수혜의 분포

순수혜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하다. 수혜와 부담을 구성하는 항목이 모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순수혜의 경우 음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다수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표 8-18〉은 2019년 기준 소득 분위별 수혜와 부담 금액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수혜는 LIS의 공적 이전소득을, 부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공적연금 납부액 포함)를 합한 값이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수혜는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난다.

〈표 8-18〉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펜스)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4,629	1,246,900	1,096	2,716	3,811
2	381,635	988,024	14,474	2,858	17,333
3	922,568	701,882	63,757	22,567	86,324
4	1,415,153	537,799	117,274	50,830	168,104
5	1,940,316	328,859	195,265	88,304	283,569
6	2,435,604	250,409	254,385	115,133	369,519
7	2,987,626	196,553	326,323	169,396	495,719
8	3,662,776	137,453	459,270	219,101	678,370
9	4,697,648	117,455	638,233	297,853	936,086
10분위	8,032,341	97,191	1,682,289	411,783	2,094,072
전체	2,647,103	460,252	375,236	138,054	513,290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지출.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19〉는 수혜와 부담의 분위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분위는 전체 수혜의 27.1%를 차지하고 3분위까지의 수혜 누적 점유율은 63.8%이다. 영국에서 수혜가 한국보다 더 저분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점유율은 수혜와는 반대로 하위 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상위 분위에서 높다. 조세의 누적 점유율이 사회보험료의 누적 점유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8-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27.1(27.1)	0(0)	0.2(0.2)	0.1(0.1)
2	21.5(48.6)	0.4(0.4)	0.2(0.4)	0.3(0.4)
3	15.2(63.8)	1.7(2.1)	1.6(2)	1.7(2.1)
4	11.7(75.5)	3.1(5.2)	3.7(5.7)	3.3(5.4)
5	7.1(82.6)	5.2(10.4)	6.4(12.1)	5.5(10.9)
6	5.4(88.1)	6.8(17.2)	8.3(20.5)	7.2(18.1)
7	4.3(92.3)	8.7(25.9)	12.3(32.7)	9.7(27.7)
8	3(95.3)	12.2(38.2)	15.9(48.6)	13.2(41)
9	2.6(97.9)	17(55.2)	21.6(70.2)	18.2(59.2)
10분위	2.1(100)	44.8(100)	29.8(100)	40.8(100)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순수혜는 수혜에서 부담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표 8-20〉의 원편에서 보듯이 순수혜 금액은 분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위에 따라 그 값이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5분위까지는 순수혜가 양수, 즉 수혜가 부담보다 크고 6분위부터는 반대이다. 전체 평균 순수혜 값이 연간 -53,038 펜스(-530.38 파운드)인 것은 순수혜의 총액 역시 음수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도 분위에 따라 양수와 음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소득 계층 가운데 양(+)의 순수혜와 음(-)의 순수혜를 갖는 분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를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분위 순수혜의 합은 양수가 되고, 분위별 순수혜의 점유율 역시 모두 양수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위별 순수혜를 비교한 것이 <표 8-20>의 오른쪽이다.

<표 8-20>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단위: 펜스, %)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대체)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1,243,089	-234.4(-234.4)	1,245,590	33.5(33.5)
2	970,691	-183.0(-417.4)	971,845	26.1(59.6)
3	615,557	-116.1(-533.5)	621,231	16.7(76.3)
4	369,695	-69.7(-603.2)	408,340	11.0(87.3)
5	45,290	-8.5(-611.7)	190,111	5.1(92.4)
6	-119,110	22.5(-589.2)	117,493	3.2(95.5)
7	-299,166	56.4(-532.8)	75,892	2.0(97.6)
8	-540,917	102.0(-430.8)	41,511	1.1(98.7)
9	-818,631	154.3(-276.5)	28,488	0.8(99.5)
10분위	-1,996,881	376.5(100)	20,302	0.5(100)
전체	-53,038		338,254	

주: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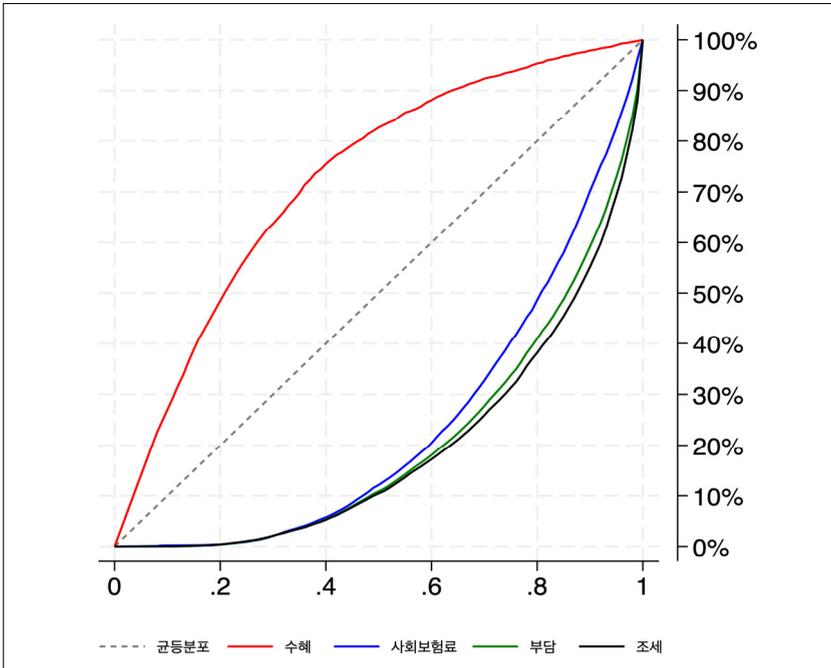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20>에는 각 방법으로 계산한 순수혜 금액 이 외에도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제시하고 있다. 음(-)의 순수혜를 양수로 대

제한 순수혜의 점유율은 1분위에서 33.5%, 2분위에서 26.1%로 나타난다. 2분위까지의 누적점유율은 59.6%이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92.4%에 이른다. <표 8-19>의 분위별 수혜 누적 점유율에 비해 순수혜 점유율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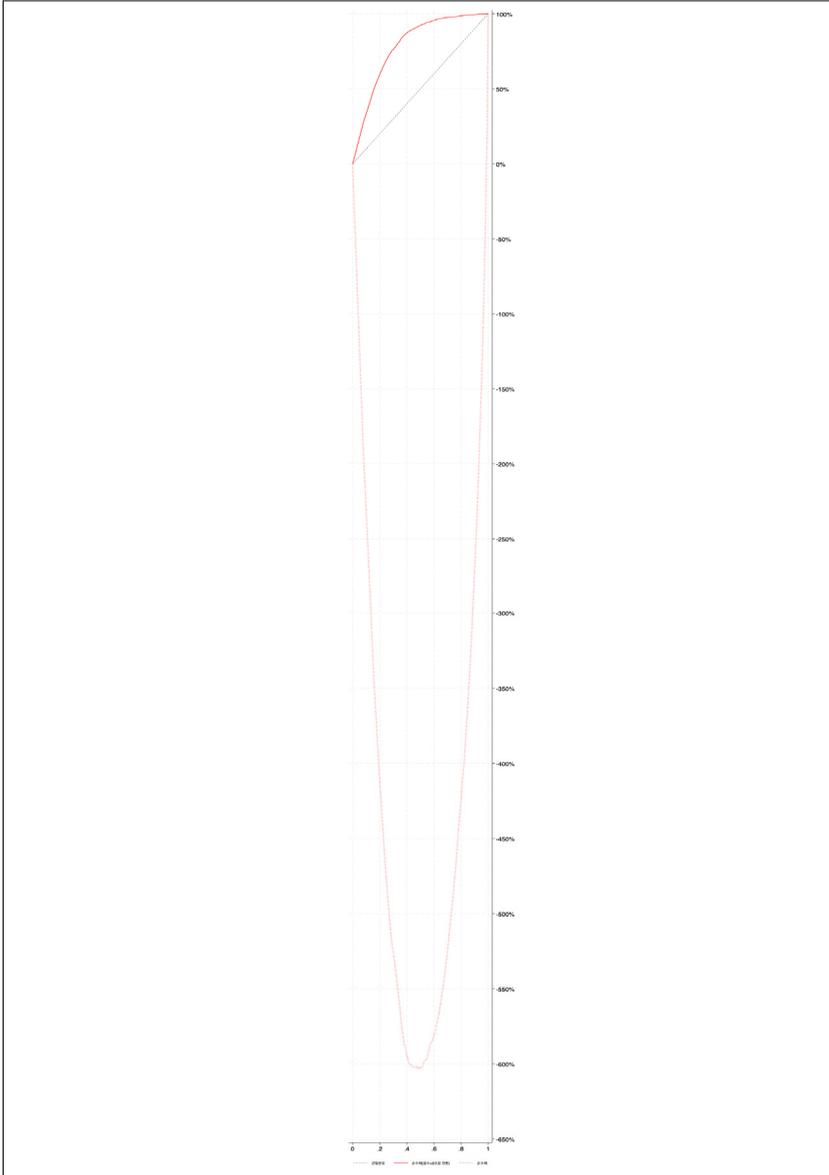
[그림 8-11]은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 [그림 8-12]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8-11]에서 보듯이 수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아래에 위치한다. 즉 고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의 집중도는 사회보험료의 집중도보다 훨씬 크다.

[그림 8-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12]는 음수값을 포함한 순수혜의 로렌츠곡선과 음수를 0으로 전환(대체)한 순수혜 로렌츠 곡선을 비교하고 있다. 음수값을 포함하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점선)은 누적 점유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집중 지수를 구하면 그 값은 1보다 크다. [그림 8-12]를 보면, 영국의 순수혜 로렌츠곡선이 극단적으로 큰 'U'자를 그리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의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수준이다. 영국의 곡선이 세로로 지나치게 길어서 불가피하게 폭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영국에서 수혜와 부담의 집중도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12장의 [그림 12-7]을 보면, 영국의 순수혜 기준 집중지수의 절댓값이 일본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담의 집중지수도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한 결과가 영국의 깊숙한 순수혜 로렌츠 곡선으로 나타났다.

순수혜 값의 음수를 0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림에서 실선의 로렌츠 곡선이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로렌츠곡선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음의 순수혜를 0으로 대체했을 때 순수혜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영국의 순수혜 로렌츠곡선은 다른 나라의 곡선 속에 특징없이 뒤섞였다([그림 12-8] 참고).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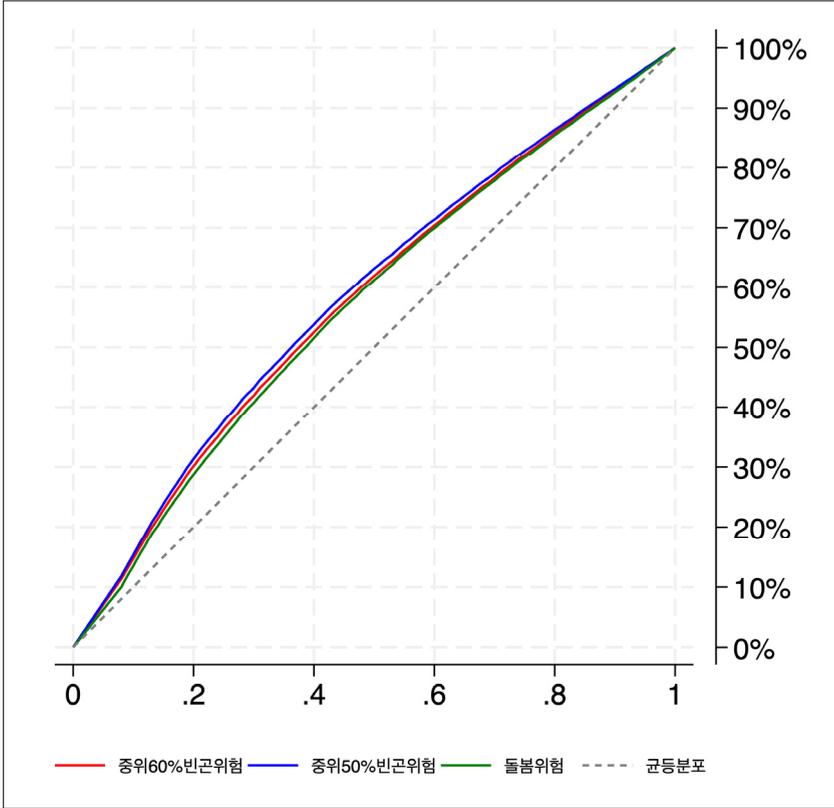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여러 가지 위험의 집중도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들 사이에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위험은 비교적 모든 소득 계층에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빈곤이나 돌봄의 위험 처럼 위험 자체가 가구 단위로 정의되는 경우다. 두 번째 위험은 개인 단위로 정의된 후 가구 단위로 합산된 위험이다. 고용 관련(미취업, 실업, 불완전 고용) 위험이나 건강,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위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의 분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각각 [그림 8-13]과 [그림 8-14]로 제시했다.

[그림 8-13]은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위험의 균등한 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점선 위로 로렌츠 곡선이 두툼할수록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빈곤 위험이 돌봄 위험보다 미세하게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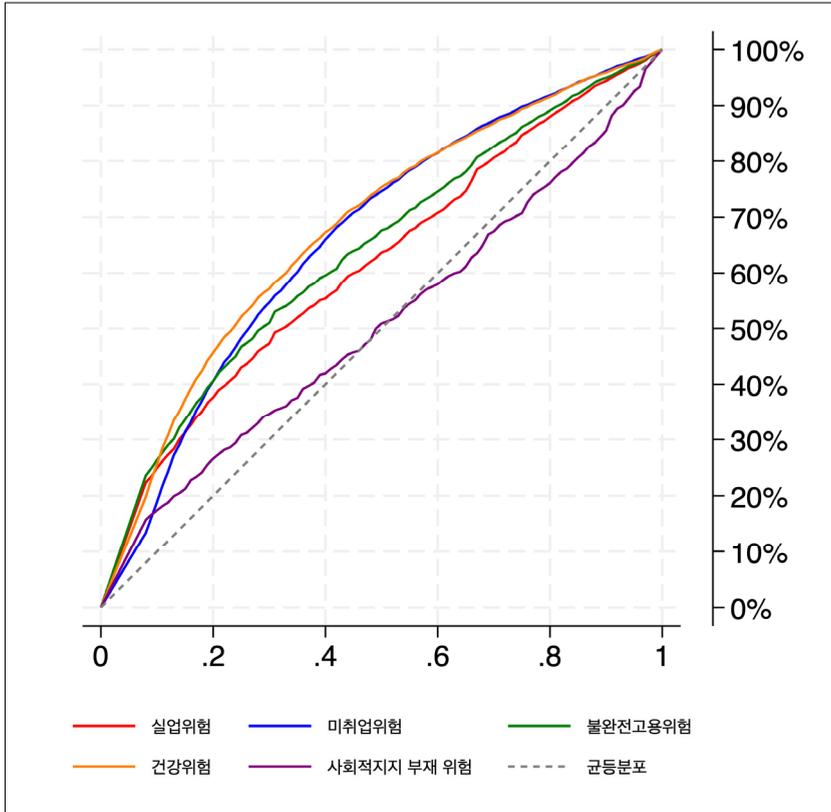
[그림 8-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8-14]는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된 위험들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로렌츠곡선이다. 위험의 균등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대각선 위에 있을수록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그림 8-14]에 따르면 위험의 집중도는 계층에 따라 동적으로 차이를 나타낸다. 대체로 보면, 건강, 미취업, 불안전 고용, 실업 위험의 순이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대각선의 위와 아래를 넘나들었다.

[그림 8-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21〉은 위험별 집중지수를 보여준다. 집중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집중도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 〈표 8-21〉에는 집중지수 이 외에도 위험의 지니계수를 제시하였다. 위험의 집중 지수는 위험도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험의 지니계수는 위험도를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8-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174	0.339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158	0.311
	돌봄위험	-0.143	0.326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324	0.676
	실업 위험	-0.232	0.827
	불완전 고용 위험	-0.279	0.840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017	0.843
	건강 위험	-0.356	0.777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8-21〉에서 모든 위험의 집중 지수는 그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다. 모든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집중된 정도는 집중 지수의 절댓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가구 단위로 측정된 위험에서는 돌봄위험의 집중지수(-0.143)의 절댓값이 두 가지 빈곤 위험 집중 지수 절댓값보다 작았다.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위험의 경우 집중 지수의 절댓값은 건강 > 미취업 > 불완전 고용 > 실업 >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의 순이다. 이는 [그림 8-14]에서 로렌츠 곡선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 순서와 같다. 영국에서 순서는 미국과는 같았지만, 한국과는 달랐다. 한국은 건강 > 불완전 고용 > 미취업 > 사회적 지지 부재 > 실업 위험의 순이다.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각되는 사회적 위험은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었는데, 집중지수의 절댓값이 각각 한국 다음으로 높았다([그림 12-4] 참고).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위험의 집중 지수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했다. <표 8-22>는 순수혜를 산출하는 데 관련된 항목들의 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8-22>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수혜, 순수혜 항목들의 집중지수 값은 음수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집중지수 값은 양수이다.

<표 8-22>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446	0.629
부담	조세	0.607	0.657
	사회보험료	0.523	0.616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585	0.625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9.602	-10.962
	순수혜(음수 → 0으로 전환)	-0.586	0.714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영국에서 순수혜의 극단적인 분포는 [그림 8-12]의 로렌츠곡선에서 확인했다. 영국에서 순수혜의 집중지수 역시 다소 극단적인 9.602로, 미국의 3.976의 두배를 넘는다. 한국은 1.587이었다. 세 나라의 순수혜 로렌츠곡선을 비교하면, 영국의 로렌츠곡선이 매우 깊숙한 'U'자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분포는 영국의 낮은 수혜 집중지수와 높은 부담 집중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영국의 수혜 집중 지수는 -0.446으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일본(-0.459) 다음으로 적었고, 부담 집중지수는 0.585로, 미국(0.629) 다음으로 컸다. 영국은 중부담-중지출 국가 유형에

속한다. 영국의 부담과 수혜의 분포를 보면, 보편부담-부담복지 유형이라기보다는, 복지국가의 재원을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고 수혜는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고소득층의) 선별부담 - (저소득층 대상) 선별복지’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에서 포착되는 현재 모습은 Duffy et al.(2013)이 역사적으로 관찰한 영국 복지국가의 변화상과 겹친다. 1970년대 말 이후 영국에서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관련 총지출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세배 이상 증가한 반면, 근로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의 총지출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제9장

일본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일본의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제3절 소결

제 9 장

일본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일본의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1. 지출과 부담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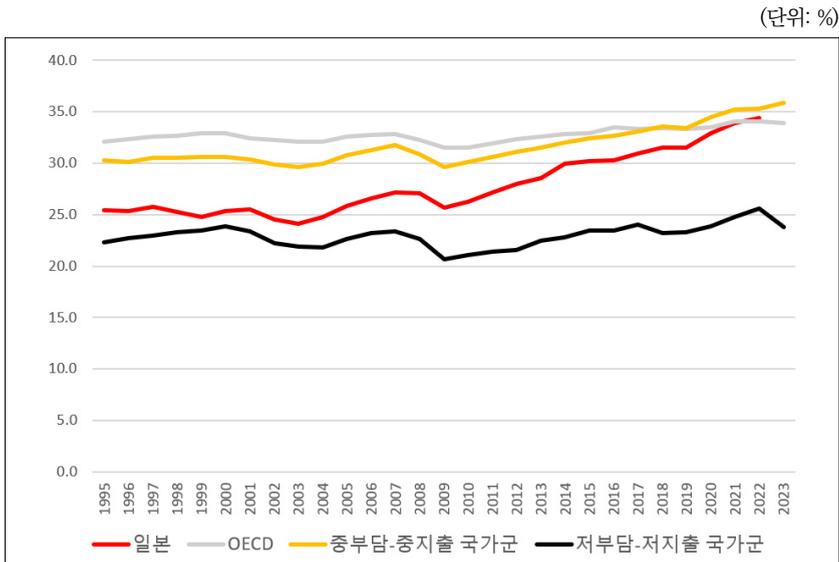
일본 복지국가의 부담과 복지지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수준만 보면 중부담-중지출 국가로도 해석될 수 있다. Esping-Andersen(1990)은 일본을 비서구 국가 중 유일하게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일본의 사회적 위험이나 공공사회지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후 Esping-Andersen(1997)은 일본을 ‘잠재적으로 예외적인 사례 (potentially deviant case)’로 규정하였고, Estevez-Abe(2008)는 일본을 ‘수수께끼(puzzle)’로 묘사하였다.

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서 일본은 사회민주주의형으로는 거의 분류되지 않으며, 자유주의형 또는 혼합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Ferragina & Seeleib-Kaiser, 2011, Kim, 2015). 이러한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마주하기도 한다. 일본 내부 학자들은 서구의 틀을 비판하며, 복지체제 분류 자체를 ‘잘못된 질문’(Takegawa, 2005)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서구의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렌즈로 일본의 지출이나 부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의 지출과 부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민부담률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25% 수준으로 미국 등 자유주의 혹은 저부담-저지출 국가와 유사했으나,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4%를 넘어섰다(OECD, 2025a). [그림 9-1]을 보면, 일본이 저부담-저지출 국가군 경로(검은색)에서 벗어나서 중부담-중지출 경로(회색)로 도약하는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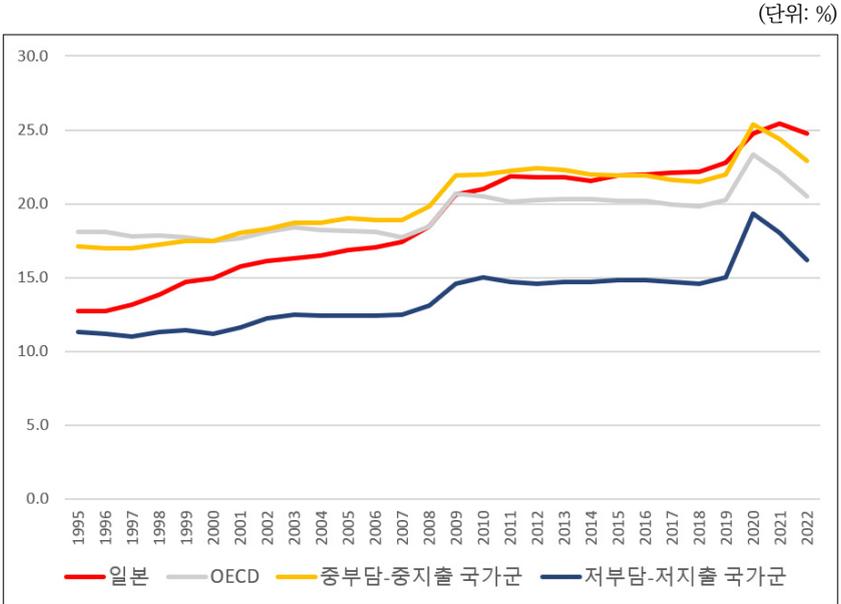
[그림 9-1] 일본의 국민부담률 비교



출처: “국민부담률,”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공공사회지출 규모도 2021년에는 GDP 대비 25%를 넘어섰다(OECD, 2025b), OECD 평균(20.8%, 2023년 기준)을 상회하며, 미국(19.0%, 2023년 기준)보다 높다. 일본의 사회지출 증가 추세는 인상적이다. [그림 9-2]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로는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에서 이탈해서 2020년대 들어서는 OECD 평균을 초과했다.

[그림 9-2] 일본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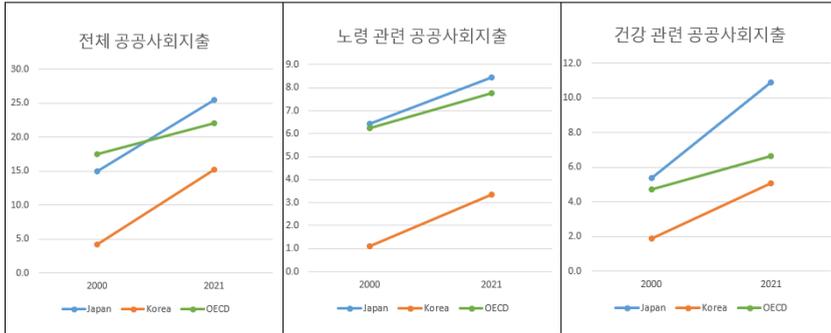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이러한 상승에는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이다. OECD(2025d)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2000~2023년 OECD 회원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5~6% 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두배 이상 증가(17.4% → 29.1%)했다. 급격한 노령화는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의 급격한 수요를 불렀다. 2000~2021년 일본의 노령 및 건강 관련 지출 규모는 GDP 대비 각각 2.0% 포인트와 5.5% 포인트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폭이 1.5% 포인트와 1.9% 포인트였다([그림 9-3] 참고). 특히 2000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 일본에서 지출 증가의 분기점이 됐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공공지출은 2000년 전후 0.7%에서 2019년 2.1%로 늘었다(Gruber et al., 2023).

[그림 9-3] 일본, 한국, OECD의 공공사회지출 증가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OECD, 2025b,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social-expenditure-database-socx.html>

둘째, 사회보험료 인상이다. 일본은 후생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전 영역에서 보험료율을 대부분 인상하며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김명중, 2015). 2010년 중반 시점에서만 보아도,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2007년 15.0%에서 2010년에 16.4%로 늘었다. 같은 기간의 개호보험과 협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도 1.23%와 8.20%에서 1.50%와 9.34%로 각각 인상됐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인상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했지만,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셋째, 소비세 인상이다. 일본은 소비세를 1997년 5%로, 2014년 8%로, 2019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권순미, 2019). 2010년대에만 두 차례에 걸친 인상이 단행됐다. 소비세 인상의 이유도 사회보험 보험료 인상과 같았다. 일본 입장에서는 GDP 대비 200%를 초과하는 정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조세 인상은 불가피했다. 권순미(2019)는 1990년대의 일본 정부의 채무 증가가 주로 경기대책 실시로 인한 공공사업비로 발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넷째, 1990년대 들어서 정당 정책 경쟁의 본격화가 복지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의 전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당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복지 확대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다. 특히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제3의 길’ 노선을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이는 복지 이슈를 정치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이후 자민당 역시 복지 확대를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적 경쟁이 사회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변화에 대해, 기업 중심의 생산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 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모델로의 전환이었다는 해석도 있다(권순미, 2018).

일본은 겉으로는 중부담-중지출 국가처럼 보이나, 지출 구조와 정책 설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공공사회지출이 고령층 중심으로 편중되고, 청년·실업자 대상 지출은 OECD 평균 이하이다. 이를 테면, 실업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일본에서 GDP 대비 0.2%이다(OECD, 2025b). OECD 실업 관련 평균 지출 수준은 1.4%이다. 일본의 1990년대 후반 기준 아동빈곤율은 14.3%로 높지만 정부 개입은 제한적이다(Bradshaw & Hirose, 2006).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2018년에도 14.0%였다(OECD, 2025d).

일본은 제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 조합주의적 요소를 갖추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민간·가족 의존과 제한적 보편성을 보이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동아시아적 변형’ 또는 ‘하이브리드 생산주의 복지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Estevez-Abe, 2008; Holliday, 2000).

2. 일본 사회적 위험의 성격

일본 사회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가족 의존 구조와 성별 분업 중심의 위험 구조이다. 일본 복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 생계부양자-전업주부’ 모델에 기반한 가족 주의적 복지체제이다(Estevez-Abe et al., 2001). 이는 사회적 위험의 배분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생애소득과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 보장에서 미흡하다. 또, 가족이 돌봄·노후보장 기능을 전담하기 때문에, 이혼·사별·무자녀 등의 상황에서 위험이 가구 단위에서 완충되지 못한다. 더욱이, 일본은 산업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세대 간 위험 배분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정규직 남성은 상대적으로 두터운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로 보호되지만, 비정규직·여성·청년·이혼여성·노인 단독가구는 다중위험에 노출된다.

둘째, 일본은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의 이분화를 경험했다. 서구의 사회 보장제도의 ‘기능적 등가물’이라는 평가를 받던 전통적인 종신고용과 연공 서열 임금체계의 일부도 빠르게 무너졌다. 1990년대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일본의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14.6%로, OECD 회원국 평균(11.2%)보다 높았다(OECD, 2025e). 참고로, 한국에서 비율은 26.9%였다.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험 미적용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이러한 요인은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고령화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에 육박한다(OECD, 2025d). 이에 따라 장기요양(long-term care)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사회 전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2000년 도입된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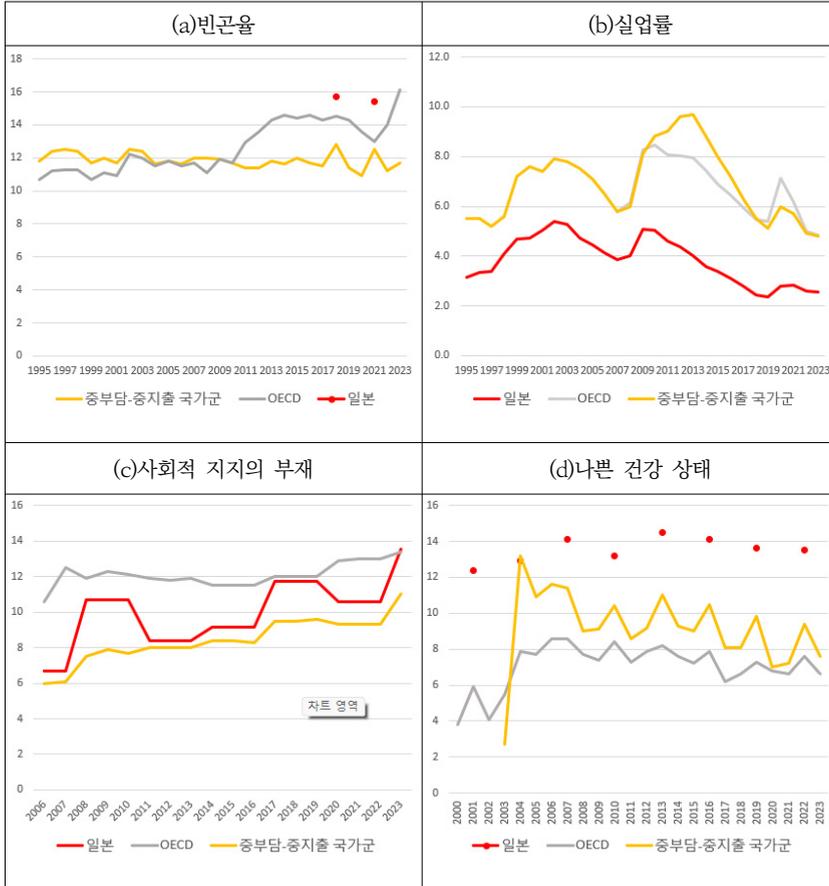
돌봄 부담을 경감시켰지만, 여전히 요양 서비스 인력 공급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의 질을 위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개호난민(介護難民)’ 문제를 야기했다(Takahashi, 2019).

넷째, 일본 노동시장의 불평등이다. 일본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21년 기준 0.513으로, 미국(0.517)에 근접한다(OECD, 2025c). 일본의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33.6%로, 미국의 29.3% 수준도 넘어선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가장 불평등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일본은 조세 및 이전을 통해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5.4%까지 낮추고 있다(OECD, 2025c). 그러나 일본에서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낮은 수급률 등으로 일본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노출한다는 지적도 있다(Takaku, 2016). 이를 테면, 小川浩(2000)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1인 빈곤 가구의 수급률은 13.46%, 2인 빈곤 가구는 6.18%, 3인 빈곤 가구는 4.43% 순으로 분석됐다(노대명 외, 2014 재인용). 일본은 엄격한 자산조사, 가족부양의무 규정, 사회적 낙인이 공공부조 수급 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Takaku, 2016).

다섯째, 건강과 관계의 측면에서 일본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일본의 기대 수명은 84.5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3a). 그렇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그림 9-4] 참고). 이러한 주·객관적 건강지표의 다소 모순된 경향성은 한국에서도 관찰되는데, 동아시아에서 건강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4] 일본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출처: "Social Indicators,"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가. 가구 유형의 소득 계층별 분포

이 연구에서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가구 유형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LIS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9-1>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 구성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각 유형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9-1>에 따르면 일본에서 노인 단독 가구를 포함하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계속하여 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노인 가구의 비율도 낮고,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고령화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의 충격이 가구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한국보다 이르게 진행됐지만, 가족구조의 변화는 한국보다 더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성인 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노인 + 근로연령’ 가구의 비율이 한국은 33.7%였지만, 일본은 41.0%였다.

〈표 9-1〉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노인 단독	2.0	2.1	2.2	1.9	2.1	2.3	2.3	2.6	2.4
2. 노인만 2인이상	7.6	8.0	7.9	7.8	9.0	10.3	10.5	11.1	10.4
3. 근로연령 단독	1.9	2.3	2.1	2.2	2.0	2.3	2.5	2.1	2.2
4. 근로연령만 2인	5.5	5.4	5.4	5.4	5.6	5.0	5.1	4.7	5.8
5. 노인+근로연령	41.3	41.2	43.0	43.8	42.6	42.0	41.0	42.7	41.0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0.8	1.1	0.6	0.5	0.7	0.8	0.6	0.6	0.6
7. 근로연령2+아동	21.0	18.8	19.6	19.4	19.3	19.6	20.0	18.8	19.6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12.9	13.1	11.9	11.8	11.9	11.2	10.5	10.5	12.7
9. 기타	7.0	8.0	7.2	7.1	6.6	6.7	7.5	6.9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가구 유형에 따라서 빈곤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9년 사이에 각 소득 분위별로 가구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9-2〉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최하위 소득 분위인 1분위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만 2인 이상이 사는 가구의 합이 60%를 넘는다. 이 점은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비중은 높은 소득 분위로 갈수록 낮아진다. 노인 가구가 대체로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경향은 두 나라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근로연령층 2명과 아동이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1분위에서는 0.4%에 불과하지만 7~8분위에서는 30%가 넘는다. 노인과 근로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1분위를 제외

하고는 소득분위의 양극단에 고루 분포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 유형은 계층적 지위를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노인 + 근로연령’ 가구는 그러한 가설에 다소 어긋나는 분포를 보인다.

〈표 9-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 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 노인 단독	13.6	5.3	3.2	1.1	0.5	0.3	0.0	0.1	0.8	0.1
2. 노인만 2인이상	53.1	26.8	11.5	3.0	2.6	3.2	0.8	0.7	0.1	2.8
3. 근로연령 단독	2.1	1.3	1.2	2.4	2.5	2.1	2.0	3.2	3.9	3.1
4. 근로연령만 2인	0.9	0.8	2.6	2.6	7.0	7.2	7.7	8.0	7.5	14.5
5. 노인+ 근로연령	23.1	47.4	51.6	44.4	39.2	37.1	31.7	42.1	53.4	50.2
6. 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0.0	2.6	1.3	1.4	0.5	0.1	0.0	0.4	0.0	0.7
7. 근로연령2+아동	0.4	6.2	10.3	25.4	20.7	27.3	35.5	33.6	20.7	16.3
8.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노인 무관)	1.4	6.3	11.7	10.8	17.6	20.0	18.3	9.8	8.4	11.8
9. 기타	5.4	3.2	6.5	8.9	9.3	2.9	3.9	2.1	5.1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개인 특성의 소득계층별 분포

앞 장에서 개인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성과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 계층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9-3>은 각 소득 분위별로 성과 연령대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다소 독특한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이 3~4분위에서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 분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미세하게 높았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관찰된 점과는 다른 양상이다.

<표 9-3>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7.8	52.2	2.2	20.7	77.2
2	46.0	54.0	7.3	39.9	52.5
3	51.0	49.0	11.9	48.7	39.1
4	51.7	48.3	20.2	56.2	23.3
5	48.9	51.1	18.3	59.2	22.5
6	46.2	53.8	19.1	64.5	15.2
7	49.0	51.0	24.6	63.9	10.9
8	49.7	50.3	18.5	69.4	12.1
9	49.6	50.4	13.8	77.3	8.9
10	49.5	50.4	11.0	77.9	11.0
전체	49.0	51.0	14.3	57.0	28.4

주: 연도는 소득 발생 연도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연령대별 구성 측면에서 보면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연령층인 18~64세의 비중은 소득 분위가 높아지면서 점차 늘어난다. 0~17세의 아동의 비중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중간 소득 분위에서는 높아졌다가 8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와 유사하다.

2. 사회적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

가. 빈곤 위험의 분포

이제 일본의 사회적 위험 분포에 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빈곤 위험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2018년의 빈곤율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표 9-4>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의 평균 빈곤율이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는 35.6%, 중위소득의 6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43.5%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각각 89.7%, 92.9%였다. 스웨덴도 81.3%, 83.8%였다. 이는 OECD의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과도 다른 수치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63.0%로, 한국(59.9%)이나 스웨덴(65.6%), 영국(57.3%)와 대동소이하다(OECD, 2025c). LIS 데이터 기준으로 일본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노인 빈곤율은 이번 장의 분석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9-4〉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35.6	43.5
2. 노인만 2인이상	11.5	21.0
3. 근로연령 단독	16.3	23.1
4. 근로연령만 2인	7.6	10.7
5. 노인+ 근로연령	10.2	14.6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29.3	34.8
7. 근로연령2+아동	5.6	10.9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10.1	13.6
9. 기타	12.2	16.8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빈곤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9-4〉의 가구 유형별 평균 빈곤율을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평균하면 2019년 기준 각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모든 분위의 위험도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위험도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표 9-5〉에는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가 제시되어 있다. 1분위의 빈곤 위험도는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에서는 14.5%, 중위소득 60% 빈곤선에서는 22.2%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각각 55.9%, 60.9%였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빈곤 위험도는 낮아지지만 분위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표 9-5〉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4.5	14.2(14.2)	22.2	14.4(14.4)
2	12.2	11.9(26.1)	18.3	11.9(26.3)
3	11.1	10.8(36.9)	16.2	10.5(36.8)
4	9.8	9.6(46.4)	14.7	9.5(46.3)
5	9.6	9.4(55.8)	14.2	9.3(55.6)
6	9.0	8.8(64.6)	13.7	8.9(64.5)
7	8.5	8.3(73)	13.1	8.5(73)
8	8.8	8.5(81.5)	13.4	8.7(81.7)
9	9.6	9.3(90.8)	14.1	9.2(90.9)
10분위	9.4	9.2(100)	13.9	9.1(100)
전체	13.9		19.4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1분위의 빈곤 위험도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2011년~2018년)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2019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4.5% (중위소득 50%선 기준)의 확률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표 9-5〉의 위험은 사전적(事前的) 위험이고 실제 계측된 빈곤율은 사후적(事後的) 위험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는 1분위의 모든 구성원들이 빈곤층이겠지만 이는 2019년의 소득이 모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판별되는 빈곤층이다.

각 분위별 빈곤 위험도를 계산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위별 빈곤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빈곤 위험도 점유율이란 전체 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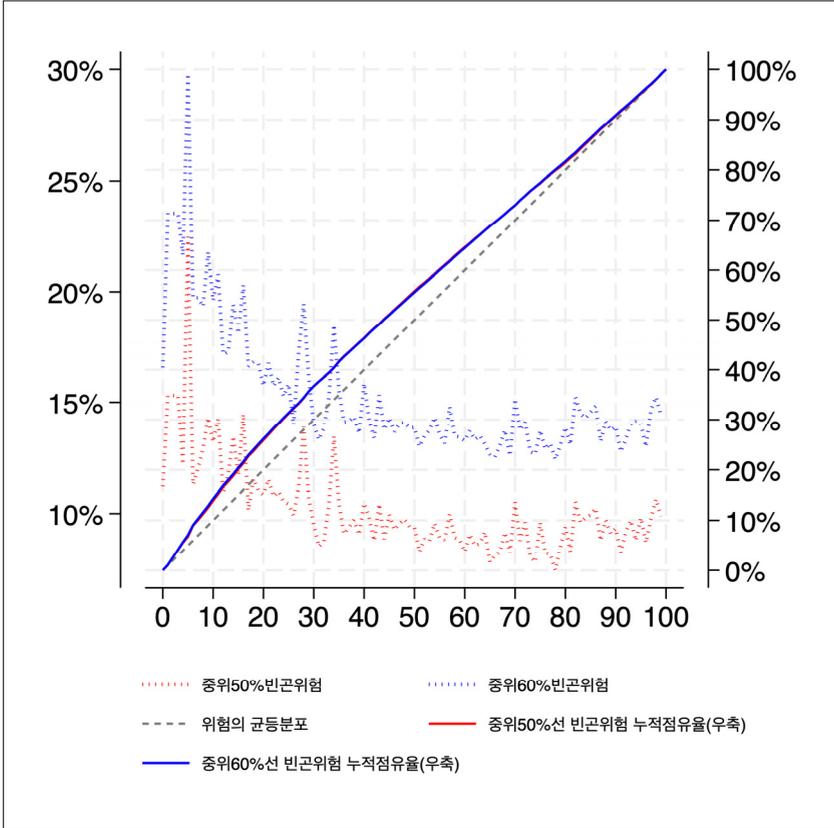
위험도 합에서 특정 분위의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란 특정 분위 및 그 이하 소득 계층의 위험도 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표 9-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빈곤위험도의 합에서 2분위까지의 빈곤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은 26.1%(중위소득 50%선), 26.3%(중위소득 60%선)이다. 5분위까지 누적 점유율은 각각 55.8%와 55.6%이다.

[그림 9-5]는 소득 분위기를 100분위로 세분화하여 로렌츠곡선을 그린 것이다. [그림 9-5]의 가로축은 전체 인구를 시장소득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누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각 소득 분위별 빈곤 위험도(좌축)와 각 분위까지의 누적 인구가 점유하는 빈곤 위험도 누적점유율(우축)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린 실선의 곡선이 빈곤 로렌츠 곡선이다.

먼저 좌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빈곤위험도를 보면 하위 5% 정도의 지점에서 빈곤위험도가 최댓값을 찍은 뒤,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위 50%의 빈곤위험은 중위 60% 빈곤 위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축을 기준으로 그려진 로렌츠 곡선(빈곤위험도 누적점유율 곡선)을 보면 두 빈곤 곡선 모두 위험도의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점선(우상향 대각선) 위쪽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포물선의 낙폭이 크지는 않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빈곤 위험이 집중되어 있지만, 집중도가 크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위 50% 빈곤의 로렌츠곡선과 중위 60%의 로렌츠곡선도 거의 중첩됐다.

[그림 9-5]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나. 실업

실업은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위험이다. <표 9-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일본의 연령대별, 성별 실업자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이 비율이 실업률이 아닌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분모가 해당 연령대 경제활동참여인구가 아니라 전체 연령 대비 인구다. 15~19세 여성과 65세 이상 남·여의 실업자 비율이 1%보다 낮은 이유도 분모가 크기 때문이다.

<표 9-6> 성 및 연령대별 실업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자 비율	
	남성	여성
15 ~ 19세	1.07	0.89
20 ~ 24세	5.07	4.23
25 ~ 29세	5.71	3.93
30 ~ 34세	4.18	3.00
35 ~ 39세	3.47	2.67
40 ~ 44세	3.13	2.61
45 ~ 49세	3.00	2.42
50 ~ 54세	2.99	2.11
55 ~ 59세	3.40	1.71
60 ~ 64세	3.79	1.37
65세 이상	0.83	0.17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9-6>의 수치를 2019년 데이터의 각 성 및 연령대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할당해 주면 2019년 시점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의 위험도가 산출된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 가구원 개인별 실업 위험도를 모두 곱하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 상태에 놓일 위험도가 계산된다. <표 9-7>의 가운데

열은 가구의 실업 위험도를 소득 분위별로 평균한 값이다. <표 9-7>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일 위험의 절대적인 값은 매우 낮다. 일본의 경우, 실업위험도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돼 있다. 굳이 따져보자면, 소득 8~9분위에서 실업위험도가 높았다.

<표 9-7>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0.1	9.5(9.5)
2	0.1	6.6(16.0)
3	0.1	6.9(22.9)
4	0.2	12.7(35.7)
5	0.1	9.9(45.5)
6	0.1	10.6(56.1)
7	0.1	8.2(64.3)
8	0.2	12.8(77.2)
9	0.2	14.2(91.3)
10분위	0.1	8.7(100)
전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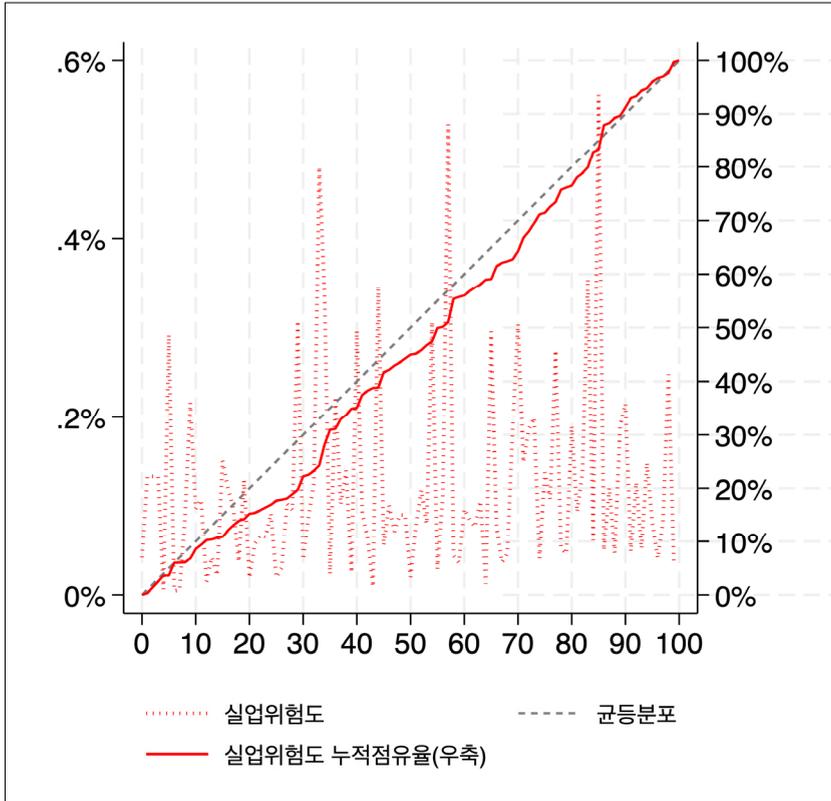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9-7>의 마지막 열은 계층별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소득 분위의 위험도 합 대비 각 소득 분위의 위험도가 위험도 점유율이고, 최하위 소득 분위부터 특정 소득 분위까지 위험도 점유율을 합한 것이 위험도의 누적 점유율이다. 하위 소득 1~2분위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16.0%이고, 중위소득 이하인 1~5분위가 차지하는 위험도 누적 점유율은 45.5%이다. 실업의 위험이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차이는 미세했다.

[그림 9-6]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6]은 소득 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 위험도 곡선과 위험도 누적 점유율 곡선(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다. 소득분위별 위험도는 오르락내리락했지만, 분위별 경향성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일본이 유일하게 아래로 볼록했다. 위험 확률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의미이다.

다. 미취업 위험

앞 소절에서 실업 위험의 집중도를 분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취업 위험의 계층별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 미취업 위험이란 실업자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위험이다. 특성 집단별 미취업 위험은 100에서 해당 집단의 고용률을 뺀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되지 않을 확률이 곧 미취업 확률 즉 미취업 위험인 것이다.

〈표 9-8〉 성 및 연령대별 고용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자 비율	
	남성	여성
15 ~ 19세	15.6	14.6
20 ~ 24세	66.2	63.9
25 ~ 29세	75.6	88.0
30 ~ 34세	67.8	91.6
35 ~ 39세	67.2	93.0
40 ~ 44세	71.5	93.3
45 ~ 49세	74.6	93.2
50 ~ 54세	73.1	92.3
55 ~ 59세	65.7	89.5
60 ~ 64세	48.0	74.3
65세 이상	14.5	29.6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표 9-8〉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연령대별 평균 고용률을 보여준다. 100에서 이 값들을 빼주면 각 성×연령대별 미취업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를 2019년의 개인들에게 성과 연령대에 맞추어 할당해 주면 2019년의 개인별 빈곤 위험이 된다. <표 9-9>는 이를 이용하여 소득 분위별 미취업 위험도와 위험도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가구원 모두가 미취업일 위험은 소득 분위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표 9-9>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3.7	36.8(36.8)
2	23.7	20(56.8)
3	15.0	12.7(69.5)
4	7.1	6(75.5)
5	6.8	5.7(81.2)
6	5.7	4.8(86)
7	3.5	2.9(88.9)
8	3.9	3.3(92.3)
9	3.9	3.3(95.5)
10분위	5.3	4.5(100)
전체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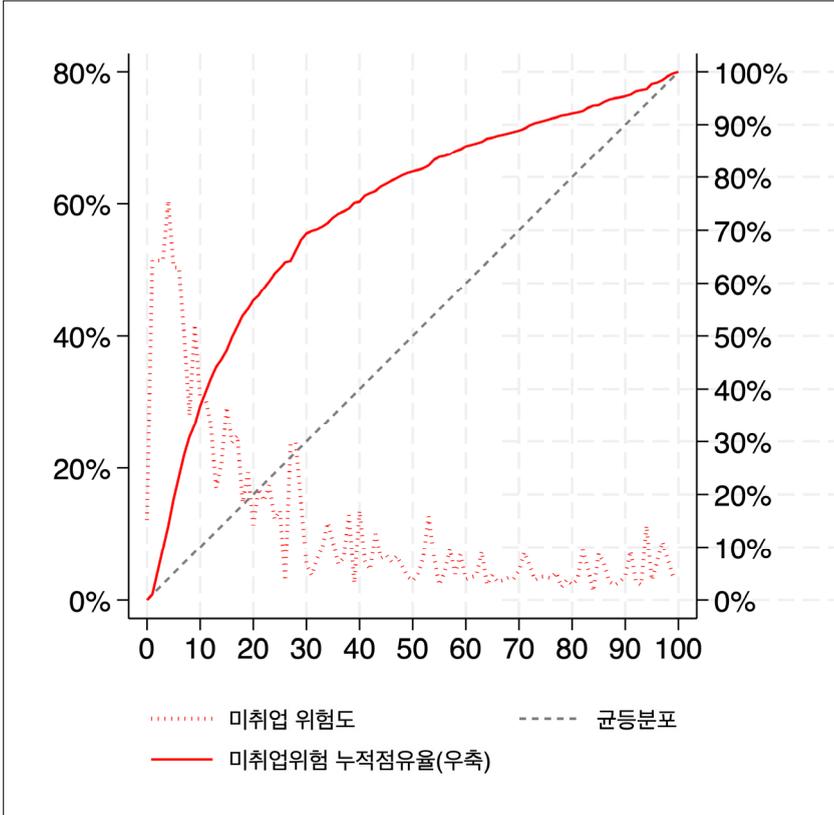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분위별 평균 위험의 차이는 분위별 위험도 누적 점유율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표 9-9>를 보면 미취업 위험은 2분위까지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 56.8%,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이 81.2%이다. 실업의 위험과 달리, 미취업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그림 9-7]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저소득 분위의 위험도 점유율이 높은 결과는 [그림 9-7]의 로렌츠 곡선으로도 부각된다. 분위별 취업 위험을 보여주는 점선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매우 높고 하위 30%의 소득 구간 오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됐다. 그 결과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점선) 위로 상당히 부풀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 불완전 고용 위험

이 연구에서 불완전 고용의 위험은 비자발적 근로자가 될 위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표 9-10>은 2009년~2018년간 성별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평균값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비율이 근로자 대비 비율이 아니라 해당 인구집단(성×연령대별)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연령대의 구분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며, <표 9-6> 및 <표 9-8>과도 다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표현한 만큼 절대적인 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체로 높다. 여성이 남성과 달리 연령대별 위험의 편차가 있다는 점이 일본의 특징이었다. 나라에 따라서는 남성에게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은 25~54세에서, 남성은 15~24세에서 위험의 비율이 높다.

<표 9-10>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4세	2.8	3.4
25 - 54세	1.9	5.9
55 - 64세	2.7	3.6
65세 이상	1.7	0.7

주: LIS 자료 상의 국가들의 연령대 구분(네 집단)과 한국의 구분(여섯집단)이 다른 점에 주의할 필요 있음.

출처: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OECD, 각연도, 2025. 6. 11.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9-10>의 값을 2019년의 각 성×연령대별 그룹에 할당하여 불완전 고용의 위험을 소득분위별로 구한 결과가 <표 9-11>에 나타나 있다.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될 위험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

었다. 일본에서는 분위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 1분위와 4분위에서 0.2%로 수치가 달랐고, 나머지 분위에서는 비율이 모두 0.1%였다. 위험도 점유율도 1분위까지가 14.5%로 높았지만, 나머지 분위에서는 거의 균등하게 누적됐다.

〈표 9-11〉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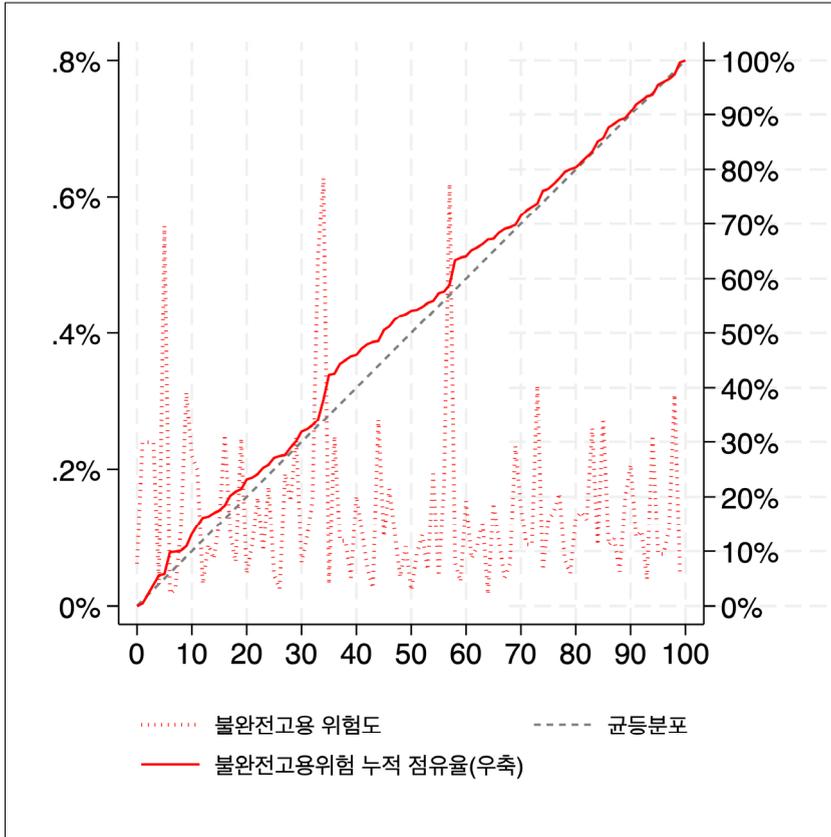
소득분위	불완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0.2	14.5(14.5)
2	0.1	9.9(24.5)
3	0.1	8.6(33)
4	0.2	13.9(47)
5	0.1	8(55)
6	0.1	9.7(64.6)
7	0.1	7.4(72)
8	0.1	8.8(80.8)
9	0.1	9.9(90.7)
10분위	0.1	9.3(100)
전체	0.1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8]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8]은 불안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곡선을 보여준다. 우선 100 분위별 위험도를 보면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지 않는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직선에서 매우 소폭을 유지하면서 상향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위험이 매우 미세한 정도로 저소득층에게서 높기 때문이다.

마. 건강 위험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을 건강 위험 지표로, 이번 연구에서 활용했다. <표 9-12>에는 성×연령대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쁜 건강 위험은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9-12>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6~9세	1.55	1.39
10~14세	2.59	2.71
15~19세	4.27	4.80
20~24세	5.66	7.36
25~29세	7.08	9.06
30~34세	7.96	9.90
35~39세	8.67	10.87
40~44세	9.32	11.46
45~49세	10.58	13.26
50~54세	11.35	14.26
55~59세	12.85	13.56
60~64세	13.71	13.73
65세~	21.70	23.91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각연도.

<표 9-12>의 성×연령대별 건강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원별 성×연령층에 할당한 후 이를 소득분위별로 집계한 것이 <표 9-13>이다.

건강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위험도는 1분위~3분위에서 낙폭이 컸다. 흥미로운 점은 건강 위험도가 7분위에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 4분위~10분위 구간에서 건강 위험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9-13>의 마지막 열은 건강 위험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즉, 건강 위험은 집중도를 보인다. 1분위의 점유율이 37.3%로 매우 높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77.7%이다.

<표 9-13>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6.2	37.3(37.3)
2	3.0	18.1(55.3)
3	1.9	11.3(66.7)
4	1.0	5.8(72.5)
5	0.9	5.3(77.7)
6	0.8	4.7(82.4)
7	0.5	3.2(85.6)
8	0.7	4(89.6)
9	0.8	4.9(94.5)
10분위	0.9	5.5(100)
전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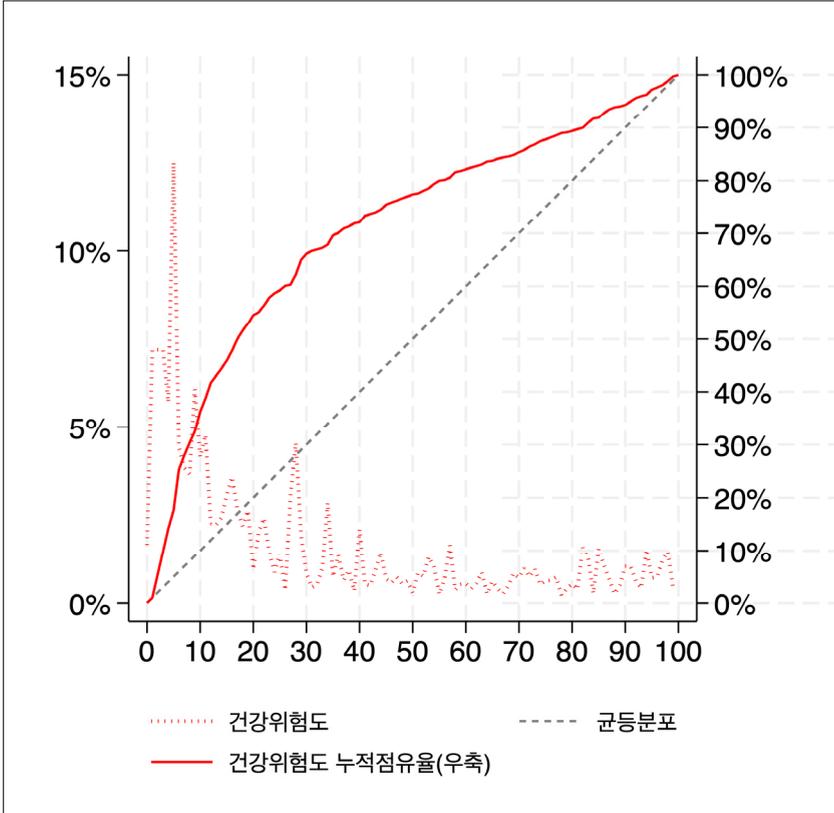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소득 분위기를 100개로 세분화하여 본 [그림 9-9]에서도 위험의 집중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은 하위 30%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됐다. 물론, 나머지 집단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로렌츠 곡선을 보면 대각선의 위로 일정하게 부풀어 오른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9-9]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바. 돌봄 위험

이 연구에서 돌봄 위험은 전체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7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돌봄의

위험은 가구 단위에서 맞이하는 위험이다. 가구의 유형별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 <표 9-14>는 2011년~2018년간 가구 유형별로 돌봄 위험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가구원의 연령을 이용하여 돌봄 필요 가구원을 정의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에서 돌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표 9-14>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1~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64.4
2. 노인만 2인 이상	49.7
3. 근로연령 단독	0.7
4. 근로연령만 2인	0.6
5. 노인+근로연령	14.6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6.8
7. 근로연령2+아동	14.2
8. 근로연령3인 이상+아동있음(노인 무관)	11.3
9. 기타	18.4
전체	20.1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9-15>는 <표 9-14>의 가구 유형별 위험도를 2019년의 가구 유형에 할당하여 소득 분위별로 구한 위험도를 보여준다. 1분위의 위험은 3분위 이상의 계층에서 직면하는 위험의 두 배 이상이다. 위험의 분위별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보면 위험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의 돌봄 위험 점유율은 22.1%, 5분위까지의 점유율은 63.6%이다. 돌봄 위험 역시 저소득 분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앞선 다른 유형의 위험에 비해 돌봄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도는 약한 편이다.

〈표 9-15〉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돌봄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39.8	22.1(22.1)
2	26.0	14.4(36.5)
3	19.4	10.8(47.3)
4	15.3	8.5(55.7)
5	14.1	7.8(63.6)
6	13.9	7.7(71.3)
7	12.9	7.2(78.4)
8	12.9	7.2(85.6)
9	13.3	7.4(93)
10분위	12.7	7.0(100)
전체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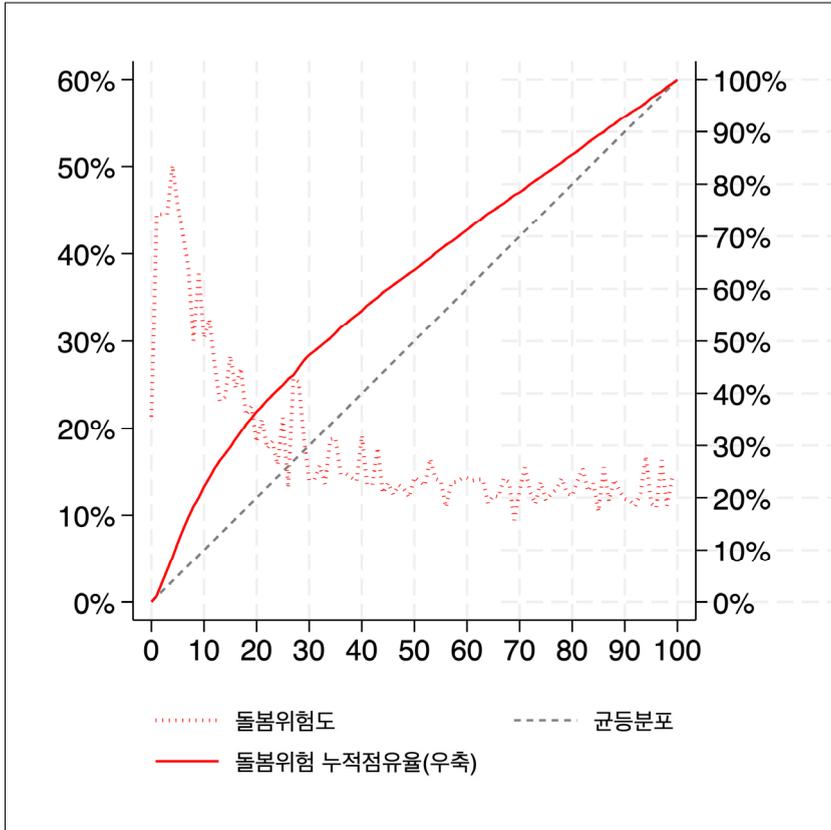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10] 은 돌봄 위험의 100분위별 분포와 누적 위험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린 로렌츠 곡선이다. 위험의 수준은 하위 20%의 소득계층과 그 이상의 계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선 위쪽에 위치하여 저소득층에 집중된 위험임을 보인다. 위험의 집중 정도는 앞선 건강 위험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림 9-10]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사.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부재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지지의 부재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위험도의 지표로

삼았다. OECD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자료는 성과 연령대의 결합 분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및 연령대별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 9-16>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9-16>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서 성×연령대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다른 위험도와는 달리 연령대의 구분이 상세하지 않아 집단 간 위험도의 차이가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표 9-16>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6.5	5.5
30 ~ 49세	19.7	16.4
50세 이상	38.9	32.4

출처: 1)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2) "Current well-being by age,"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표 9-17>은 <표 9-16>의 값을 이용하여 2019년의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낮은 소득 분위에서 위험도가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소득의 양극단에서 위험도가 높은 'U'자형을 그렸다. 일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소득 9분위에서 위험도가 5.4%로 가장 높았고, 3분위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1.2%). 분위별 위험 점유율을 보더라도 1분위의 위험 점유율은 9.3%,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33.1%이다.

300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표 9-17〉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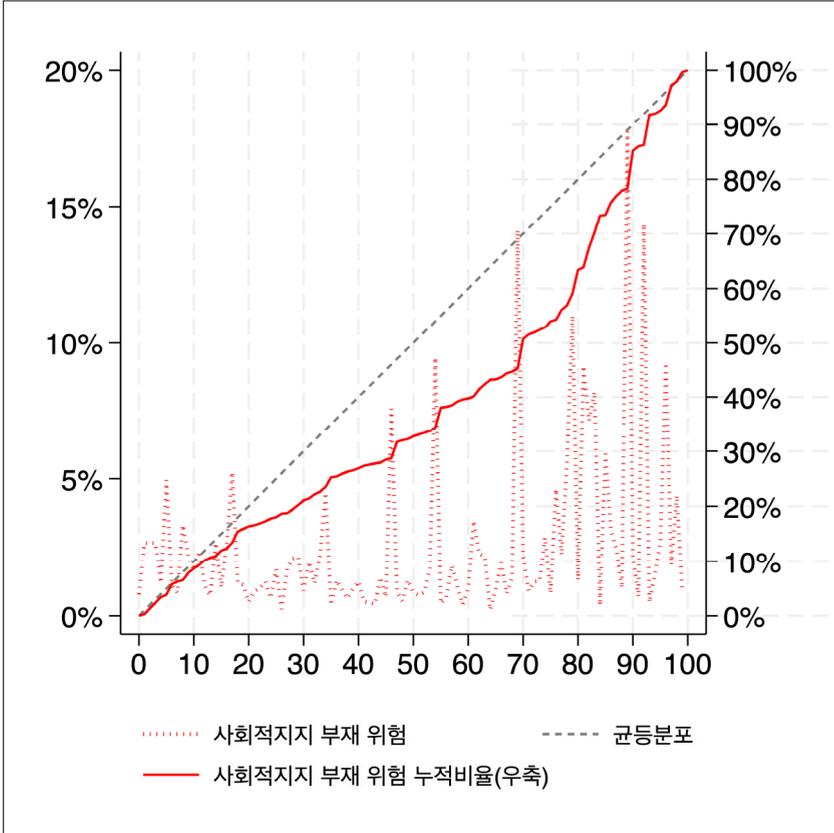
소득 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2.4	9.3(9.3)
2	2.0	7.7(17)
3	1.2	4.8(21.8)
4	1.5	5.9(27.6)
5	1.4	5.5(33.1)
6	1.8	6.9(40)
7	2.9	11.2(51.2)
8	3.2	12.5(63.7)
9	5.4	21.2(84.9)
10분위	3.9	15.1(100)
전체	2.6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

2) 〈표 9-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11]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표 9-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11]을 통해서도 위험의 집중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도는 상위 소득 분위에서 분명하게 높게 분포했다.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아래로 볼록했다. 위험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일본이 유일하게 이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이 절에서 살펴본 사회적 위험들은 일본에서는 매우 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체로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됐지만, 일본에서는 위험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는 다음 3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전에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분포와 집중 양상에 대해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순수혜의 분포

위험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에 비해 순수혜의 집중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하다. 수혜와 부담을 구성하는 항목이 모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어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표 9-18>은 2019년 기준 각 소득 분위별 수혜와 부담 금액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수혜는 LIS의 공적 이전소득을, 부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공적연금 납부액 포함)를 합한 값이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수혜는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나지만 부담 가운데에서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분위별 차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9-18〉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엔)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4,038,536	177,160,544	2,160,007	12,735,363	14,895,370
2	85,642,760	97,455,840	2,141,879	13,728,234	15,870,112
3	173,495,232	67,036,136	4,717,349	23,822,992	28,540,340
4	241,256,224	41,208,892	6,999,423.5	29,702,688	36,702,112
5	301,077,376	44,107,952	13,223,614	36,716,804	49,940,420
6	363,976,128	23,029,178	17,618,478	44,495,160	62,113,636
7	433,891,936	19,572,276	24,756,210	53,735,308	78,491,512
8	521,254,752	21,018,468	39,233,184	67,929,088	107,162,272
9	623,418,624	14,588,864	52,125,820	72,487,392	124,613,216
10분위	1,032,776,384	14,986,302	176,738,464	100,505,568	277,244,032
전체	378,082,795	52,016,445	33,971,442	45,585,859	79,557,302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지출.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9-19〉는 수혜와 부담의 분위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분위는 전체 수혜의 34.1%를 차지하고 3분위까지의 수혜 누적 점유율은 65.7%이다. 한국보다 저소득 분위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점유율은 수혜와는 반대로 하위 소득 분위에서는 낮고 상위 분위에서 높다. 조세의 누적 점유율이 사회보험료의 누적 점유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합한 부담의 점유율 역시 고소득층에서 높는데, 그 누적 점유율이 증가하는 속도는 조세 > 부담 > 사회보험료의 순이다.

〈표 9-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34.1(34.1)	0.6(0.6)	2.8(2.8)	1.9(1.9)
2	18.7(52.8)	0.6(1.3)	3(5.8)	2(3.9)
3	12.9(65.7)	1.4(2.7)	5.2(11)	3.6(7.5)
4	7.9(73.6)	2.1(4.7)	6.5(17.5)	4.6(12.1)
5	8.5(82.1)	3.9(8.6)	8.1(25.6)	6.3(18.3)
6	4.4(86.5)	5.2(13.8)	9.8(35.4)	7.8(26.2)
7	3.8(90.3)	7.3(21.1)	11.8(47.1)	9.9(36)
8	4(94.3)	11.5(32.6)	14.9(62.1)	13.5(49.5)
9	2.8(97.1)	15.3(48)	15.9(78)	15.7(65.2)
10분위	2.9(100)	52(100)	22(100)	34.8(100)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순수혜는 수혜에서 부담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표 9-20〉의 원편에서 보듯이 순수혜 금액은 분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위에 따라 그 값이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4분위까지는 순수혜가 양수, 즉 수혜가 부담보다 크고 5분위부터는 반대이다. 전체 평균 순수혜 값이 연간 -2754만 엔이라는 것은 순수혜의 총액 역시 음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도 분위에 따라 양수와 음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소득 계층 가운데 양(+의 순수혜와 음(-)의 순수혜를 갖는 분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를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분위 순수혜의 합은 양수가 되고, 분위별 순수혜의 점유율 역시 모두 양수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위별 순수혜를 비교한 것이 〈표 9-20〉의 오른편이다.

〈표 9-20〉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단위: 엔, %)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대체)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162,265,168	-58.9(-58.9)	162,364,896	45.8(45.8)
2	81,585,728	-29.6(-88.5)	82,665,664	23.3(69.1)
3	38,495,792	-14(-102.5)	48,715,352	13.7(82.8)
4	4,506,783	-1.6(-104.2)	21,739,556	6.1(89)
5	-5,832,468	2.1(-102)	20,481,964	5.8(94.8)
6	-39,084,460	14.2(-87.8)	6,791,949	1.9(96.7)
7	-58,919,236	21.4(-66.5)	5,014,585	1.4(98.1)
8	-86,143,808	31.3(-35.2)	3,039,200	0.9(98.9)
9	-110,024,352	39.9(4.8)	3,458,295	1(99.9)
10분위	-262,257,728	95.2(100)	293,076	0.1(100)
전체	-27,540,858		32,233,139	

주: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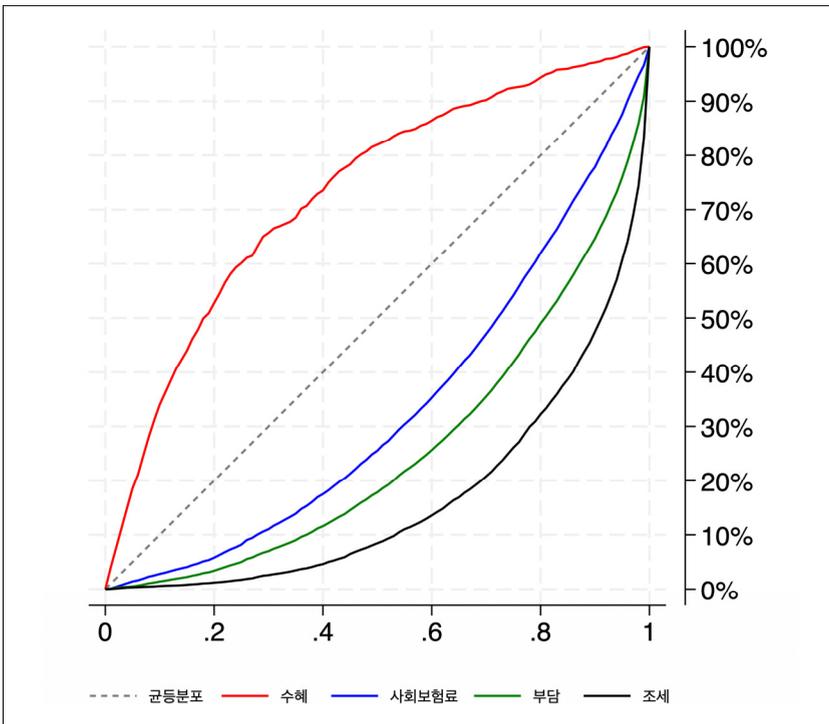
〈표 9-20〉에는 각 방법으로 계산한 순수혜 금액 이 외에도 분위별 순수혜 점유율과 누적 점유율을 제시하고 있다. 음(-)의 순수혜를 양수로 대체한 순수혜의 점유율은 1분위에서 45.8%, 2분위에서 23.3%로 나타난다. 2분위까지의 누적점유율은 69.1%이고, 5분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94.8%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비율이 각각 61.6%, 88.0%였다. 일본에서 순수혜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됐다. 〈표 9-19〉의 분위별 수혜 누적 점유율에 비해 순수혜 점유율이 더 크다.

[그림 9-12]는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을, [그림 9-13]은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9-12]에서 보듯이 수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로렌츠 곡선은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점선 아래에 위치한다. 즉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의 집중도는 사회보험료의

집중도보다 현격하게 크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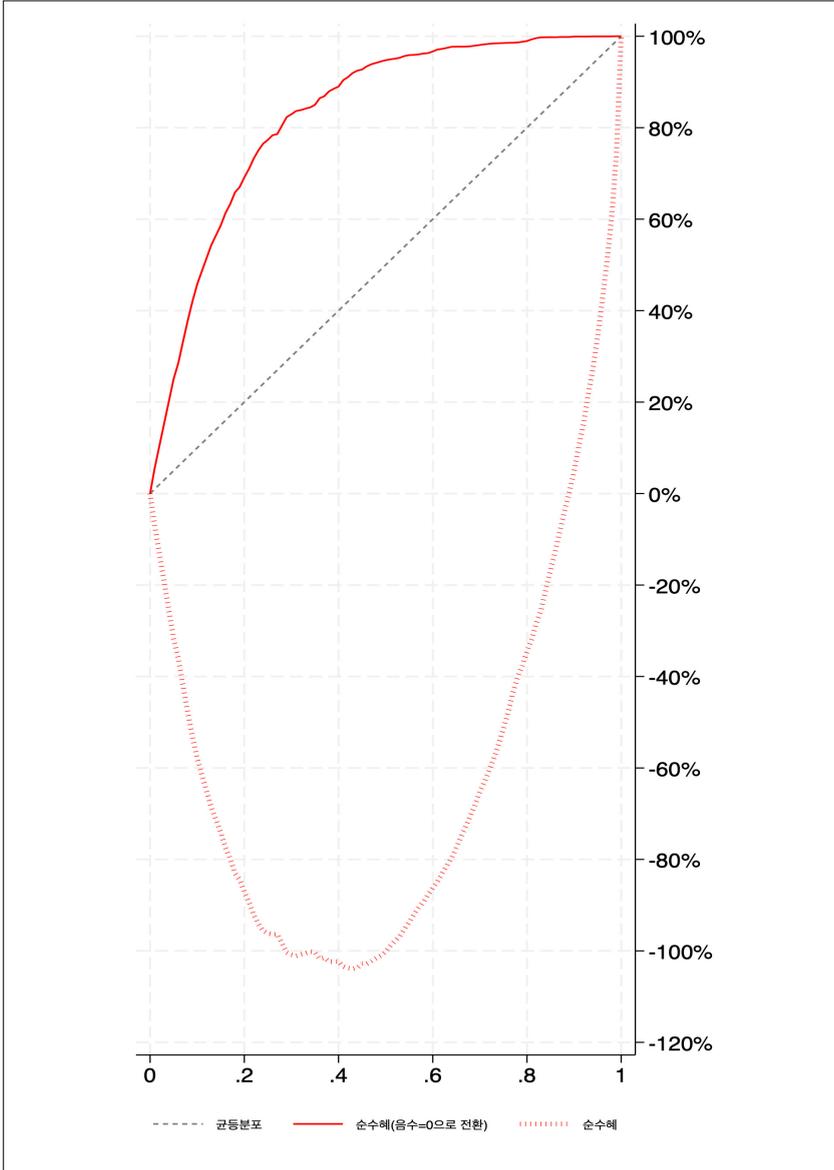
[그림 9-13]은 음수값을 포함한 순수혜의 로렌츠곡선과 음수를 0으로 전환(대체)한 순수혜 로렌츠 곡선을 비교하고 있다. 음수값을 포함하는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점선)은 누적 점유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집중 지수를 구하면 그 값은 1보다 크게 된다. 음수를 0으로 대체할 경우 실선의 로렌츠 곡선이 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로렌츠 곡선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음의 순수혜를 0으로 대체했을 때 순수혜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12]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13]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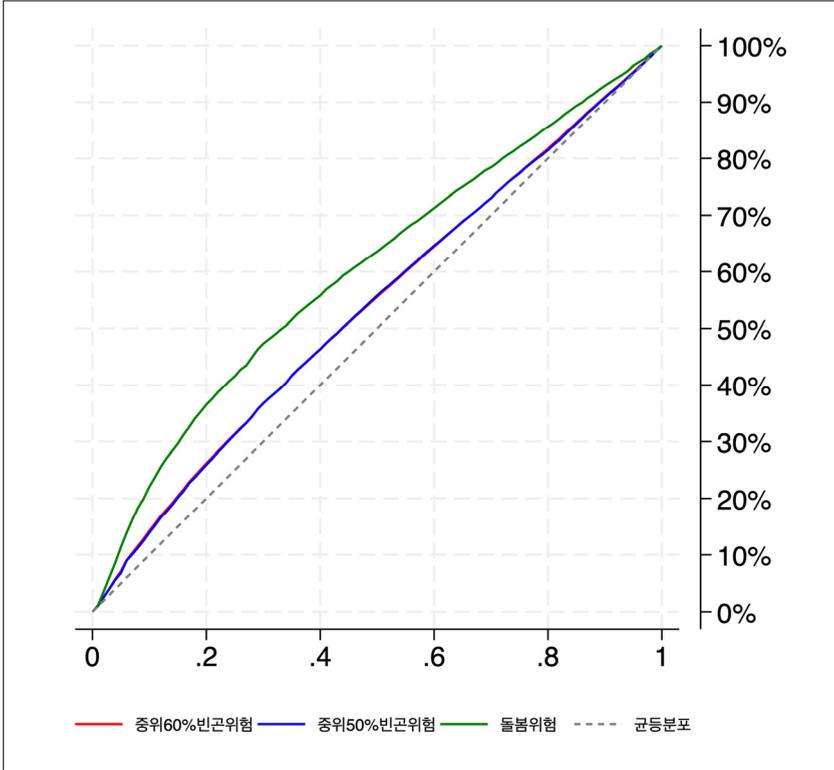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일본에서 위험의 종류에 따라 계층별 집중도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의 유형에 따른 계층별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위험을 계측하고 위험의 집중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위험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빈곤이나 돌봄의 위험처럼 위험 분석의 출발점이 가구 단위인 경우다. 빈곤 위험은 가구별로 합산된(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으로, 돌봄의 위험은 가구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 단위로 정의된 후 가구 단위로 합산된 위험이다. 고용 관련(미취업, 실업, 불완전 고용) 위험이나 건강,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위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가구 단위의 위험은 개인의 위험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의 분석에서는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과 개인 단위로 정의되어 가구별로 합산된 위험을 구분하여 비교했다.

[그림 9-14]는 일본의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위험의 균등한 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점선 위로 로렌츠 곡선이 치우쳐 있을수록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일본에서 빈곤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대각선에 근접했다. 빈곤 위험이 전 계층에 걸쳐서 비교적 평탄하게 분포했다는 의미이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인 집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앞서 2절의 빈곤위험분포에서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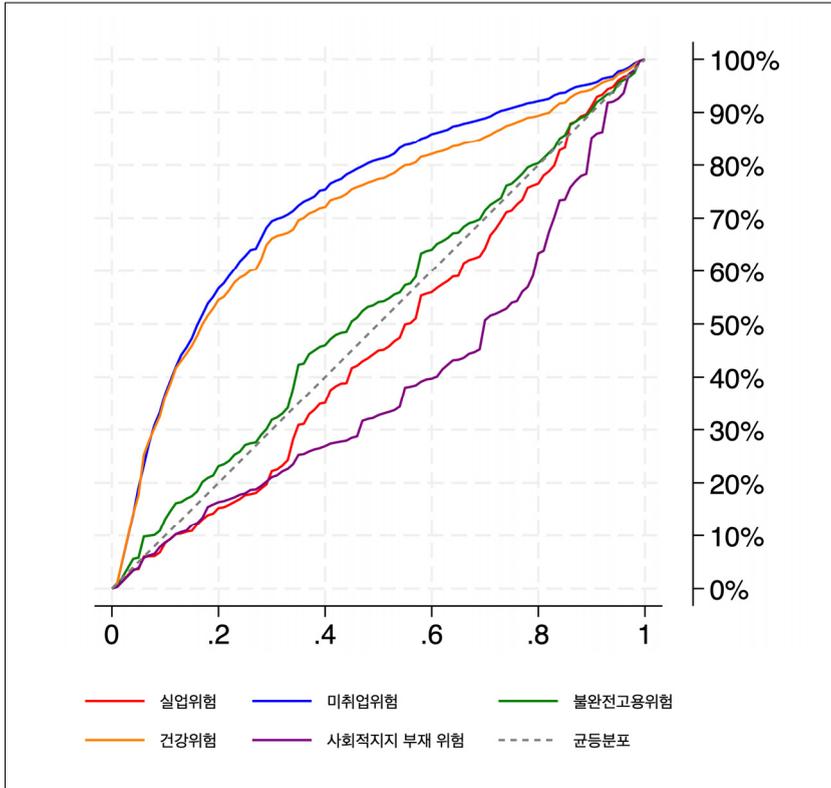
[그림 9-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그림 9-15]는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된 위험들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로렌츠곡선이다. 위험의 균등분포 상태를 의미하는 대각선 위에 있을수록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그림 9-15]에 따르면 위험의 집중도는 미취업, 건강, 불완전 고용 순서로 나타난다. 사회적 지지 부재와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일본의 경우, 두 가지 영역에서는 위험이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9-15]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곡선의 모양을 통해 살펴본 위험 집중도의 차이를 집중 계수와 비교함으로써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표 9-21>은 위험별 집중지수를 보여준다. 집중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집중도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 <표 9-21>에는 집중지수 이 외에도 위험의 지니계수도 제시하였다. 위험의 집중 지수는 위험도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험의 지니계수는 위험도를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9-21〉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079	0.182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080	0.155
	돌봄위험	-0.208	0.325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467	0.739
	실업 위험	0.063	0.929
	불완전 고용 위험	-0.063	0.905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213	0.877
	건강 위험	-0.425	0.827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9-21〉에서 대부분 위험의 집중 지수는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다. 이번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들과 견주면, 일본에서 빈곤위험의 절댓값이 가장 낮았고, 미취업위험의 절댓값은 가장 컸다.

실업과 사회적 지지 부재는 일본에서는 양수였다. 이는 일본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양상이다.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의 경우, 한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별 격차가 가장 분명했고, 일본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분명했다. 서구의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계층에 따라 동적인 양태를 보였다.

가구 단위로 측정된 위험에서는 돌봄위험의 집중지수(-0.208)의 절댓값이 다른 두 가지 빈곤 위험의 집중지수 절댓값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 단위로 정의되고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위험의 경우 집중 지수의 절댓값은 미취업 > 건강 > 불완전 고용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부재와 실업 위험의 경우, 집중지수가 양수였다. [그림 9-15]에서 로렌츠 곡선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 내용과 같다.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위험의 집중 지수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다. <표 9-22>를 보면, 일본에서 수혜의 집중지수(-0.459)와 순수혜(음수→ 0으로 전환)의 집중지수(-0.659)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절댓값이 가장 컸다. 이는 12장의 [그림 12-7]과 [그림 12-8]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로렌츠곡선이 저소득분위에서 다른 국가보다도 눈에 띄게 높은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수혜 혹은 순수혜의 집중도가 높았다. 복지국가의 수혜가 저소득층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장의 1절에서 일본이 90년대 이후 ‘저부담-저지출’에서 ‘중부담-중지출’ 유형으로 확장했음을 확인했다.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복지국가의 발전은 잔여적 유형에서 보편적 유형으로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작은’ 잔여유형에서 ‘큰’ 잔여유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표 9-22>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459	0.738
부담	조세	0.657	0.727
	사회보험료	0.333	0.455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471	0.557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2.240	-2.869
	순수혜(음수→ 0으로 전환)	-0.659	0.814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변화는 사회정책의 질적, 능동적 확장의 결과라기보다는 고령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적인 확장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한국이 이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높다. 일본이 90년대 이후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부담-중지출' 국가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라도 예비한 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곱씹을 대목이다.



제10장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프랑스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제3절 소결

제 10 장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프랑스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2025년 현재 프랑스는 어떤 복지국가로 변화하고 있는가. 인구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험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각종 복지개혁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좌초하고 있는가.

극우세력의 약진에 따른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극우세력의 출현과 주류화 문제를 겪어 왔으며, 2025년 현재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집권여당인 르네상스(Renaissance)가 극우세력인 국민연합(RN)의 성장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의 약진 사이에 끼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주요한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구축된 사회보장체계가 변화된 경제사회환경과 인구고령화 위험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2025년 9월 이후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각종 복지개혁과 관련해 극우와 좌파연합 어느 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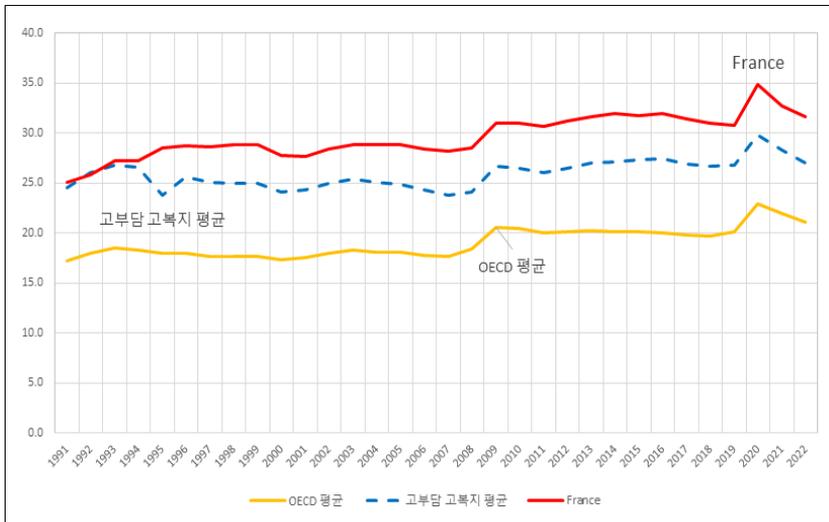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프랑스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적소득이전이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

프랑스의 사회지출은 1990년대 초반까지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의 평균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OECD 국가 중 사회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불리고 있다. 참고로 1991년 사회지출은 GDP의 25% 수준이었지만, 2001년 27.7%, 2011년 30.7%, 2021년 32.7%로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이 복지개혁 등을 통해 사회지출 증가를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프랑스는 수 차례의 복지개혁이 좌초됐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주목할 점은 2020년 34.9%로 절정에 도달한 뒤, 차츰 감소하여 2022년에는 31.6%까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림 10-1] 프랑스 사회지출의 추이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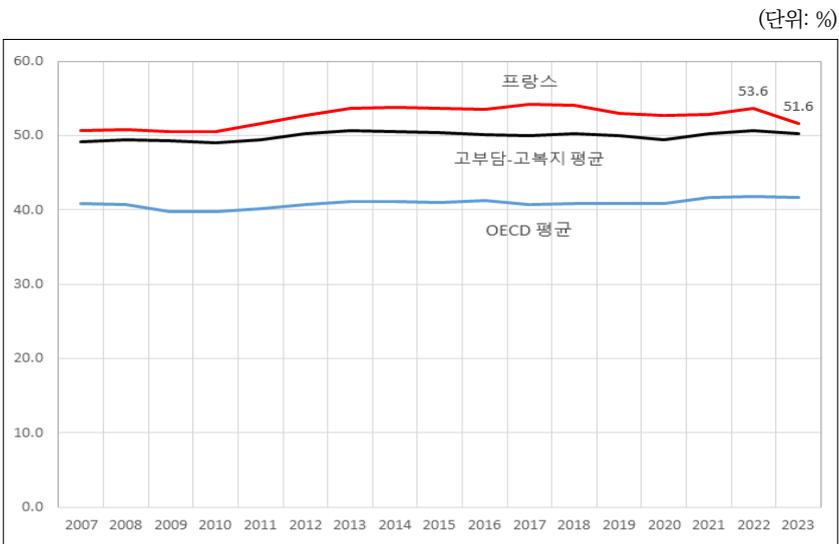
(단위: %)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물론 높은 사회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수반한다. 실제 프랑스의 국민부담률 또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그것은 2007년~2023년까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고부담-고복지군 평균 값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물론 최근의 사회지출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국민부담률도 2022년 53.6%로 절정에 이른 뒤, 2023년 51.6%로 약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개혁, 특히 사회보장개혁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혁정책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사회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회지출 감소세가 유지될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림 10-2] 프랑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 추이 비교



출처: “Public finance main indicators: government at a glance, 2025 edition, General government revenues,” OECD, 2025f.

현재 프랑스의 사회지출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2020년 동안의 사회지출 추이를 보면,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보장 부문의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장 부문 사회지출은 5.4%에서 9.6%로 약 78% 증가하였고, 노령부문(연금)의 사회지출은 7.5%에서 13.3%로 약 77% 증가했다. 2020년 현재 이 두 부문의 사회지출이 전체 사회지출의 65.6%에 달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증가세가 큰 정책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92년~2020년 사이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약 8.3배 증가했다. 이는 근로빈곤층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말해주듯, 지난 20~30년간 프랑스정부는 근로빈곤층 복지제도를 계속 개혁해 왔고, 지금도 활동연대수당(RSA)과 근로장려금(Prime d'activité)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면, 최근 20년간 프랑스의 사회지출 증가는 고령화에 따라 공적 연금과 건강보장 지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복지개혁이 매우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취업빈곤층이나 실직근로 빈곤층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지출규모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최근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복지개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정치세력의 정치적 반대,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부자 감세가 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정서, 빈곤정책이 결국 이민자를 지원한다는 대중의 비판적 정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5년 9월 현재 심각한 정치·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⁵³⁾

53) 분명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지금도 사회보장개혁을 통해 공공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문

〈표 10-1〉 프랑스와 OECD의 공적사회지출의 분야별 배분의 변화

(단위: GDP의 %)

France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노동	실업	주거	기타	전체
1980	7.5	1.9	2.7	5.4	2.2			0.4		20.1
1985	8.5	2.0	2.7	6.0	2.6	0.6	2.3	0.7		25.3
1990	9.0	1.6	2.0	6.1	2.4	0.7	1.6	0.7	0.1	24.4
1995	10.4	1.6	2.1	7.8	2.7	1.2	1.6	0.9	0.3	28.5
2000	10.2	1.5	1.7	7.6	3.0	1.2	1.4	0.9	0.3	27.7
2005	10.6	1.7	1.8	8.0	2.9	0.9	1.7	0.8	0.4	28.8
2010	11.9	1.7	1.6	8.6	2.9	1.1	1.6	0.8	0.8	31.0
2015	12.6	1.6	1.7	8.8	2.9	0.9	1.6	0.8	0.8	31.8
2020	13.3	1.6	1.9	9.6	2.9	0.8	2.8	0.7	1.2	34.9

OECD 평균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노동	실업	주거	기타	전체
1980	4.9	0.9	2.0	4.1	1.5	0.2	0.6	0.2	0.4	14.4
1985	5.4	0.9	2.1	4.1	1.4	0.4	1.0	0.3	0.4	15.9
1990	5.6	0.8	2.1	4.3	1.6	0.4	0.9	0.3	0.4	16.4
1995	6.2	0.8	2.2	4.5	1.7	0.5	1.1	0.3	0.5	18.0
2000	6.1	0.9	2.0	4.8	1.8	0.5	0.7	0.3	0.4	17.3
2005	6.2	0.9	2.0	5.2	1.8	0.5	0.7	0.3	0.5	18.1
2010	7.1	0.9	2.1	5.8	2.2	0.5	0.9	0.4	0.6	20.4
2015	7.4	0.9	2.0	5.7	2.1	0.5	0.7	0.3	0.5	20.1
2020	7.4	0.8	2.0	5.8	2.1	0.6	0.6	0.3	0.5	20.1

주: 셀의 수치는 public social expenditure이며, GDP의 퍼센트(%).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2. 사회적 위험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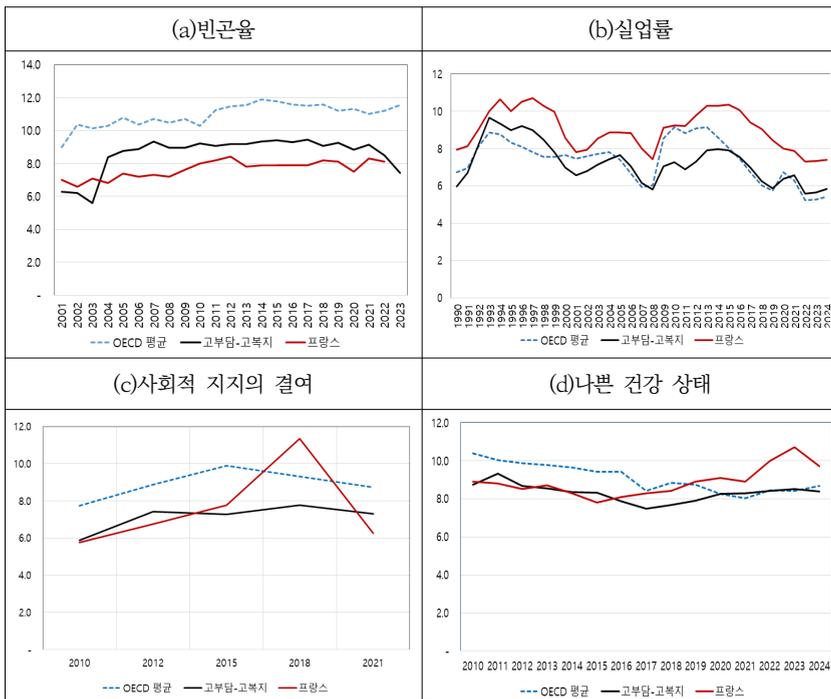
프랑스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과 사회지출의 수준과 추이를 보면,

제로 풀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마크롱 정부는 2023년 4월 14일 사회보장 재정법(PLFSS)을 개정하여,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특수 직역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기업의 노령근로자 고용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전국적 시위와 저항을 받으며, 2023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9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둘러싸고 더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위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10-3]은 크게 네 가지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고부담-고복지 국가 및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림 10-3]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 출처: 1)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L’essentiel sur...la pauvreté,” INSEE, 2025,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759045#>에서 인출.
 2) 실업률은 “L’essentiel sur...le chômage,” INSEE, 2025,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805248>에서 인출.
 3)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3% des individus isolés de leur famille et de leur entourage : un cumul de difficultés socioéconomiques et de mal-être, Insee Première n° 1 770 - Septembre 2019,” INSEE, 2019.
 4) 나쁜 건강 상태는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10_custom_18444746/default/table에서 인출.

좌측 상단의 그림은 1996~2022년 가처분소득 중위 60% 기준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프랑스 빈곤율이 14.3%였다면 2022년에는 14.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았던 시기는 2000년~2004년 시점으로 12.4%~1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보다 크게 낮고,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⁵⁴⁾

우측 상단 그림에서 프랑스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 가파르게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실업률은 계속 OECD 평균이나 고부담-고복지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5년까지 8%~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16년 이후 감소하여 2022년 7.3%, 2023년 7.4%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좌측 하단의 그림은 OECD의 현재 행복에 대한 조사에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망 결여>(lack of social support)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군들과 달리 2018년 부정적 답변이 11.4%까지 치솟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2018년 노란조끼 운동이 촉발시킨 사회 갈등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프랑스인들이 사회적 지지망 결여는 5.8%~6.3%로 다른 국가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그 비율은 2015년까지 OECD 국가 평균보다

54) 같은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의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은 36.5%, 중위 60% 기준 빈곤율은 40.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부담-고복지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고부담-고복지 국가군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9년 이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지만, 수년간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여기서는 LI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2009년~2018년 기준 프랑스 가구 및 개인 데이터(2010년~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사회적 위험을 규정하고, 이를 2019년 가구데이터에서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로 비교한다.

경제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기에 앞서, 2009년~2019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연도별로 가구유형의 분포를 산출하여 그 추이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노인단독,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10-2〉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노인 단독	5.87	5.85	6.00	6.34	6.41	6.45	6.62	6.86	7.04	6.89
2.노인만 2인이상	7.76	8.05	8.26	8.27	8.65	8.92	9.22	9.38	9.53	9.90
3. 근로연령 단독	9.43	9.88	9.85	9.59	9.66	9.68	9.91	9.91	9.98	10.24
4. 근로연령만 2인	16.07	15.51	15.06	15.02	14.61	14.33	14.28	14.17	14.25	13.93
5. 노인+ 근로연령	13.09	13.04	13.16	12.72	12.66	12.93	12.56	12.54	12.37	12.62
6.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5.37	5.08	5.10	5.39	5.59	5.89	5.77	5.89	6.19	6.27
7.근로연령2+아동	33.75	33.81	34.04	33.74	33.95	33.46	33.31	32.96	32.74	32.12
8.근로연령 3인 이 상+아동(노인 무관)	8.23	8.22	7.94	8.41	7.82	7.77	7.71	7.77	7.37	7.41
9. 기타	0.43	0.55	0.58	0.52	0.65	0.57	0.62	0.53	0.52	0.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10~2019,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09~2018년).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가구유형을 구분한 뒤, 각 소득분위에서 어느 유형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금소득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 기준상으로는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제외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소득하위 1~3분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3〉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노인 단독	26.5	26.4	22.4	10.8	3.2	1.4	0.6	0.4	0.5	1.1
2.노인만 2인이상	21.8	37.4	33.9	18.3	5.8	2.6	1.3	1.2	0.9	1.3
3. 근로연령 단독	15.3	10.3	9.3	10.4	8.0	9.3	12.6	10.6	10.0	8.4
4. 근로연령만 2인	6.0	4.9	6.6	9.6	10.5	14.0	12.9	16.0	21.0	24.5
5. 노인+ 근로연령	8.3	8.9	12.3	13.3	11.8	12.0	11.1	11.8	14.8	18.2
6.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11.0	5.9	5.1	8.9	10.6	10.2	5.0	2.1	1.8	1.9
7.근로연령2+아동	7.8	5.0	7.5	22.0	39.5	39.7	45.9	46.3	40.5	35.5
8.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노인 무관)	2.5	0.9	2.2	5.3	9.2	10.4	10.0	11.2	10.4	9.1
9. 기타	0.8	0.4	0.9	1.3	1.4	0.4	0.6	0.5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 기준 10분위집단.

2) 개인가중치로 가중화된 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소득 10분위 계층의 각 분위에서 성별 분포를 보면, 하위 1~6분위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고, 7분위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하위소득 1~3분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2~68%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 소득이전이 이루어진 이후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표 10-4〉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3.0	57.0	12.7	35.1	52.2
2	43.6	56.4	7.0	25.1	68.0
3	44.4	55.6	8.4	30.3	61.4
4	46.4	53.6	19.9	45.7	34.4
5	47.4	52.6	31.2	56.1	12.8
6	49.8	50.2	29.1	63.7	7.2
7	50.1	49.9	28.0	68.2	3.9
8	50.6	49.4	26.1	71.0	2.9
9	51.2	48.8	22.3	75.4	2.4
10	52.1	47.9	20.1	76.2	3.7
전체	48.4	51.6	22.0	58.1	20.0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 기준 10분위집단.

2) 개인가중치로 가중화된 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 사회적 위험의 분포

여기서는 사회적위험을 1)빈곤, 2)실업, 3)미취업, 4)비정규고용, 5)건강 위험, 6)돌봄부담, 7)사회적 지지망 취약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소득기준으로 각 집단이 어느 소득분위에 위치하는지 살펴본다. 전체 보고서 차원의 기술의 통일성을 위해 가구유형별, 소득분위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낸다.

가. 빈곤 위험 분포

프랑스의 경제사회적 위험 중 빈곤위험을 2009~2018년 가구유형 및 소득분위별 빈곤율 평균값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어떤 집단에서 빈곤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위값의 50%와 6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였다.

아래 <표 10-5>는 프랑스의 가구를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같은 기간 각 집단별 빈곤율을 계산한 것이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단독가구와 노인2인가구의 평균 빈곤율은 각각 88.9%와 86.1%에 이른다. 더불어 기타가구(9)가 52.4%,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6)가 43.6%, 근로연령층 단독가구(3)가 35.6%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5>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88.9	90.7
2. 노인만 2인이상	86.1	88.5
3. 근로연령 단독	35.6	38.2
4. 근로연령만 2인	17.7	20.0
5. 노인+ 근로연령	28.2	31.0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43.6	48.9
7. 근로연령2+아동	14.3	18.1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13.7	18.0
9. 기타	52.4	60.3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이용한 빈곤율임.

2) 2010~2019년 데이터 해당 변수(빈곤)의 가구유형별 평균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09~2018년).

<표 10-6>은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집단별로 빈곤위험과 위험의 점유율(그리고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론적으로 시장소득의 하위1분위는 모두 또는 대부분 빈곤층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 10-6>은

2019년 기준 소득분위집단이 2009~2018년 빈곤을 경험했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잠재적으로 각 소득분위집단이 안고 있는 빈곤위험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표 10-6〉에서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시장소득 1분위의 빈곤위험도는 60.3%, 2분위는 63.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념과는 다른 분석결과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중위소득 60%를 빈곤선으로 해도 이 역전현상은 동일하다. 그리고 빈곤위험의 점유율을 보면, 하위소득 5분위집단의 빈곤점유율은 중위소득 50%와 60%를 적용할 때, 각각 66.9%와 65.1%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6〉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60.3	17.9(17.9)	63.1	17.1(17.1)
2	63.8	19.0(36.9)	66.5	18.0(35.0)
3	45.2	13.4(50.3)	48.4	13.1(48.1)
4	29.5	8.8(59.1)	33.2	9.0(57.0)
5	26.2	7.8(66.9)	29.9	8.1(65.1)
6	23.8	7.1(73.9)	27.4	7.4(72.5)
7	21.9	6.5(80.4)	25.5	6.9(79.4)
8	21.3	6.3(86.8)	24.8	6.7(86.1)
9	21.8	6.5(93.2)	25.2	6.8(92.9)
10분위	22.8	6.8(100.0)	26.2	7.1(100.0)
전체	33.7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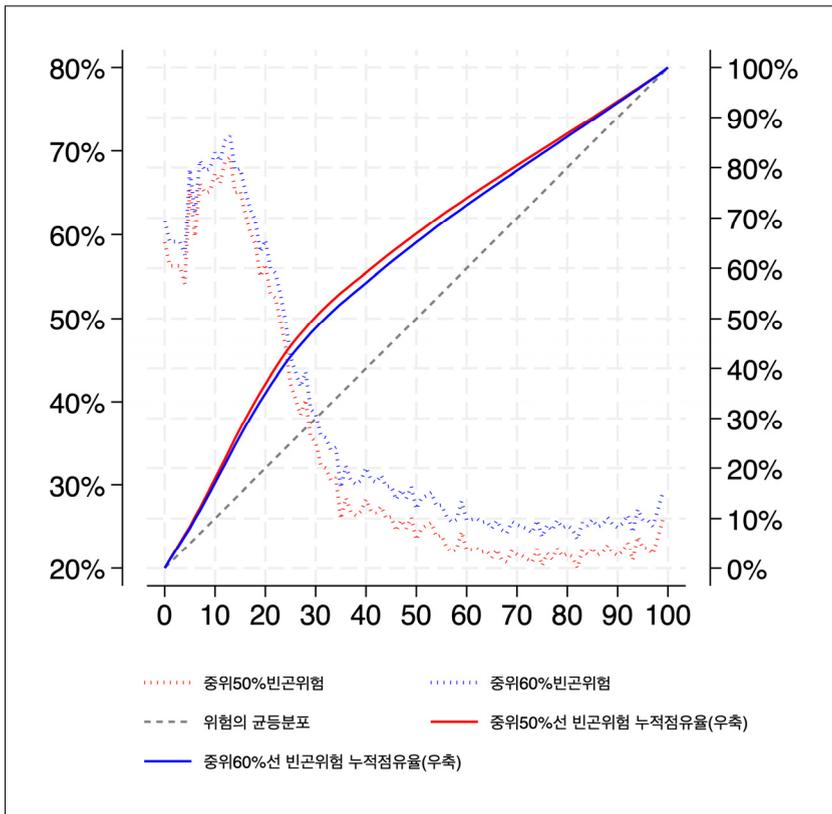
주: 〈표 10-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아래 [그림 10-4]는 가로축을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세로축의 좌측은 각 집단의 빈곤위험도(비율)를 나타내고, 우측은 빈곤

위험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앙의 점선으로 표시된 45도 선을 기준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두 개의 선이 중위 50% 및 60% 기준 빈곤율의 로렌츠곡선이다. 이 그림을 설명하면, 빈곤위험은 하위소득 20분위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22~40분위 집단에서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나. 실업

프랑스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실업률이 높은 사회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아래 <표 10-7>은 OECD 데이터를 활용해 2010~2019년 <성별·연령집단별> 실업자 비율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프랑스에서 가장 실업경험이 높았던 집단은 20세~29세 청년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연령이라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4세 남성의 실업률이 14.8%라면, 여성의 실업률은 11.9%로 나타났다.

<표 10-7>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및 고용률(2010~2019년의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률	
	남성	여성
15 ~ 19세	5.0	3.9
20 ~ 24세	14.8	11.9
25 ~ 29세	12.1	10.4
30 ~ 34세	8.9	8.1
35 ~ 39세	7.5	7.2
40 ~ 44세	6.9	6.6
45 ~ 49세	6.4	6.2
50 ~ 54세	5.6	5.2
55 ~ 59세	5.5	4.3
60 ~ 64세	1.9	1.4
65세 이상	0.1	0.04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위의 <표 10-7>의 비율을 LIS의 2019년 기준 데이터의 해당 집단에 할당하고, 이를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집단별 실업위험도와 그 점유율로

나타낸 것이 아래 <표 10-8>이다. <표 10-8>은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집단별로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인 가구의 비율은 소득하위 4분위~6분위에서 1.5~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득최상위 10분위에서 0.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 단위의 실업 위험이 다양한 집단에 분포하고 있어,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10-8>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4	11.2(11.2)
2	0.9	7.4(18.6)
3	1.3	10.6(29.2)
4	1.5	11.7(40.8)
5	1.5	12.2(53.1)
6	1.6	12.6(65.7)
7	1.3	10.7(76.4)
8	1.1	9.0(85.4)
9	1.0	7.9(93.3)
10분위	0.8	6.7(100.0)
전체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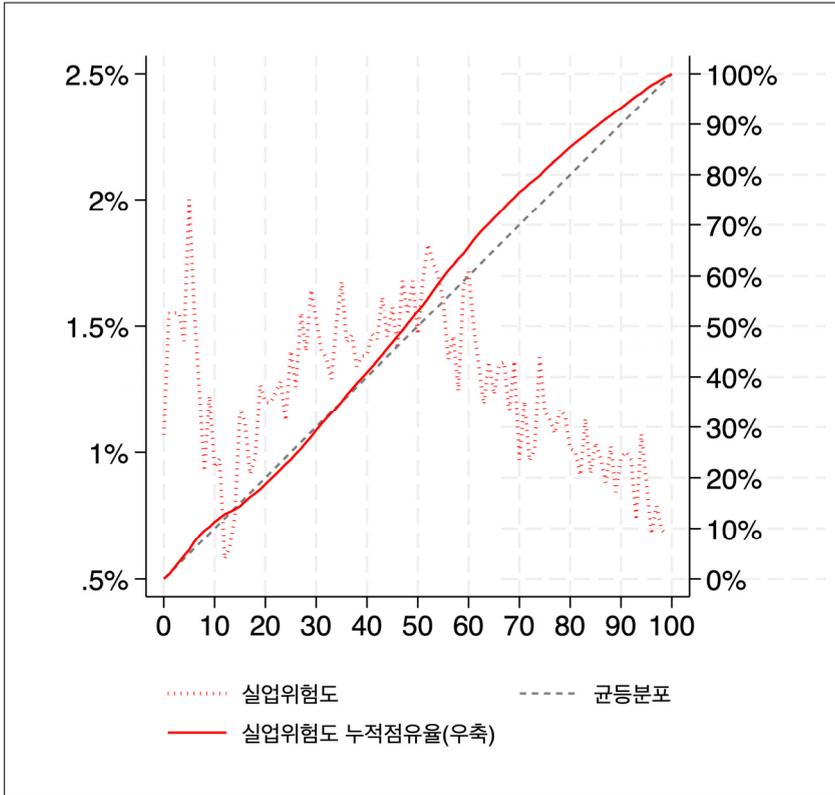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0-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아래 [그림 10-5]는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의 분위별로 모든 가구원이 실업에 처할 위험도와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표 10-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위별 위험도는 소득하위 5분위가 가장 높고, 이후 급감하다 다시 증가하여 50분위에서 절정에 달한 뒤,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험도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내는 로렌즈곡선 또한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0-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다. 미취업 위험

특정 가구의 빈곤위험은 가구원의 취업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을 추출하고, 이를 2009년~2018년 데이터의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할당하여 미취업자 수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빈곤위험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10-9>는 성별, 연령별 미취업 고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은 65세 이상 집단이 가장 낮고, 15~19세 집단이 다음으로 낮으며, 60~64세 집단 순이다. 이는 해당 집단에서 미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9>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15 ~ 19세	7.7	12.3
20 ~ 24세	45.0	51.1
25 ~ 29세	69.9	79.5
30 ~ 34세	72.6	85.3
35 ~ 39세	76.1	87.2
40 ~ 44세	78.7	87.6
45 ~ 49세	79.1	86.7
50 ~ 54세	75.8	84.6
55 ~ 59세	63.5	70.3
60 ~ 64세	23.3	24.9
65세 이상	1.7	3.1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위의 고용률을 토대로 미취업자 비율을 추정한 뒤, 2019년 시장소득 10분위별로 2009년~2018년 가구단위에서 모든 가구원이 미취업자인 가구의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아래 <표 10-10>을 보면, 소득하위 2분위에서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득하위 1분위가 66.4%로 나타나고, 소득하위 3분위에서 46.2%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빈곤층의 존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소득 기준 하위 1~3분위에 노인가구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10>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 (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66.4	23.8(23.8)
2	71.7	25.6(49.4)
3	46.2	16.5(65.9)
4	22.9	8.2(74.1)
5	16.8	6.0(80.1)
6	13.3	4.7(84.9)
7	11.0	3.9(88.8)
8	9.6	3.5(92.3)
9	9.7	3.5(95.7)
10분위	11.9	4.3(100.0)
전체	28.0	100.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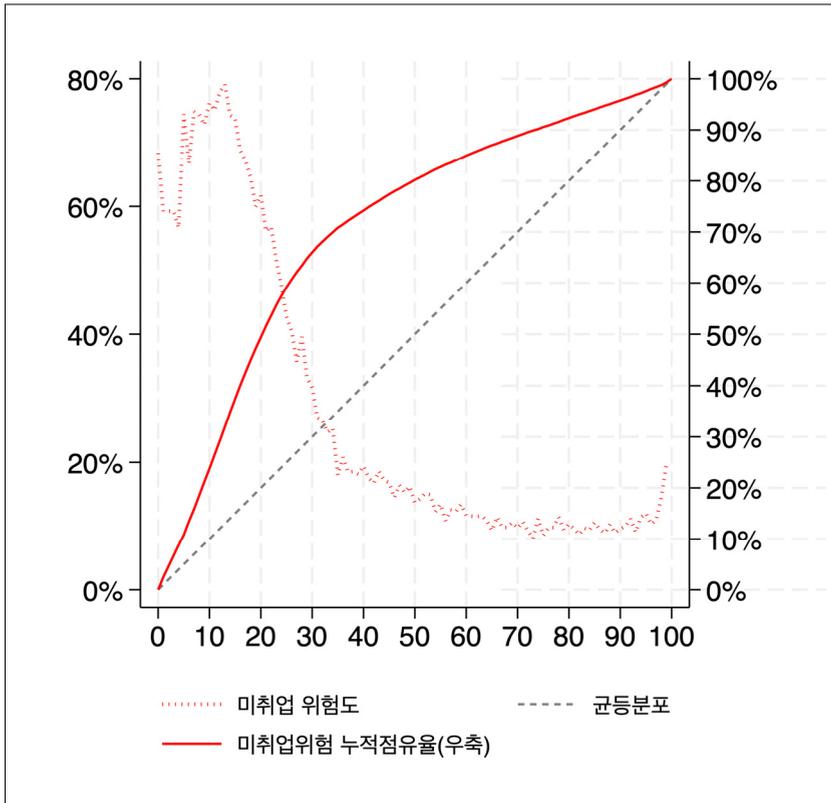
2) <표 10-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6]은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미취업 위험도와 그 누적 점유율(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미취업자 비율이 소득하위 1~30분위 집단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득

하위 40분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소득하위 30분위 집단의 위험도 누적점유율이 65.9%에 이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0-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라. 불완전 고용 위험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저임금노동이나 불완전고용보다 고실업과 장기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불완전 고용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 지표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불완전 고용의 위험도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10-11>은 2009년~2018년 성별·연령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25세~54세 여성이 7.6%로 가장 높고, 55세~64세 여성이 5.1%, 15세~24세 집단이 4.7%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 노동에 대한 선호가 돌봄이나 가사 등을 이유로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지만,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10-11>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24세	2.1	4.7
25~54세	2.1	7.6
55~64세	1.3	5.1
65세 이상	0.1	0.1

주: 각 집단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출처: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OECD, 각연도, 2025. 6. 11.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아래 <표 10-12>는 2019년 시장소득 10분위 집단을 구한 뒤, 2009년~2018년 소득분위별 가구 내 근로연령대 가구원 모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인 가구 비율의 평균값을 불완전 고용 위험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하위소득 1분위 집단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 하위 1~7분위에서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계층일수록 가구원 모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될 위험이 다소 큰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는 크다고 말하기 힘들다. <표 10-12>의 위험도 누적 점유율이 이를 말해준다.

<표 10-12> 소득분위별 불완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불완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0	13.6(13.6)
2	0.7	9.1(22.7)
3	0.8	11.4(34.1)
4	0.9	12.0(46.2)
5	0.8	11.6(57.7)
6	0.9	11.9(69.6)
7	0.7	9.3(78.9)
8	0.6	8.1(87.0)
9	0.5	7.1(94.0)
10분위	0.4	6.0(100.0)
전체	0.7	100.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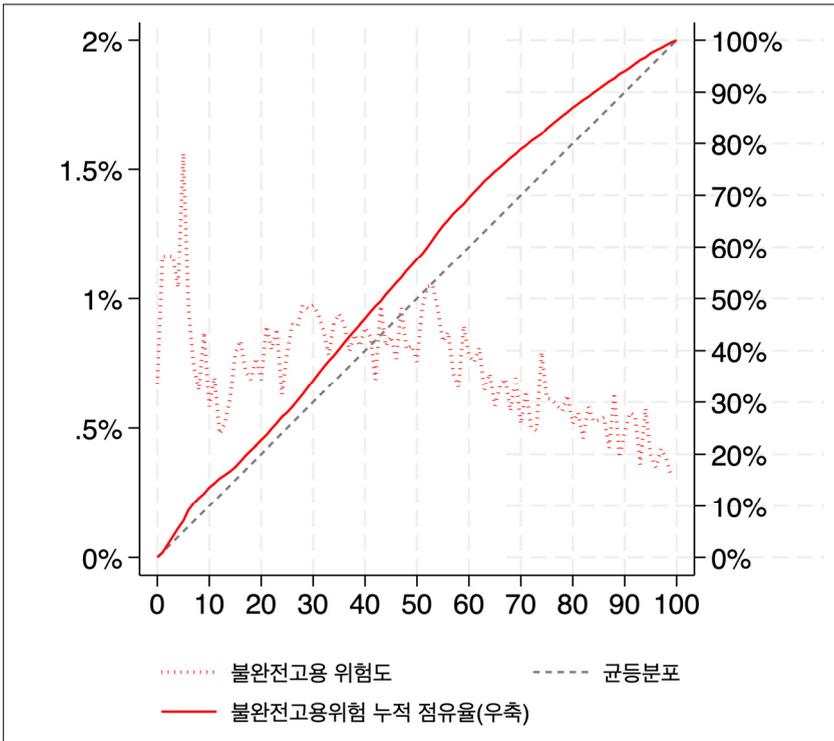
2) <표 10-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7]은 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려준 것이다.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구의 비율은 소득하위 10분위에 다소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집중도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는 그 위험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전제할 때,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도 그 비율은 일정 정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10-7] 불안전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마. 건강 위험

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주관적으로' 응답할 확률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인구고령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프랑스 또한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 건강보장정책이나 지출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인식이 어떻게 소득계층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하게, 외부 데이터를 토대로 프랑스 국민들의 성별, 연령대별 건강 상태에 대한 응답률을 산출한 뒤, 이를 2009년~2018년 데이터의 동일 집단에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10-13>은 외부 데이터에서 추출한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단위의 성별·연령대별 응답률이다. 이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 집단에서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는 응답률이 남성 18.39%, 여성 19.6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3>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6~24세	1.5	1.7
25~34세	2.4	2.7
35~44세	3.8	5.1
45~54세	7.0	8.3
55~64세	9.5	10.7
65세 이상	18.4	19.7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Self-perceived health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Eurostata, 각 연도. 2025.5.18. 검색,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02_custom_16749729/default/table?lang=en

아래 <표 10-14>는 시장소득 10분위별로 2009~2018년 가구원 모두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의 평균값을 건강위험도로 나타

내고, 그 점유율을 덧붙인 것이다. 분석결과는 소득하위 1분위의 건강 위험도가 7.5%로 가장 높고, 2분위가 7.0%, 3분위가 4.2%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점유율을 보면, 소득 하위 3분위 집단의 누적점유율이 66.9%로 하위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위험도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것은 저소득층의 건강위험도를 일부 반영하지만,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14〉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7.5	26.8(26.8)
2	7.0	25.2(51.9)
3	4.2	14.9(66.9)
4	2.0	7.2(74.1)
5	1.5	5.5(79.6)
6	1.3	4.8(84.4)
7	1.1	4.0(88.5)
8	1.0	3.7(92.2)
9	1.0	3.6(95.8)
10분위	1.2	4.2(100.0)
전체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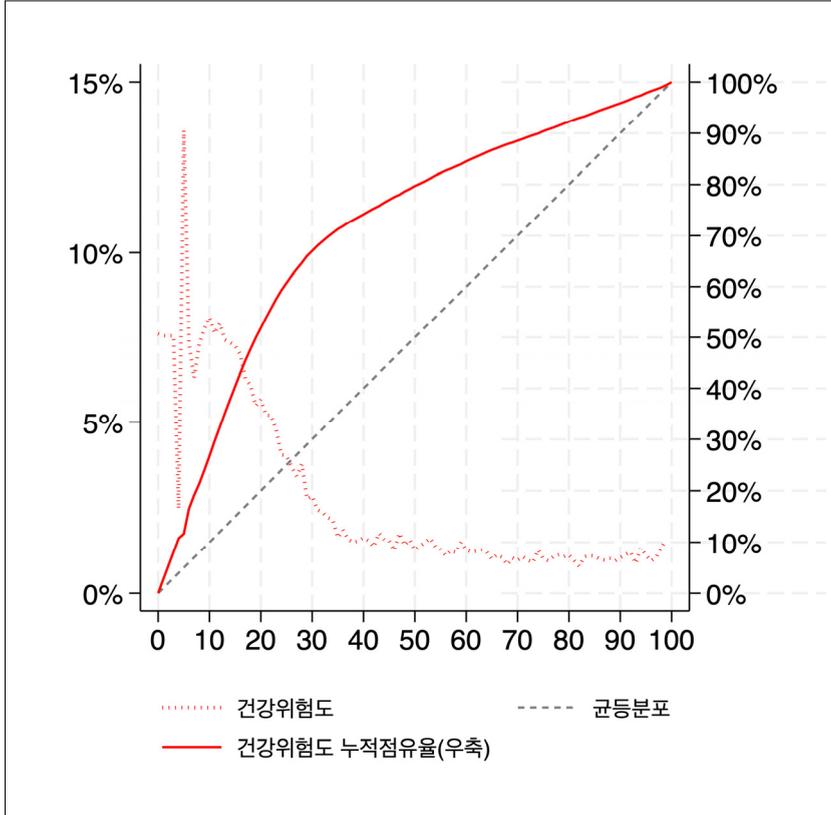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0-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10~2019,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09~2018년).

아래 [그림 10-8]은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건강 위험도와 그 위험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건강위험의 로렌즈곡선은 소득하위 30%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바. 돌봄 위험

인구고령화로 프랑스 사회에서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돌봄에 따른 제약과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구유형이나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 특히 돌봄 정책이 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분석은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소득계층별로 돌봄위험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10-15>는 가구 내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돌봄 수요는 아동 유무, 노인 유무, 장애인 유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노인가구는 노령이라는 연령기준 외에도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돌봄위험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인단독가구(1)는 79.4%가 돌봄이 필요하고, 노인 2인 이상 가구(2)의 경우도 가구원의 71.3%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도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연령가구의 경우에도 50~60%의 가구원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15>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0~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79.4
2. 노인만 2인 이상	71.3
3. 근로연령 단독	46.1
4. 근로연령만 2인	45.5
5. 노인+ 근로연령	49.6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62.2
7. 근로연령2+아동	61.8
8. 근로연령3인 이상+ 아동있음(노인 무관)	51.9
9. 기타	60.3
전체	58.7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10~2019,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09~2018년).

그렇다면 가구유형에 따라 돌봄수요 또는 돌봄위험이 다르게 분포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소득계층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0-16>은 소득 10분위 집단별로 돌봄 위험도와 위험의 점유율(그리고 누적점유율)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준다. 소득하위 2분위 집단이 65.8%, 소득하위 1분위 집단이 64.5%의 돌봄 위험도를 갖는다. 하지만 점유율과 누적점유율을 보면, 그것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전 소득계층에 고르게 분포하는 위험임을 말해준다.

<표 10-16>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돌봄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64.5	11.1(11.1)
2	65.8	11.4(22.5)
3	60.7	10.5(33)
4	57.7	10(43)
5	56.6	9.8(52.7)
6	55.7	9.6(62.3)
7	55.4	9.6(71.9)
8	54.9	9.5(81.4)
9	53.9	9.3(90.7)
10분위	53.9	9.3(100)
전체	57.9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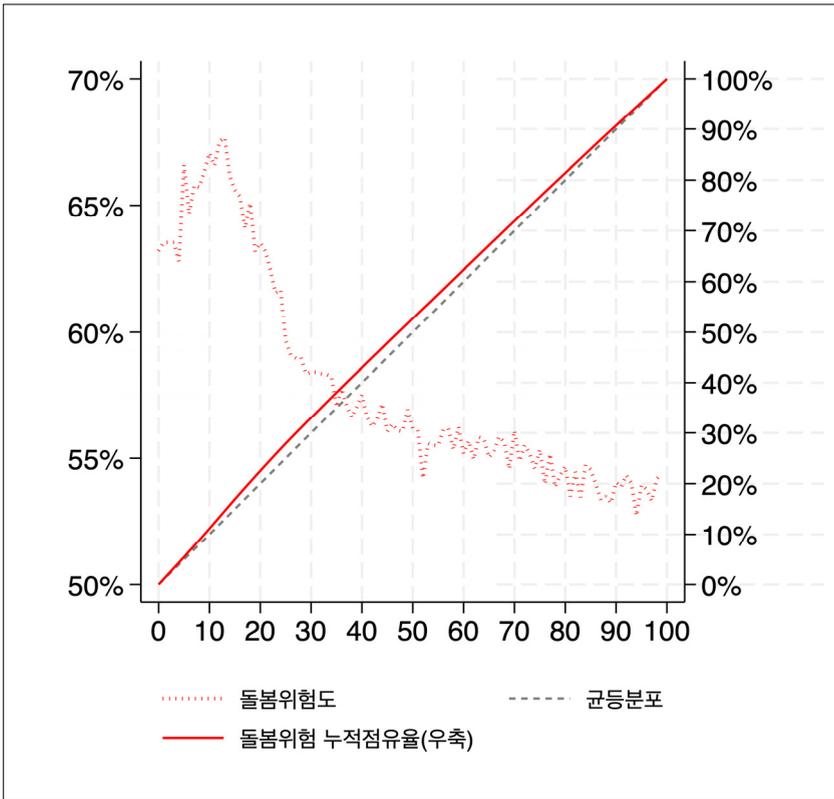
2) <표 10-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9]는 <표 10-16>에 나타난 결과를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 위험도와 그 위험의 누적 점유율로 나타낸 것이다. 당연히 그

위험은 소득하위집단에 다소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 10분위 집단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0-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사.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고립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빈곤과 박탈상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는 사회적 지지 기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그림 10-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부재> (lack of social support)를 주관적 응답으로 측정하는 경우, 사회분위기에 따라 다소 큰 등락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지속성을 갖는 사회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갤럽 등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표 10-17>은 아무런 사회적 지지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7>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결여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6.6	6.1
30 ~ 49세	8.3	7.8
50세 이상	10.2	9.7

출처: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아래 <표 10-18>은 위의 사회적 지지 결여를 2009년~2018년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 지지 결여 응답의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1분위에서 위험도가 6.5%로 높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집단에서 소득분위별로 유의미한 집중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위험의 점유율과 누적점유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소득하위 5분위의 누적점유율이 49.9%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표 10-18〉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6.5	12.5(12.5)
2	4.9	9.5(22.0)
3	4.7	9.1(31.1)
4	4.6	8.9(40.0)
5	5.1	9.9(49.9)
6	5.0	9.7(59.5)
7	5.3	10.2(69.7)
8	5.4	10.4(80.1)
9	5.1	9.8(90.0)
10분위	5.2	10.0(100.0)
전체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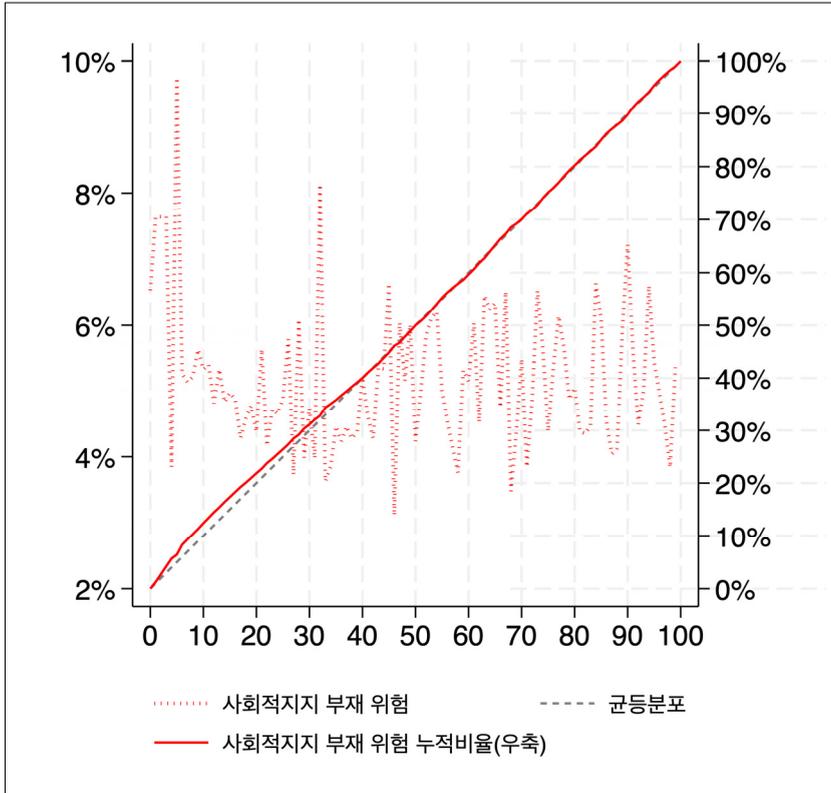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0-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10]은 〈표 10-18〉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 위험도와 그 위험의 누적 점유율, 즉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앙에 등락이 심한 소득분위별 위험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위험이 소득하위 1분위 외에 다른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며, 전체 소득계층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45도 선에 거의 붙어 있는 로렌츠곡선은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림 10-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0-1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3. 순수혜의 분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앞서 언급한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사회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 수혜(공적이전소득)에서 총 부담(조세+사회보험료)을 뺀 값을 순수혜로 표현하였다. 이를 소득 분위별 순수혜와 누적 순수혜 점유율, 즉 로렌츠곡선으로 시각화하면, 프랑스 사회가 경제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총 수혜에서 총 부담을 뺀 순수혜가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의 제도적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조사데이터의 경우, 표본규모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사항목이 일관성과 정확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부담과 수혜의 관계에서 해석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조사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행정데이터를 통한 보정이나 일정한 가정을 적용한 일괄 보정 등의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다(Guillaud et al., 2017.07; Sterdyniak, H., 2013.12.23).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구데이터 자체가 부담과 수혜 중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구데이터는 해당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반영할 수 있지만,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 규모가 큰 경우라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뒤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아래 <표 10-19>는 LIS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프랑스의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로 시장소득과 부담(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그리고

수혜(공적이전소득)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수혜는 소득하위 1~3분위 집단이 가장 크고, 이후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해, 조세부담은 1~3분위가 낮게 나타나지만, 4분위의 조세 부담이 2~3분위보다 낮은 특이점을 보였다. 사회보험료는 시장소득 분위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 평균 금액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스웨덴 등의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소득하위 1~3분위의 사회보험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한 부담을 보면, 시장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총 부담이 점증적으로 상승하는 매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표 10-19〉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Euro)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기여	부담
1	-315	18,586	1,307	25	1,332
2	733	22,081	2,103	30	2,133
3	4,826	17,306	2,122	374	2,496
4	11,400	10,505	1,884	1,065	2,950
5	17,444	7,579	2,288	1,682	3,970
6	23,239	5,107	2,707	2,303	5,010
7	28,987	3,697	3,384	2,936	6,320
8	35,431	3,014	4,486	3,598	8,084
9	45,386	2,720	6,830	4,649	11,479
10	87,144	3,163	19,392	8,223	27,615
전체	25,427	9,376	4,650	2,489	7,139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순수혜1= 수혜-부담, 순수혜2는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1을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한 값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0-20〉은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과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하위 1~4분위 소득계층에게 공적

이전소득의 7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분배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정반대의 특징을 보인다. 하위 소득분위 1~7분위 집단의 조세 부담 점유율은 34.0%, 사회보험료 부담 점유율은 33.8%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이나 사회보험료 감면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 부담을 보더라도, 하위소득 1~7분위 집단의 부담 누적점유율이 33.9%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20〉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단위: E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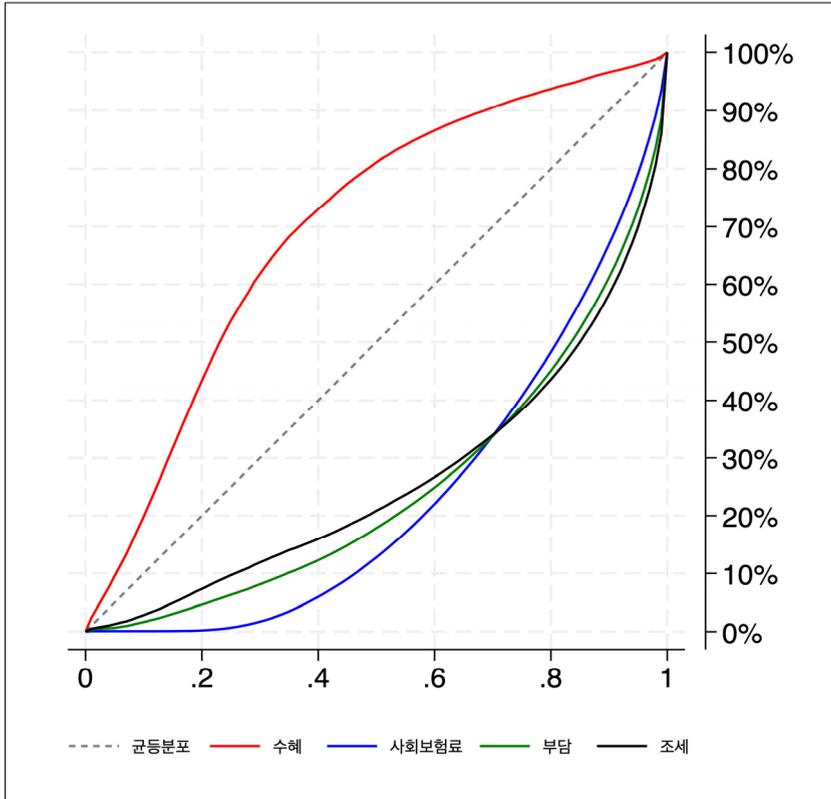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19.8(19.8)	2.8(2.8)	0.1(0.1)	1.9(1.9)
2	23.6(43.4)	4.5(7.3)	0.1(0.2)	3.0(4.9)
3	18.5(61.8)	4.6(11.9)	1.5(1.7)	3.5(8.3)
4	11.2(73.0)	4.1(15.9)	4.3(6.0)	4.1(12.5)
5	8.1(81.1)	4.9(20.9)	6.8(12.8)	5.6(18.0)
6	5.4(86.6)	5.8(26.7)	9.3(22.0)	7.0(25.1)
7	3.9(90.5)	7.3(34.0)	11.8(33.8)	8.9(33.9)
8	3.2(93.7)	9.6(43.6)	14.5(48.3)	11.3(45.2)
9	2.9(96.6)	14.7(58.3)	18.7(67.0)	16.1(61.3)
10분위	3.4(100.0)	41.7(100.0)	33.0(100.0)	38.7(100.0)

주: 괄호는 누적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11]은 〈표 10-20〉에 나타난 수혜와 부담의 누적점유율을 로렌츠 곡선으로 그린 것이다. 수혜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고, 부담은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는 일반적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부담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위소득계층의 사회보험부담률이 낮다는 점과 조세는 상위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수혜/부담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0-21>은 총 수혜에서 총 부담을 뺀 순수혜의 평균값과 점유율을 두 가지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순수혜를 계산한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음수를 0으로 대체한 모델이다. 이를 보면, 하위소득 1~6분위는 순수혜가 양의 값이며, 7분위부터 음의 값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음수를 0으로 대체하면, 모든 값이 양으로 전환되지만, 이는 분석결과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표 10-21〉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2019년)

(단위: Eur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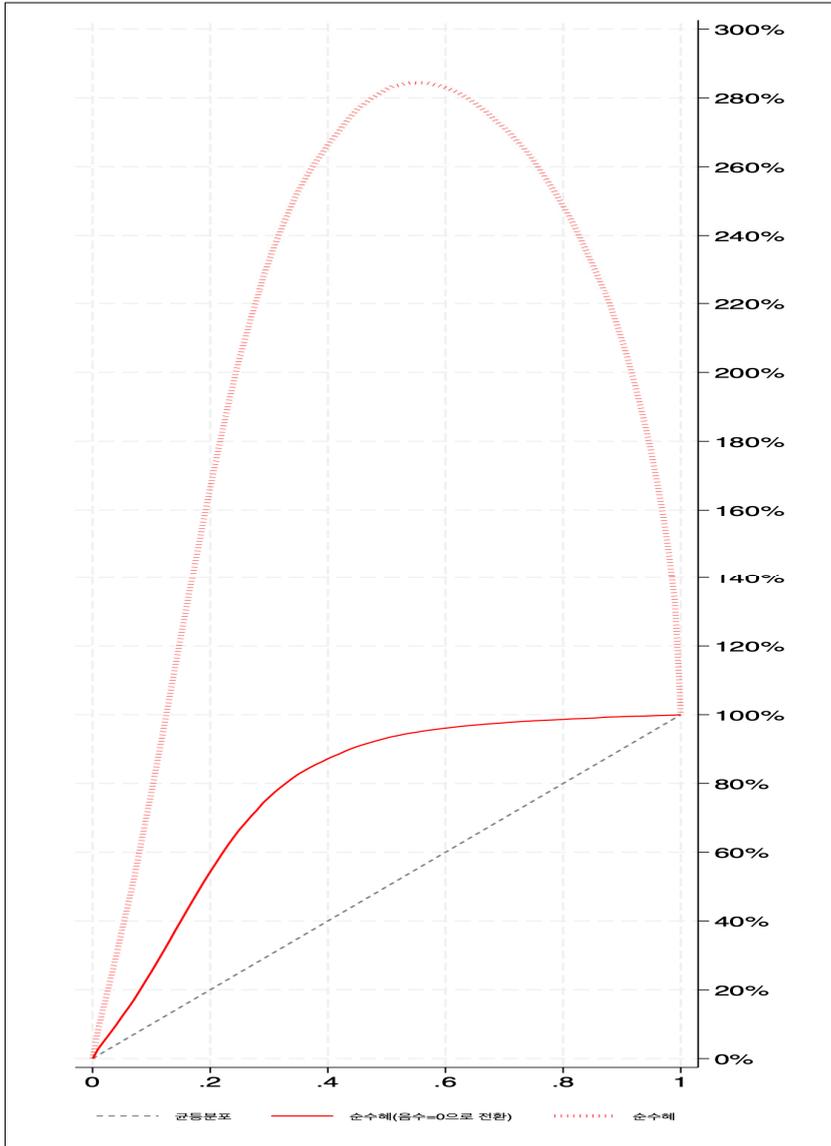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대체)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17,254	77.1(77.1)	17,302	25.2(25.2)
2	19,948	89.2(166.3)	19,979	29.1(54.3)
3	14,811	66.2(232.5)	14,894	21.7(76.0)
4	7,556	33.8(266.3)	7,720	11.2(87.2)
5	3,608	16.1(282.4)	4,141	6.0(93.2)
6	97	0.4(282.9)	1,964	2.9(96.1)
7	-2,623	-11.7(271.1)	1,081	1.6(97.7)
8	-5,070	-22.7(248.5)	658	1.0(98.6)
9	-8,760	-39.2(209.3)	569	0.8(99.4)
10분위	-24,452	-109.3(100.0)	378	0.6(100.0)
전체	2,237		6,868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위의 〈표 10-21〉의 순수혜 평균값을 보면, 프랑스의 순수혜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방향으로⁵⁵⁾ 높게 솟은 모양으로 그려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강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결과가 아래 [그림 10-12]이다.

55) 이것이 데이터의 문제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이 노동자의 두 배에 가까우며, 그것이 가구데이터의 부담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소득계층의 순수혜가 양의 값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그림 10-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수혜/부담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제3절 소결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 조세제도나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근 도입된 사회보장세(CSG)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수입구조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는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위 집단 중 하위 소득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높은 노인인구 비중과 높은 보장수준이 만들어낸 특징에 가깝다. 물론 근로연령대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공부조의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이는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연대주의적 사회보장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어쩌면 이 점이 프랑스가 정부가 지난 20~30년간 근로연령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진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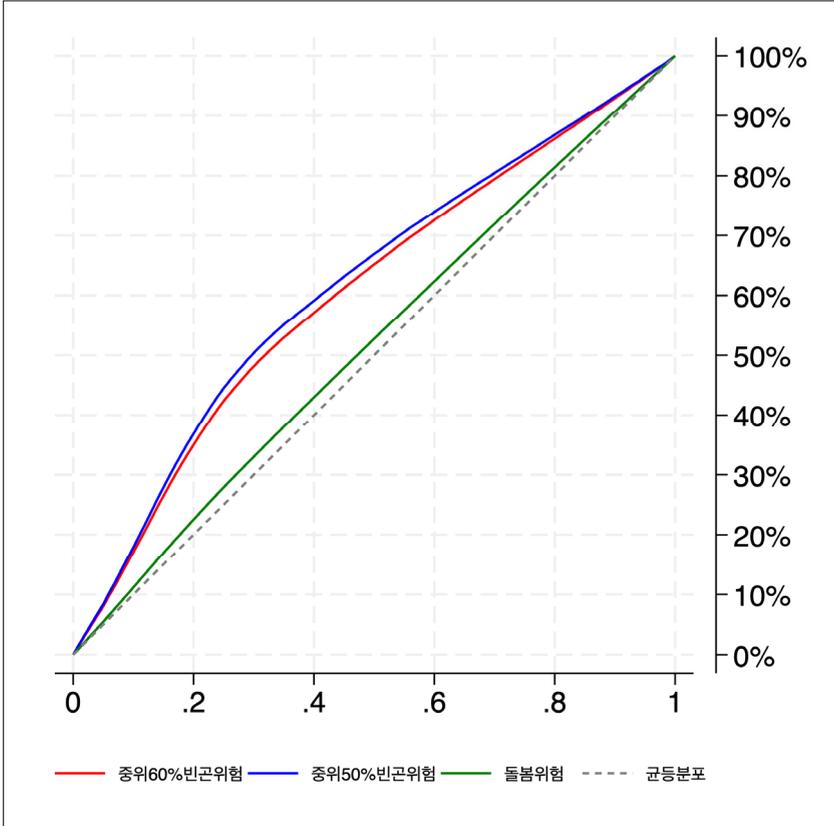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앞의 분석결과들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계층별 집중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위험의 집중도를 살펴보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주로 어떤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전체 소득계층에 고르게 분포하는지 알 수 있었다.

위험의 계측과 그 집중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위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가구단위로 측정된 위험, 예를 들면 빈곤위험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단위로 측정된 위험, 예를 들면, 실업 등 고용 관련 위험이나 사회적 지지의 위험, 건강위험 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위험을 산출하는 방법이나 그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앞의 이론적 검토 및 한국사례에 대한 분석 장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아래 [그림 10-13]은 가구단위의 위험으로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빈곤 위험이 돌봄 위험에 비해 좀 더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분위에서 저소득층에 노인가구 등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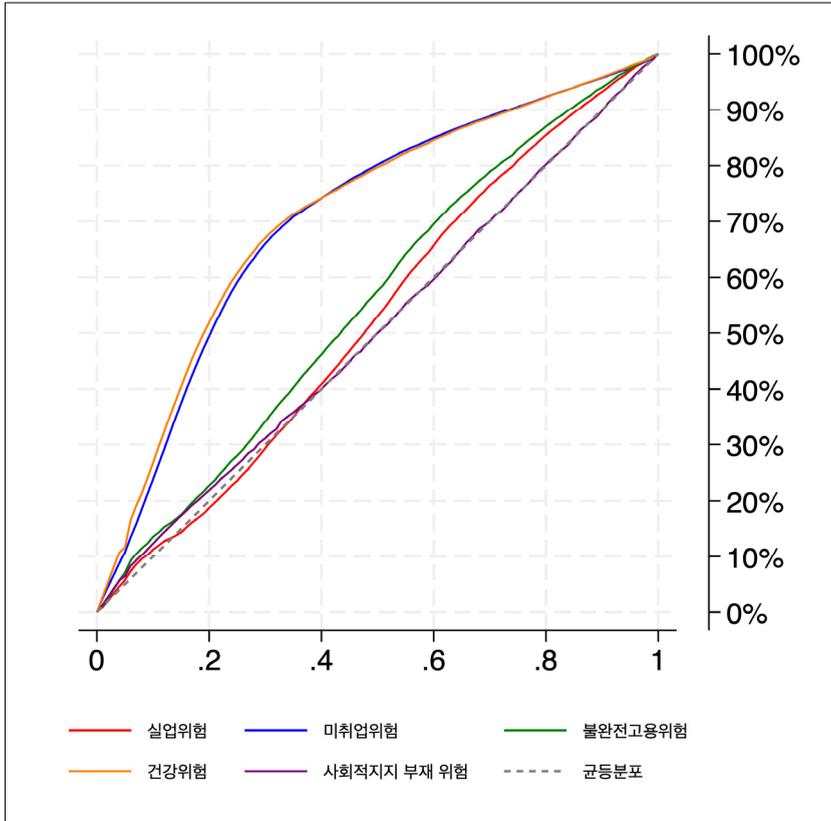
[그림 10-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0-14]는 개인 단위 위험들을 각 로렌츠곡선의 한 그림에 넣어 비교한 것이다. [그림 10-14]에 따르면 위험의 집중도는 건강 위험과 미취업 위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나머지 위험, 즉 불완전 고용, 사회적 지지의 부재, 실업 위험 등은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의 위험별 집중도와 다소 상이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0-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0-22>는 가구단위 위험과 개인단위 위험을 구분하여, 각 위험별 집중지수와 위험별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위험의 집중지수는 위험도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험의 지니계수는 위험도를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10-22>에서 모든 위험의 집중 지수는 그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다. 즉 위험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수의 절댓값은

각 위험의 집중도 순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그림 10-14]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의 경제사회적 위험 중 소득계층별 집중도가 큰 것은 개인 단위 위험 중 건강위험(-0.424)과 미취업위험(-0.413) 순이다. 다음으로 집중도가 큰 것은 당연히 빈곤위험이다. 중위소득 50% 선과 60% 선을 기준으로 각각 -0.232와 -0.208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의 집중지수가 높다고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10-22>에서, 불완전고용 위험이나 실업 위험, 그리고 사회적지지 위험 등은 집중지수는 낮지만, 지니계수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별로 특정집단, 특히 저소득층 집중도는 낮지만 위험 자체는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격차는 가구단위 위험보다 개인 단위 위험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22>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232	0.380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208	0.338
	돌봄위험	-0.038	0.096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413	0.625
	실업 위험	-0.048	0.802
	불완전 고용 위험	-0.108	0.844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013	0.776
	건강 위험	-0.424	0.765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앞서 위험의 집중도를 비교했다면, 이제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 <표 10-23>은 위의 <표 10-22>와 마찬가지로 순수혜 도출에 활용되었던 항목들의 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수혜나 순수혜의 집중지수는 음수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양수로 나타난다.

<표 10-23>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396	0.610
부담	조세	0.475	0.602
	사회보험료	0.526	0.551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492	0.550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3.229	3.751
	순수혜(음수 → 0으로 전환)	-0.560	0.705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이상의 논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제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 비교에 많은 이론적 제약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 11 장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스웨덴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

제3절 소결

제 11 장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제1절 스웨덴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 복지국가의 요람이었던 유럽에서부터 강하게 닥쳐오고 있다. 물론 많은 서구국가에서 국민들은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보장혜택이 이민자들에게 부당한 편익을 주는 문제라고 해석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이미 연대주의라는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서구 복지국가에서 스웨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강력한 연대임금제와 높은 사회지출, 높은 재분배 성과 및 삶의 질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최상위권 국가의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의 정치상황이나 주요 복지정책을 보면, 그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1990년대 복지개혁 이후에도 스웨덴이 여전히 그러한 평가를 받기에 적합한지 이견(異見)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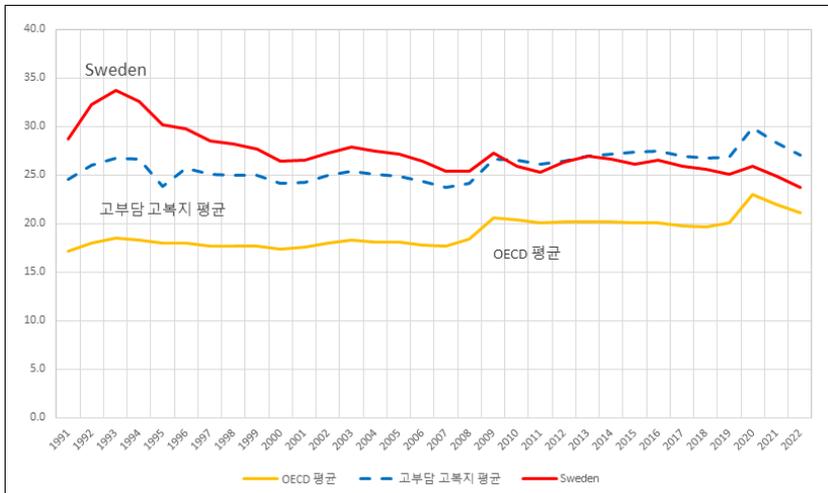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순수혜를 시장소득 10분위 및 100분위 집단별로 파악하고, 이를 로렌츠곡선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략과 사회지출 총량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 문제에 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기간에 중점을 두고 스웨덴의 사회지출과 국민부담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지출과 부담의 수준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며, 1993년 33.7%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강력한 복지개혁을 통해 사회지출 증가세를 관리해 왔다. 스웨덴의 2022~2023년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약 27.5%로, OECD 평균(약 21%)보다는 높으나, 고 부담-고복지 국가군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만을 본다면,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이 약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의 감소세는 단순히 복지축소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1) 경기회복에 따른 GDP 분모 효과, (2) 재정 긴축 및 제도개혁의 효과, (3) 복지지출 구조의 전환이 그것이다.

[그림 11-1]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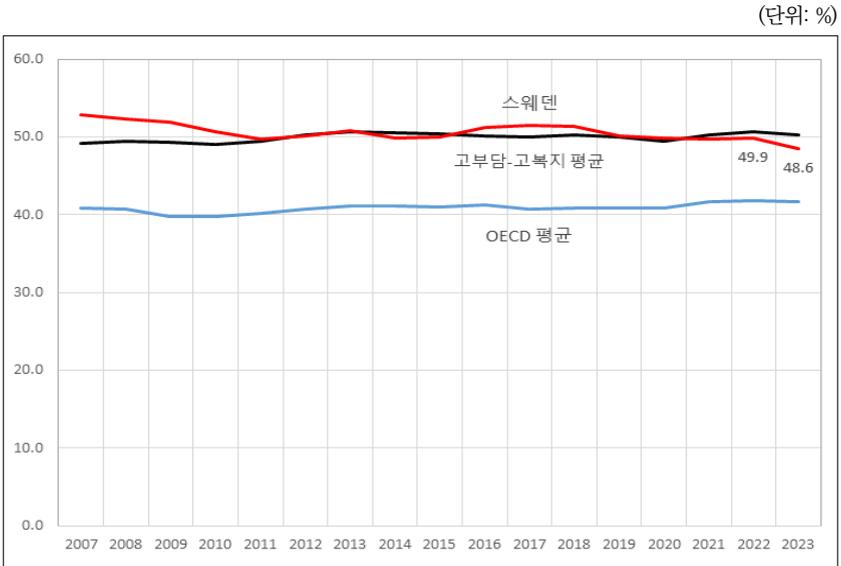
(단위: %)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에서 인출.

스웨덴은 1990년대 복지개혁을 통해 사회지출 수준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1-2]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2007년~2023년까지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의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그 수준이 다소 더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후의 추세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2] 스웨덴의 국민부담률 비교



출처: "Public finance main indicators: government at a glance, 2025 edition, General government revenues," OECD, 2025f.

스웨덴의 사회지출이 감소 또는 관리되어 왔다면, 구체적으로 각 정책 영역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아래 <표 11-1>은 OECD Socx를 구성하는 9개 기능을 중심으로 1980년~2020년까지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11-1〉 스웨덴과 OECD의 공적사회지출의 분야별 배분의 변화

(단위: GDP의 %)

Sweden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노동	실업	주거	기타	전체
1980	7.2	0.6	4.5	7.1	3.5		0.3	1.0	0.4	24.5
1985	7.7	0.6	4.2	6.5	3.7	1.9	0.8	0.6	0.6	26.6
1990	8.0	0.6	5.2	5.7	4.0	1.5	0.8	0.6	0.5	26.9
1995	9.3	0.7	4.7	5.7	3.6	2.1	2.2	1.0	0.9	30.2
2000	8.3	0.6	4.9	5.7	2.8	1.6	1.3	0.6	0.6	26.4
2005	8.8	0.6	5.2	6.1	3.1	1.1	1.1	0.5	0.6	27.1
2010	8.9	0.5	4.1	6.3	3.4	1.1	0.6	0.4	0.7	25.8
2015	9.2	0.3	3.8	6.4	3.5	1.2	0.3	0.4	0.9	26.1
2020	9.1	0.2	3.4	6.6	3.4	1.0	0.3	0.4	0.7	25.1

OECD 평균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노동	실업	주거	기타	전체
1980	4.9	0.9	2.0	4.1	1.5	0.2	0.6	0.2	0.4	14.4
1985	5.4	0.9	2.1	4.1	1.4	0.4	1.0	0.3	0.4	15.9
1990	5.6	0.8	2.1	4.3	1.6	0.4	0.9	0.3	0.4	16.4
1995	6.2	0.8	2.2	4.5	1.7	0.5	1.1	0.3	0.5	18.0
2000	6.1	0.9	2.0	4.8	1.8	0.5	0.7	0.3	0.4	17.3
2005	6.2	0.9	2.0	5.2	1.8	0.5	0.7	0.3	0.5	18.1
2010	7.1	0.9	2.1	5.8	2.2	0.5	0.9	0.4	0.6	20.4
2015	7.4	0.9	2.0	5.7	2.1	0.5	0.7	0.3	0.5	20.1
2020	7.4	0.8	2.0	5.8	2.1	0.6	0.6	0.3	0.5	20.1

주: 셀의 수치는 public social expenditure이며, GDP의 퍼센트(%)

출처: "SOCX," OECD, 각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에서 인출.

〈표 11-1〉에서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령분야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1980년~2020년 동안 GDP의 7.2%에서 9.1%로 증가했다. 이어 같은 기간 건강보장 부문 지출은 7.1%에서 6.6%로 약 7% 감소했다. OECD 국가 평균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의 증가세와 차별화된 부분이다. 물론 건강보장정책의 성과 측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스웨덴의 건강정책 성과가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의료자원이나 대기기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 등 일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OECD, 2025).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타부문, 즉 빈곤정책 등 공공부조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부문에서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1차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힘든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Nelson & Fritzell, 2019). 위의 <표 11-1>에 나타난 것처럼, 공공부조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같은 기간 0.4%에서 0.7%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Berut et. al., 2024).

<표 11-2> 지급방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비중 비교(2022년)

(단위 :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

Zones	자산조사형 사회보장제도	비자산조사형 사회보장제도
북서유럽	12.9	87.1
남부유럽	9.0	91.0
동유럽	3.5	96.5
EU-27국	11.0	89.0
스웨덴	2.0	98.0
프랑스	11.0	89.0

출처: "La Protection sociale en Europe en 2023," Berut et. al., 2024.

그 밖에도 복지지출 축소와 같은 변화 또한 관측된다. 그것은 주거정책과 노동정책에서의 지출의 급격한 축소다. 같은 기간 주거부문 사회지출은 GDP의 1.0%에서 0.4%로 60%나 감소했으며, 노동부문은 1985년 1.9%에서 1.0%로 47.4%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스웨덴의 ALMP 정책이 공공 주도의 고용창출에서 훈련 중심 정책으로 재편된 결과이며(Forslund, 2019), 주거정책 또한 본래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사회주택 모델이 아니

었다는 점에서 복지축소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거문제가 사회갈등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ECD, 2025.6).

그리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사회보장재원에 대한 기여주체별 부담 정도 문제이다. 아래 <표 11-3>에 따르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지출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가(일반재정 및 기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으로는 고용주가 큰 부담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 보면, 스웨덴은 그것은 국가가 사회보장재원의 절반인 50%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38%를 부담하며, 노동자 개인은 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개인의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Berut et. al., 2024).

<표 11-3> 기여주체별 사회보장재원의 구성분포(2022년)

(단위 :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

Zones	고용주	근로자	국가	기타
북서유럽	30.7	18.9	46.1	4.2
남부유럽	29.5	16.7	50.0	4.0
동유럽	35.5	28.3	34.8	1.7
기 타	31.3	19.0	46.3	3.3
EU-27국	35.0	21.0	41.0	3.0
스웨덴	38.0	9.0	50.0	2.0
프랑스	37.0	16.0	44.0	3.0

출처: “La Protection sociale en Europe en 2023,” Berut et. al., 2024.

2. 사회적 위험의 수준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스웨덴에서 인구고령화는 사회보장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미래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로 매우 높지만, 2070년에도 24%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Norlin & Linnea, 2023.12. 1). 이어 스웨덴은 동남부를 중심으로 인구와 고용 등 각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광대한 지역은 고용률, 빈곤율, 임금수준, 의료격차, 주택가격 등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Andersson et al., 2021: 14).

그렇다면 이제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을 다음 네 가지 사회지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스웨덴의 위험 정도와 추이를 다른 국가들, 특히 고부담-고복지 국가 및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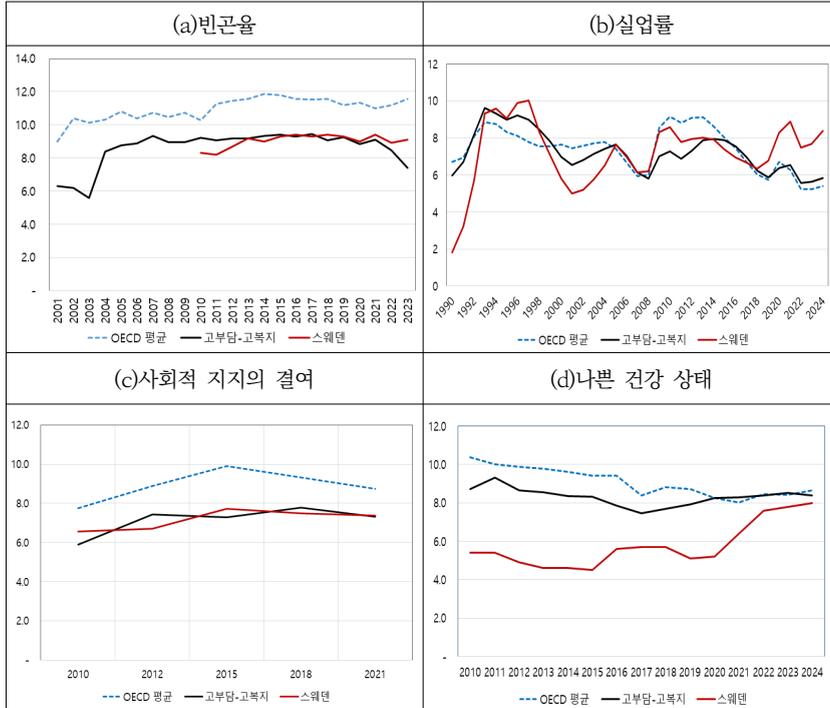
먼저 스웨덴의 빈곤율은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보다 크게 낮고,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의 빈곤율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빈곤문제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근로연령층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Poverty rate)은 2024년 10.9%로, 전체 빈곤율 15%보다 크게 낮다.

이어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른 국가들의 실업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이나 다른 고부담-고복지 국가들보다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16세 이상 인구 중 <사회적 지지의 결여>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을 보면, 시계열 내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의 평균에 근접한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3]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비교

(단위: %)



- 출처: 1)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OECD data-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인출.
 2) 실업률은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에서 인출.
 3)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OECD data-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인출.
 4) 나쁜 건강상태는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10_custom_18444746/default/table에서 인출.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 소득계층별 가구 유형 및 인구 특성 분포

여기서는 LI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2009년~2018년 기준 스웨덴 가구 및 개인데이터(2010년~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사회적 위험을 규정하고, 이를 2019년 가구데이터에서 시장소득 10분위 및 100분위 집단별로 비교한다.

경제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기에 앞서, 2009년~2019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연도별로 가구유형의 분포를 산출하였다. 아래 <표 11-4>는 9개 가구유형별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노인가구(1과 2)와 근로연령층 2인 이상 가구(4) 비중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1-4> 가구 유형별 인구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가구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노인 단독	7.87	7.77	8.05	7.31	7.66	7.76	7.73	7.78	8.37	8.26
2.노인만 2인이상	8.13	8.59	8.89	9.91	9.81	9.93	9.79	9.73	9.42	9.57
3.근로연령 단독	16.91	16.57	16.57	13.14	12.80	12.78	12.33	12.91	15.00	13.91
4.근로연령만 2인	12.73	12.23	11.61	16.48	16.01	15.76	15.71	15.12	13.95	14.63
5.노인+근로연령	10.55	10.48	10.67	9.51	9.30	9.41	9.58	9.50	8.53	8.93
6.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6.13	5.66	5.81	5.12	5.87	5.71	5.52	6.09	6.67	6.40
7.근로연령2+아동	31.19	31.85	31.80	32.18	31.73	32.60	33.13	32.31	32.19	31.92
8.근로연령 3인 이 상 + 아동(노인 무관)	6.30	6.59	6.49	5.97	6.49	5.49	5.72	6.05	5.40	5.94
9. 기타	0.19	0.27	0.13	0.39	0.34	0.57	0.49	0.51	0.47	0.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아래 <표 11-5>는 2019년 현재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로 가구유형 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은 근로연령층 단독가구 비중이 49.0%, 노인 단독가구가 20.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소득하위 2분위 계층에서는 노인 단독가구가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지는 3분위 계층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2인 가구 비중이 각각 37.4%와 2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근로연령층 부부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5>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비(2019년)

(단위: %)

분위 가구유형	1	2	3	4	5	6	7	8	9	10분위
1.노인 단독	20.5	59.8	37.4	18.6	9.0	4.2	2.5	2.4	3.1	2.3
2.노인만 2인이상	3.6	15.8	29.7	22.1	10.8	5.9	3.7	3.0	2.9	2.7
3. 근로연령 단독	49.0	14.4	17.7	24.5	24.7	37.3	43.8	38.0	23.9	18.9
4. 근로연령만 2인	4.6	2.2	4.8	6.4	10.8	12.2	11.2	19.1	31.3	40.1
5. 노인+ 근로연령	3.1	2.0	3.1	5.5	7.2	7.7	7.7	8.8	9.8	10.3
6.노인+아동 또는 근로연령1+아동	5.2	2.7	2.1	6.5	13.0	8.2	2.8	2.5	1.6	1.4
7.근로연령2+아동	10.3	1.6	4.2	14.3	21.9	22.1	24.9	22.9	23.3	19.8
8.근로연령 3인 이 상 + 아동(노인 무관)	1.8	0.9	0.9	1.9	2.3	2.4	3.3	3.3	3.9	4.4
9. 기타	2.0	0.6	0.1	0.2	0.4	0.1	0.2	0.0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 기준 10분위집단.

2) 개인가중치로 가중화된 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소득 10분위 계층의 각 분위에서 성별 분포를 보면, 하위 1~4분위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고, 6분위 이상부터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하위소득 1분위에서는 18~64세 근로연령층이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하위 2~3분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각각 69.8%와 62.5%로 나타났다. 참고로 <표 11-6>의 소득분위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생성되어, 높은 연금을 받는 노인도 하위 소득분위에 속할 수 있다.

<표 11-6> 가구소득 분위별 성, 연령대 구성비(2019년)

(단위: %)

소득 분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이상
1	48.6	51.4	23.3	58.3	18.5
2	40.8	59.2	7.9	22.4	69.8
3	46.4	53.6	9.1	28.5	62.5
4	48.0	52.0	22.1	43.9	34.0
5	50.0	50.0	29.0	55.1	15.9
6	51.9	48.1	26.7	63.3	10.0
7	53.2	46.8	25.7	67.4	6.8
8	53.3	46.8	22.5	71.4	6.1
9	53.3	46.7	20.6	73.9	5.6
10	52.2	47.8	18.7	76.4	4.9
전체	50.3	49.7	21.3	58.6	20.1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 기준 10분위집단.

2) 개인가중치로 가중화된 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 사회적 위험의 소득 계층별 분포

여기서는 사회적위험을 1)빈곤, 2)실업, 3)미취업, 4)비정규고용, 5)건강 위험, 6)돌봄부담, 7)사회적 지지망 취약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소득기준으로 각 집단이 어느 소득분위에 위치하는지 살펴본다. 전체 보고서 차원의 기술의 통일성을 위해 가구유형별, 소득분위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낸다.

가. 빈곤 위험의 분포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 중 가구유형별 빈곤위험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11-7>은 가구유형별로 2009년~2018년까지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다. 이는 어떤 집단에서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면, 노인 단독가구(1)의 평균 빈곤율은 81.3%, 노인 2인가구(2)는 66.6%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가구(9)가 53.5%,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6)가 36.6%로 다음을 잇고 있다.

<표 11-7> 가구 유형별 빈곤율 평균(2009~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중위소득의 60%
1. 노인 단독	81.3	83.8
2. 노인만 2인 이상	66.6	72.8
3. 근로연령 단독	32.4	35.4
4. 근로연령만 2인	9.8	11.7
5. 노인+근로연령	16.5	19.0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36.6	43.5
7. 근로연령2+아동	13.7	17.3
8. 근로연령3인 이상+아동있음(노인 무관)	14.9	18.9
9. 기타	53.5	62.4

주: 1) 균등화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이용한 빈곤율임.

2) 2010~2019년 데이터 해당 변수(빈곤)의 가구유형별 평균값.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1-8>은 2019년 기준 소득분위별 집단의 2009년~2018년 기간 중 가구유형별 빈곤율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해당 소득집단의

잠재적 빈곤위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험도의 점유율과 누적점유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빈곤위험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하위소득 2분위의 빈곤위험도가 57.7%로 1분위의 4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위 5분위 집단의 빈곤 위험도 누적점유율 또한 67.5%로 나타났다. 빈곤위험이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8〉 소득분위별 빈곤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빈곤선=중위소득의 60%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45.2	15.6(15.6)	48.8	15.0(15.0)
2	57.7	19.9(35.5)	61.5	19.0(34.0)
3	38.9	13.4(48.9)	42.7	13.2(47.2)
4	29.3	10.1(59.0)	33.1	10.2(57.4)
5	24.5	8.4(67.5)	28.1	8.7(66.1)
6	21.8	7.5(75.0)	25.2	7.8(73.8)
7	19.9	6.9(81.9)	23.2	7.2(81.0)
8	19.3	6.7(88.5)	22.5	6.9(87.9)
9	16.9	5.8(94.3)	19.9	6.1(94.1)
10분위	16.4	5.7(100.0)	19.3	5.9(100.0)
전체	29.0	100.0	32.4	100.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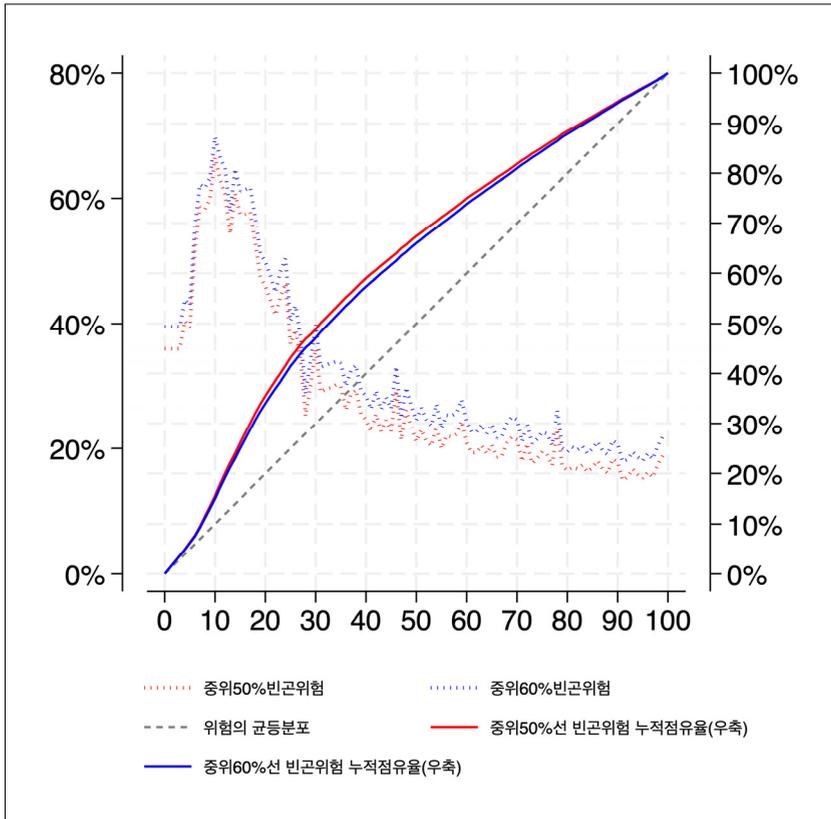
2) 〈표 1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4]는 가로축을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세로축의 좌측은 각 집단의 빈곤위험도(비율)를 나타내고, 우측은 빈곤위험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4] 중앙의 점선으로 표시된

45도 선을 기준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두 개의 선이 중위 50% 및 60% 기준 빈곤율의 로렌츠곡선이다. [그림 11-4]를 보면, 시장소득 하위 30% 소득집단에게 빈곤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4] 빈곤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나. 실업

스웨덴은 1970~80년대까지 경제호황을 겪으며 낮은 실업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오일쇼크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지난 10년간의 실업률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 <표 11-9>는 실업률을 성별,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실업률이 높은 집단은 20대 청년층이며, 그 중에서도 20~24세 남성이 1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및 고용률(201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실업률	
	남성	여성
15 ~ 19세	10.4	11.7
20 ~ 24세	13.6	10.6
25 ~ 29세	8.0	6.9
30 ~ 34세	5.8	5.6
35 ~ 39세	5.0	5.4
40 ~ 44세	4.7	4.5
45 ~ 49세	4.8	4.4
50 ~ 54세	4.6	3.7
55 ~ 59세	5.1	3.6
60 ~ 64세	4.5	3.0
65세 이상	0.4	0.4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아래 <표 11-10>은 위의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을 LIS 데이터의 2009년 ~2018년 데이터의 해당 집단에 할당하고, 이를 2019년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집단의 실업 위험도와 그 점유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실업 위험도는 가구원 모두가 실업자인 가구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실업위험도는 하위소득 1분위 집단에서 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소득계층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실업위험이 1분위 집단에 집중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실업위험도의 누적점유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1-10> 소득분위별 실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실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2.7	20.0(20.0)
2	1.1	8.4(28.4)
3	1.5	11.0(39.4)
4	1.4	10.8(50.1)
5	1.5	11.5(61.7)
6	1.6	11.9(73.5)
7	1.3	9.6(83.2)
8	1.1	7.9(91.0)
9	0.7	5.0(96.1)
10분위	0.5	3.9(100.0)
전체	1.3	100.0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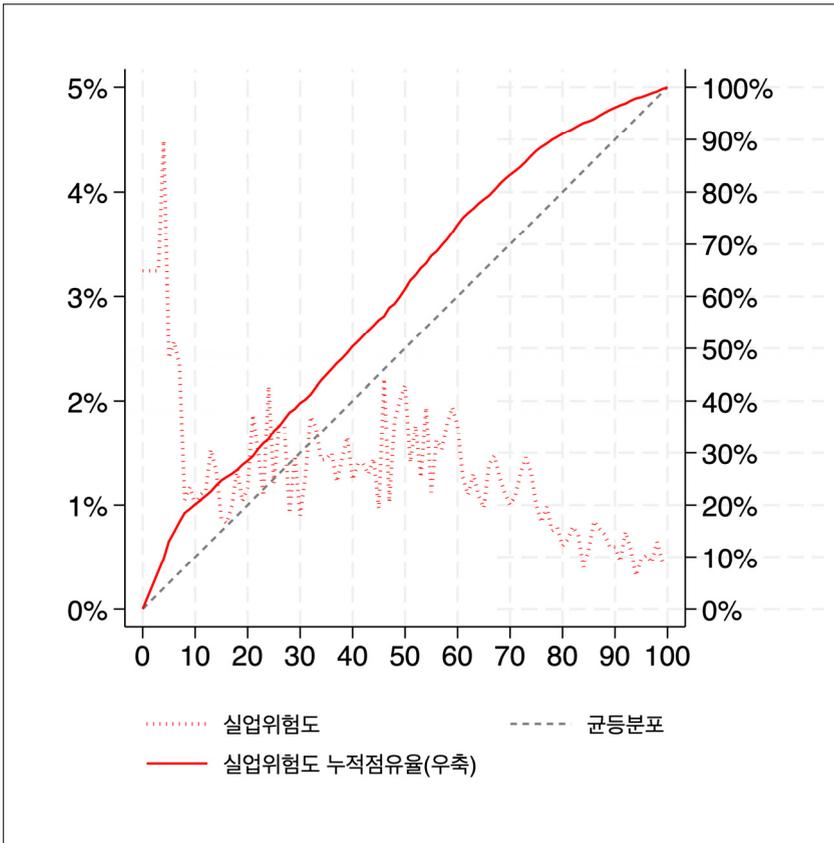
2) <표 11-9>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5]는 시장소득 100분위별로 모든 가구원이 실업에 처할 위험도와 누적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5] 중앙의 붉은

색 실선은 실업위험도 누적점유율, 즉 로렌츠곡선인데, 위의 <표 11-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이 소득하위 1분위에 집중되어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소득분위별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1-5] 실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다. 미취업 위험

여기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을 추출하고, 이를 2009년~2018년 데이터의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할당하여 미취업자 수를 파악한 뒤, 2019년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 미취업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스웨덴은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고용률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2023~2024년 현재 스웨덴의 15~64세 고용률은 약 78~8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약 70%)보다 약 8~10%포인트 높고, OECD 평균(약 68%)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 <표 11-11>은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연령대의 고용률은 매우 균등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15~29세 청년층과 60~64세 집단에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의 학업수행과 고령층의 퇴직 등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고용률도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11-11>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15 ~ 19세	24.9	18.6
20 ~ 24세	58.9	60.7
25 ~ 29세	75.2	80.6
30 ~ 34세	81.4	88.3
35 ~ 39세	84.0	90.5
40 ~ 44세	86.4	90.7
45 ~ 49세	85.9	89.5
50 ~ 54세	84.0	87.6

연령대	고용률	
	남성	여성
55 ~ 59세	80.3	84.3
60 ~ 64세	62.1	69.0
65세 이상	11.1	19.3

출처: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indicators," OECD, 각연도, 2025. 5. 6.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LFS_INDIC&df[ag]=OECD.ELS.SAE&df[vs]=1.1&dq=.EMP_RATIO....&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아래 <표 11-12>는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와 위험 점유율(누적 점유율)을 보여준다. 미취업 위험도는 소득하위 2분위가 56.2%로 가장 높지만, 소득하위 1~3분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연령대 미취업 빈곤층의 존재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소득하위 1~3분위에 노인가구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1-12> 소득분위별 미취업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미취업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38.3	18.5(18.5)
2	56.2	27.2(45.7)
3	33.4	16.1(61.8)
4	19.8	9.6(71.4)
5	13.9	6.7(78.1)
6	11.4	5.5(83.6)
7	9.7	4.7(88.3)
8	9.7	4.7(93.0)
9	7.4	3.6(96.6)
10분위	7.1	3.4(100.0)
전체	2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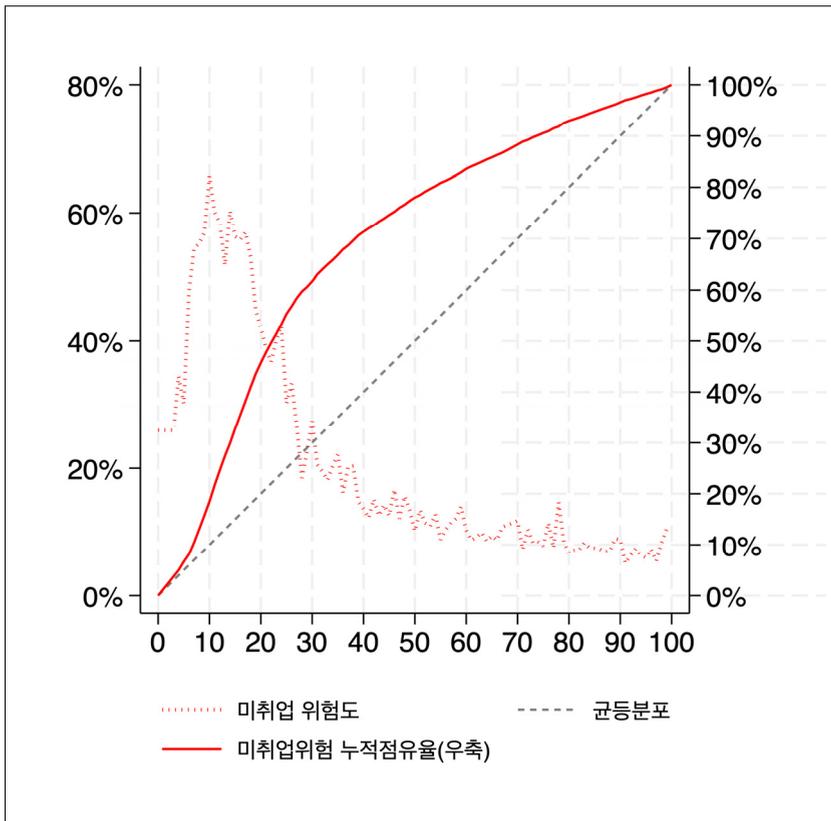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1-11>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6]은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미취업 위험도와 그 누적 점유율을 시각화한 것이다. 미취업자 비율이 소득하위 1~30분위 집단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하위 40분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1-6] 미취업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12>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라. 불완전 고용 위험

21세기는 기술혁신에 따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 복지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에서 불완전 고용의 위험은 어떠한가. 소득계층별로 위험이 집중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는 불완전 고용 위험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불완전 고용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 11-13>은 2009년~2018년 성별·연령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보여준다. 15세~24세 청년층에서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여성청년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25세~54세의 여성 핵심 근로연령층이 6.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돌봄이나 가사 등을 이유로 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1-13> 성 및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2009~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24세	4.5	8.7
25~54세	2.4	6.9
55~64세	1.5	4.9
65세 이상	0.5	0.4

주: 각 집단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출처: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OECD, 각연도, 2025. 6. 11.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아래 <표 11-14>는 2019년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로 불완전 고용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다. 불완전 고용 위험도가 가구원 모두가 비자발적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표 11-14>를 보면, 하위소득 1분위 집단의 불안전 고용 위험도가 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그 밖의 소득 집단에서는 그 위험이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4> 소득분위별 불안전고용 위험도(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불안전 고용 위험도	위험도 점유율
1	1.9	19.9(19.9)
2	0.8	8.4(28.3)
3	1.1	11.4(39.8)
4	1.1	12.0(51.8)
5	1.1	11.7(63.5)
6	1.1	11.3(74.8)
7	0.8	8.7(83.6)
8	0.7	7.6(91.2)
9	0.4	4.6(95.8)
10분위	0.4	4.2(100.0)
전체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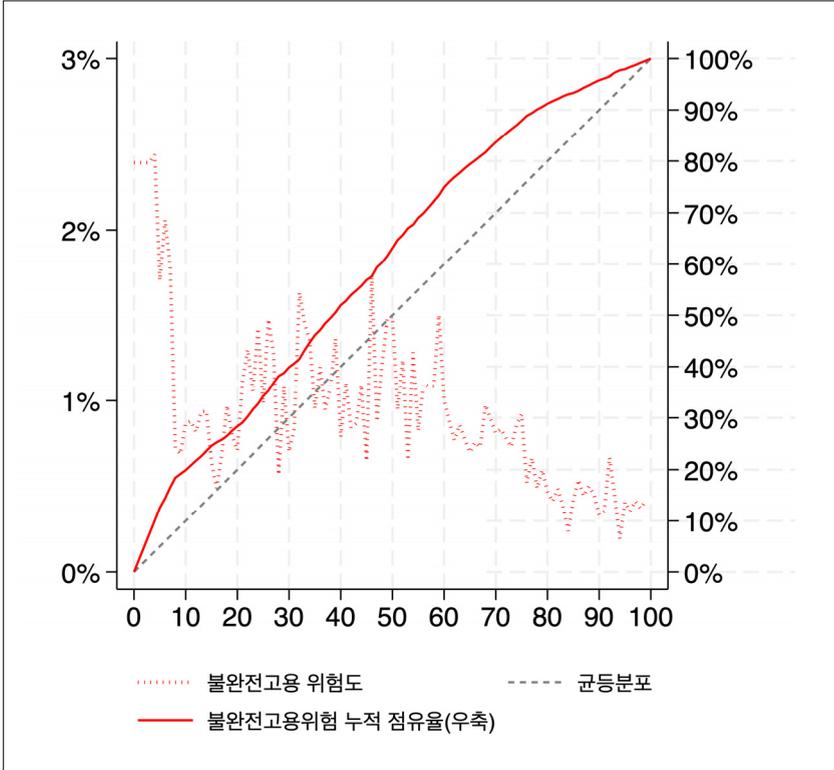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1-13>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IS, Sweden 2020년 가구 및 개인데이터 원자료.

아래 [그림 11-7]은 위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보면, 소득하위 10분위 집단에 고용불안 위험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소득집단에는 그 위험이 낮고 유사한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1-7] 불안전 고용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14>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마. 건강 위험

스웨덴은 인구고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앞의 [그림 11-3]에서 언급한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주관적 인식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분석시점을 2009~2018년으로 통제하고

있어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스웨덴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방법은 앞의 위험도 분석과 동일하게, 외부 데이터에서 파악한 성별, 연령대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을 LIS의 2009년~2018년 데이터의 동일 집단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먼저 아래 <표 11-15>는 외부 데이터에서 추출한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대가 높고, 여성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5세~64세 여성과 65세 이상 여성의 각각 8.3%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45세~54세 여성이 7.9%로 뒤를 잇고 있다. 65세 이상 남성은 그보다 낮은 7.1%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했다.

<표 11-15> 성 및 연령대별 건강 위험(2010~2018년 평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6~24세	2.0	1.9
25~34세	2.8	3.3
35~44세	2.7	5.1
45~54세	4.1	7.9
55~64세	5.7	8.3
65세 이상	7.1	8.3

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Self-perceived health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Eurostata. 각 연도. 2025.5.18. 검색,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02_custom_16749729/default/table?lang=en

아래 <표 11-16>은 2009~2018년 가구원 모두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의 평균값을 건강위험도로 정의하고, 이를 2019년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 위험도로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소득하위 10분위

집단과 20분위 집단의 건강위험도가 각각 3.6%와 3.2%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소득 20% 집단의 건강위험도 누적점유율이 41.6%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하위소득계층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 건강위험의 불평등보다 인구 고령화와의 관련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11-16〉 소득분위별 건강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건강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3.6	22.1(22.1)
2	3.2	19.5(41.6)
3	1.8	11.0(52.6)
4	1.5	9.1(61.7)
5	1.4	8.7(70.5)
6	1.2	7.5(78.0)
7	1.1	6.7(84.6)
8	1.1	6.5(91.1)
9	0.8	4.6(95.7)
10분위	0.7	4.3(100.0)
전체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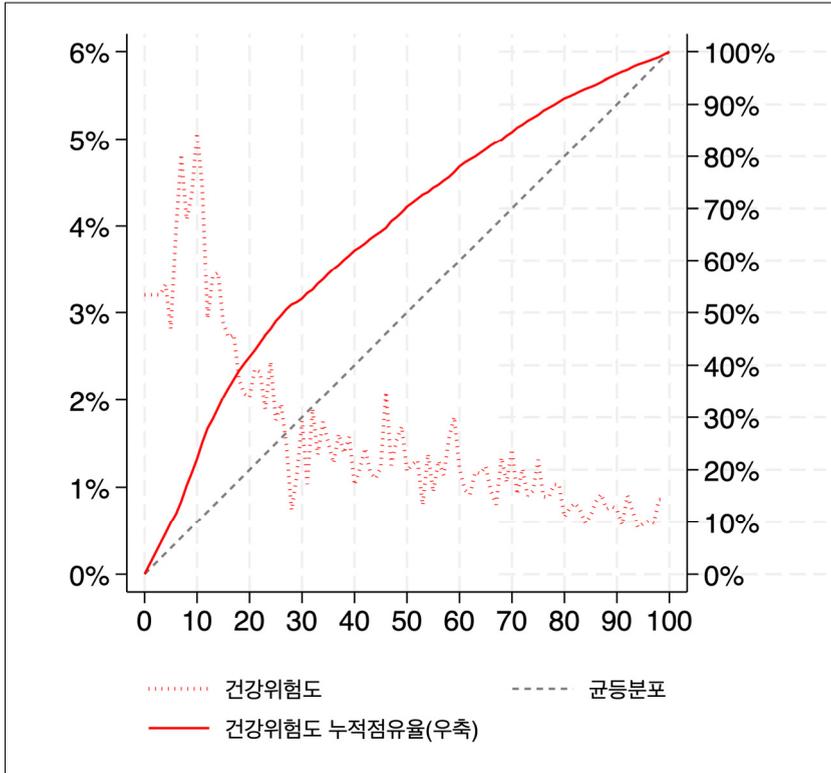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1-15〉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8]은 위의 분석결과를 로렌즈곡선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로 건강위험도와 그 위험의 누적점유율을 보면, 건강위험도가 소득하위 20%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상위 90분위 이상 집단에서는 그 위험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8] 건강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16>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바. 돌봄 위험

스웨덴은 복지국가 중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이며,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이 빈곤율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정책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스웨덴에서 돌봄 위험이 가구유형이나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돌봄

수요는 아동유무, 노인유무, 장애인 유무 등의 기준을 사용했다.⁵⁶⁾

아래 <표 11-17>은 LIS 데이터를 활용해 가구유형별로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예상했던 바와 같이, 노인 단독가구(1)와 노인 2인 가구(2)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이 각각 57.2%와 41.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아동을 보육하는 가구(6~7)에서는 15.0%~19.3%로 나타났다.

<표 11-17> 가구 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평균(2010~2018년)

(단위: %)

위험 가구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비율
1. 노인 단독	57.2
2. 노인만 2인 이상	41.1
3. 근로연령 단독	0.0
4. 근로연령만 2인	0.0
5. 노인+근로연령	2.1
6. 노인+아동, 근로연령1+아동	15.0
7. 근로연령2+아동	19.3
8. 근로연령3인 이상+아동있음(노인 무관)	3.3
9. 기타	9.3
전체	16.4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각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표 11-17>에서 가구유형에 따라 돌봄 욕구의 수준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면, 소득분위별로는 어떠한 분포를 보일까. 아래 <표 11-18>은 소득

56) 돌봄 위험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노령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가구는 돌봄욕구가 가구원 수를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00으로 통제하였다.

10분위 집단별로 돌봄 위험도와 위험의 점유율(누적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소득하위 1~3분위 집단에서 돌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는 소득하위 2분위의 위험도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하위 3분위가 22.4%로 나타났다. 누적점유율을 보면, 돌봄 위험도는 소득하위 3분위에 49.1%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8〉 소득분위별 돌봄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돌봄 위험도	위험 점유율
1	22.3	13.8(13.8)
2	34.9	21.5(35.3)
3	22.4	13.8(49.1)
4	17.3	10.7(59.8)
5	13.7	8.4(68.2)
6	12.1	7.5(75.7)
7	11.0	6.8(82.5)
8	10.3	6.3(88.9)
9	9.6	5.9(94.8)
10분위	8.4	5.2(100)
전체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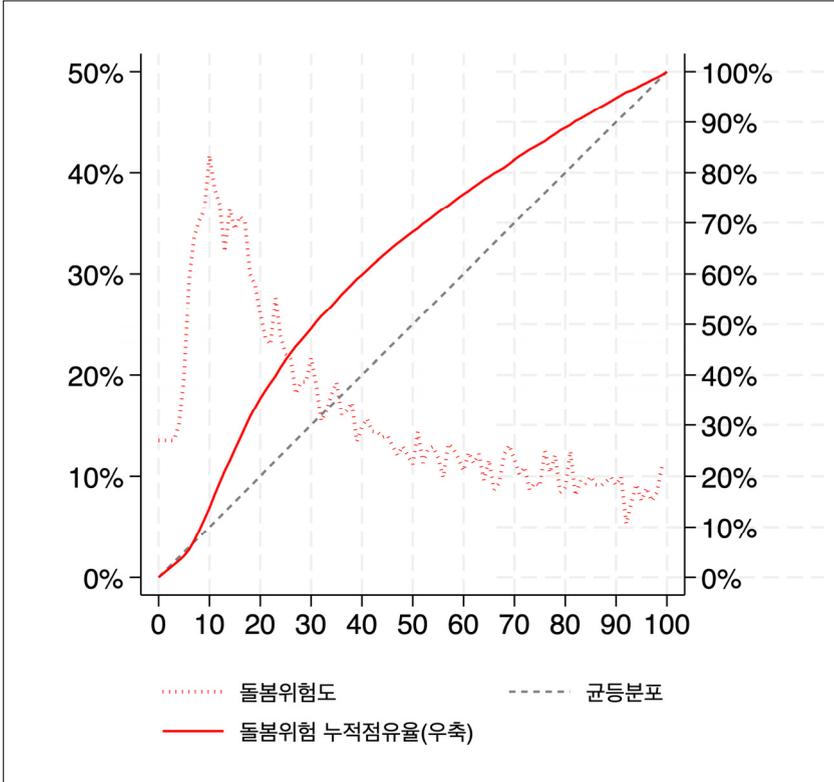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1-17〉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IS, Sweden 2011~2020년 가구 및 개인데이터 원자료.

아래 [그림 11-9]는 위의 〈표 11-18〉의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 중 소득하위 30%에 위험도가 집중된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중앙의 붉은 색 실선으로 표시된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내는 로렌츠곡선 또한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9] 돌봄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18>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IS, Sweden 2020년 가구 및 개인데이터의 원자료, OECD data(확인)

사. 사회적 지지의 부재 위험

현대사회는 점점 원자화되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도움이나 의견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이나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청년층 단독가구 등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각종 경제사회 인프라의 공간적 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큰 문제일 수 있다.

아래 <표 11-19>는 스웨덴의 16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민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성별·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표 11-19>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부재 비율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 ~ 29세	2.3	2.3
30 ~ 49세	6.8	6.7
50세 이상	9.6	9.4

출처: 1) “Current well-being by sex,”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2) “Current well-being by age,” OECD, 각연도, 2025. 4. 27. 검색, “<https://data-explorer.oecd.org>”

아래 <표 11-20>은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는 응답결과를 2009년~2018년 데이터의 동일집단에 할당한 뒤, 이를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로 나타낸 것이다. 과거 발생했던 사실을 토대로 현재의 해당 집단이 처할 수 있는 개연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고립 위험도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스웨덴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의 결여라는 위험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른 집중화 현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보면 분명하게 잘 드러난다.

〈표 11-20〉 소득분위별 사회적지지 부재의 위험(2019년)

(단위: %)

소득분위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도	위험의 점유율
1	6.8	12.0(12.0)
2	4.5	8.0(20.0)
3	3.9	7.0(27.0)
4	5.8	10.3(37.3)
5	5.3	9.4(46.7)
6	5.8	10.4(57.1)
7	6.7	11.9(68.9)
8	5.5	9.8(78.7)
9	5.7	10.1(88.8)
10분위	6.3	11.2(100.0)
전체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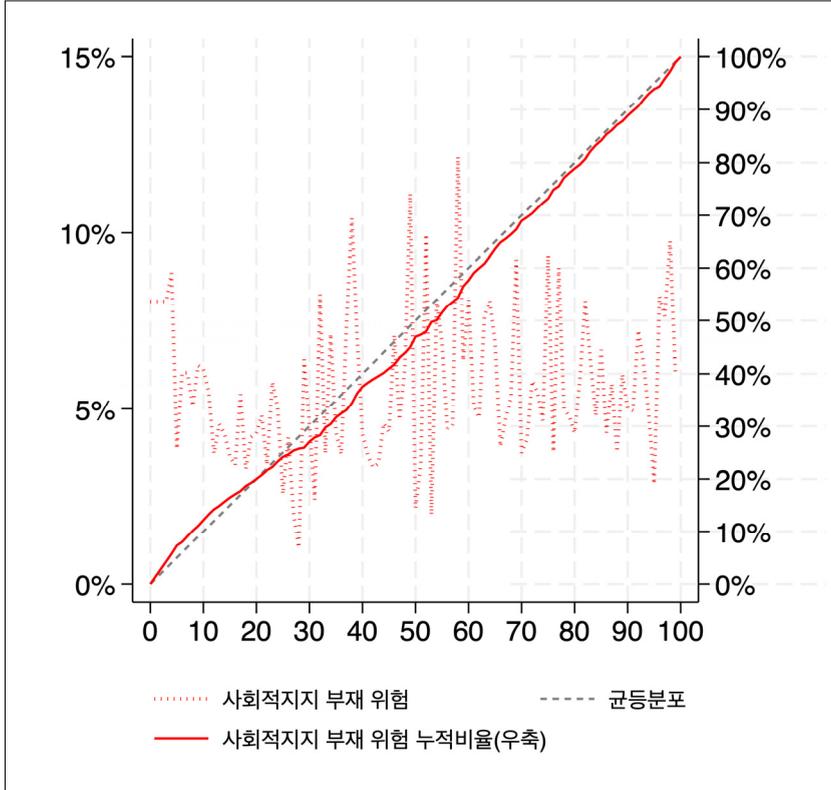
주: 1)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2) 〈표 11-1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10]은 〈표 11-20〉의 분석결과를 시장소득 100분위 집단별 위험도와 그 위험의 누적 점유율, 즉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스웨덴에서 사회적 고립 또는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 문제는 소득계층에 따라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렌츠곡선 또한 중앙의 45도 선에 거의 밀착해서 우상향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림 11-10]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1)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위험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2) <표 11-20>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3. 순수혜의 분포

앞서 스웨덴 사회에서 빈곤, 실업, 건강,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주요한 경제사회적 위험이 개인집단이나 가구유형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경제사회적 위험들은 그 성격에 따라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거나, 전체 소득계층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갖는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면서도 개별화된 정교함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식을 단순화하여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별 가구나 개인을 단위로 자신이 조세나 사회보험 등의 형태로 국가에 기여한 것을 부담(burden)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 급여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합(合)을 수혜(benefit)로 규정하였다. 이어 총수혜(공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총부담(조세+사회보험료)을 뺀 값을 순수혜(net-benefit)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득분위별 순수혜와 누적 순수혜 점유율, 즉 로렌즈곡선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순수혜를 도출하는 문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조사데이터를 활용해 그 값을 산출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이론적, 기술적 쟁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국가마다 상이한 복잡한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비교는 용이하지 않다. 이미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놓은 <LIS data>를 사용함으로써 그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부 분석결과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아래 <표 11-21>은 LIS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시장소득 10분위 집단별로 시장소득과 부담(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그리고 수혜

(공적이전소득)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수혜는 소득하위 1~4분위 집단이 가장 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혜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부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조세부담은 시장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점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보험료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부담과 수혜가 매우 명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동일한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속한 프랑스와 비교하면,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 11-21〉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2019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시장소득	수혜	조세	사회보험기여	부담
1	4,463	143,111	16,431	1,774	18,205
2	49,875	180,045	38,680	2,103	40,782
3	122,936	141,203	42,769	7,348	50,117
4	199,688	101,987	48,349	13,562	61,911
5	269,117	75,228	53,877	18,606	72,483
6	336,396	58,742	64,616	23,358	87,974
7	398,787	52,329	76,184	26,554	102,737
8	475,593	40,363	93,586	30,604	124,190
9	583,841	30,793	119,489	35,537	155,026
10	1,002,722	29,047	285,088	38,052	323,140
전체	344,342	85,285	83,907	19,750	103,657

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부담=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순수혜1= 수혜-부담, 순수혜2는 음의 값을 갖는 순수혜1을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한 값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1-22>는 <표 11-21>의 수혜와 부담을 점유율과 누적점유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하면, 스웨덴은 하위 1~4분위 소득계층에게 총 공적이전소득의 66.4%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정반대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하위 1~7분위 집단의 조세 부담 점유율은 40.6%, 사회보험료 부담 점유율은 47.2%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를 합한 총 부담은 소득하위 1~7분위 집단이 전체 부담의 41.9%를 감당하고, 소득최상위 9~10분위 집단이 46.2%를 감당한다. 물론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이나 기타 법인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말한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강한 재분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제 비교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11-22>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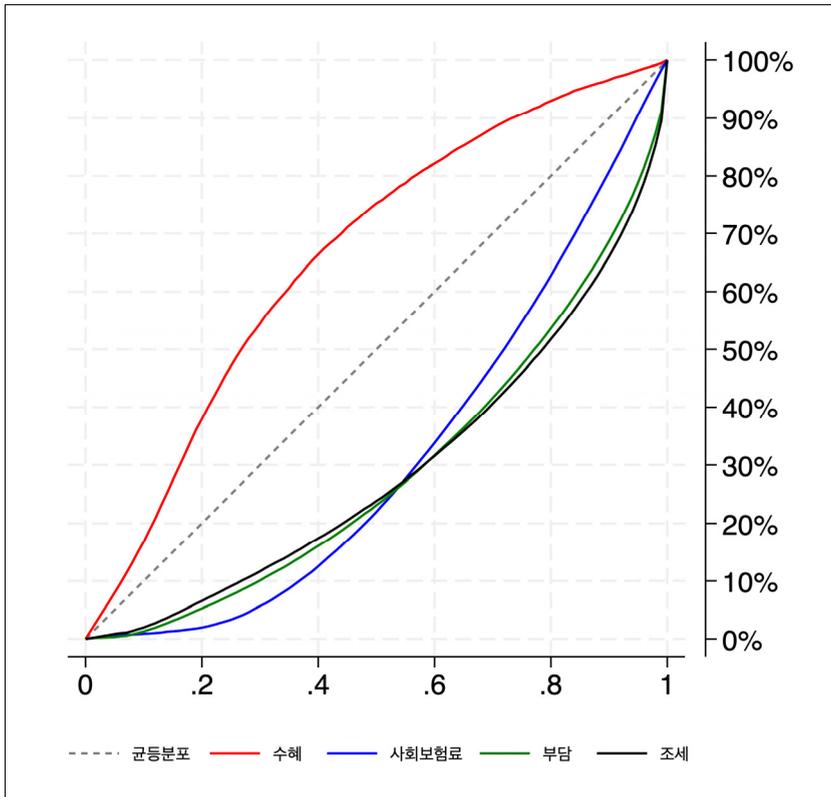
(단위: %)

소득 분위	수혜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
1	16.8(16.8)	2.0(2.0)	0.9(0.9)	1.8(1.8)
2	21.1(37.9)	4.6(6.6)	1.1(2.0)	3.9(5.7)
3	16.6(54.4)	5.1(11.7)	3.7(5.7)	4.8(10.5)
4	12.0(66.4)	5.8(17.4)	6.9(12.6)	6.0(16.5)
5	8.8(75.2)	6.4(23.8)	9.4(22.0)	7.0(23.5)
6	6.9(82.1)	7.7(31.5)	11.8(33.8)	8.5(32.0)
7	6.1(88.3)	9.1(40.6)	13.4(47.2)	9.9(41.9)
8	4.7(93.0)	11.2(51.8)	15.5(62.7)	12.0(53.9)
9	3.6(96.6)	14.2(66.0)	18.0(80.7)	15.0(68.8)
10분위	3.4(100.0)	34.0(100.0)	19.3(100.0)	31.2(100.0)

주: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아래 [그림 11-11]은 <표 11-22>에 나타난 수혜와 부담의 누적점유율을 로렌츠 곡선으로 그린 것이다. 수혜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담은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하위소득계층의 사회보험부담률이 매우 낮아, 조세부담과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 11-11] 수혜와 부담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가로축은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수혜/부담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1-23>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최종 분석결과, 즉 스웨덴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재분배를 하고 있는지 순수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순수혜를 계산한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과 음수를 0으로 대체한 모델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하위 소득 1~5분위는 순수혜가 양의 값이며, 6분위부터 음의 값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부담하는 것보다 공적이전소득 형태로 받는 것이 많고, 나머지 절반은 반대로 부담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수를 0으로 대체한 분석결과는 순수혜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23> 순수혜 계산 방식과 분위별 순수혜 규모(2019년)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순수혜		순수혜 (음수 → 0으로 전환)	
	평균	점유율	평균	점유율
1	124,906	-68.0(-68.0)	125,006	27.7(27.7)
2	139,263	-75.8(-143.8)	139,434	30.9(58.6)
3	91,085	-49.6(-193.4)	92,760	20.5(79.1)
4	40,076	-21.8(-215.2)	47,206	10.5(89.5)
5	2,745	-1.5(-216.7)	23,868	5.3(94.8)
6	-29,233	15.9(-200.8)	10,219	2.3(97.1)
7	-50,409	27.4(-173.3)	7,269	1.6(98.7)
8	-83,827	45.6(-127.7)	3,147	0.7(99.4)
9	-124,233	67.6(-60.1)	1,900	0.4(99.8)
10분위	-294,092	160.1(100.0)	807	0.2(100.0)
전체	-18,372	100.0	45,1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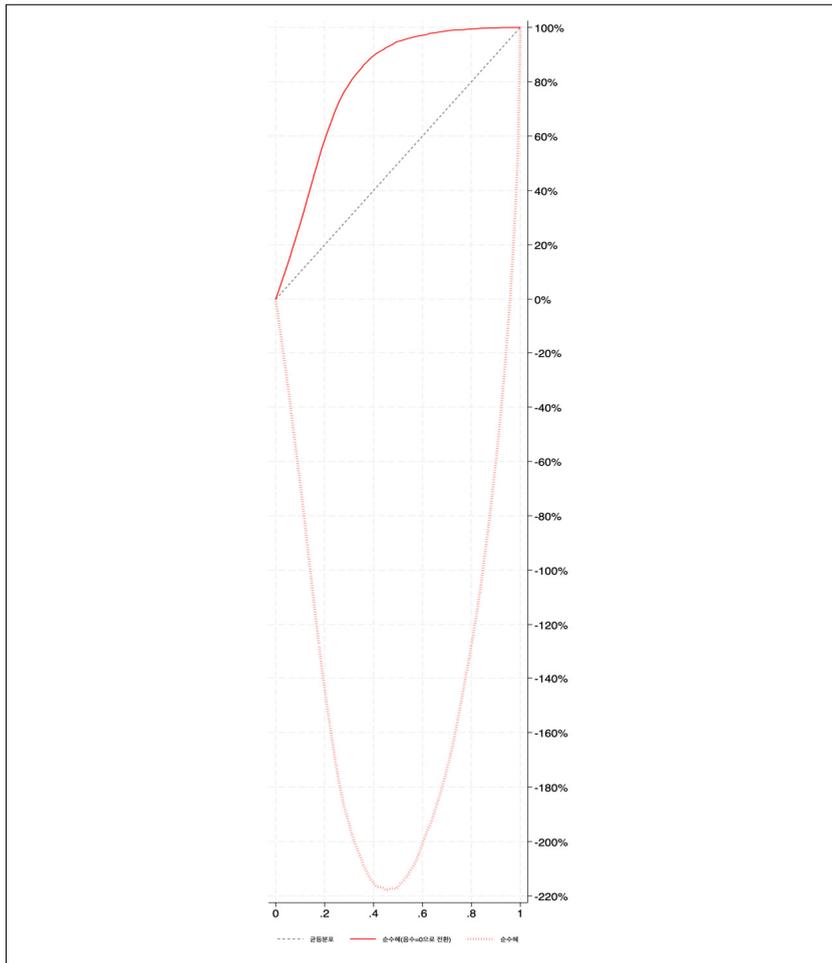
주: 괄호는 누적 점유율임.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위의 <표 11-23>의 결과를 감안하면, 스웨덴의 순수혜 로렌즈곡선은 깊은 u자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1-12]는

스웨덴이 강한 재분배와 소득수준에 비례한 강한 부담을 전제로 하는 국가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1-12] 순수혜의 로렌츠 곡선(2019년)



주: 가로축 소득순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은 수혜/부담의 누적 점유율을 의미함.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 (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제3절 소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이며,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의 간략한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스웨덴이 다양한 경제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적 위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으며, 고부담-고복지 국가군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순수혜를 시각화한 결과 또한 강력한 재분배 기능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누적적 징수 기능을 보여주었다. 이 분석을 통해 포괄하지 못한 부담과 수혜를 고려한 보다 정치(精緻)한 분석결과와 함의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부담과 수혜의 최선의 조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 위험의 집중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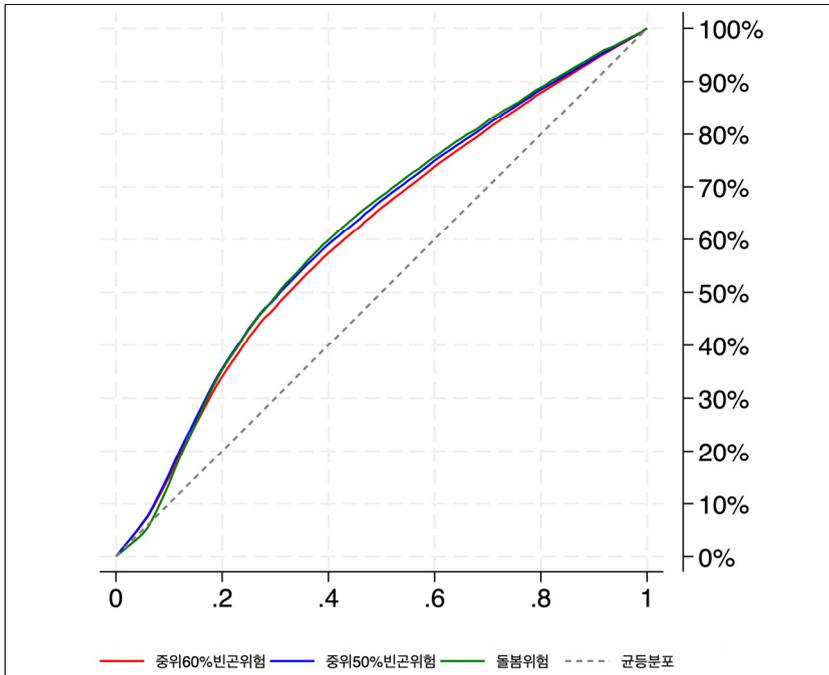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스웨덴 사회의 경우, 위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 계층별 집중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분석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전제로, 여기서는 각 위험의 집중도를 살펴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어떤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전체 소득계층에 고르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의 계층과 그 집중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위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위험(빈곤위험, 돌봄위험)과 개인단위로 측정된

위험(실업 등 고용 관련 위험, 사회적 지지 위험, 건강위험 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의미한다. 각 위험을 산출하는 방법이나 그것이 갖는 한계는 앞의 이론적 검토 및 한국사례에 대한 장(chapter)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아래 [그림 11-13]은 가구단위의 위험으로 빈곤 위험과 돌봄 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1-13]에 따르면, 빈곤위험과 돌봄위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위험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 위험 판정과 시장소득 분위 판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현상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노인가구가 저소득층에 상당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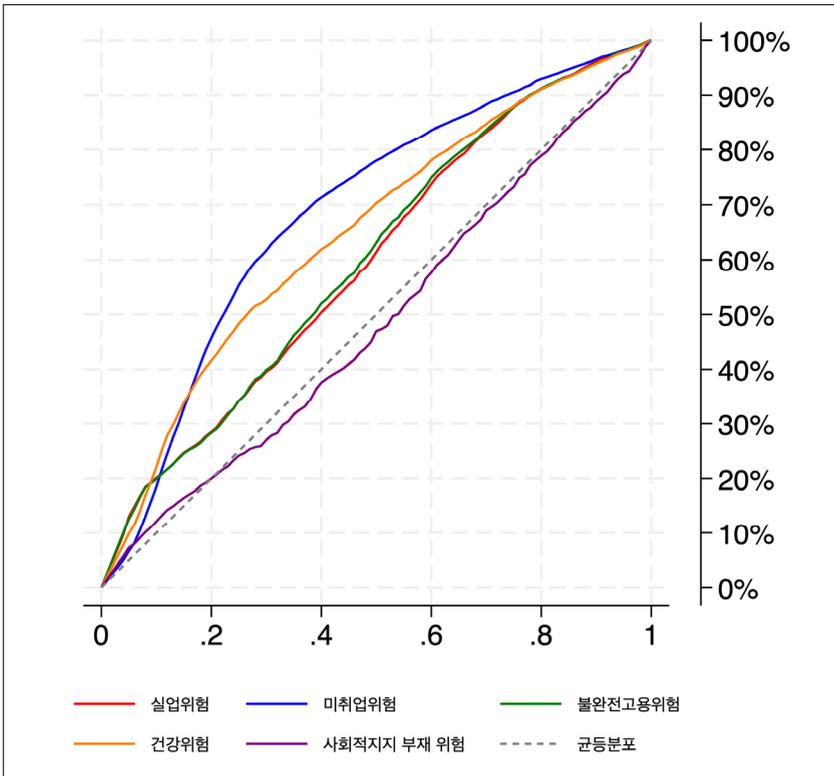
[그림 11-13] 위험의 분포 비교 - 가구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그림 11-14]는 개인 단위 위험들을 각 로렌츠곡선을 한 그림에 넣어 비교한 것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개인 단위 위험의 집중도는 미취업 위험 - 건강 위험 - 불안전고용 위험 - 실업 위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뒤의 종합비교에 관한 장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1-14] 위험의 분포 비교 - 개인 단위로 정의된 위험의 로렌츠 곡선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아래 <표 11-24>는 가구단위 위험과 개인단위 위험을 구분하여, 각 위험별 집중지수와 위험별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위험의 집중지수는 위험도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험의 지니계수는 위험도를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11-24>에서 위험의 집중 지수는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을 제외하고 그 부호가 모두 음(-)으로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앞서 [그림 11-14]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위험 중 소득계층별 집중도가 가장 큰 것은 미취업 위험(-0.373) - 건강 위험(-0.298) - 불완전고용 위험(-0.200) - 실업 위험(-0.190) 순이다. 다음으로 집중도가 큰 것은 가구 위험 중 돌봄 위험(-0.236)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집중도는 빈곤 위험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위험의 집중지수가 높다고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표 11-24>에서 사회적지지 부재 위험의 소득수준별 집중도는 0.028로 매우 낮지만, 위험의 지니계수는 0.80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것은 사회적지지 부재 문제가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위험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24〉 위험의 집중 지수 비교

위험의 특성	위험의 종류	위험 집중지수	위험 지니계수
가구 단위 위험	중위소득 50%선 빈곤 위험	-0.232	0.413
	중위소득 60%선 빈곤 위험	-0.213	0.379
	돌봄위험	-0.236	0.560
개인 단위 위험 → 가구 단위 집계	미취업 위험	-0.373	0.665
	실업 위험	-0.190	0.778
	불완전 고용 위험	-0.200	0.796
	사회적 지지 부재 위험	0.028	0.808
	건강 위험	-0.298	0.729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2.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

앞서 위험의 집중도를 비교했다면, 여기서는 수혜와 부담,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 〈표 11-25〉는 위의 〈표 11-24〉와 마찬가지로의 형식을 빌어, 순수혜 도출에 활용되었던 항목들의 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수혜와 순수혜의 집중지수는 음수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25〉 순수혜 관련 항목의 집중 지수 비교

구분	항목	집중 지수	지니 계수
수혜	수혜(=공적 이전소득)	-0.324	0.542
부담	조세	0.411	0.477
	사회보험료	0.367	0.414
	부담(= 조세 + 사회보험료)	0.402	0.440
순수혜	순수혜(= 수혜 - 부담)	3.779	-4.206
	순수혜(음수 → 0으로 전환)	-0.594	0.714

출처: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2020,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저자가 직접계산(소득 기준연도는 2019년).

이상의 분석결과는 스웨덴에서 경제사회적 위험 중 많은 것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 위험은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 고르게 나타나는 위험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그 정도, 즉 저소득층으로의 집중도는 낮아도,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의 심각성은 매우 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12장

국가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에서
한국의 특징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에 대한 함의

제 12 장 국가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에서 한국의 특징

1. 사회적 위험의 분포 비교

6장부터 11장까지 각 국가별 분석을 통해 6개 국가에 대해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2장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를 이들 국가 간에 비교하고 집중도에 있어서 한국이 보이는 특징을 확인한 후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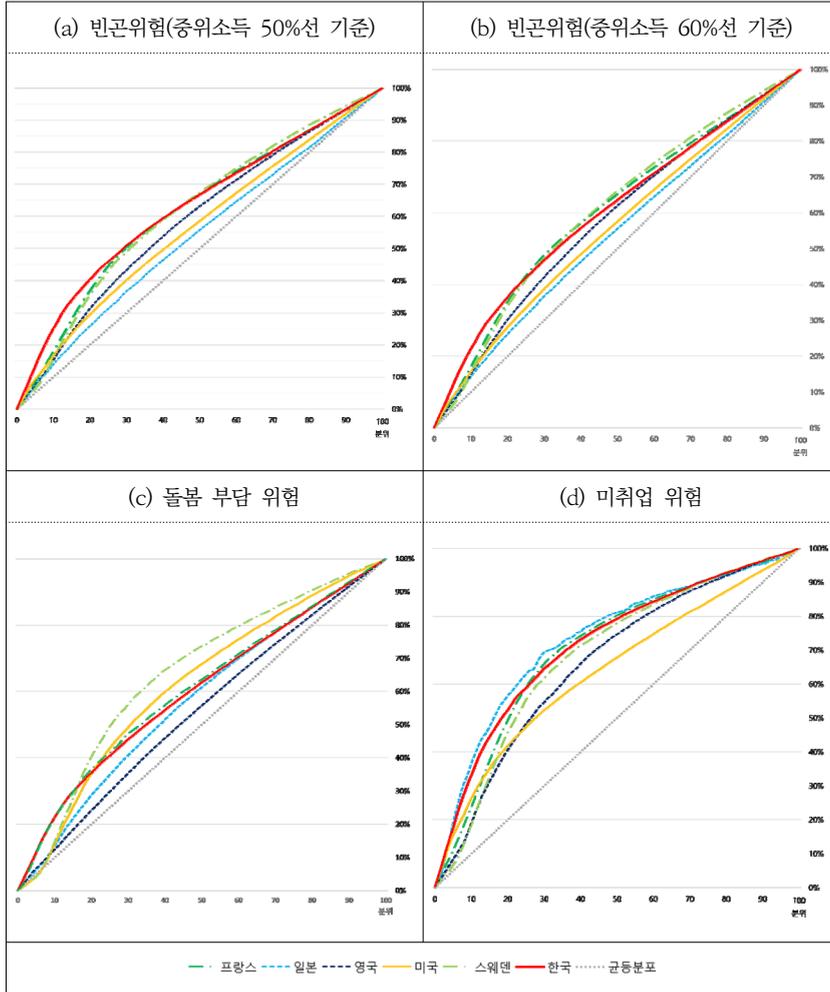
먼저 위험의 집중도를 비교해 보자. [그림 12-1]과 [그림 12-2]는 6~11장에서 분석된 8 종류의 위험 지표에 대해 로렌츠 곡선을 모아서 비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각 그림 중앙의 직선이 위험의 균등 분포라는 가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선이다. 곡선이 이 직선의 위에 위치하면 저소득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것이다. 곡선의 모양을 볼 때 빈곤 위험은 모든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집중의 정도된 모습은 모두 다르다. 우선 로렌츠 곡선의 모양은 위험마다 다르다. 빈곤 위험이나 돌봄 부담 위험처럼 비교적 균등분포 상태에 가까이 그려지는 로렌츠곡선이 있는가 하면 미취업 위험이나 건강 위험처럼 특정 소득계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띠는 곡선도 있다.

410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그림 12-1] 위험도의 분포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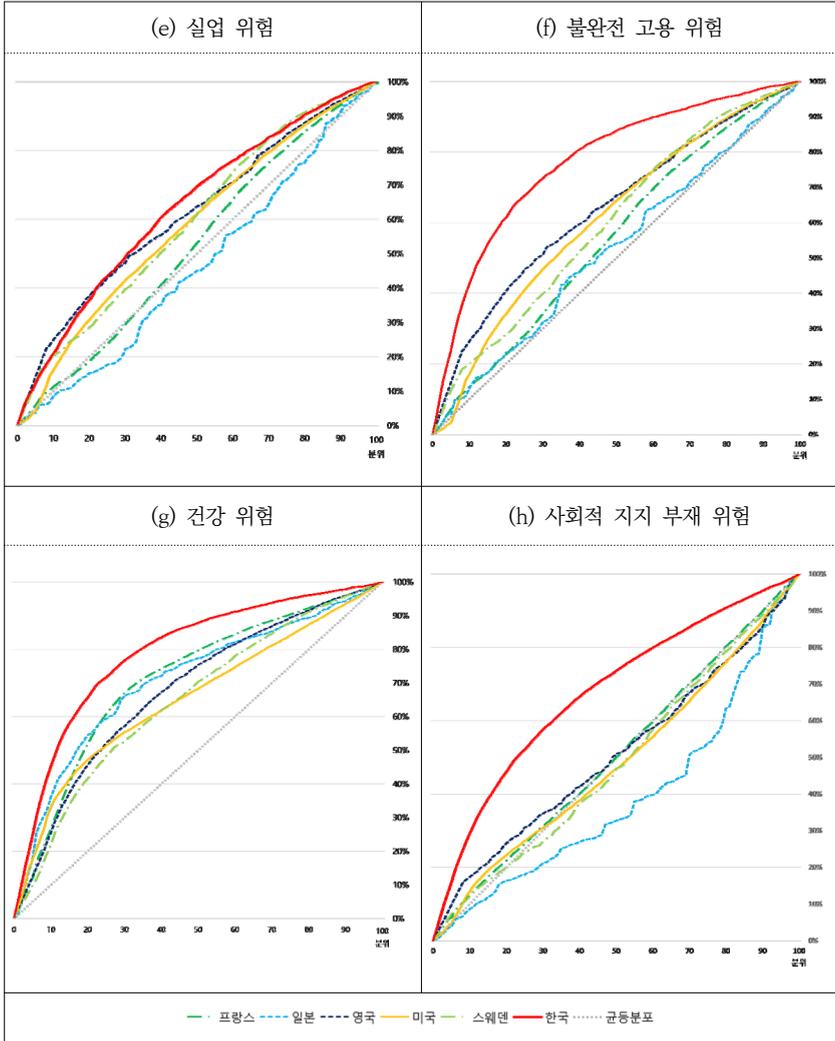
(단위: %)



주: 6~11장의 위험별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12-2] 위험도의 분포 비교 2

(단위: %)



주: 6~11장의 위험별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12-1]과 [그림 12-2]를 통해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국가별로 위험의 로렌츠곡선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빈곤(중위소득의 50%선 기준) 위험의 경우 한국과 스웨덴은 로렌츠곡선이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바깥쪽에 위치하고 일본과 미국은 안쪽에 위치한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빈곤 위험 자체가 낮다는 것이 아니고 빈곤 위험의 집중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즉 빈곤 위험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봄 위험의 경우 스웨덴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지만 한국의 집중도는 중간 수준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위험에서 집중도가 낮고 심지어 실업 위험에서는 위험도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취업 위험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1]과 [그림 1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즉 한 국가의 로렌츠곡선이 다른 국가의 곡선에 비해 항상 바깥쪽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어느 국가의 로렌츠 곡선이 다른 국가의 것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최고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서 누적 위험도가 높다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는 점은 어느 소득 계층까지는 한 나라의 위험 집중도가 높다가 교차점 이후부터는 집중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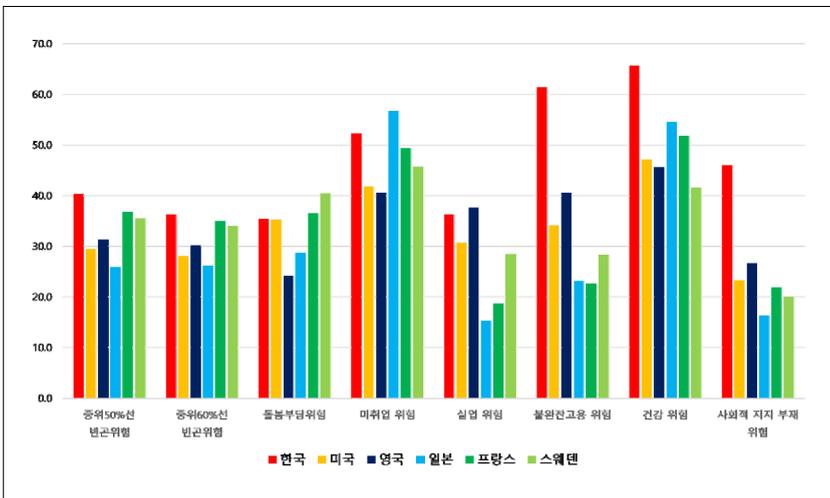
위험 집중도의 국가별 순위가 소득 계층마다 달라질 수 있다면 어느 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첫째는 시장소득 하위 20% 계층의 위험도 점유율이다. 이 지표는 전체 사회의 위험도 가운데 하위 20%가 점유하는 위험도를 보여준다. 둘째는 집중지수이다. 이 지수는 특정한 소득 계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모든 계층이 균등하게 위험을 나누어 갖고 있는 가상적인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즉 특정한⁵⁷⁾ 소득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단일한 숫자로 보여준다. 로렌츠 곡선을 통한 비교가 다소 직관적인 비교인 반면에 집중지수를 이용한 비교는 더 계량화된 비교치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12-3]은 8개의 위험지표별로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 어느 정도로 위험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12-3]에서 한국은 돌봄과 미취업 위험을 제외한 6가지 위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취업 위험의 집중도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위험의 집중도 순위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위험에 따라 다른 모습인데, 한국만 모든 위험에 대해 일관되게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그림 12-3] 소득 하위 20% 계층의 위험 점유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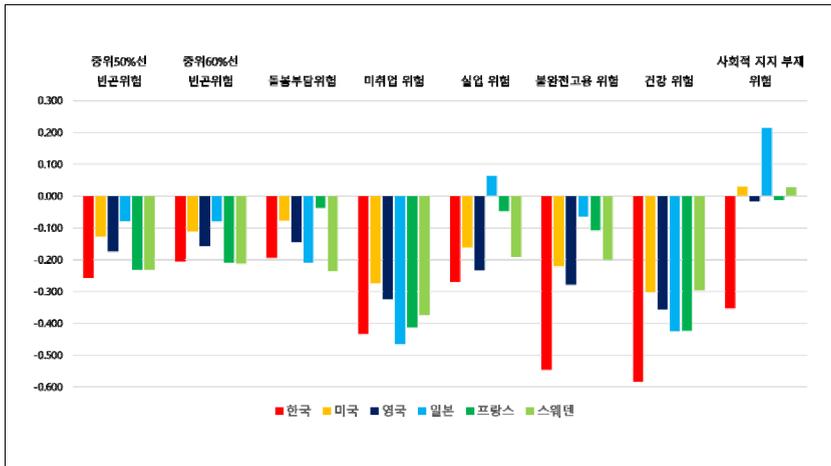


주: 6~11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57) 그것이 반드시 저소득층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2-4]는 위험별로 집중지수를 국가 간에 비교하여 보여준다. 집중지수는 위험이 모든 소득 계층에게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특정 소득층에 집중된 정도를 의미한다.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면 양(+)의 값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면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림 12-4]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지 부재의 위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집중지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저소득층에 위험이 집중된 것이다.

[그림 12-4] 위험별 집중지수 비교



주: 6~11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집중지수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그림 12-4]에서도 한국은 대부분의 위험에서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중위 소득 60%선 기준 빈곤 위험, 돌봄 위험, 미취업 위험에서는 가장 높지 않지만 그 외의 위험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집중도가 높다. 중위 60%선 빈곤 위험에서는 스웨덴이, 미취업 위험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았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 불완전 고용, 건강, 사회적 지지 부재 등의 위험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집중도와 차이가 큰 편이다.

[그림 12-3]과 [그림 12-4]를 보면 위협의 집중도는 국가군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에 속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집중도가 낮은 편이다. 반대로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된 프랑스는 위협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집중도는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인 영국의 집중도에 비해 높은 경우도 드물지 않다. 위협의 총량적인 수준에서 국가군별 차이가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위협의 수준과 위협의 집중도의 순위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위협의 수준과 집중도 사이의 엄밀한 상관관계는 더 많은 연도와 더 많은 국가의 관측치가 있을 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위협의 수준과 위협의 집중도 모두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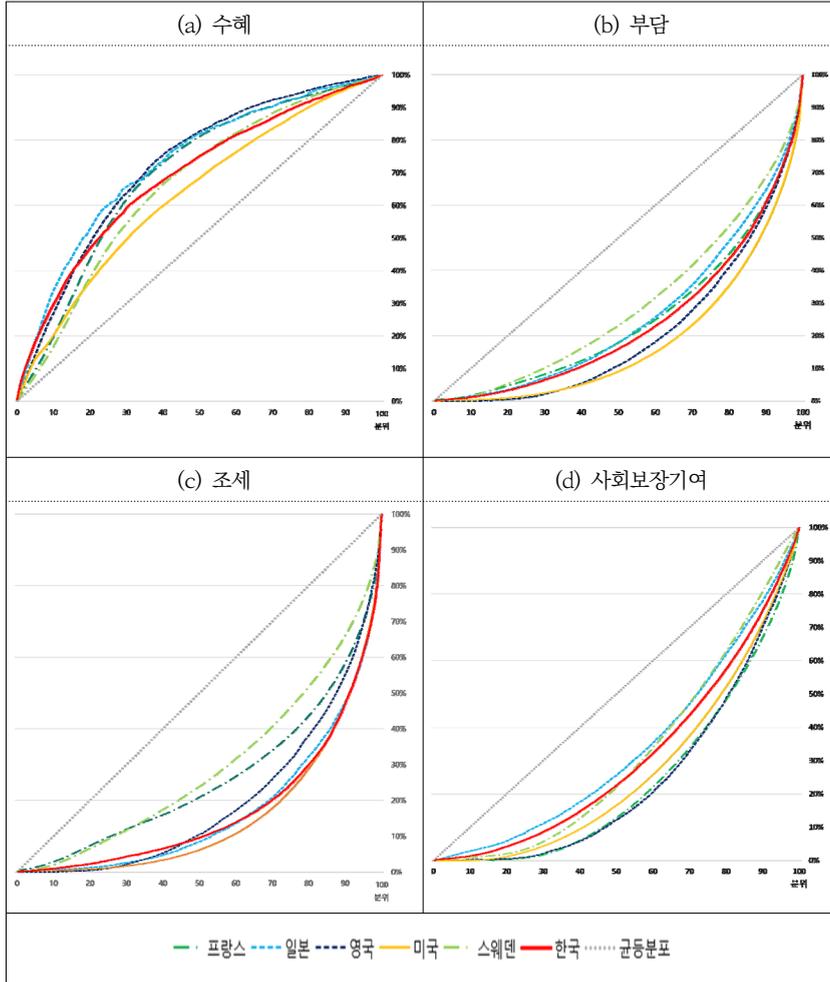
2.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 비교

가. 수혜와 부담의 분포

사회적 위협의 집중도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하여 보자. 우선 [그림 12-5]에서는 6개 국가의 사회보장 수혜, 조세, 사회보장기여(사회보험료), 그리고 부담의 로렌츠 곡선을 비교한다.

[그림 12-5] 수혜와 부담의 분포 비교

(단위: %)



주: 6~11장의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작성함.

수혜의 분포를 비교한 [그림 12-5]의 (a)를 보면 위험의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수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로렌츠 곡선 6개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고른 수혜의 분포를 보인다. 한국은 하위 10% 소득층을 비교할 때에는 가장 집중된 분포를 보이지만 하위 20%~30%의 구간에서는 중간 정도의 집중도를 보이고 중간층인 50% 계층까지의 점유율은 미국 다음으로 낮다. 즉 한국은 저소득층의 수혜 집중도가 높은 국가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하위 30%~70% 계층의 중간층이 점유하는 수혜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층별 부담의 분포 측면에서 보면([그림 12-5]의 (b))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의 로렌츠곡선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스웨덴의 곡선이 가장 위에 위치한다. 스웨덴은 모든 계층이 비교적 고르게 부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로렌츠곡선은 미국과 영국보다는 위에, 프랑스와 일본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한다. 즉 모든 계층에 걸쳐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의 부담 점유율을 보인다.

부담은 조세 부담([그림 12-5]의 (c)) 과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그림 12-5]의 (d))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그래프를 보면 조세 로렌츠 곡선이 사회보장기여금 곡선보다 아래로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 조세의 고소득층 집중 경향이 사회보장기여금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국가별 순위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세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의 곡선이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세 국가의 곡선 위치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조세의 로렌츠곡선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치우친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 점유율도 낮지만 중상위 소득층의 점유율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의미

한다. 균등분포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이다. 요컨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과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의 차이가 조세 부담의 분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에서의 조세 부담은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훨씬 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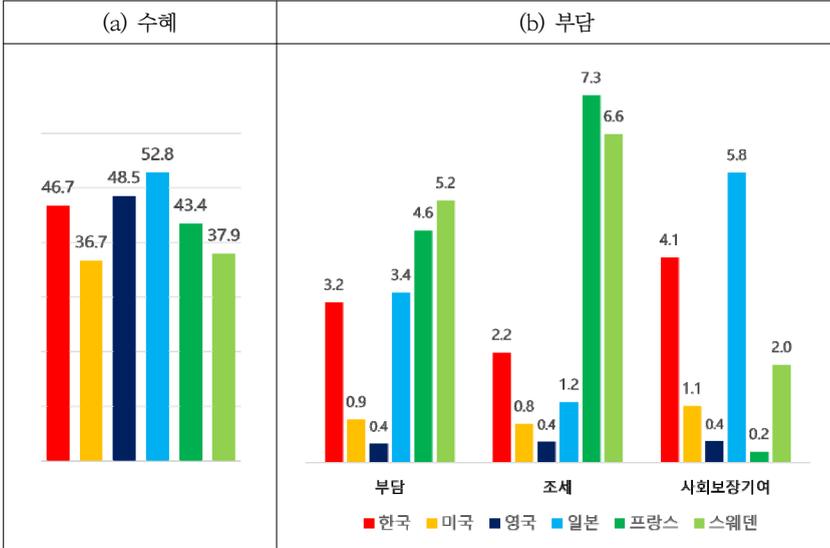
하지만 사회보장기여의 분포 양상은 이와 다소 다르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다. 반면 일본과 스웨덴이 균등분포선에 가장 가깝다. 한국은 중간 정도의 위치이다. 같은 국가군인 프랑스와 스웨덴 사이에, 그리고 영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크다. 한국은 조세 부담에서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분포를, 사회보장기여에서는 비교적 전 계층의 고른 부담 분포를 보인다.

이제 소득 하위 20%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집중도를 비교해 보자. [그림 12-6]의 (a)를 보면 한국의 경우 하위 20% 계층의 점유율이 46.7%이다. 이는 영국이나 일본보다는 낮고 미국이나 스웨덴보다 높은 수치이다.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이라고 해서 모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집중도가 한국보다 높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이였다. 한국과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인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집중도는 고부담-고지출 국가군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보다 낮다.

부담의 집중도([그림 12-6]의 (b)) 측면에서 보면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중에 따라 구분된 국가군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영미권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저소득층 점유율이 매우 낮고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6] 소득 하위 20% 계층의 수혜 및 부담 점유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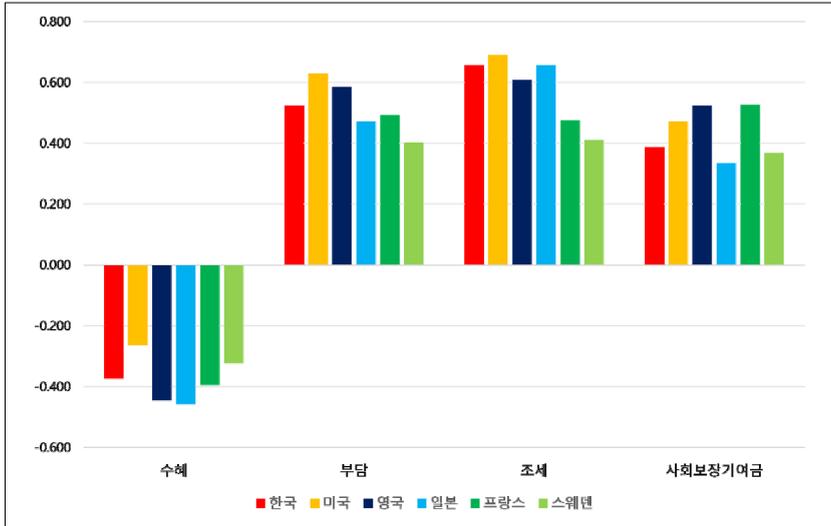
(단위: %)



주: 6~11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하위 소득계층의 점유율을 통해 볼 때 한국의 부담 집중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를 각각 따로 살펴보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조세의 집중도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사회보장 기여금의 점유율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비해 크게 높고 스웨덴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이다. 한국은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인 미국이나 중부담-중지출 국가군인 영국에 비해서도 저소득층의 부담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12-7] 수혜와 부담의 집중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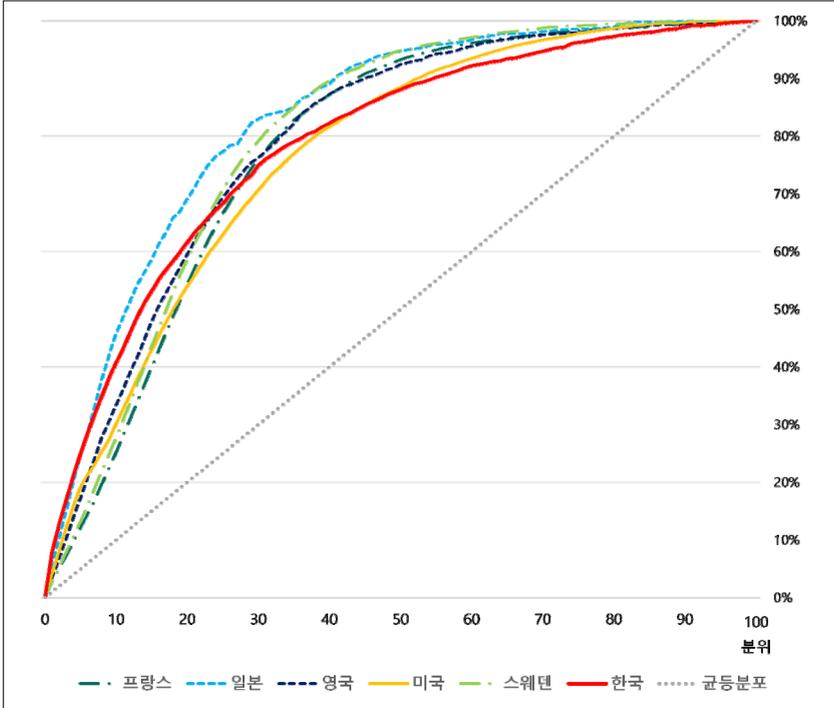


주: 6~11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12-8]은 수혜와 부담을 모두 고려한 순수혜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로렌츠 곡선이다. 순수혜 값이 음이 되는, 즉 수혜보다 부담이 큰 계층에서는 그 값을 0으로 대체하여 산출한 순수혜 값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한국은 하위 약 20분위까지의 계층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누적 점유율을 보이지만 약 30분위를 지나면서는 미국 다음으로 순수혜 누적 점유율이 낮아진다. 그리고 약 50분위 이상의 계층에서는 누적 점유율이 가장 낮다.

순수혜의 로렌츠곡선이 균등분포선에 가장 가깝게 그려지는 국가는 미국이고 반대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고부담-고지출 국가는 저소득층의 누적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간 소득층으로 가면서 누적점유율이 높아진다. 즉 순수혜가 중간 소득층까지 비교적 널리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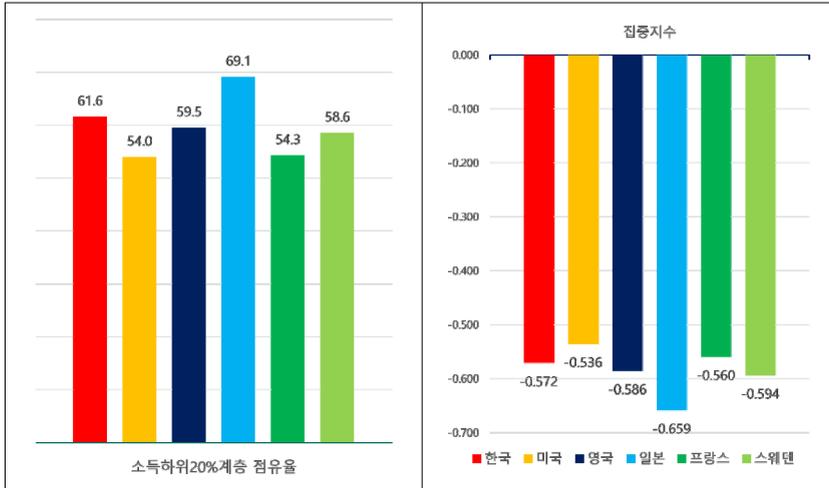
[그림 12-8] 순수혜(음→0 대체)의 분포 비교



주: 6~11장의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12-9]는 비음(非陰) 순수혜의 집중도를 소득 하위 20% 계층 점유율과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하위 20% 계층 점유율은 61.6%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집중지수의 절댓값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4번째이다. 이 두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수혜와 순수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 12-9] 순수혜(음→0 대체)의 집중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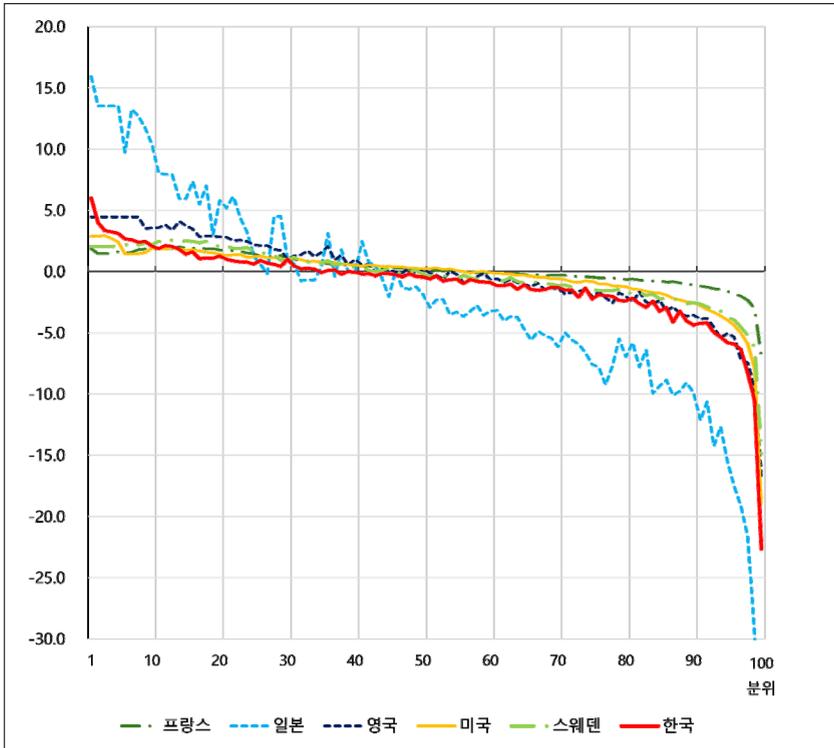
주: 6~11장의 분석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함.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그림 12-8]과 [그림 12-9]는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갖는 분위의 경우 그 값을 0으로 대체한 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12-8]에서 로렌츠 곡선의 모양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 불룩하게 그려지고 중상 수준의 소득 계층 이후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중상 수준의 소득 계층에서 음의 순수혜가 모두 0으로 대체되어 국가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얼마나 많은 계층에서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갖는지, 그리고 그 음의 값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점유율이 아닌 순수혜 크기 자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10]은 각 분위별 순수혜 값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국가마다 화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순수혜 값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30분위의 값을 1로 간주하여 표준화하였다. [그림 12-10]의 각 곡선들은 30

분위가 얻는 순수혜에 비해 각 분위가 어느 정도의 순수혜를 얻는지 보여 준다. 곡선의 그래프가 가파른 음(-)의 기울기를 보일수록 순수혜의 분위별 차이는 크다. 일본이 전체 소득 계층에 걸쳐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인다. 한국은 최하위 계층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최상위 계층의 기울기 역시 일본이 매우 가파르다. 한국의 순수혜의 계층 간 격차는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저소득층에서 소득의 미세한 증가에 따라 순수혜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2-10] 100분위별 순수혜의 상대적 크기(30분위=1)



주: 6~11장의 분석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함.

순수혜 값이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은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갖게 되는 지점, 즉 부담이 수혜를 초과하게 되는 계층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1>은 100분위 가운데 어느 분위에서 최초로 음의 순수혜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분위별 순수혜는 분위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만일 특정 분위에서 매우 큰 음의 순수혜를 보이는 가구가 있을 경우 다른 가구가 양의 순수혜를 갖더라도 전체 평균을 음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바로 다음의 소득 분위에서는 다시 순수혜가 양수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표 12-1>에서는 최초로 음의 순수혜가 관측되는 분위와 지속적으로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갖게 되는 분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35분위에서 최초로 순수혜 평균값이 음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음의 순수혜가 관측되는 것은 40분위이다. 프랑스 55분위, 일본 49분위, 영국 49분위, 미국 57분위, 스웨덴 50분위이다.

<표 12-1> 부담 > 수혜가 시작되는 소득 계층 비교(2019년)

(단위: 분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최초	35	57	43	27	55	46
지속	40	57	49	49	55	50

한국에서 음의 순수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40분위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양의 순수혜를 받는 계층이 소득 하위 40% 계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0% 이상의 중간 소득층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받는 금액보다 크다. [그림 12-8]~[그림 12-9]에서 순수혜의 집중도를 비교할 때는 <표 12-1>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의 순수혜 집중도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하위 40%의 인구에서 발생하는 집중도에 의해 설명

된다. 스웨덴은 그것이 50%, 프랑스는 55%이며, 같은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으로 분류된 미국도 57%이다.

3.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 비교

이상에서 위험의 집중도와 순수혜의 집중도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과 순수혜 집중도의 조응 상태에 대해 살펴보자. 각 장의 분석(특히 6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위험과 순수혜의 집중도 자체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위험별로 다르기도 하고 순수혜의 계측 방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위험이나 순수혜의 집중도 순위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교 대상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각 국가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위험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6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은 8개의 위험 지표 가운데 5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인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8개 지표 중 4개에서 가장 낮고 2개의 지표에서 두 번째로 낮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비음 전환 순수혜 점유율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국가는 일본이고 다음이 한국이다. 한국은 수혜의 점유율 면에서는 세 번째였으나 양의 순수혜를 얻는 집단의 비중이 가장 낮다 보니 그 결과 비음 전환 순수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두 번째가 된 것이다.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이다.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위험의 집중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은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집중지수 측면에서도 한국은 8개 위험 가운데 5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⁵⁸⁾ 집중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8개 위험 가운데 5개에서 5번째, 그리고 1개(미취업 위험)에서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인다. 비음 전환 순수혜의 집중지수는 일본의 집중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스웨덴이다. 한국은 네 번째이다. 한국은 수혜의 집중도 면에서도 네 번째이다.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수혜와 비음전환 순수혜에서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인다.

한국은 위험에서 집중도 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순수혜의 집중 측면에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하위 소득계층의 점유율 면에서는 순수혜 집중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양의 순수혜를 얻는 계층의 비중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높은 순수혜 집중도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양의 순수혜를 얻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집중도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도가 높은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도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집중도와 중간 정도의 순수혜 집중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58) 위험과 순수혜에서는 집중지수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여기서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집중도의 높낮이를 서술하였다.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에 대한 함의

1.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계량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험도의 계층별 분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국가 간에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분포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위험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을 정의했을 때 위험의 분포는 반드시 위험의 수준과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가군 사이에 위험의 수준 차이가 관측되지만 위험의 분포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위험 분포상의 어느 지점, 즉 어느 소득 계층에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 집중의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계층의 위험 점유율에 주목할 것인가, 위험의 집중도를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낮출 것인가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전적 관점에서 정의된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보면 보편화와 집중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발견된다. 위험의 보편화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소득 계층에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후적 위험은 일부 소득 계층에 국한된 사건일지 모르나 사전적 위험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발견된다. 위험의 집중이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득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위험의 보편화와 위험의 집중 두

현상 모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양의 순수혜를 얻는 집단을 늘리는 것이 보편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순수혜의 집중도를 조정하는 것이 위험의 집중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셋째,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위험이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위험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시사한다. 우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은 모든 위험에 사전적,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이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비교 대상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의 위험도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의 집중 경향이 한 종류의 위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여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고용,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저소득층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다.

집중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의 배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인 수준을 통해 보더라도 한국은 사회적 위험의 집중에 비해 순수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위험의 집중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재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순수혜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즉 총수혜나 총 순수혜의 크기를 증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다. 총량 수준의 정책 변화와는 별개로 재원의 재배분(re-allocation), 재할당도 중요한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위험의

분포이다.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모든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만큼 저소득층의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소득, 고용,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위험의 집중도가 높은 영역인 미취업, 불완전 고용, 건강 등의 영역에서 집중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위험의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순수혜를 집중시킨다고 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도를 비교한 기준은 시장 소득 기준 하위 20% 계층이었다. 이 20%란 수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훨씬 큰 수치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표적화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적의 크기는 현재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설정하는 범위에 비해 훨씬 크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계층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야별로 계층한 위험도는 어떤 영역의 사회보장 급여를 우선 확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위험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과 기타 계층 사이에 정책적 지원에 대한 지지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보장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의 지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위험의 집중과 동시에 위험의 보편화라는 현실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위험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재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양의 순수혜를 얻는 집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계층별로 수혜와 부담의 점유율을 모두 조정하되 수혜가 부담보다 큰 계층을 현재의 하위 약 40% 수준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이 사회보장 재원의 확충과 정책적 지지의 기반을 모두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험의 배분과 순수혜의 배분을 조율시키는 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이 있다. 다시 환기하자면, 이 연구에서 사회적 위험은 7가지 종류(8개 지표)로 그리고 사회보장 순수혜는 단일 지표로 비교하였다. 현실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의 배분은 각 위험에 대응하여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위험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물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니다. 빈곤에 대응하는 정책만 예를 들더라도 직접적인 소득 지원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출보전, 일자리 제공, 임금 지원, 고용유지 등 다양한 영역이 관여되어 있다. 각 영역마다 대상자의 특성들이 달리 제한된다. 이런 점에서 관련된 수혜(급여)의 영역을 설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계층적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현 시점의 한계일 뿐 장기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각 정책 프로그램별로 관련 위험을 설정하게 하고 위험별로 정책 조합을 재배치하거나 재설계하는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한 작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가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즉 위험과 순수혜의 분포 혹은 배분 상태에 주목했고 그 총량(수준)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범위 설정이 위험과 순수혜(특히 수혜와 연결되는

사회지출의 수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 대상자의 확대가 사회보장 지출 수준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보장 재원의 재배분 문제와 별개로 사회보장 재원을 늘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제한된 위험에 대해 제한된 국가를 비교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위험과 순수혜의 비교를 위해 비교적 통일된 방식으로 집계되거나 제공되는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가용한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비교 대상 국가와 비교 대상 위험의 종류가 제한되었다. 분석의 결과 역시 데이터의 특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순수혜 로렌츠 곡선이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나타난다거나 일본의 빈곤 위험도가 OECD 데이터 포털에 수록된 값에 비해 낮게 보고 되는 것은 LIS에 수록된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된다. 집계 자료를 이용한 4장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파악되는 포르투갈의 경우처럼 분석의 필요성은 있으나 가구 소득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들도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그 데이터가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가구 계층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은 고용주의 부담이 이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집중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더 풍부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용 가능해진다면 더욱 다양한 위험과 더 많은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6~11장에서 본 연구는 위험을 계측하고 지표화하는 데 몇 가지 가정에 입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구별 위험이 가구 유형에 의존하거나 개인의 위험이 성별과 연령대에 의존한다는 가정이 대표적이다. 이 가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위험의 결정 요인을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의 위험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위험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구원 간 위험의 상호 독립성을 가정한 것도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가구 및 개인의 위험 결정 요인에 대해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고 가구원 간 위험도의 의존성에 대한 분석이 축적된다면 좀 더 개선된 위험도 추정 모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분석은 주로 가구별 소득 정보가 포함된 미시자료를 사용하였다. 4장에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순수혜의 배분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나 제한된 국가와 제한된 시기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집계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계정 자료 등 거시자료를 통한 분석은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과는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국민계정 자료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이 자료의 시계열이 축적되면 향후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과 사회적 위험의 수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미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가 간 비교의 시점을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 지출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증가시켰고 그것이 계층별 위험과 순수혜에 미친 영향도 이례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이 최근의 현실까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이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2020년 이후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정책의 변화에서 예외성과 통상성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강신욱, 나원희, 안수란, 이다미, 전지현. (2024).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이원진, 노대명, 이지혜, 백승화, 서정희, 오건호, 최한수, 홍경준, 금민. (2021).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전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순미. (2018).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5(1), 231-257.
- 권순미. (2019).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월간복지동향**. 기획 4.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647300>
-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채,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2022).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제도 개혁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 여유진, 임완섭, 조성은, 김성아, 정세정, 신영규, 이주미, 윤홍식, 최영준. (202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변화의 도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 (2023).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 (봄), 5-20. <https://doi.org/10.23063/2023.03>.
- 김명중. (2015). 일본에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관계. **국제노동브리프 5월호**. 61-75.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이현주, 임완섭, 전지현, 김근혜, 박광준, 고이시 노리미치, Dan Finn, Neil Lunt, John Hudson. (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편. 2006,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小川浩. (2000). 貧困世帯の現状-日英比較-. **經濟研究**, 岩波書店, Vol. 51, No. 3, Jul. 2000, pp. 220-231.
- 정무권. (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95-224.

-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0년(RAS용).
- 통계청. (각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 통계청. (각연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 Adema, W., Fron, P., & Ladaique, M.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24. <https://doi.org/10.1787/5kg2d2d4pbf0-en>
- Alcock, P. (2016). The history of third sector service delivery in the UK. *In The third sect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pp. 21-40). Policy Press.
- Andersson, L. F., H. A. Bengtsson, S. Fina & B. Heider. (2021). *Unequal Sweden : Regional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Sweden*. Europa
- Beck, U. (1992). Modern Society as a Risk Society. *In The culture and power of knowledge: Inquiries into contemporary societies*, 199.
- Beveridge, W. (2000).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8(6), 847.
- Béruit, Théodore, Lisa Troy & Mathilde didier. (2025). *La protection sociale en Europe en 2023*. DREES, Les Dossiers de la DREES. n.127, janvier 2025
- Béruit, Théodore, Lisa Troy & Mathilde didier. (2025). *La protection sociale en Europe en 2023*. DREES, Les Dossiers de la DREES. n.127, janvier 2025
- Bitler, M. P., & Hoynes, H. W. (2016). Strengthening safety nets to address poverty.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821-847. <https://doi.org/10.1146/annurev-economics-080315-015605>
- Bonoli, G.(2007) Time Matter: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s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495-520.
- Bradshaw, J., & Hirose, K. (2006). Child pover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4), 291-301. <https://doi.org/10.1111/j.1468-2397.2006.00415.x>
- Cammeraat, 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social expenditure schemes and poverty,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73(2). pp.101-123.
- Case, A., & Kraftman, L. (2022). Health inequalities. IFS Deaton Review of Inequalities.
- Chen, C.N., Tsaur, T-W. & Rhai, T-S.(1982). The Gini coefficient and Negative Income, *Oxford Economic Papers*, 34(3). pp.473-478.
- Commonwealth Fund. (2023). U.S. health care from a global perspective. <https://www.commonwealthfund.org/publications/issue-briefs/2023>
- De Battisti, F., Porro, F. & Vernizzi, A. (2019).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case of negative values, *Electronic Journal of Applied Statistical Analysis*, 12(1). pp85-107.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18). Community Life Survey: Focus on Loneliness 2017-18. p. 3.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ommunity-life-survey-focus-on-loneliness>
- Duffy, B., O'Leary, D., Pope, S., Hall, S. (2013). *Generation Strains*. London: Demo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7). Hybrid or unique?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179-189. <https://doi.org/10.1177/09589287970070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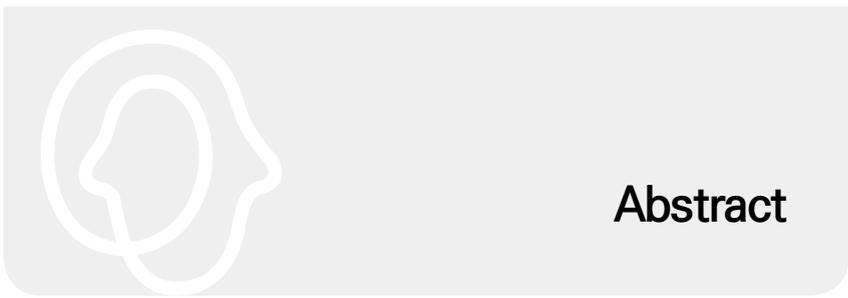
- Esping-Anderso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 Press. 박시중 옮김 (2006).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Estevez-Abe, M. (2008).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tevez-Abe, M., Iversen, T., & Soskice, D.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P. A. Hall &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pp. 145-183).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global.oup.com/academic/product/varieties-of-capitalism-9780199247752>
- Ferragina, E., & Seeleib-Kaiser, M. (2011). Welfare regime debate: Past, present, future? *Policy & Politics*, 39(4), 583-611. <https://doi.org/10.1332/030557311X574590>
- Forslund, Anders. (2019). Employment outcomes and policies in Sweden during recent decades. *IFAU Working Paper 2019*, 15
- Gruber, J., McGarry, K. M., & Hanzel, C. (2023). Long-term care around the world (NBER Working Paper No. 318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papers/w31882>
- Guillaud, E., M. Olckers & M. Zemmour. (2017.07). Four levers of redistribution: The impact of tax and transfer systems on inequality reduction. Luxembourg Income Study (LIS), *LIS Working Paper Series* No. 695, July 2017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4), 706-723. <https://doi.org/10.1111/1467-9248.00279>
- Holzmann, R., Sherburne-Benz, L., & Tesliuc, E. (2003). *Social Risk Management: The World Bank's Approach to Social Protection in a Globalizing World*. World Bank.

- Hood, A., & Waters, T. (2017).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ax and welfare reforms, 2010 to 201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INSEE. (2025). L'essentiel sur...le chômag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805248#tableau-figure3_radio2)
- Kim, K. T. (2015). From worlds to cases: Case selection and 'other worlds' in the welfare modelling business. *Social Policy and Society*, 14(2), 309-321.
- Lupu, L. (2019). The concept of social risk: A geographical approach. *Quaestiones Geographicae*. 38(4). pp.5-13.
- LIS. (각연도).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원자료.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
- Nelson, Kenneth & Johan Fritzell. (2019). *In-work poverty : Swede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ESPN) Thematic Report.
- Norlin, J. & Linnea. (2023.12.01). *2024 Ageing Report : Sweden - Country Fiche*. Ministry of Finance, Sweden.
- OECD. (2023a). *Health at a Glance 2023*. <https://doi.org/10.1787/ae3016b9-en>
- OECD. (2023b).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12/pensions-at-a-glance-2023_4757bf20/678055dd-en.pdf
- OECD. (2024a). *PF2.1. Parental leave system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family-database/pf2_1_parental_leave_systems.pdf
- OECD. (2024b). *Labour Market Programme Expenditur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MPEXP>
- OECD. (2024c). *OECD Handbook on the Compilation of Household Distributional Results on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in*

- Line with National Accounts Total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a3b9119-en>.
- OECD. (2024d). *How's Life? 2024: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4e).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5a). *Global Revenue Statistic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global-revenue-statistics-database.html>
- OECD. (2025b).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social-expenditure-database-socx.html>
- OECD. (2025c).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 OECD. (2025d). *Elderly population*.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elderly-population.html>
- OECD. (2025e).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 Incidence*.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EMP%40DF_TEMP_D&df\[ag\]=OECD.ELS.SAE&df\[vs\]=1.0](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EMP%40DF_TEMP_D&df[ag]=OECD.ELS.SAE&df[vs]=1.0)
- OECD. (2025f). *Public finance main indicators: government at a glance*, 2025 edition, General government revenues
- OECD. (2025.06). *OECD Economic Surveys: Sweden 2025*. Volume 2025/13.
- OECD. (2025. 10.).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 OECD. (각연도). *Current well-being by age*,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fr&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https://data-explorer.oecd.org/vis?lc=fr&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

- L%40DF_HSL_CWB_AGE&df[ag]=OECD.WISE.WDP&df[vs]=1.1
 OECD. (각연도). *Current well-being by sex*.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SEX&df\[ag\]=OECD.WISE.WDP&df\[vs\]=1.1](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_SEX&df[ag]=OECD.WISE.WDP&df[vs]=1.1)
- OECD. (각연도).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employment*. <https://data-explorer.oecd.org>
- Eurostat. (각연도). *Self-perceived health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lth_silc_02__custom_16749729/default/table?lang=en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각년도).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 *EMP17: People in employment on zero-hours contracts*.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datasets/emp17peopleinemploymentonzerohourscontracts>
- Ostasiewicz, K. & Vernizzi, A. (2017) Decomposition and normalization of absolute difference, wi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re considered: application to the Gini coefficient. *Quantitative Methods in Economics*, 18(3). pp.472-491.
- Pintelon, O., Cantillon, B. Van den Bosch, K., & Whelan, C. (2011).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social risks: class and responsibility in 'New' Welfare State. *GINI Discussion Paper* 13. Growing Inequalities' Impacts.
- Raffinetti, E., Siletti, E., & Vernizzi, A. (2014). On the Gini coefficient normalization when attributes with negative values are considered, *Statistical Method and Applications*, 24.
- Rehm, P. (2016).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 Press.
- Rohde, I., Kirstein, I., & Rohde, M. (2015). Managing social risks -

- tradeoffs between risks and inequalitie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1. pp.103-124.
- Sterdyniak Henri. (2013.12.23). *Is the French tax-benefit system really redistributive?*, OFCE blog, Social inequality, 23 December 2013.
- Takahashi, M. (2019).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14, 100190. <https://doi.org/10.1016/j.jeoa.2019.100190>
- Takaku, R. (2016). Why do Japanese people avoid public assistance?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15(2), 1-14. https://www.ipss.go.jp/webj-ad/WebJournal.files/SocialSecurityPolicy/2016/Autumn/Autumn2016_01.pdf
- Takegawa, S. (2005). Welfare state theory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regimes: The case of East Asia. In A. Walker & C. Wong (Eds.), *East Asian welfare regimes in transition: From Confucianism to globalisation* (pp. 169-188). Policy Press.
- Taylor-Gooby, P. (2005).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Oxford Univ Press.
- The King's Fund. (2023).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NHS and Social Care in 2022: Results from the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 Wagstaff, A., Paci, P. & Van Doorslaer, E. (1991)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in health, *Soc. Sci. Med.* 33(5). pp.545-557.
- Wagstaff, A., Van Doorslaer, E. & Paci, P. (1989) Equity in the finance and delivery of health care: some tentative cross-country comparison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5(1). pp.89-112.
- Yang, J. (2014). Welfare states' policy response to new social risk. *Development and Society*. 43(2). 269-296.
- Zucman, G. (2015).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The scourge of tax have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Class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and Net Social Security Benefit

Project Head: Kang, Shin-Wook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 common perception is that expanding social security spending inevitably requires increasing the tax burden. However,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at the primary goal of social expenditure is to protect people from social risks. Social risk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levels of social expenditure and tax burden. At the same time, distributional issues must also be considered. Since risks are not distributed evenly among all classes, the benefits or burdens of social security systems must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risks. However, few prior studies have examined how risks are distributed across social classes. In light of this issue, this study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social risk and social security net benefits (benefits minus contributions/taxes), and through this, sough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llocation of social security resources.

2. Key Research Findings

(Chapter 2) The theoretical status of the concept of social risk in social policy began to receive considerable attention after the mid-2000s, as the issue of new social risks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However, discussions on actually quantifying risk, and particularly analyzing its distribution, were scarce.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risk, this study defines risk in an ex-ante sense and focuses on its distribution across income groups (quantiles) based on market income. Furthermore, net benefits were defined as the value obtained by subtract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burden from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benefits) received by each household. To compare risk distributions, the analysis focused on two indicators: the risk share by income quantile and the risk concentration index.

(Chapter 3) For cross-country comparison, OECD countries were first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social expenditure (% of GDP) and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burden (% of GDP): low burden/low expenditure, medium burden/medium expenditure, and high burden/high expenditure. The gap in the share of social expenditure between these groups persists even as economies grow. Al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risk, a distinct gap in

the level of social risk was observed between these groups. This confirms that, in terms of expenditure and burden levels, a country's policy choices are closely linked to its choice of the level of social risk it is willing to accept. This study selected two countries from each of the three groups, comparing a total of six countri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weden).

(Chapter 4) Before conducting the analysis of the six countries using micro-data, aggregate data (national accounts data) was used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net benefits across income quintiles for a larger number of OECD countries. Even within the same group of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net benefits differed. Some countries saw benefits and net benefits concentrated among lower-income groups, while others exhibited a smaller gap in net benefit shares between high- and low-income groups. South Korea's cash net benefit ratio for the first quintil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first quintile's share of net benefits combining cash and in-kind benefits was somewhat higher, reflecting the effects of systems such as the universal health insurance scheme.

(Chapter 5) In the analysis using microdata, the seven risks examined are: poverty, care burden, non-employment, un-

employment, underemployment, ill health, and lack of social support. Each risk was aggregated at the household level and compared across income groups. Focusing on ex-ante risk, each risk level was defined as the average value of the risk actually experienced over the past decade by households of the same type (or by individuals of the same gender and age group). Risks measured at the individual level were aggregated to the household level by multiplying the risk levels of each household member. Based on these measured risk levels, concentrations of risk were calculated for 2019, followed by cross-country comparisons. Net benefit distribution was calculated using net benefit values at the household level, and the concentration of net benefits was then compared.

(Chapters 6-12, Section 1) Based on this same analytical method,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risks and net benefits in each of the six countries.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country-by-country analysis revealed that all countries experienced both the universalization of risk and the phenomenon of risk concentration. All income groups faced ex-ante risks. Most risks appeared concentrated among low-income groups. The degree of risk concentration varied by risk and by country. Even within the same group of countries, differences in risk concentration were not uncommon.

Korea shows the highest level of risk concentration when

measured by the share of risk borne by the bottom 20% income group. When comparing concentration indices, Korea also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5 out of 8 risk indicators. However, a different pattern emerged when we compared the concentration of net benefits. While the concentration is high when viewed through the net benefit share of the bottom 20% income group, this is not the case when looking at the concentration index. This characteristic is related to the fact that Korea has a lowe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receiving positive net benefi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3. Policy Implications

(Chapter 12, Section 2)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above analysis. First, given that the level of risk and the distribution of risk exhibit different patterns,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simultaneously reduce the level of risk and alter the distribution of risk. It is necessary to set policy objectives such as which group's risk share to focus on, to what extent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risk, and by what methods to achieve this reduction.

Second, a response to the universalization of risk is necessary. The universalization of risk means that risk exists across all income groups, albeit to varying degrees. Policies addressing social risks must be capable of responding to both

the universalization of risk and the concentration of risk.

Third, addressing concentrated risk requires concentrated suppor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et benefit share for relatively low-income groups during the reallocation of social security resources. However, such policy changes should not prevent increases in total benefits or total net benefit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low-income groups in Korea exhibi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levels across all risks, policy approaches to reduce their risks must be comprehensive, spanning various domains. Support is particularly needed to mitigate concentrated risks in areas with high risk concentration, such as unemployment, partial unemployment, and ill health.

Fourth, even when opera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a targeted manner to address risk concentration, the scope of such targeting must be set considerably broader than that currently defined by low-income support schemes. It is crucial to move beyond relying solely on expanding the beneficiary scope of existing systems and instead seek ways to support a wider range of groups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Fif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groups receiving a net positive benefit. While adjusting both the share of benefits and the share of contributions across income groups, the proportion of groups where benefits exceed contributions should be raised from the current level of approx-

imately the bottom 40%. Such changes will contribute to broadening both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unding and the base of policy support.

Finally, for each policy programme, relevant risks should be established, followed by tasks such as reallocating or redesigning policy combinations for each risk.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data that can provide the basis for such wor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risks and net benefits under data constraints and inevitably faced several limitations. The types of risks and the countries for comparison were necessarily limited. The process of measuring and aggregating risks also relied on somewhat strong assumptions. There were also constraints in referencing the analysis results using aggregated data. Setting the comparison year as 2019 meant it could not capture recent changes occurring after the COVID-19 shock.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limitations can be overcome in the future as more data accumulates and diverse analytical methods are applied.

Key words: social risk, social security benefits,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net social security benefits, risk concentration, social expenditure, fiscal allocation,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